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이 번역본은 OECD와의 협의에 의해 출판되었으나, OECD 공식 번역본은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원 저작물과 번역본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원본 저작물만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의견과 주장들은 OECD 회원국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와 지도에는 영토적 현 상태 혹은 주권에 대한 어떠한 편향도 없으며, 국경과 영토, 도시, 지역의 명칭 및 경계에 관한 편향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OECD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함에 있어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인 편향이 없음을 밝힙니다.

본 출판물의 영문원본은 OECD에 의해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OECD(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ccf5c38-en>.

한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도서의 저작권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에 있습니다.

번역: 신가희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역자 서문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아태지역 정부인사 및 전문가들에게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에서 정부혁신, 전자정부, 조달, 정부청렴 등 공공관리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공관리정책본부에서는 OECD가 발간하는 공공 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 발간한 “Government at a glance 2019(한눈에 보는 정부)”는 공공재정, 인적자원관리, 규제 등의 다양한 거버넌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 성과를 공유하여 정부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번역을 진행한 신가희 박사님과 감수에 힘써주신 이남국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판 발간을 위해 애써준 공공관리정책본부 이보환 본부장 및 직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관리정책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활용되고,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전홍택

머리말

금융위기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정부 부채의 누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급격한 기술의 변화로 인한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동시에,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공공부문의 효율성, 대응성, 사회통합의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개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역량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중심의 접근을 통한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람중심의 접근은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설계, 전달, 집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OECD 공공행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보고서의 제6판으로, 사람중심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OECD 국가의 성과관리와 거버넌스 제도, 서비스 전달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OECD 국가들은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반영되는 서비스 공급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공공거버넌스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는 OECD 국가,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교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각 국은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는 정부의 전체적인 생산과정 즉, 투입에서 산출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한 눈에 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각 국의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와 거버넌스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OECD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특정 기관의 역할 및 책임성, 예산제도와 실무, 인적자원관리, 규제거버넌스, 공공조달,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공재정과 경제, 공공고용에서는 주로 투입 지표와 데이터가 포함된다. 정부 신뢰, 정치 유효성, 대응성, 소득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핵심 정부 성과에서는 주로 산출 지표와 데이터가 포함된다. 또한 교육, 보건,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대응성, 서비스의 질, 시민 만족도에서도 주로 산출 지표를 다룬다. OECD는 회원국들이 공공거버넌스 제도에 관한 원칙과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은 많은 공공거버넌스 분야에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감사의 글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Marcos Bonturi 국장의 지휘 아래 OECD 공공행정국(OECD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에 의해 발행되었다. 본 보고서의 작성은 Irene Hors와 Monica Brezzi의 지시 하에 Zsuzsanna Lonti가 이끌었다. 본 보고서의 초안은 Barbara Baredes, Santiago Gonzalez, Alessandro Lupi, and Minjoo Son가 작성하였고 Clara Delcourt가 연구를 보조하였다. 제3장 공공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Daniel Gerson, Donal Mulligan, Pinar Guven이 도움을 주었다. 제4장 정부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Stephane Jacobzone, Claire Salama, Diego Millan이 도움을 주었다. 제5장 예산제도 및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Andrew Blazey, Delphine Moretti, Juliana Jansen, Anne Keller, Sherie Nicol, Ana-Maria Ruiz가 도움을 주었다. 제6장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Daniel Gerson, Donal Mulligan이 도움을 주었다. 제7장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은 Christiane Arndt-Basacle, Benjamin Gerloff, Rebecca Schultz가 도움을 주었다. 제8장 공공조달과 관련된 내용은 Janos Bertok, Paulo Magina, Matthieu Cahen, Antoine Comps, Fleur D'Souza, Tessa Cullen이 도움을 주었다. 제9장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Barbara Ubaldi, Reginald Dadzie, Jacob Arturo Riviera Perez, Joao Vasconcelos, Zina Akrou, Cecilia Emilsson이 도움을 주었다. 제1장에 대한 귀중한 코멘트를 제공해 준 Janos Bertok, Andrew Blazey, Eva Beuselinck, Stephane Jacobzone, Edwin Lau and Barbara Ubaldi에 감사를 전한다. 편집에 도움을 준 Andrea Uhrhammer, 출판을 위한 문서 준비에 도움을 준 Julie Harris, Joelle Palmieri에 감사를 전한다. 프랑스어 번역판의 출판에 도움을 준 Maia Kirilovski, Frederic Berri, Maria Eiguren에 감사를 전한다.

본 보고서는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들과 자문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공공행정위원회,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은 부록 G에 제시), OECD 통계정책위원회, 공공고용관리 작업반, 고위 예산담당관 작업반, 고위 디지털 정부 공무원 작업반, 공공조달 작업반, 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또한 OECD 고용·노동·사회국의 Gaetan Lafortune, Chris James, Maxime Ladaique, OECD 교육·숙련국의 Corinne Heckman, Daniel Sanchez Serra, Camila Demoraes, OECD 통계·데이터국의 Carlotta Balestra,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의 Oliver Petzold에게도 귀중한 자문을 받았다.

목 차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공공정책과 서비스로의 변화 필요	11
요약	13
일러두기	16
도입	20
1.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 지향	25
서론	26
1.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27
2.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측정	28
3. 사람중심의 정책결정	35
결론	45
2. 공공재정과 경제	49
일반정부 재정수지	50
일반정부 순저축	52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54
일반정부 부채	56
일반정부 순금융자산	58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60
일반정부 수입	62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64
일반정부 지출	66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68
경제적 거래별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	70
정부수준별 수입 및 지출 구조	72
공공투자지출	74
일반정부의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76
특집: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사회보호분야와 보건분야의 일반정부 지출	78
3. 공공 고용	81
일반정부 고용	82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84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86
정치의 성평등	88
사법의 성평등	90

4. 정부기관	93
정부수뇌기관(centres of government)의 역할 및 책임	94
열린정부에서의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96
정책평가체계의 제도화	98
정책평가의 활용 촉진	100
5. 예산제도와 실무	103
자본예산과 인프라	104
재정위험(fiscal risk)의 관리	106
성인지 예산	108
예산의 투명성	110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	112
6. 인적자원관리	115
공무원(civil servants)과 공공부문 근로자(public employees)의 고용 조건	116
공무원의 학습과 경력개발	118
고위 공무원의 성과관리	120
7. 규제거버넌스	123
규제 제·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124
규제영향분석	126
규제의 사후평가	128
8. 공공조달	131
공공조달의 규모	132
전략적 공공조달	134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	136
공공조달 역량 및 성과	138
공공조달의 위험 관리	140
9.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143
디지털 정부	144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숙도와 지속가능성	146
데이터 가용성: 정책 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데이터 개방	148
데이터 접근성: 공개된, 무료의, 접근가능한 형태	150
사용자 참여: 정부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사용	152
10. 핵심 정부 성과	155
정부 신뢰	156
정부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 : 외적 정치 유효성	158
소득 및 부의 재분배	160
법의 지배	162
공공부문의 효율성	164
공공정책의 비용효과성	166

11. **대시민서비스** 169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170

 공공서비스와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 만족도 174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리적 접근성 176

 교육에 대한 재정적 접근성 178

 법률 및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180

 환자의 수요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대응성 182

 특별한 수요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 184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 186

 보건의료의 질 188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 형평성 190

 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192

부록 A. **국가별 국민계정통계의 보고 체계 및 출처** 195

부록 B. **정부 총수입** 198

부록 C. **정부기능별 분류(COFOG)** 199

부록 D. **직업의 분류 및 정의** 201

부록 E. **성인지예산,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에 관한 방법론** 203

부록 F.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그림 자료** 204

부록 G. **운영위원회의 구성** 206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용어 해설 207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lidlibrary>



<http://www.oecd.org/oeclidirect/>

StatLinks

이 보고서에는 인쇄 페이지를 통해 엑셀파일을 제공하는 StatLinks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표 또는 그래프 오른쪽 하단에 있는 StatLinks를 찾아보세요.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관련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PDF버전을 보는 경우 링크를 클릭만 하면 관련 엑셀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공공정책과 서비스로의 변화 필요

오늘날, 2008년 금융위기의 최악의 결과는 우리에게 지나간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7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 부채는 GDP의 110%로, 여전히 높은 채무부담을 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과 불안감 등의 필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부채 수준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세금과 이전 지출을 통한 재분배도 감소했으며, 노후화된 인프라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 투자지출을 위한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정부와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OECD 국가 전체 국민 중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은 종종 정치적 담론,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OECD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공공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과 정부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이중 핵심은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람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사람중심의 접근 방식은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정부의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OECD 국가들의 공공관리 및 거버넌스 제도가 사람중심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분석을 제공한다. 이는 다양한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OECD 36개 국가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추구하는 OECD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교육, 보건, 사법 등 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대응성, 질이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OECD 국가 전체 국민의 평균 70%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66%는 교육 제도에 만족하고, 56%는 사법제도 및 법원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 및 거버넌스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무료로, 접근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 대응성, 책무성,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예산의 결정이 주요 정책 분야와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분석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2016년 12개국에서 2018년 1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률 및 규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 시기와 피드백 메커니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019년 OECD 24개국에서는 공무원 리더십에 관한 교육훈련과 코칭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원에 대한 투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을 위해 정보통신 및 디지털 교육 훈련을 시행하는 국가는 17개국에 불과하다.

이렇듯,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 공공 행정의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고, 정부가 좋은 실무들을 만들어내며,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정책결정자, 실무자, 연구자, 시민들에게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Angel Gurría

요약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국민 연계성 회복, 평등의 향상, 포용적 성장의 촉진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문 성과 및 정부 정책의 핵심 지수에 대한 요약を提供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가 접근성, 대응성, 질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교육, 보건, 사법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사람중심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예산, 규제거버넌스, 공공조달,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공공거버넌스 제도와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결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채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을 감소시킨다.

- 2009년 이후 재정적자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GDP의 2.2%에 도달하였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인 1.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17년 OECD국가의 평균적인 총 정부부채는 GDP의 110%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 2017년 OECD 국가의 사회보호 및 보건 분야의 일반정부 지출은 GDP의 21%를 넘는 수준이다. 2007년 대비 2017년 사회보호 분야의 일반정부 지출은 1.5%p, 보건 분야의 일반정부 지출은 1.1%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 2017년 공공투자 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과 비교하여 0.5%p 낮은 수준이다. 공공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공공고용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모든 공공부문의 피고용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중 일반정부 고용의 비율은 약18%로 2007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 공공부문의 노동력에는 지속적인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법원 판사의 고위 직급과 정치에서는 남성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총 67%)을 차지한다. 2019년 OECD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하원/단원제 의회 의석에서 30%, 중앙정부의 장관급 직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 중앙정부에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은 전체 노동력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공공부문의 근로자보다 높은 직업 안정성과 유리한 승진의 기회, 엄격한 채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결정이 주요 인구집단과 정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예산제도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2018년 OECD 국가의 절반이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4은 성인지 예산을 법제화하였다.
- 2018년 OECD 국가의 1/4에서 예산이 환경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은 예산이 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5%의 국가들만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반영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법률과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책결정의 늦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 조사된 모든 OECD 국가에서 최소한 일부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2016년 OECD 28개 국가에서 정부수뇌기관이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과 비교하면, 국가들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실무가 약간 개선되었다. 상위법령(1점~4점)에 대해서는 2014년 2점에서 2017년 2.2점,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2014년 2점에서 2017년 2.1점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공공조달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조달 지출은 GDP의 12%를 차지한다.
- 2018년 모든 OECD 국가들은 친환경 공공조달 전략을 이행하고 있으며, 포용적 성장(30개국), 혁신(22개국), 기업의 책임경영(18개국)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무료로, 접근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데 있어 계속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 OECD 33개 국가 중 정부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는 33개국이고, 공개 저작권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29개국이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는 31개국이다.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 행정부 내에서 역량과 능력의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국가는 21개국이다.
-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이행 수준을 측정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 data)는 2017년과 대비 2019년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재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모든 기본적인 지표의 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 성과가 낮았던 국가들도 한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도국가를 추격하고 있다.
- 2016년 정부수뇌기관이 정부 공공데이터 전략과 이니셔티브의 설계에 관여하는 OECD 국가는 21개국이며, 20개국 역시 이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07년 이후로 악화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들에서 45%로 회복되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독일, 일본, 한국, 폴란드, 스위스 등의 16개국에서 높아졌다.
- 2016년 OECD 국가에서 1/3에 해당하는 국민들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보건, 교육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인구 집단 간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 2018년 OECD 국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해 만족하는 시민은 70%이며, 교육 시스템과 학교 서비스에 만족하는 시민은 66%, 사법 시스템과 법원 서비스에 신뢰하는 시민은 56%로 나타났다.
-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교육, 보건,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 대응성, 질이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청년(NEET)의 비율이 2012년 6.9%에서 2018년 5.2%로 낮아졌다.
- 인구 집단 간에는 지속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7년 건강검진에 대한 미충족 수요의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서 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두기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에 포함된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이하의 수많은 지표들에 대한 방법론적 고려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제2장부터는 두 쪽에 걸쳐 각각의 지표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쪽의 본문에서는 해당 챕터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방법론 및 개념 정의”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소개하고, 자료의 해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에서는 본문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유용한 문헌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두 번째 쪽에서는 그림을 통해 자료를 보여주며, OECD회원국의 현재 수준과 가능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보여 준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보고서에 기술된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국민계정 자료의 역년(Calendar year)과 회계연도(Fiscal year)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OECD 국민계정 자료는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뉴질랜드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일본의 정부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출과 일반정부의 부문별 지출에 대한 자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국민계정체계의 자료는 2019년 6월 24일 기준으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 재정통계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36개 OECD회원국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부터 제공되었다. OECD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함에 있어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인 편향이 없음을 밝힌다.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OECD 회원 후보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¹⁾)과 기타 주요경제 협력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자료는 표와 그림의 하단에 OECD회원국의 자료와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1) 러시아 연방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12일 OECD 이사회는 “러시아 연방의 OECD 가입 승인을 당분간 연기 하였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oecd.org/newsroom/statement-by-the-oecd-regarding-the-status-of-the-accession-process-withrussia-and-co-operation-with-ukraine.htm>를 참고할 수 있다.

국가명 약어

OECD 회원국			
호주	AUS	뉴질랜드	NZL
오스트리아	AUT	노르웨이	NOR
벨기에	BEL	폴란드	POL
캐나다	CAN	포르투갈	PRT
칠레	CHL	슬로바키아	SVK
체코	CZE	슬로베니아	SVN
덴마크	DNK	스페인	ESP
에스토니아	EST	스웨덴	SWE
핀란드	FIN	스위스	CHE
프랑스	FRA	터키	TUR
독일	DEU	영국	GBR
그리스	GRC	미국	USA
헝가리	HUN		
OECD 회원 후보국*			
아이슬란드	ISL	콜롬비아	COL
아일랜드	IRL	코스타리카	CRI
이스라엘	ISR	러시아 연방 (이하 러시아)	RUS
이탈리아	ITA		
일본	JPN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			
한국	KOR		
라트비아	LVA	브라질 (OECD 공공행정위원회 참여)	BRA
리투아니아	LTU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CHN
룩셈부르크	LUX	인도	IND
멕시코	MEX	인도네시아	IDN
네덜란드	NLD	남아프리카공화국 (OECD 공공행정위원회 참여)	ZAF

* 주: 러시아 연방과 관련한 정보는 상단의 각주 참조

OECD 평균과 합계

평균

그림에 제시된 OECD 평균은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회원국의 비가중, 산술평균 또는 가중평균을 의미하며,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데이터는 평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설명(주석)에는 데이터의 이용이 불가능(데이터가 누락된) OECD 국가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단년도 이상의 수치가 제시될 경우, OECD 평균에는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국가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본 보고서에 포함된 2007년 OECD 평균에는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평균에 포함한다.

국민계정 자료의 OECD 평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중 비유럽국가들은 2018년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ECD 평균의 계산 시 2017년 까지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계

표에 제시된 OECD 합계는 해당 열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회원국의 데이터를 합한 값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데이터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설명(주석)에는 데이터의 이용이 불가능(데이터가 누락된) OECD 국가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온라인을 통한 추가 자료 제시

특정 국가의 자료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표와 그림 또는 지표 및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된 부록은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방법론 및 개념 정의” 부분에 이를 제시하였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독자들이 본 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StatLinks를 제공한다. StatLinks는 표 또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였으며, 웹 브라우저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 버전의 보고서에서 직접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이하의 추가 자료들도 온라인(<https://www.oecd.org/gov/ovtaglance.ht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국가별 주요 데이터를 OECD 평균과 비교한 국가별 현황표(country fact sheet)
- 정량지표의 선정을 위해 OECD.Stat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한 눈에 보는 정부 통계의 데이터베이스 및 OECD 공공행정국이 웹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질적 데이터)
- 각 회원국들의 정치적, 행정적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배경 정보를 담고 있는 각 국에 대한 맥락적 설명

1인당 지표

일부 지표(예: 지출, 수입, 정부 채무)의 경우, 1인당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때 인구 추정치는 국민 계정체계상의 거주자(residency)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권과는 상관없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과 군인의 가족, 유학생,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1년의 기준은 해외에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하는 국민은 거주자로 포함되는 반면, 관광객 등의 외국인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개인은 해당 국가의 고용인으로 포함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포함되어 임금과 급여가 국민총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구매력평가는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제거하여 나라마다 다른 구매력을 동일하게 만드는 환율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에 따라 국가별 지출은 사실상 동일한 가격으로 표현된다. 이는 동일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 묶음이 양 국가에서 동일한 비용을 가질 때,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량의 차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OECD는 특정 절차에 따라 현재와 과거의 구매력평가 자료를 제공, 업데이트하고 있다. 당해 연도(T) 구매력평가는 5가지 단계에 의해 실시된다.

1. T+2개월 : 국내총생산(GDP)의 비교를 위한 첫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2. T+6 개월: 국내총생산(GDP), 가계실질개인소비(AIC), 개인가계소비(IHC)의 비교를 위한 두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3. T+12 개월: 당해 연도의 모든 물가와 지출을 포함한 세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4. T+24개월: 최신의 지출 추정치 자료를 포함한 네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5. T+36 개월: 당해연도 마지막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2012년 이전의 구매력평가 자료는 국민계정의 디플레이터 수정을 위해 매년 12월 변경되었다. 특히 2016년 12월 모든 유럽국가들의 2012년 이전의 구매력평가 자료가 수정되었다.

구매력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www.oecd.org/std/prices-ppp)를 참고할 수 있다.

종합지수

본 보고서는 성인지예산,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협의의 종합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종합지수는 불연속적이고 정성적인 정보를 요약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종합지수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종합지수 작성 편람(*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의 단계를 따르고 있다(Nardo et al., 2008).

종합지수의 구성에 활용된 방법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E를 참고할 수 있다. 종합지수는 OECD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론과 최적 실무에 기반하고 있으나,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수와 변수 간 가중치는 전문가 판단에 기초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기호 및 약어

기호 및 약어	의미
.	결측값
x	해당 없음(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ADR	대안적 분쟁 해결
CBA	중앙예산기관
COFOG	정부기능별분류
CIO	최고정보책임자
CPA	중앙행정기관
GDP	국내총생산
GFS	정부재정통계
GFSM	정부재정통계 매뉴얼
HR	인적자원
HRM	인적자원 관리
ICT	정보통신기술
ILO	국제노동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IODC	국제 공공데이터 현장
ISO	국제표준화기구
IT	정보기술
OCSC	중앙인사위원회
OGD	공공정부데이터
PBO	의회예산처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p.(%p)	퍼센트 포인트
PPPs	구매력평가/민관협력
PR	비례대표제
PRP	성과급
R&D	연구개발
SCS	고위직 공무원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Rs	특별인출권
SHRM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MEs	중소기업
SNA	국민계정체계
VAT	부가가치세
WEO	세계경제전망
WJP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도입

한 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는 OECD 회원국,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정부 정책과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지표들은 공공거버넌스의 다양한 영역의 측정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을 넘어 중남미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6판은 본 보고서의 트레이드마크인 핵심 지표 외에도 새로운 지표와 추가적인 데이터를 선정하여 제공함으로써 OECD 국가 전반의 공공행정 업무와 성과를 보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6판에서 제시된 지표 중 약 2/5가 OECD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일차 자료에 해당한다. 이 외의 지표는 행정 자료(예: 공공재정), 가구 조사(예: 신뢰, 서비스 만족도), 다른 기관이 수집한 전문가 평가 자료(예: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에 기초한 이차 자료에 해당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에서는 무엇이 새로워졌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적인 챕터와 새로운 특징들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핵심 챕터에서는 지표와 관련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 챕터에는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제3장 공공고용, 제5장 예산제도와 실무, 제6장 인적자원관리, 제7장 규제거버넌스, 제8장 공공조달, 제10장 핵심 정부 성과, 제11장 대시민서비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표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의 많은 핵심 챕터에서는 새로운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제5장 예산제도와 실무에서는 OECD 국가 전반에 공유되고 있는 실무와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거나 통합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특정 예산제도를 다룬다. 따라서 자본예산과 인프라, 재정 위험, 성인지 예산, 예산의 투명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지표들이 포함된다.
- 제6장 인적자원관리에서는 OECD 국가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 조건, 고위 공무원의 성과관리, 공무원의 학습과 경력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 제7장 규제거버넌스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수,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시계열 자료로 측정되기 때문에 향후 OECD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성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졌다.
- 제8장 공공조달의 핵심 지표로 공공조달의 위험관리, 집권화된 역할을 포함한 공공조달 역량 및 성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 제10장 핵심 정부 성과에서는 산출 및 결과지표를 강조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답한 인구의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포함하였다.

새로운 특징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의 새로운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공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일련의 지표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제4장에는 기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지표에 더해 열린정부 정책에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었다. 또한, 열린정부 정책을 위한 제도적 구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평가 지표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제9장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에서는 주요 지표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를 업데이트 하였다. 제9장에는 디지털 정부 전략의 거버넌스, 다른 행위자에 대한 조정 역할, 정책 수단 등 디지털 정부에 관한 새로운 설문조사 자료가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정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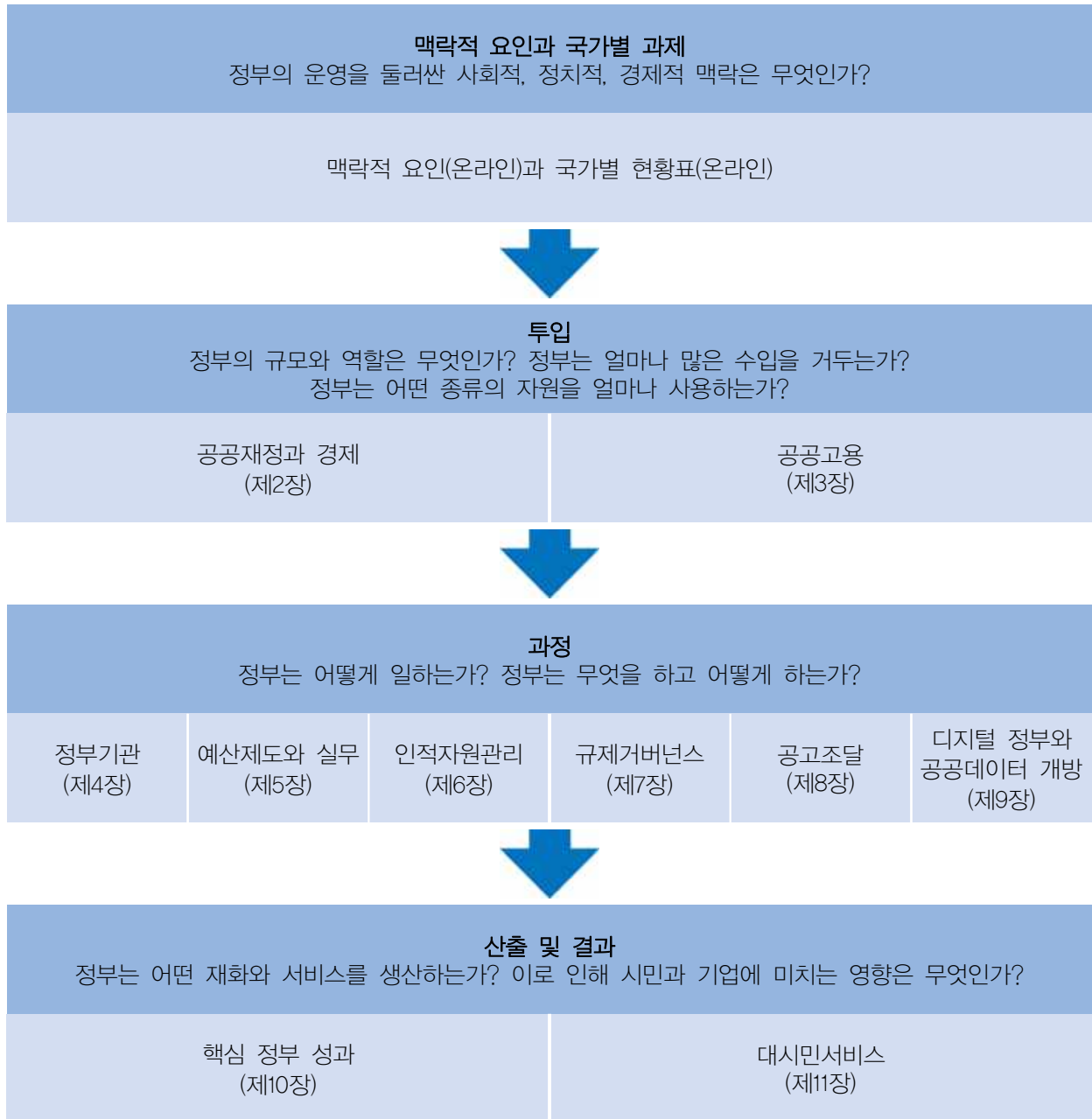
공공재정에 관한 자료에서 정부는 국민계정체계(SNA)상 “일반정부”로 정의된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부처, 기관, 산하 사무소, 일부 비영리기관과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된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 및 지방) 수준에서 제시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기금도 포함하였다. 또한 공공고용에 관한 자료에서 정부란 일반정부를 의미하지만,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에 관한 자료에서는 공공부문에 일반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 제도와 절차에 관한 자료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제도와 절차만 포함된다.

본 보고서의 체계와 구조

한 눈에 보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36개 OECD 회원국들의 자료를 포함하나, 가능한 경우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 후보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과 기타 주요 경제 협력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의 자료도 포함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제6판에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와 함께 맥락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0.1은 한 눈에 보는 정부의 개념적 체계를 보여준다.

그림 0.1.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의 개념적 체계



맥락

맥락적 요인(온라인)은 OECD 국가의 정치·행정 구조의 주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 간 제도적 차이와 유사성을 이해하고, 다른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별 현황표(온라인)는 OECD 회원국과 일부 회원 후보국의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특정한 맥락에 따라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제공한다.

투입

투입은 정부가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때 자원은 노동과 자본을 의미한다.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제3장 공공고용에서는 정부지출, 생산비용, 고용 및 공공부문의 인력 구성 등 주로 투입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국가 간 투입지표의 비교를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정부의 다양한 역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정

과정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공공관리 제도와 절차를 나타낸다. 즉,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정부의 책무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러한 과정의 개혁을 목표로 실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기관, 예산제도와 실무, 인적자원관리, 규제거버넌스, 공공조달,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제4장-제9장).

산출 및 결과

산출과 결과의 구분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산출물은 정부가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는 반면, 결과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시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산출 지표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이 달성한 결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정부 사업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효과(예: 후생 증진, 건강 개선, 교육/학습 향상)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부 사업과 서비스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의 행태적 특성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제10장과 제11장에서 산출과 결과를 측정한다.

- 제10장 핵심 정부 성과에서는 정부 신뢰도, 부패에 대한 인식, 법치주의(법의 지배), 소득재분배, 공공부문의 효율성(산출 중심), 비용효과성(결과 중심) 등 정부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 제11장 대시민서비스에서는 공공부문의 활동의 산출물과 결과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대시민성과표는 OECD 국가들이 개발한 후 OECD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분석 틀이다. 제11장은 대시민 서비스의 접근성, 대응성, 질에 대한 측정 결과를 제공한다. 제6판은 보건의료, 교육, 사법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과제

한 눈에 보는 정부를 발간하기 위해 OECD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중복 수집을 피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 갤럽 및 유럽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눈에 보는 정부에 포함된 국가 간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다음 개정판에서는 이하의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 OECD 유럽연합 회원국 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기능별 공공재정과 정부지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 국가 통계청과 협력하여 국민계정체계상 정부수준별, 성별, 연령별 정부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 예산의 투명성, 디지털 정부, 공공조달, 위험관리 분야의 중간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 주요 공공거버넌스 원칙 또는 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예: 다양성 이슈, 조직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결과 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 텍스트 마이닝 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어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OECD 사무국과 다른 OECD 국가의 심화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지역판

2019년 9월 *한 눈에 보는 정부*: 동아시아 지역의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¹⁾의 10개 국가와 OECD평균,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교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동아시아 지역은 공공재정과 경제, 공공고용, 예산 제도와 실무, 인적자원관리,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대시민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한 눈에 보는 정부*: 중남미 지역의 제3판은 2020년 3월 발매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중남미지역의 공공행정에 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다.

2020년 5월에는 한 눈에 보는 정부: 서발칸반도 지역²⁾의 초판이 발매될 예정이다.

공공거버넌스에 관한 모든 데이터와 지표는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OECD 공공행정국에서 *한 눈에 보는 정부*의 발간을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는 온라인 (<https://www.oecd.org/gov/govataglance.ht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를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에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정의, 출처, 방법론에 대한 원본을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통계자료에는 공공부문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대한 질적·양적 지표들이 포함되며, 새로운 데이터가 발행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주석

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국가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된다.
2. 서발칸반도 지역의 6개 국가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포함된다.

1.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 지향

서론

2008년 경제위기는 채무의 누적과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즉, 사람들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집단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있으나, 2007년과 비교할 때 정부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국내외 문제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중심의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있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퇴이후 평균 기대여명이 1970년 기준 남자 11년, 여자 15년인데 반해, 2016년에는 남자 18년, 여자 22년으로 각각 증가하였다(OECD, 2017^[11]). 또한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사회보장기여금의 재원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년을 늘리고, 조기퇴직을 제한하는 등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들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은 2017년 7.8%에서 2030년 10.2%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Lorenzoni et al., 2019^[21]).

상당수의 사람들은 질병 또는 실직 등의 재정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의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정부는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 재분배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Causa, Browne and Vindics, 2019^[31]). 가구의 자산(부) 불평등(예: 상위계층에 부동산 등의 경제적 자본 집중)은 소득불평등 수준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OECD국가 상위 10%의 총 소득은 전체 소득의 24%를 차지하는 반면, 상위 10% 가구의 총 자산은 전체 자산의 52%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lestra and Tonkin, 2018^[41]).

또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시민사회와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과 경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Welby, 2019^[51]).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가용성 및 활용의 증가, 민간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공공부문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즉,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서비스 접근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때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문서 중심의 거래를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는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적 제약 하에 놓여져 있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사람중심의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에 중점을 두고, OECD국가들의 성과와 거버넌스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더하여, 사람중심의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각 국의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본문을 참고할 수 있다.

1.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사람중심”이란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설계, 전달, 집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수요와 목소리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사결정 및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수요와 기대에 대응한 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접근법은 정부가 시민들의 수요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의 수혜 집단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 그들의 경험에 기반한 재능, 기술,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을 통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보장할 경우,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어 혁신을 강화할 수 있다(OECD, 2017_[6]). 이렇듯, “사람중심”이라는 개념에는 “사용자 중심(user centric)”, “사용자 기반(user driven)”과 그 이상의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사람중심의 개념에는 포괄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경제 활동인구의 특성과 역량이 고려된다.

사람중심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집합적 지식을 구축·공유하며, 시민들이 어디에 있던 데이터에 접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된 데이터와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람중심의 접근 방식 하에서는 접근성, 투명성, 통합, 대응성, 책무성, 평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의 원칙에 따라 정부, 개인, 민간기관이 상호 작용을 한다. 정부는 시민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즉, 정책 설계, 전달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들과 협력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예: 정보, 데이터, 디지털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열린 정부의 핵심은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포용적 정책의 대응은 청소년, 노인, 빈곤층과 같이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스스로 뒤쳐진 것으로 인식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OECD 국가의 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고, 서비스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와 시민 만족도와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 “사람중심의 정책결정”에서는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한 OECD 국가 중 모범 사례와 활동들을 소개한다.

2.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측정

이하에서는 OECD 국가들의 공공서비스 성과를 접근성, 대응성, 시민 만족도와 질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성과가설(micro-performance hypothesis)”에 기초하고 있다(Van de Walle and Bouckaert, 2003^[8]); (Yang and Holzer, M., 2006^[9]). 이번 장은 한 눈에 보는 정부의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을 통해 국가별 공공서비스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에서는 공공서비스 성과의 핵심 지표로서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2.1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공공부문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발급, 공공재로부터 얻는 혜택, 학교와 병원의 서비스 이용, 사회 급여의 자격을 얻거나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온라인 요청 등의 서비스 공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시민서비스 분석틀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 중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고, 합의된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보건, 교육, 사법 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시민서비스 분석틀은 향후 다른 서비스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란 사회적·개인적 삶의 다른 측면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다. 표 1.1에 제시된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은 서비스의 특성과는 무관한 사람중심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공공서비스 성과의 주요 차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을 통해 동일한 분야에 대한 국가 간 공공서비스의 성과는 비교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의 서비스 및 서비스 유형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대응한 포괄적이고(예: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 셀프서비스 전달체계를 선호하는 사람 등 모든 시민들에게 대응성을 갖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표 1.1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은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OECD 국가가 어떠한 진전을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1.1. OECD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

접근성	대응성	질
지불가능성	공손함 및 치료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과 성과
지리적 근접성	특별한 교육수요의 충족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 및 성과
정보의 접근성	적시성	보호/안전

하나의 차원에 초점을 맞출 경우, 다른 두 차원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차원에 대해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질(예: 학생 성취도)을 평가할 때에는 접근성(예: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에게만 교육 제공)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예: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와 무관한 표준화된 교육 제공)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다.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은 동일한 차원(예: 접근성)의 비교할 수 없는 지표(예: 취학률과 보건의료

보장성)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론적 시각을 제공해준다.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은 향후 다른 지표 또는 개인에 의해 보고된 측정 지표들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환자의 경험에 대한 국제비교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OECD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경험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보고지표조사(Patient-Reported Indicators Surveys; PaRIS)를 도입하였다. 환자보고지표조사는 의사의 치료(예: 무릎 인공관절 수술)가 환자의 삶의 질(예: 고통 감소) 개선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치있는 증거들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증거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의 범위(치료 및 절차)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각 차원에 대한 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는 행정 기록(예: 일선부처, 서비스 공급자), 통계청의 가구 조사, 국제 데이터 등에서 얻을 수 있다.

2.2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착할 수 있는 정부 활동의 핵심 성과를 의미한다(OECD, 2017^[8]; OECD, 2017^[9]). 만족은 일반적으로 기대, 서비스에 대한 경험, 다른 요인들(예: 미디어, 인터넷, 지인 등)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kobsen and Jensen, 2015^[10]; James, 2009^[11]). 시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이해할 경우,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시민의 필요, 기대, 소망이 충족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오직 개인 스스로 보고한 결과에 의해 서만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예: 1심법원에서 사건이 해결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시민들이 자신이 받은 서비스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시민들이 인지하는 서비스의 질, 대응성, 접근성에 대한 부분적인 결과이므로 이를 측정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에 있어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피드백을 얻을 경우,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저렴하고 빠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즉,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혁신에 있어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사람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자원의 배분, 서비스 설계와 집행의 변경과 관련된 결정에 앞서 시민과의 협의 또는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가 정책과 서비스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효율성, 비용효과성과 함께 시민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갤럽 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에 따르면, 2018년 OECD 국가의 전체 시민 중 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시민은 70%로 2007년과 동일한 비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교육 서비스에 만족하는 시민은 66%로 2007년에 비해 3%p 증가하였다. 사법 서비스에 대해 신뢰하는 시민은 55%로 2007년에 비해 4%p 증가하였다. 최근 공무원과의 상호 작용 경험, 응답 피로도, 응답 방식 등 여론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럽 여론 조사 데이터는 OECD 국가 간 시민 만족도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민 인식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보건의료, 교육, 사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국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또한, 벨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두 번째로 높은 국가(89%)이며, 핀란드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세 번째로 높은 국가(84%)이다. 200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는 에스토니아(21%p)와 리투아니아(19%p)이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는 스위스(16%p)와 이스라엘(12%p)이다. 그러나 터키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17%p)하였다.

2.3 서비스 성과와 시민 만족도

대시민서비스 성과표는 2017년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정부(2017 Government at a Glance)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시민 성과표는 교육, 보건,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대응성, 질, 만족도 측면에서 국가들의 상대적 성과를 보여준다. 성과표에 포함된 지표들은 적절성(예: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는 지표인가), 데이터의 가용성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OECD 전문가와 협의 하에 선정하였다. 성과표는 접근성, 대응성, 서비스의 질 측면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표는 OECD 국가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 보고서 후반부에는 접근성, 대응성, 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교육, 보건, 사법 분야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대시민서비스 성과표의 지표는 예방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의 질을 평가한다. 따라서 본 성과표의 지표는 보건의료의 질을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예: 예방 가능한 입원율(avoidable hospital admission), 산과적 외상(obstetric trauma))에 한정된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성과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대시민 성과표에서는 성과지표로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자가관리 행위(예: 건강검진 일정 준수) 또한 포함하고 있다.

개별 성과표는 분석 틀의 다양한 차원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교육, 보건, 사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후 이를 비교한다. OECD 국가는 각 지표의 성과에 따라 1) 상위 3분위(녹색), 2) 중간 3분위(주황색), 3) 하위 3분위(빨간색)로 구분된다. 또한 성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별 순위를 측정하였다(성과가 가장 높은 국가가 1위). 여러 국가의 지표 값이 동일한 경우 해당 국가들은 동일한 순위로 측정된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접근성, 대응성, 보건의료 정책의 질 모두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얻은 국가는 없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하나(또는 두 개)의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경우, 나머지 차원에서는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하나의 차원 내에서도 특정 지표에 대해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더라도 다른 지표에 대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성과표에 제시된 사망률(심장병, 뇌졸중, 유방암)은 흡연과 같은 개인의 행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제약이 존재한다.

표 1.2. 보건의료 정책 및 서비스의 접근성, 대응성, 질에 대한 성과표

	보건의료 정책 및 서비스									
	접근성			대응성			질			만족도
보건의료 보장성	미충족 의료	가계 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당일 의사의 회신을 받지 못한 환자의 비율	진료 예약을 위해 6일 이상을 대기한 환자의 비율	전문의 진료 예약을 위해 2달 이상을 대기한 환자의 비율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 (심장병)	사망률- 뇌혈관질환 (뇌졸중)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		
네덜란드	2	2	8	3	2	1	7	16	26	1
벨기에	4	9	25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	12	24	2
노르웨이	1	7	22	4	1	8	20	9	6	2
덴마크	1	7	1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18	27	3
스위스	1	4	35	1	4	1	4	1	15	3
호주	1	해당없음	16	4	3	5	14	10	9	4
오스트리아	2	1	3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4	6	18	5
뉴질랜드	1	해당없음	4	6	8	4	30	23	16	6
독일	1	3	11	2	11	3	23	13	28	7
룩셈부르크	해당없음	3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5	22	8
핀란드	1	17	24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5	22	9	9
스웨덴	1	8	27	7	9	7	21	14	7	9
영국	1	15	7	8	7	6	15	15	22	10
슬로베니아	1	15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27	28	11
미국	10	해당없음	14	8	5	2	16	11	9	12
캐나다	1	해당없음	13	9	10	9	17	3	12	13
체코	1	3	5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9	26	14	13
일본	1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	13	3	14
한국	1	해당없음	34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20	1	15
프랑스	2	6	3	5	6	3	2	2	21	16
이스라엘	1	해당없음	1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4	23	17
스페인	2	2	2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8	5	18
아일랜드	1	13	1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9	17	29	19
포르투갈	1	10	2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28	10	20
슬로바키아	5	11	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6	33	25	20
에스토니아	6	20	1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19	11	21
터키	3	1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2	32	2	21
멕시코	11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3	21	4	22
리투아니아	8	8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34	13	23
폴란드	9	16	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25	20	24
이탈리아	1	9	2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24	17	25
헝가리	7	5	2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8	31	30	26
그리스	1	19	3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2	29	19	27
칠레	7	해당없음	3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1	30	8	28
라트비아	1	18	3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35	26	28
아이슬란드	1	14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8	7	28	해당없음
연도	2017	2018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8

주: 국가는 만족도의 순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성과표에 기입된 숫자는 각 국가의 순위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 범위에 따라 상위 3분위 국가(보건의료 보장 범위가 95%~100%), 중위 3분위 국가(90%~95%), 하위 3분위 국가(90% 이하)로 구분하였다.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자료는 EU에서 수행한 소득 및 생활여건에 관한 설문조사(EU-SILC survey)를 활용하였다. “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이유로 인해 건강 검진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문항에 거리, 대기시간,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고 답한 응답자 수를 측정하였다. 본인부담액(OOP payments)은 환자가 의료 또는 치료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의 소득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공공(또는 민간)건강보험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포함된다(co-payments).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의료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지불한 비용까지 본인부담액에 포함한다. 전문의 진료 예약을 위해 2달 이상을 대기한 환자의 비율은 지난 2년 동안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받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당신은 전문의를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거나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로 결정한 이후, 진료를 받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당신이 살고있는 도시 혹은 지역의 보건의료/교육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과 이용가능성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본, 스페인의 보건의료 보장성 자료는 2017년 대신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자료는 2018년 대신 2017년의 자료, 아이슬란드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칠레의 가계 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자료는 2017년 자료 대신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호주,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의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유방암 사망률 자료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출처: OECD (2019),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2019), Commonwealth Fund (2017)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of Older Adults, *Gallup World Poll* 2018 (database).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가계 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과는 상관없이 보건의료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며, 미충족 의료 수요의 비중이 낮은 국가이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응성과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호주와 노르웨이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아니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은 가장 낮다(제11장 대시민서비스 보건의료의 질 지표 참조).

교육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르웨이, 스위스는 질, 대응성, 접근성 지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해당 국가들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사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교육 최초 입학률과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룩셈부르크 제외). 또한, 해당 국가들은 적응형 교수법의 활용, 학습도우미의 제공, 교육자료의 적절한 활용과 같이 교육 서비스가 학생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는 국가에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수업료 또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재정적 제약과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특히, 신뢰 수준은 사법 서비스의 질(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세 가지 성과표는 서비스 만족도와 접근성, 대응성, 질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와 사법 제도의 신뢰도는 교육 서비스의 만족도 보다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민사사법 서비스의 효과적인 집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r=0.67$).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와 저소득층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r=-0.57$).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관측치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일부 국가의 거버넌스(예: 분권화, 공공데이터 활용)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표 1.3. 교육의 접근성, 대응성, 질에 대한 성과표

	교육									만족도
	접근성			대응성			질			
	사교육비 지출(초등 교육~고등 교육)	4세 아동 취학률	고등교육 최초 입학률	교육자료 부족지수	학교에서의 학습도우미 이용가능성	적응형 교수법의 활용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과학평균 점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수학평균 점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능력평균 점수	
노르웨이	2	8	12	18	30	11	18	14	7	1
스위스	해당없음	32	3	4	23	20	12	3	22	2
덴마크	해당없음	3	4	11	1	7	15	7	15	3
핀란드	1	28	21	23	15	14	3	8	2	3
아일랜드	10	1	해당없음	28	28	19	13	13	3	4
네덜란드	22	9	14	12	22	17	11	6	12	4
슬로베니아	12	22	11	8	24	해당없음	7	9	11	5
룩셈부르크	3	14	28	15	2	31	26	26	28	6
벨기에	7	2	9	25	26	27	14	10	17	7
폴란드	13	27	7	5	13	22	16	12	10	8
오스트리아	6	18	13	10	36	34	20	15	25	9
캐나다	26	해당없음	해당없음	1	7	2	4	5	1	9
체코	17	23	17	16	18	30	23	21	24	9
프랑스	16	1	해당없음	14	16	28	21	19	16	9
뉴질랜드	28	10	1	17	8	3	6	16	8	9
영국	31	1	10	19	3	10	9	20	19	9
호주	33	24	해당없음	3	6	4	8	18	13	10
독일	18	13	20	22	25	33	10	11	9	11
멕시코	25	21	23	33	34	6	36	36	36	11
포르투갈	20	19	19	24	12	1	17	22	18	12
이스라엘	23	4	15	32	17	21	31	31	29	13
스페인	24	5	6	27	32	15	24	25	21	13
미국	32	31	25	6	4	5	19	32	20	14
스웨덴	4	16	18	9	5	12	22	17	14	15
에스토니아	9	20	해당없음	20	21	23	2	4	4	16
일본	29	12	5	36	9	35	1	1	6	17
이탈리아	15	15	24	35	35	29	27	23	26	18
슬로바키아	19	29	22	21	20	32	32	30	34	18
칠레	34	26	2	7	33	8	34	34	33	19
그리스	8	30	26	30	27	25	33	33	32	20
라트비아	11	17	해당없음	13	14	9	25	27	23	20
한국	30	7	해당없음	31	29	24	5	2	5	21
헝가리	21	11	27	34	19	26	28	29	31	22
리투아니아	14	25	8	29	10	16	29	28	30	23
터키	27	33	해당없음	26	31	18	35	35	35	24
아이슬란드	5	6	16	2	11	13	30	24	27	해당없음
연도	2016	2017	2017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8
	상위 3분위									
	중간 3분위									
	하위 3분위									

주: 국가는 만족도의 순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성과표에 기입된 숫자는 각 국가의 순위를 의미한다. 교육자료의 부족 지수는 각 학교의 교장을 대상으로 “물적 인프라(학교 건물, 냉난방 시스템, 교육용 공간)와 교육 자료(교과서, 실험장비, 교육용 자료, 컴퓨터)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역량이 얼마나 제약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반영하였다. 해당 지수는 평균 0, 표준편차 1로 정규화 하였다. 학습도우미의 이용가능성은 각 학교의 교장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한 학습도우미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적응형 교수법의 활용은 “학생이 주제와 과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가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수의 수업에서 그렇다”, “모든 수업 또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을 반영하였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당신이 살고있는 도시 혹은 지역의 교육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과 이용가능성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에 취학 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을 포함한다. 아일랜드는 취학 전 교육에 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을 포함한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의 지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 교육예산 중 민간부담의 비율이 높다. 덴마크와 스위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교육 지출에 대한 민간부담의 자료에 대해 그리스는 2015년의 자료, 칠레는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출처: OECD (2019), *OECD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OECD (2015) *PISA* (database), *Gallup World Poll 2018* (database).

표 1.4. 사법 시스템의 접근성, 대응성, 질에 대한 성과표

	사법 시스템									신뢰도
	접근성		대응성			질			민사사법 제도의 효과적 집행	
민사사법 제도의 접근성 및 지불가능성	접근 가능한, 공정한, 효과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존재	민사, 상사, 행정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민사, 상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1심법원)	행정 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최고법원)	민사사법 제도의 효과적 집행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			
노르웨이	9	1	12	10	해당없음	2	1	4	1	
덴마크	4	4	1	12	해당없음	4	2	2	2	
스위스	해당없음	해당없음	9	3	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핀란드	17	19	9	16	11	6	8	5	4	
룩셈부르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캐나다	23	1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7	7	5	
독일	2	5	해당없음	13	15	5	3	12	5	
네덜란드	1	6	6	4	7	3	6	18	5	
오스트리아	10	20	4	6	16	8	9	9	6	
영국	26	17	해당없음	해당없음	17	14	13	15	7	
아일랜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스웨덴	3	26	10	11	3	1	5	1	9	
뉴질랜드	8	1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5	12	11	10	
일본	11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16	3	11	
호주	20	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4	13	12	
프랑스	15	7	15	21	14	11	15	22	13	
벨기에	6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19	9	11	17	14	
리투아니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1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4	
미국	27	1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	19	16	15	
체코	18	11	11	8	18	18	17	6	16	
그리스	16	23	해당없음	24	22	25	23	26	16	
이스라엘	해당없음	해당없음	16	20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	
에스토니아	7	8	2	7	3	16	10	10	18	
포르투갈	14	10	해당없음	19	20	24	14	24	19	
헝가리	24	27	4	9	4	26	27	8	20	
폴란드	21	13	7	14	5	20	25	19	20	
터키	25	24	해당없음	22	6	22	28	23	20	
슬로바키아	해당없음	해당없음	8	5	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1	
스페인	5	14	14	18	13	23	22	21	22	
멕시코	28	2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26	28	23	
이탈리아	22	25	17	23	21	28	20	25	24	
슬로베니아	12	22	5	17	12	21	24	14	24	
라트비아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15	1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5	
칠레	13	2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9	21	27	26	
한국	19	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18	20	해당없음	
아이슬란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도	2019	2019	2016	2016	2016	2019	2019	2019	2018	

상위 3분위
중간 3분위
하위 3분위

주: 국가는 만족도의 순위로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성과표에 기입된 숫자는 각 국가의 순위를 의미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는 각 국가의 3대 도시 거주 인구 중 일반인 1,000명과 민법에 관한 전문가(실무자 및 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법치주의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점수가 클수록 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민사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불가능성은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권리에 대한 인식, 법률 서비스의 비용, 소송자에 대한 차별의 존재 등으로 평가된다.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접근성, 공정성, 효과성은 비용, 해결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결정의 강제집행 등에 의해 평가된다. 부적절한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소송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은 법원 판결의 집행과 적시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형사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적시성은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기까지의 기간, 미결구금 및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법정에 서기까지의 기간 등을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적 폭력 행사는 가해자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포함한 범죄를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개인이 밤에 혼자 길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최근 3년(또는 1년) 이내에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인식되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정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1심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해 동안 미해결된 사건의 수를 해결된 사건의 수로 나눈 값에 365를 곱해서 계산한다. 소송 절차가 있는 민사-상사 사건은 이혼 소송과 같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소송 절차가 없는 사건은 협의의 지급명령과 같은 협의 절차와 관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사 사건을 다루는 상사법원이 존재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민사법원이 이를 다루고 있다. 행정사건은 시민과 행정기관(지방,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이 존재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민사법원이 이러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각 국가마다 개별 법원이 다루는 재판의 종류, 법원 간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비교는 신중을 요한다. 국가 간 법원의 유형과 개별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분류 방법이 차이가 존재한다.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당신이 살고있는 국가의 사법 제도와 법원 서비스에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데이터는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19), Rule of Law Index 2019, CEPEJ database (2017)

3. 사람중심의 정책결정

사람중심의 정책결정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절차, 근거, 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의 국민들은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공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람중심의 서비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OECD, 2019_[12]).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공개는 서비스(예: 의사, 교사 등) 만족도에 대한 시민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책 설계와 서비스 전달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람중심의 접근 방식은 첫째,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중심의 접근과 투명성, 공개, 시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요구한다. 둘째, 정부 서비스는 시민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설계와 전달에 사용자의 선호와 서비스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정부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OECD, forthcoming_[13]).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서비스는 시민들의 필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요구한다.

3.1 공개, 투명성, 참여, 책임성 있는 정부

공개, 투명성, 참여, 책임성은 상호연계성을 갖는 개념이다. 이하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정부가 공개, 투명성, 참여, 책임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예시를 제공한다. 오늘날, 특히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플랫폼, 공공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이자 절차의 자동화와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널리 채택해왔다. 정보통신기술은 시민들의 필요를 예측 및 이해하며, 서비스를 평가·재정의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사용자의 수요가 서비스 설계에 핵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은 보다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빠르고,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Ubaldi et al., 2019_[14]).

서비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접근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의 설계에 있어 사용자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예: 정보 공유와 전체 예산에 대한 합동 기획)의 강화를 의미한다. 온라인 국가 포털은 예를 들어, 서비스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Box 1.1 참조). 온라인 국가 포털은 데이터, 정보, 시스템, 절차를 통합하여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화 된 창구를 제공한다. 2014년 OECD 국가 중 19개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허용된 디지털 식별장치(예: 디지털 서명)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2014년 기준, 디지털 식별장치를 보유한 국가는 OECD 21개 회원국 중 20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디지털 장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간 상호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활용이 단순해야 하며, 가능한 많은 범위의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박스 1.1. 일관된 디지털정부 접근법의 주요 특징

디지털 정부 전략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에서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과 디지털 정부 전략의 성공적인 설계, 개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전략과 12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014년 OECD의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한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OECD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권고안을 6가지 차원으로 재정립하였다.

1. **설계에 의한 디지털:** 정부는 디지털 정책을 설계할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고,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략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에 접근해야 한다.
2. **데이터 주도 공공분야:** 데이터는 공공부문의 기반이 되는 촉매제로서 데이터를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전달체계의 유형을 결정하며,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해야 한다.
3. **원칙적 공개:** 디지털 운영방식의 근간이 되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정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4. **사용자 주도:** 설계에 의한 디지털 전략을 지원하고 공개 문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플랫폼으로의 정부:**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정부와 시민, 기업, 시민 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지원하는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6. **자발성:** 이상의 5가지 원칙의 적용을 통해 시민의 수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에 대한 단편적인 디지털화가 아닌 문제 전체의 해결을 위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정부에 신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성공적인 열린정부를 추진해야 한다. 열린정부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문의 정의에 따르면 열린정부란,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증진하는 거버넌스 문화를 의미한다. 열린정부는 공공 정책의 공동설계 및 공동집행과 같은 협력적 제도를 통해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민중심의 접근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모든 OECD 국가에서 공공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공공데이터 이니셔티브를 공공데이터 전략에 통합하거나, 다른 계획 또는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또한, 2016년 정부수뇌기관이 열린 정부 전략 및 이니셔티브의 설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는 OECD 21개국으로, 이 중 20개국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열린정부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와 관련된 정책 분야에서 수립된다. 그러나, 열린정부 이니셔티브의 수립이 곧 열린정부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열린 정부의 영향평가 및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활용 등을 통해 열린정부 이니셔티브가 실제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열린정부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시민, 기업, 소비자, 근로자를 포함한 적절한 이해관계자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동시에 그들의 경험, 전문성, 시각, 아이디어를 논의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얻은 정보는 실제 정책 또는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의도되지 않은 효과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OECD, 2018^[18]).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어떻게 열린정부 정책이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창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2016년 OECD 28개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직접

그림 1.1. 공공데이터 전략의 수립 (2015년)



주: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출처: OECD (2015_[15]), Survey on Open Government Co-ordin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Cycl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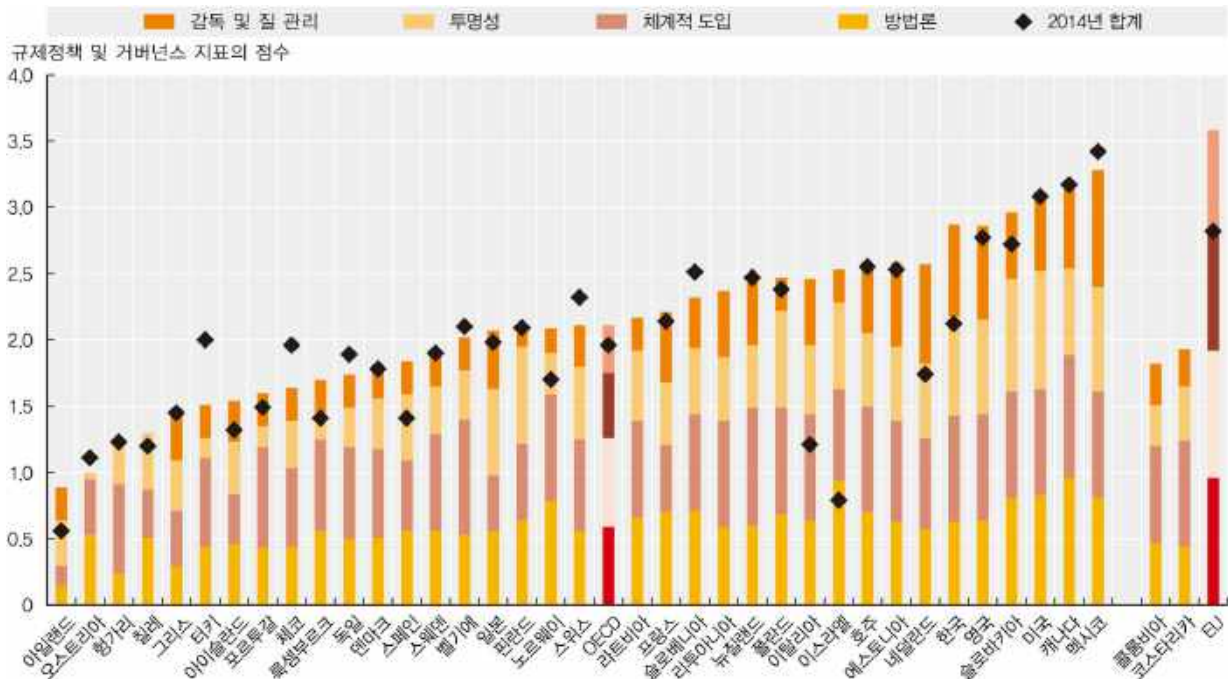
이해관계자와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입안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그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 4개 항목(방법론, 감독 및 질 관리, 체계적 도입, 투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국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이 시민들에게 보다 폭 넓게 개방되고, 유용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OECD 국가들은 최소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도입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의 입안을 위한 공식 요건과 협의 절차의 마련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그림 1.2 참조).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이미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이 결정되고, 실제 규제가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즉,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자가 이를 평가하는 초기의 결정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

지난 3년간(2014-2017년) OECD 국가에서는 하위법령의 입안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에 있어 약간의 개선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 중 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어, 예정된 협의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 협의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의견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또한, 규제 제·개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의 방법론 측면에서도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2 참조).

OECD 국가들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규제의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OECD 국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향후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고지하지 않는다. 또한 감독 및 질 관리 지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시민참여를 감소시키고, 규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2. 하위법령(subordinate regulations)의 입안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2017년)



주: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2014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34개 OECD 회원국, 유럽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7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회원 후보국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자료가 추가되었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2012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에 기초하였다.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더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는 0-4점으로 구성된다. 자료의 범위는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 하위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2015^[17] and 2018^[18], <http://oe.cd/ireg>.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681>

(Lind and Arndt, 2016^[19]). 또한 감독 및 질 관리 지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의 활용은 특히 정책평가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정책결정과 연계하며, 실무자와 국민에 대해 결과를 공개할 경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정책평가의 결과와 예산의 연계, 국무회의에서 정책평가의 결과 보고, 기관 차원의 관리·대응체계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 데이터 주도 정부를 통한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 전달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설계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선호, 관심, 기대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과 규정을 시행하며,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민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속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를 정책결정과 서비스 설계 및 전달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OECD, 2014^[20]).

공공부문의 데이터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활동을 통해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예측 및 기획** :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설계, 정부개입에 대한 기획, 수요 및 변화 예측
- **전달** :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집행, 정부의 대응성, 공공서비스 공급 활동의 개선 및 정보 제공
- **평가 및 모니터링** :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 모니터링, 감사, 영향평가 실시. 평가와 모니터링은 설문조사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설계와 사후적으로는 성과평가에 기여한다. 정부 전반에 대한 정책평가의 역량은 대부분 정부수뇌기관과 적절한 일관성, 유인 구조, 질적 기준을 보장하는 재무부에 의해서 결정된다(OECD, 2020 forthcoming_[23]).

빅데이터는 대용량, 빠른 입출력 속도, 다양성의 특성을 지닌 데이터로(Kim, Trimi and Chung, 2014_[21]),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 중 하나이다. 정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을 요청받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부가 적시에 지표를 생산하고, 보다 신속하게 전환점을 파악하며, 비상상황(예: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보다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박스 1.2 참조).

또한,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모든 유형의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재사용을 수반한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의 재사용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언론인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 결과, 많은 OECD 국가들은 민간, 기업가, 시민의 노력을 통해 혁신 서비스와 정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자동으로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박스 1.2. OECD 국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아일랜드 :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지도 제작이다. 아일랜드의 국토지리정보원(Ordnance Survey)의 ‘Geohive 서비스’는 지리·공간 데이터를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지도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주거 동향과 홍수 위험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 박탈감에 대한 정보, 지역 보육서비스의 세부 정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웹사이트(Pobal)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 한국은 2014년부터 공공부문 빅데이터분석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공공부문의 한 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하였다. 표준화된 모델은 시민서비스, 관광, 교통, CCTV, 공공주택 등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며, 2017년까지 175개 기관에 16개의 표준화된 모델이 제공되었다. 표준화된 모델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석에 있어 발생하는 지역적 차이를 최소화하여 정책이 주어진 데이터셋을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현재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초국경적(transboundary)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MIDAS(데이터 분석과 서비스의 의미있는 통합)는 이러한 초국경적 사업 중 하나이다. 플랫폼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보건의료 데이터와 기타 정부 데이터를 외부의 공공데이터와 매핑·수집하고, 관리, 모델링, 처리 및 활용함으로써 증거 기반의, 실행가능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국가, 유럽 전역의 모든 보건 정책의 현장검사(point-of-car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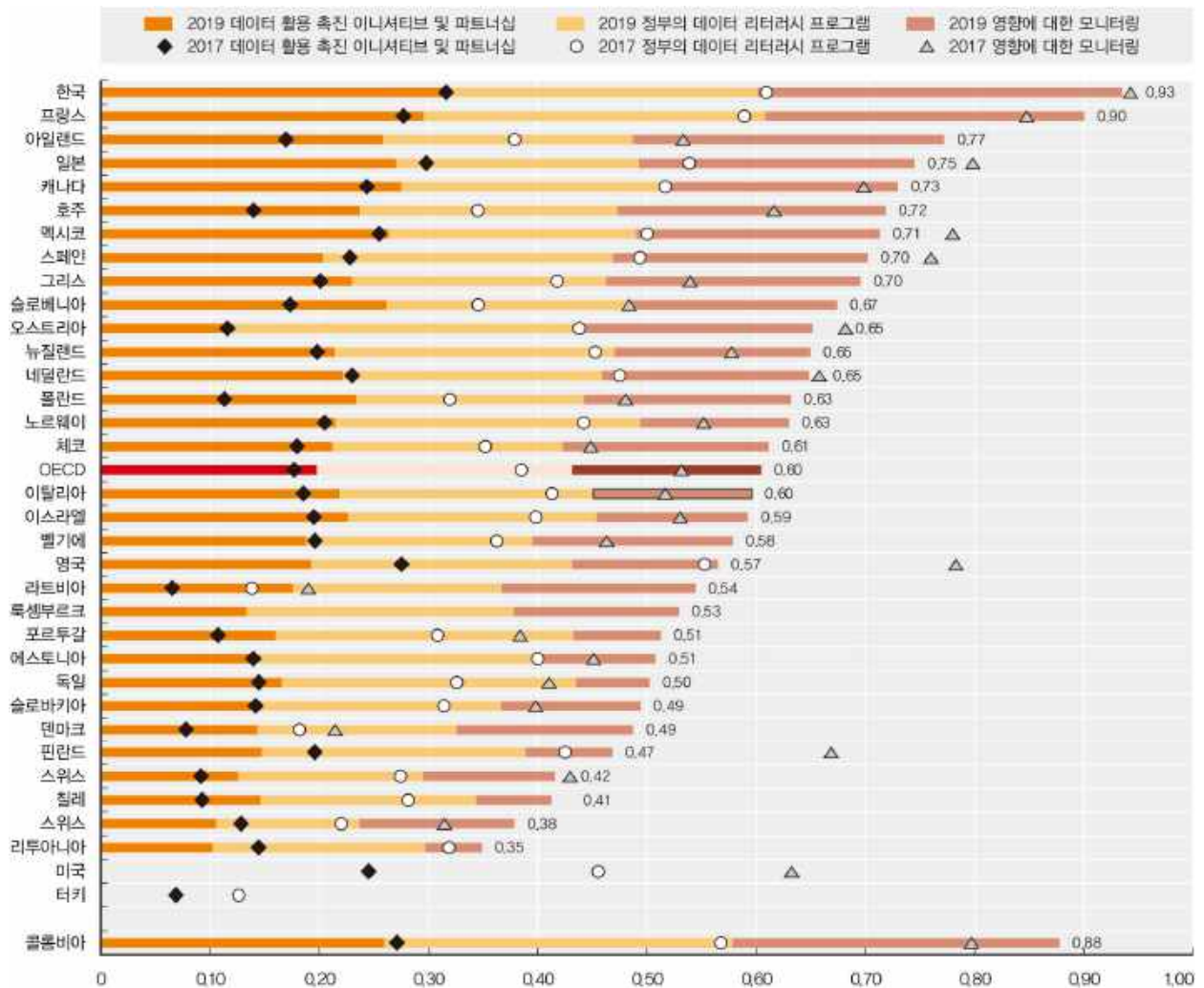
글로벌 협력 : 정부의 수많은 데이터는 글로벌 이슈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관측그룹회의(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는 지구 관측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적인 협력적 노력을 의미한다. 전지구 관측 시스템(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은 종합적,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생성하는 글로벌 공공 인프라로 다양한 글로벌 사용자와 의사결정자를 위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다.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공공조달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의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 및 이니셔티브의 설계와 이행의 노력을 평가한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국제오픈데이터현장의 원칙을 참고하여 OECD에서 개발하였다(Lafortune and Ubaldi, 2018^{[22])}.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개별 국가의 상대적 장점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잠재적인 영역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정책의 발전은 사용자와 데이터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공공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OECD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2019년 OECD국가의 90%는 정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87%는

그림 1.3.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 (2017년, 2019년)



출처: OECD (2016^{[23])}, “Open Government Data Survey”; OECD (2018^{[24])}, “Open Government Data Survey”.
 주: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가장 낮은 점수는 0, 가장 높은 점수는 1에 해당한다.

개방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2019년 OECD국가의 90%는 정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87%는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정부 데이터를 제공하며, 93%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또한, 정부는 공공데이터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OECD 국가의 64%는 행정의 내부 역량과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와의 협력과 공동창조(co-creation) 행사 개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할 때,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거나 공공데이터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그러나, 여전히 공공데이터가 갖는 장점을 이용하고 더욱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데이터의 형태와 제공 절차에 관한 표준 및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피드백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사용자의 기여를 촉진할 수 있다(OECD, 2018[25]).

3.3 사회를 반영한 대시민서비스의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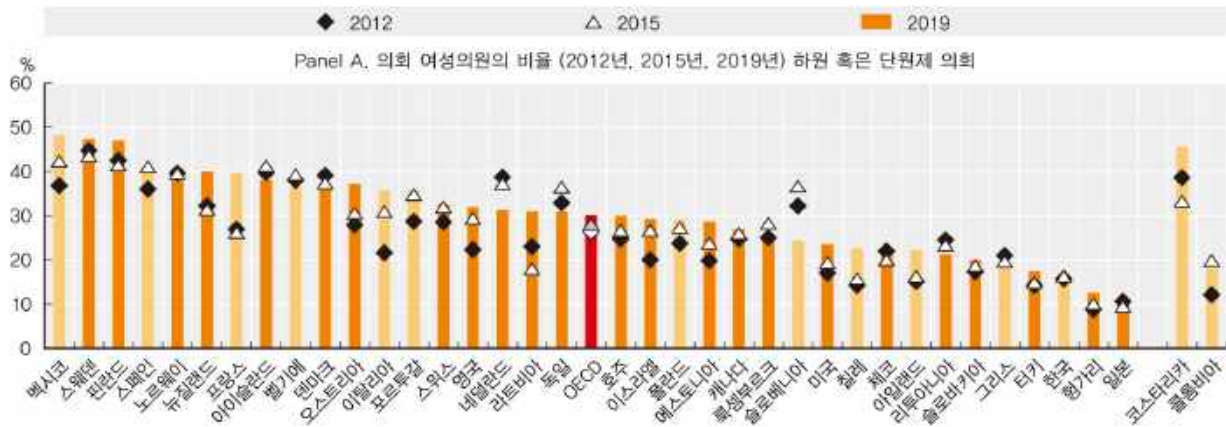
사람중심에 있어 중요한 측면은 행정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시민의 다양한 요구, 소망, 기대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서비스 전달의 장벽과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사회경제적, 개인적 특성을 대표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공무원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즉, 포용성은 다양성을 실천하고, 직장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시각에 가치를 부여하며, 지지하고 존중하며, 이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분야 또는 부문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표성을 제고할 경우, 정책형성 및 집행에 있어 그동안 간과했던 지식, 네트워크, 시각을 얻을 수 있다(OECD, 2011_[26]; OECD, 2014_[27]). 즉, 다양성과 포용적 전략을 택하는 OECD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성, 공감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다양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사람중심의 공공부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Marina, 2015_[28]; Edlin and Delamore, 2018_[29]). 공공부문이 대표해야 할 정당화된 기대를 갖는 집단의 유형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인종, 성, 민족, 소수 종교, 빈곤층, 노인, 장애인, 원주민과 같은 소수 집단 등을 포함한다(White and Rice, 2015_[30]). 성별 대표성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는 반면, 자료의 민감성으로 인해 민족, 종교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대표성과 관련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2017년 OECD국가의 공공부문 내 여성 인력의 비율은 평균 60%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내 여성이 과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안정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교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특정 직종이 여성의 일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고위직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장관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고위 관리직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정부 부처, 최고법원에서 여성이 동일하게 과소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 Panels A, B, C 참조). OECD 국가들은 고위직 고용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다양성 전략에 포함하고, 고용과 승진에 있어 여성의 할당비율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OECD, 2014_[27]).

공공정책과 자원 배분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책이 주요 인구집단 및 정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이 체계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공적 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권고’에서는 공공 부문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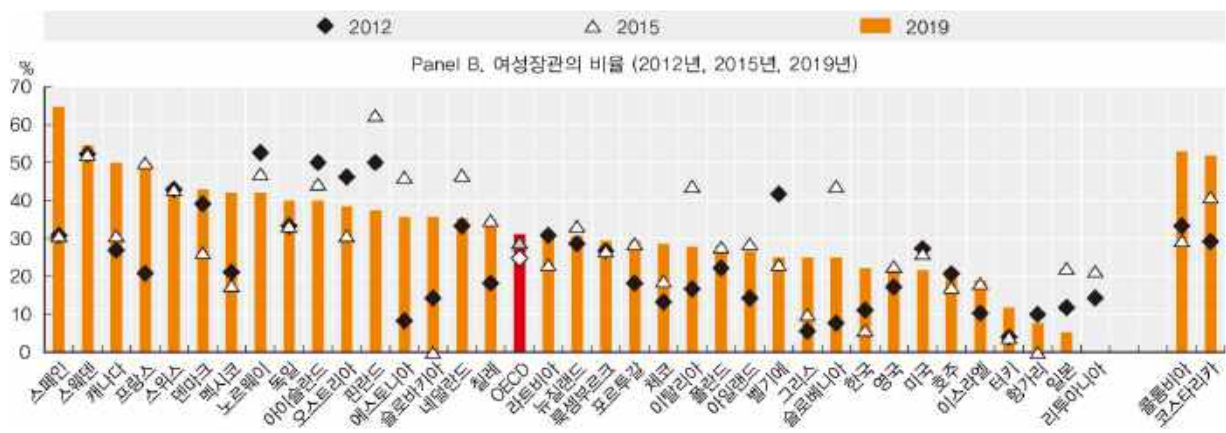
그림 1.4. 의회, 부처, 상급법원의 성평등



주: 핀란드의 2019년 자료는 정부 당국에 의해 제공받았다. 연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2019년 4월 기준, 여성의원원에 대한 후보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PARLINE (database); IDEA Quota Project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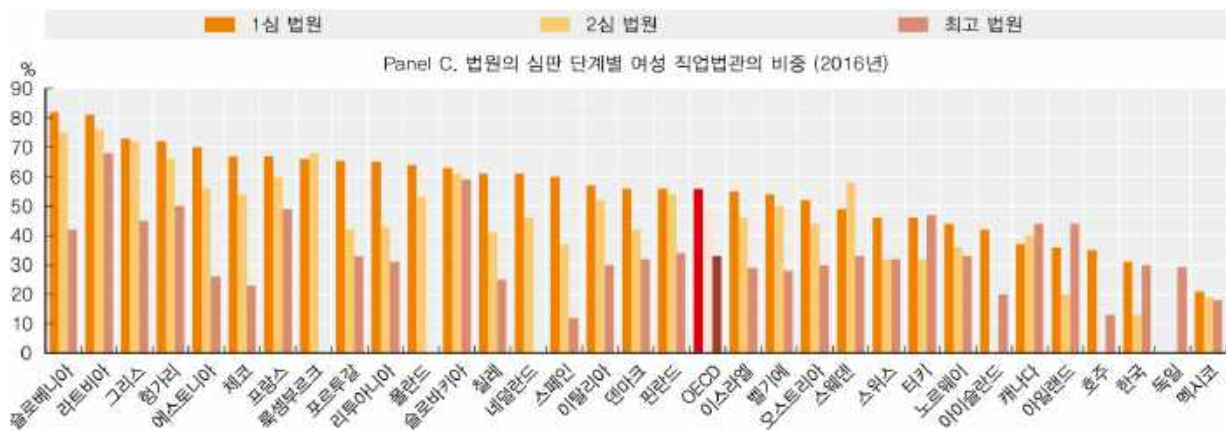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199>



주: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omen in Politics”, 2019, 2015 and 2012.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218>



주: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독일과 포르투갈의 자료는 정부 당국에 의해 제공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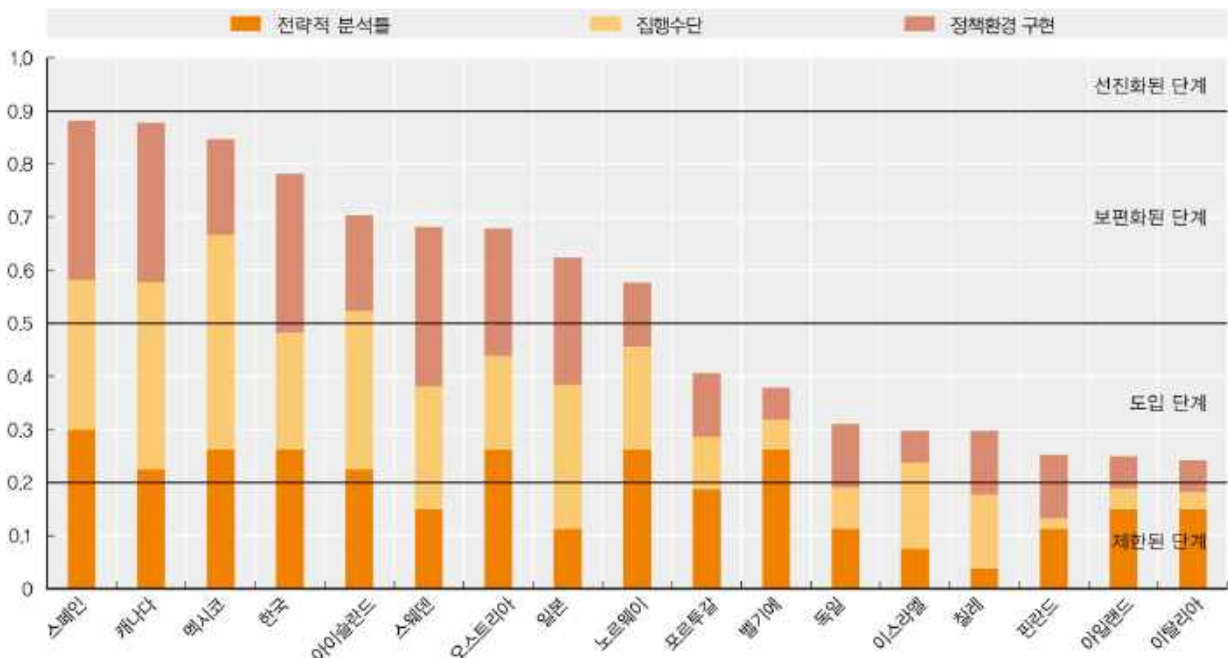
출처: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data, 2016; OECD (2017[31]), “Survey on Gender sensitive Practices in the Judiciary.”

위한 주요 수단으로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성인지 예산은 정책과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은 2016년 12개국에서 2018년 1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으로 증가하였다. OECD 국가들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정권별 인식 차이와 재정적 제약을 들 수 있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재정관리제도 또는 절차로 인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행이 제약될 수 있다.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절반 이상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법제화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의 운영 방식은 각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나, 주로 양성평등 기준선 분석, 사전·사후적 성평등영향평가, 양성평등 수요 평가 등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OECD, 2019[32]).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단계의 국가에 해당한다.


OECD는 성인지 예산의 핵심 요소에 대한 개별적이고 질적인 정보들을 요약·제공하고,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만들었다(그림 1.5 참조). 종합 지수의 값이 높은 스페인,

그림 1.5. 성인지 예산의 종합지수 (2019년)



주: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자료만을 보여준다.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종합 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의 값이 0.9점 이상일 경우 선진화된(advanced) 단계의 국가, 0.5점 이상 0.9점 미만일 경우 보편화된(mainstreamed) 단계의 국가, 0.2점 이상 0.5점 미만일 경우 제도 도입(introductory) 단계의 국가, 0.2이하일 경우 제도가 없거나 제한된(threshold) 단계의 국가로 분류한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출처: OECD (2019[32]), Designing and Implementing Gender Budgeting: A path to ac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gov/budgeting/designing-and-implementing-gender-budgeting-a-path-to-action.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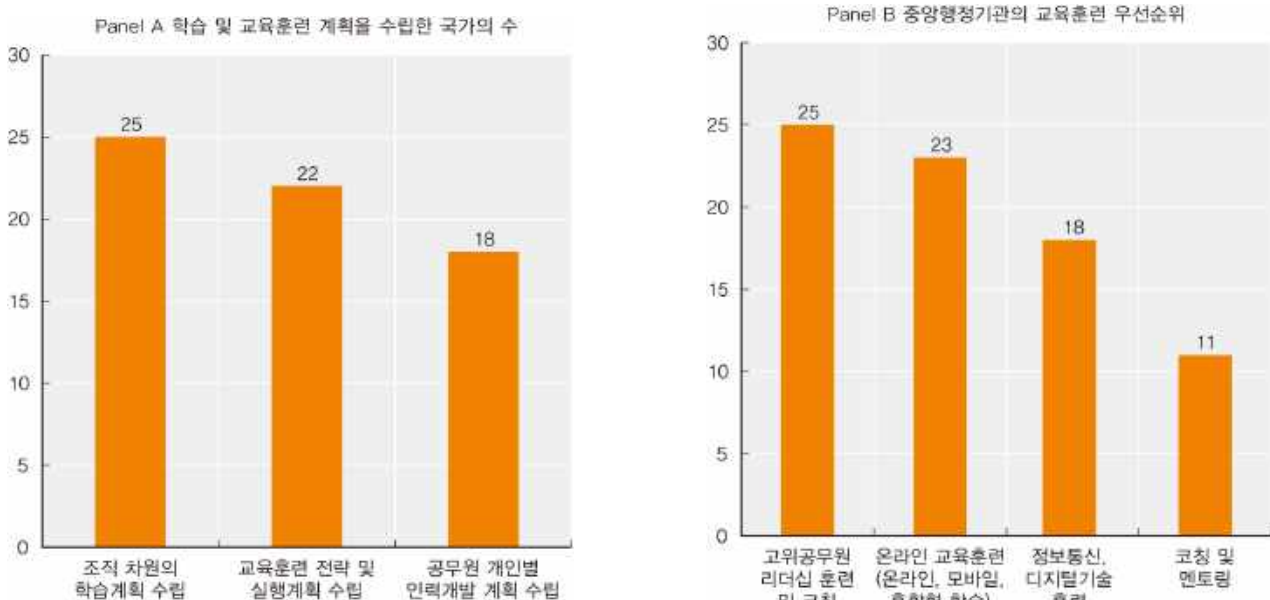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256>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전략적 분석 틀을 수립한 동시에 예산 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수단을 갖추고, 성인지 예산의 시행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환경을 구현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지수를 통해 성인지 예산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자원 배분이 성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1/5이 약간 넘는 국가에서는 공공조달시 여성기업의 참여 촉진과 같이 정부 사업에 대한 여성의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들을 시행하고 있다(제8장 전략적 공공조달 참조).

정책문제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공무원은 전문성, 공정성, 가치주도성,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같은 복잡한 범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은 협업을 장려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통찰력과 회복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제도의 유형(계급제 또는 직위분류제)과는 별개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매력을 높이고, 채용 제도의 질과 완전성을 보장함으로써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가치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기술, 지식, 행동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기술을 습득하기에 앞서 적절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직무기술의 조정, 교육 또는 재교육의 기회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가 급변하는 시민의 수요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특성화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공무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이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9년 공공리더십과 역량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에 따르면, 전통적인

그림 1.6. 중앙행정기관의 학습 및 교육훈련 계획과 우선순위 (2019년)



주: 그림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OECD 36개 회원국 전체의 자료를 보여준다.
출처: OECD (2019[33]),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집합교육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학습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의 Panels A와 B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학습 및 교육훈련 계획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 국가의 수를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 2/3의 국가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리더십 훈련을 교육훈련의 우선순위로 택했다. 이는 고위 공무원이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전략적 개혁의 촉매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교육훈련의 우선순위로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훈련을 택한 국가는 OECD 국가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수 등 인력 이동학습의 전략적인 활용은 공무원 및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을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이동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의 절반 미만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중심의 정책결정은 공공부문 근로자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함을 의미한다. 공공조직에 관한 고용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업무 환경,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다. 고용조사는 직장에서의 행복, 리더십, 통합 등을 높이기 위한 결정에 있어 유용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참여와 작업장의 생산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85% 이상이 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의 내용과 범위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용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참여, 동기, 만족, 조직몰입,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용조사가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이슈를 측정하는데는 덜 활용되고 있다.

결론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구고령화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람중심의 접근은 공공정책 및 서비스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부문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공공서비스의 역량과 가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시민들의 필요, 소망, 행동을 고려한 정책설계와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는 데이터로부터 얻은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이해를 추구하고, 호기심과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행정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참여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로의 통합은 정부의 인력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특히 정치적 리더십, 고위직 공무원에 장애인, 소수자,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 혁신, 변화의 대처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의 파악 및 개발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전략적, 혁신적인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정책의 개발, 건설적인 담론, 시민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있다.

제1장은 현재 OECD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정책과 실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새롭게 제기된 이슈이며, 매우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은 상호 학습을 통해 이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투명성을 높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며,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과 칸막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1장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는 무엇이고,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이러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행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경험과 정부의 정책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투자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줄여야 하는 격차를 파악해야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OECD 국가들의 향후 의제는 더 많은, 개선된 증거의 개발이다. OECD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OECD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 방향과 서비스 전달 모델에 대해 보여준다.

주석

1. 제1장의 성과표에는 제11장과는 일부 다른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은 접근성, 대응성, 서비스의 질의 측면에서 개별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제11장은 개별 서비스 보다는 전체적인 분석 틀 차원에서 각 국가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한 눈에 보는 정부 2017판에 포함된 교육의 질과 대응성(예: 교육자료의 부족 지수, 학교에서 학습 도우미의 이용가능성, 적응형 교수법의 활용,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과학, 수학, 읽기능력 평균 점수)을 분석하였다.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결과는 2019년 12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대응성에 대한 비교가능한 국가별 데이터가 부족하여 제11장의 성과표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문헌

- Balestra, C. and R. Tonkin (2018),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8/0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7e1bf673-en>. [4]
- Causa, O., J. Browne and A. Vindics (2019), “Income redistribution across OECD countries: Mai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3b63e61c-en>. [3]
- Edlin, M. and S. Delamore (2018), “Ready to serve the public? The role of empathy in public service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Vol. 24/3, pp. 300-320. [29]
- Jakobsen, M. and R. Jensen (2015), “Common Method Bias in Public Management Studies”,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Vol. 18/1, pp. 3-30, <http://dx.doi.org/10.1080/10967494.2014.997906>. [10]
- James, O. (2009), “Evaluating the expectations disconfirmation and expectations anchoring approaches to citizen satisfaction with local public servic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19/1, pp. 107-23. [11]
- Kim, G., S. Trimi and J. Chung (2014), “Big Data Applications in the Government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Leading Countrie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7, pp. 78-85, <http://dx.doi.org/10.1145/2500873>. [21]
- Lafortune, G. and B. Ubaldi (2018), “OECD 2017 OURdata Index: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807d3c8-en>. [22]
- Lind, E. and C. Arndt (2016), “Perceived Fairness and Regulatory Policy: A Behavioural Science Perspective on Government-Citizen Interactions”, *OECD Regulatory Policy Working Papers*, No. 6,

-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1629d397-en>. [19]
- Lorenzoni, L. et al. (2019), “Health Spending Projections to 2030: New results based on a revised OECD methodology”,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1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667f23d-en>. [2]
- OECD (2019), *Designing and Implementing Gender Budgeting: A path to action*,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gov/budgeting/designing-and-implementing-gender-budgeting-a-path-to-action.pdf>. [32]
-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33]
- OECD (2019), *Risks that Matter: Main Findings from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ls/soc/Risks-That-Matter-2018-Main-Findings.pdf>. [12]
- OECD (2018),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3072-en>. [16]
-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Report: Enhancing Policy Maturity for Sustainable Impact*,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847-en>. [25]
-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Survey*. [24]
- OECD (2017), *Core Skills for Public Sector Innovation*, OECD Publishing, https://oecd-opsi.org/wp-content/uploads/2018/07/OECD_OPSI-core_skills_for_public_sector_innovation-201704.pdf. [6]
- OECD (2017), *Fostering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0879-en>. [7]
-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gov_glance-2017-en. [9]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how_life-2017-en. [8]
- OECD (2017),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Survey*. [18]
-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 [1]
- OECD (2017), *Survey on Gender-sensitive Practices in the Judiciary*. [31]
- OECD (2016), *Open Government Data Survey*. [23]
- OECD (2015), *Survey on Open Government Co-ordin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Cycle*. [15]
- OECD (2014),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Survey*. [17]
- OECD (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06>. [20]
- OECD (2014), *Women, Government and Policy Making in OECD Countries: Fostering Diversity for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10745-en>. [27]
- OECD (2011), *Public Servants as Partners for Growth: Toward a Stronger, Leaner and More Equitable Workfor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166707-en>. [26]
- OECD (forthcoming), *Data-driven Public Sector Report*, OECD Publishing. [13]
- Rice, M. (ed.) (2015), *Managing Diversity in Communities, Workplace and Societies*, Routledge. [28]
- Rice, M. (ed.) (2015), *The Multiple Dimensions of Diversity and Culture*, Routledge. [30]
- Ubaldi, B. et al. (2019), “State of the art in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public sector”,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32780bc-en>. [14]
- Welby, B. (2019), “The impact of digital government on citizen well-being”,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4bac82f-en>. [5]





2. 공공재정과 경제

일반정부 재정수지

일반정부 순저축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순금융자산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일반정부 수입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일반정부 지출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경제적 거래별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

정부수준별 수입 및 지출 구조

공공투자지출

일반정부의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특집: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사회보호분야와 보건분야의 일반정부 지출

재정수지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며,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이 정부 지출에 충당된 정도를 보여준다. 세출이 세입보다 클 때는 재정적자, 세출이 세입보다 작을 때는 재정흑자를 의미한다. 기초재정수지 즉, 부채와 관련된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단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2007-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최고 수준(GDP 대비 8.7%)에 도달하였다. 이후 재정적자의 규모는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2.2%로 보고되고 있다.

2017년 OECD국가 중 1/3이상이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흑자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노르웨이(GDP 대비 4.9%)이고, 다음으로는 한국(GDP 대비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재정적자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4.1%), 스페인(3.1%), 포르투갈(3.0%), 일본(3.0%)으로 보고되었다. 2018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국가 중 대부분은 2017년에 비해 일반정부의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포르투갈(+2.5%p)은 재정적자 상태에 있지만 재정수지가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이다. 포르투갈은 경제 활동과 고용의 활성화로 경상수입 특히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성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7년 금융기관의 재자본화로 일시적인 재정수지의 악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노르웨이(+2.3%p) 또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석유 시장으로부터 국가를 절연시키는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비석유산업에서의 구조적인 적자를 국부펀드의 4%가 아닌 3%로 설정하는 등 보다 신중한 가정 하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하였다.

OECD 국가들의 연이은 재정적자는 국가 채무의 누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높은 이자지출을 수반하여 다시 재정적자를 가중시켰다.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가 추가적인 부채의 누적 없이 현시점에서 부채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2017년 OECD 회원국 중 3/4 이상의 국가에서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리스(3.6%)의 흑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줄이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대폭 시행한 결과이다. 동기간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

(2.7%)으로, 이는 예측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반복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소비세 인상 지연의 결과이다. 일본은 구체적인 세출 삭감, 세금 인상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분석 틀(fiscal framework)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OECD 2019).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를 이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재정수지(fiscal balance)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순융자(net lending; +) 또는 순차입(net borrowing; -)을 의미한다. 수입은 조세, 순사회보장기여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지출은 중간 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이자 지출 포함), 사회 급여, 기타 경상지출(주로 경상 이전 지출), 자본지출(자본 이전 및 투자)로 구성된다.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일반정부 부채와 관련된 순이자지출(이자지출-이자수입)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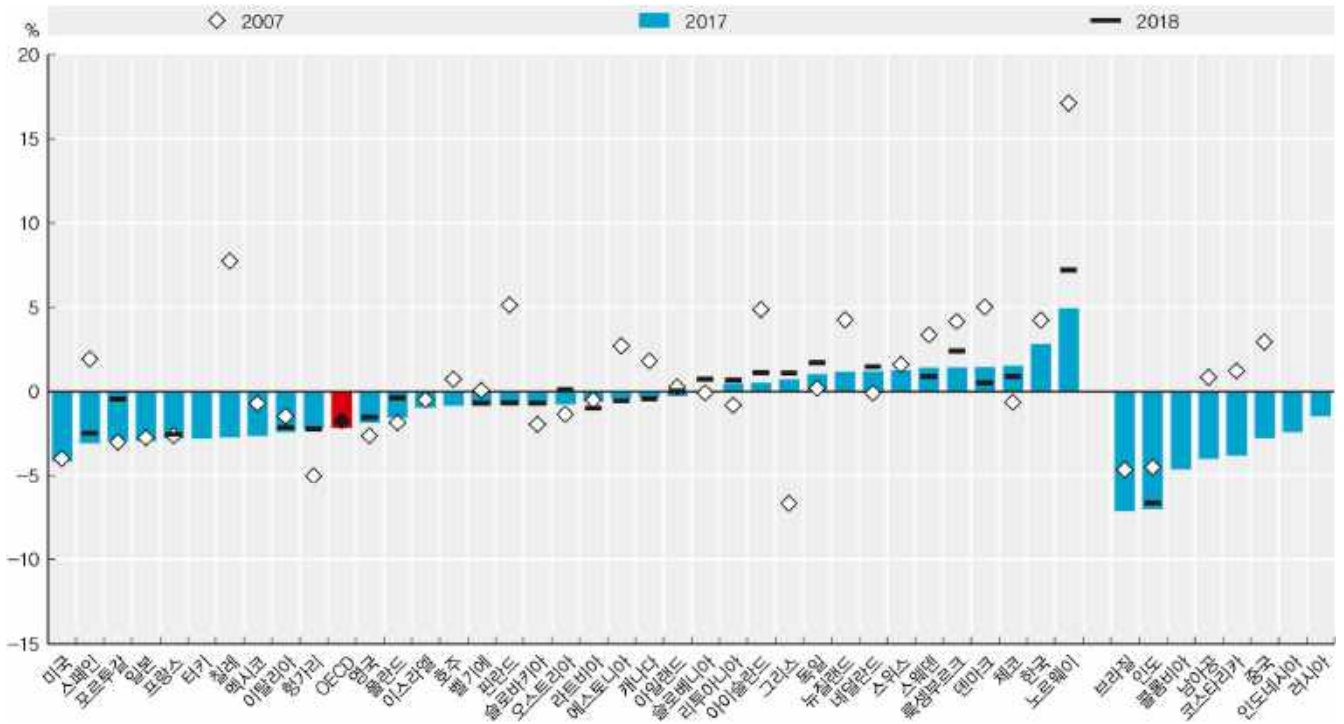
-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d63f374-en>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Norway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eco_surveys-nor-2018-en

그림 설명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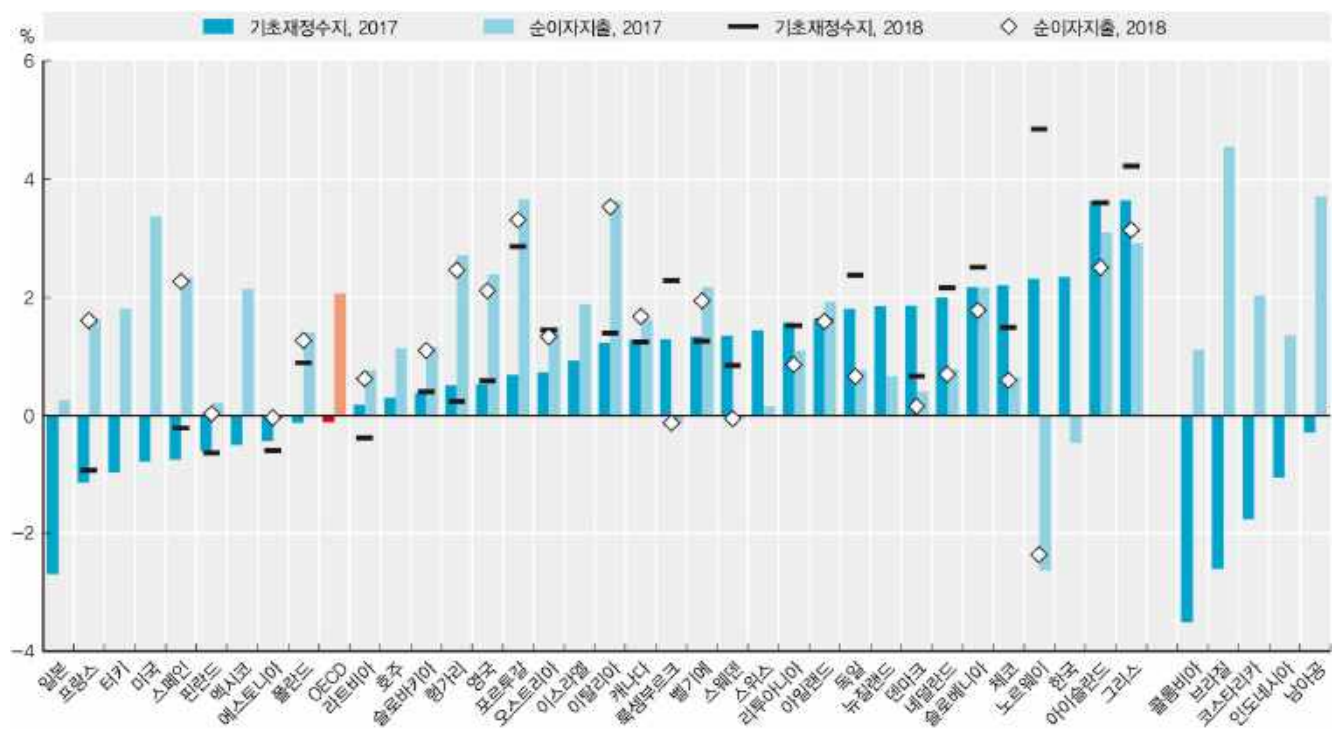
- 2.1. 칠레와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고, 정부 합계에 비재무적 자료가 포함된 관계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 2.2.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1. 일반정부 GDP 대비 재정수지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을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294>

2.2. 일반정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및 순이자지출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313>

일반정부 순저축은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 또는 자본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즉, 순저축 개념에는 투자지출 또는 자본이전(예를 들어,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이전지출)이 고려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순저축은 정부 재정의 “황금률(golden rule)”과 연관된 개념으로,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경상수입이 반드시 경상지출을 보다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부채 조달(debt issuance)이 오직 지속가능한 재정 기초를 이끄는 성장촉진 투자(growth-promoting investment)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7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순저축은 국내총생산의 -1.8%이며, 순저축이 양(+)의 값을 갖는 국가(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은 국가)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7년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순저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4.9%)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년간의 재정건전화 기초 이후 재정지출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 초, 조세개혁으로 인한 재정정책의 상당한 완화와 2018-19년 의회의 지출한도 인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OECD 2018a). 반면,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순저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6.9%)이다. 노르웨이는 비석유산업의 적자가 국부 펀드(해양에서 생산되는 석유 수입으로 조성)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재정제도 하에서는 순저축의 적자를 방지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순저축의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2007년 8개국에 불과한 반면, 2017년에는 1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순저축의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 중 긴축정책에 앞장선 오스트리아(0.1%p), 체코(0.4%p), 네덜란드(0.8%p), 독일(1.2%p)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2007년 대비 2017년 순저축이 감소하였다.

순저축과 달리 순융자/차입(예: 재정수지)은 자본지출 즉, 투자지출 또는 자본이전의 규모를 고려한 개념이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적자(순융자/차입)는 순저축보다 0.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융자/차입과 순저축 간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터키(2.88%p)와 아이슬란드(2.86%p)이다. 터키는 2016년 이후 대규모 공공투자의 증가로 정부 지급 보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OECD, 2018b). 아이슬란드는 2016년 은행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2008년 이전 국제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경제위기 결과가 2017년 1분기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Baldursson, Portes and

Thorlaksson, 2017). 또한 아이슬란드는 재정 제약, 관광업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이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정부 순저축(government net saving)은 경상수입과 경상지출(감가상각 포함)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총저축은 경상지출에서 감가상각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수치이다. 순융자/차입의 재정수지는 총저축에서 순자본이전(예: 자본이전 수입-자본이전 지급)을 더한 값에서 총투자(예: 총자본형성 및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순취득)를 뺀 값을 의미한다(순융자/차입 재정수지 = 총저축 + 순자본이전 - 총투자).

순융자/차입은 자본지출을 고려한 후 재정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다른 부문에 금융 자금을 지원할 경우 순융자(또는 정부 흑자), 정부가 지출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금융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순차입(또는 정부 적자)으로 정의된다.

순융자/차입과 비교하여 순저축은 대규모 자본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회성의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순저축은 정부 투자 시 건축 프로그램과 적자의 증가로부터 받는 상당한 압력을 피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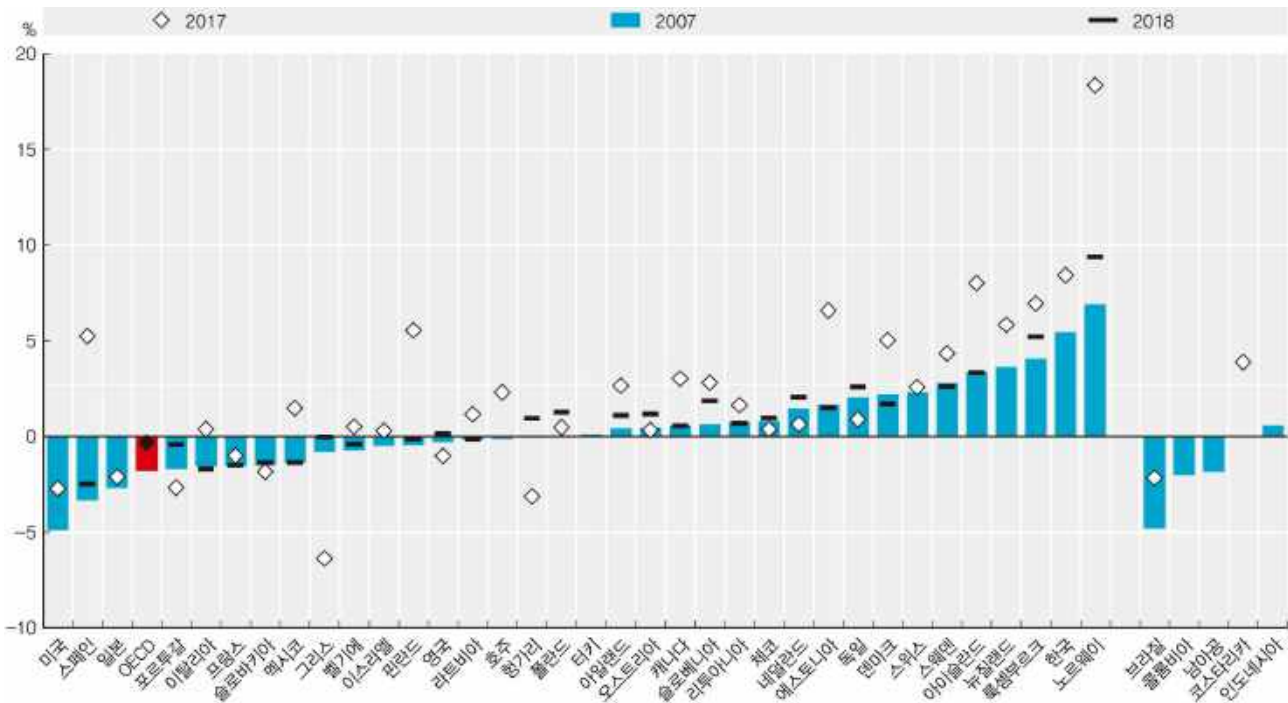
- Baldursson, F., R. Portes and E. Thorlaksson (2017), “Iceland’s Capital Controls and the Resolution of its Problematic Bank Legacy”, <http://doi.org/10.13140/RG.2.2.36548.73604>.
- OECD (2018a),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surveys-usa-2018-en>
- OECD (2018b), OECD Economic Surveys: Turkey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tur-2018-en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 러시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5. GDP 대비 순자본이전의 비율(%)은 부록 A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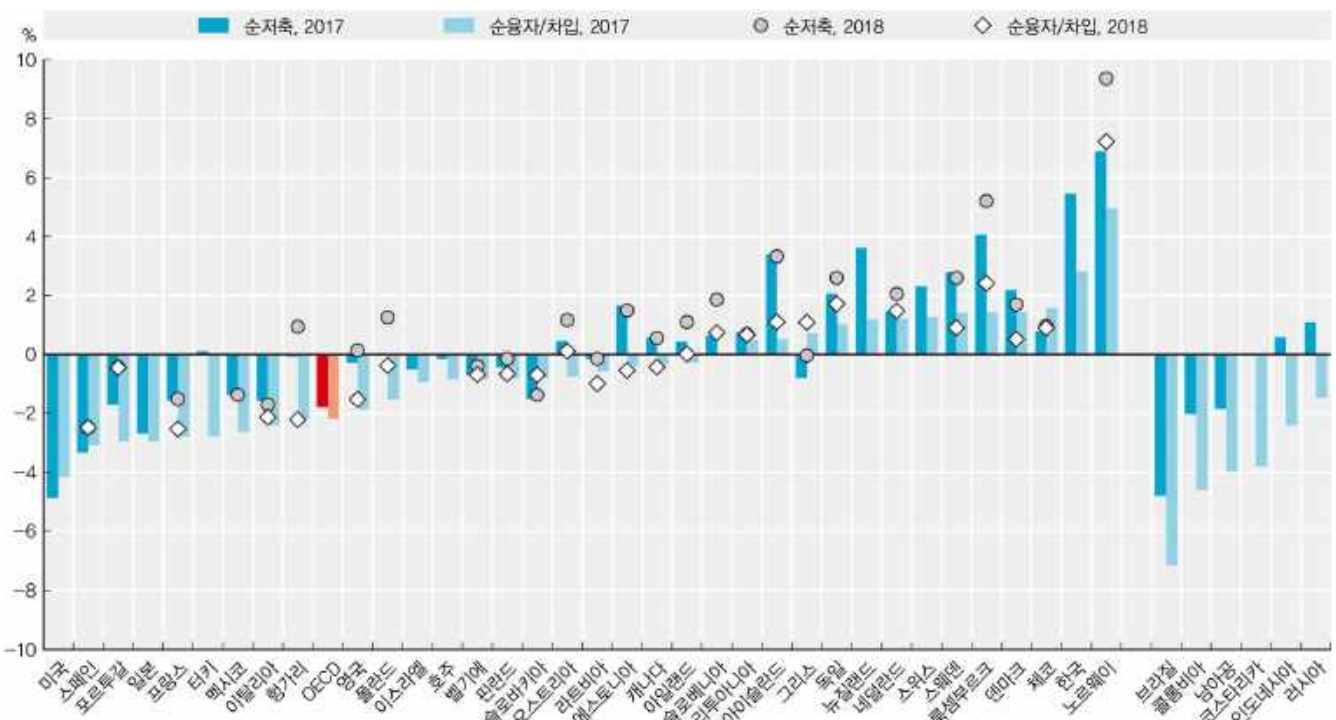
2.3. 일반정부 GDP 대비 순저축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332>

2.4. 일반정부 GDP 대비 순저축 및 순융자/차입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351>

정부의 재정수지는 주기적인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경기침체 시에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정부의 수입(특히 세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또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의 수급권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정부 지출(공공투자)을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수치만으로는 정부의 근본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는 주기적인 경기 변동과 일회성 사건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개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경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계를 위해서는 재정수지와 산출(잠재GDP: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의 구조적, 주기적 요소에 대한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산출 갭(output gap)은 실질 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로 측정된다.

잠재 GDP를 기준으로 2017년 OECD회원국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평균 2.3%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긍정적인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장 높은 경기조정 적자(4.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감세정책의 효과가 당초의 예측과는 달리 추가적인 경제성장과 보건 의료 지출의 증가로 상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기술의 노동대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특히 산업 중심지에서 높은 실업률, 경제활동의 비참여, 빈곤, 잉여노동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OECD 2018a). 반면, 가장 큰 구조적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6.4%)이다. 그리스는 2015년-17년 상당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세 순응의 개선과 지출 통제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재정건전화 정책의 긴축 효과가 완화된다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으며, 2017년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s; EDP)가 종료되었다(OECD, 2018b).

2018년 OECD 회원국의 구조적 적자 평균은 2.8%로 2017년과 비교하여 2/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구조적 재정수지의 악화를 경험하였다. 구조적 적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이스라엘(2.1%p)로 이는 조세감면, 보조금의 증가, 재정개혁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구조적 재정수지가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는 룩셈부르크(1.1%p)와 독일

(1.1%p)로 이는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경제의 공급능력(고용 포함) 제약에 직면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8c).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는 일반정부 부채와 관련된 순이자지출(이자지출-이자수입)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구조적 재정수지와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는 2017년 잠재 GDP 대비 -0.5%를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0.4%p 하락하여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 추세는 미중 간 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잠재적 효과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글로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의 자료는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No.105)을 활용하였다.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fiscal balance) 또는 근원 재정수지(underlying balance)는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산출 갭(실질 GDP-잠재GDP), 예외적 재정운영(one-off fiscal operations)을 조정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잠재GDP는 관찰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예외적 재정운영은 일회성의 이전지출 및 불규칙하고 예외적인 재정거래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의 “Sources and Methods”를 참고할 수 있다(www.oecd.org/eo/outlook/sources-and-methods.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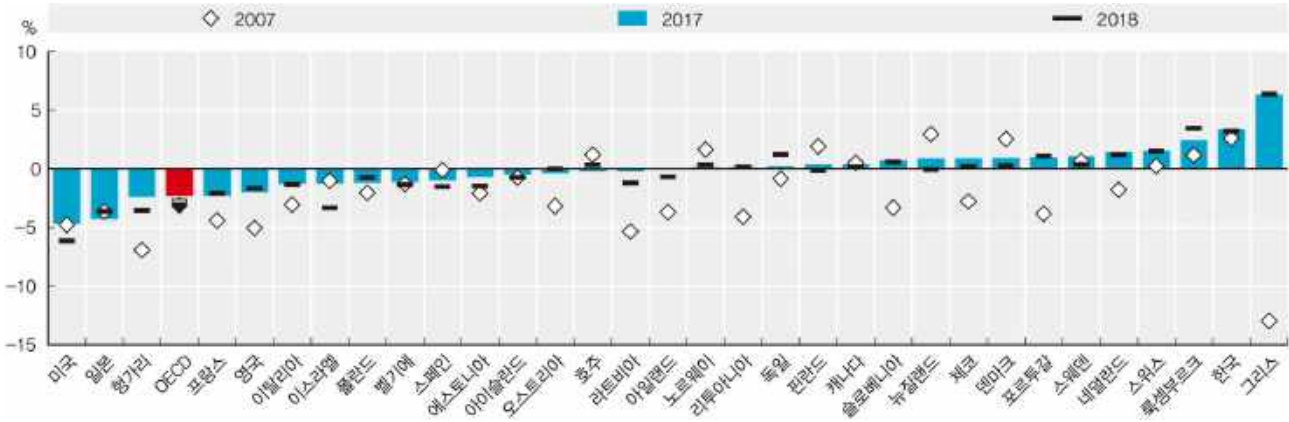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o_surveys-usa-2018-en
-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Greece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o_surveys-grc-2018-en
- OECD (2018c), 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o_surveys-deu-2018-en

그림 설명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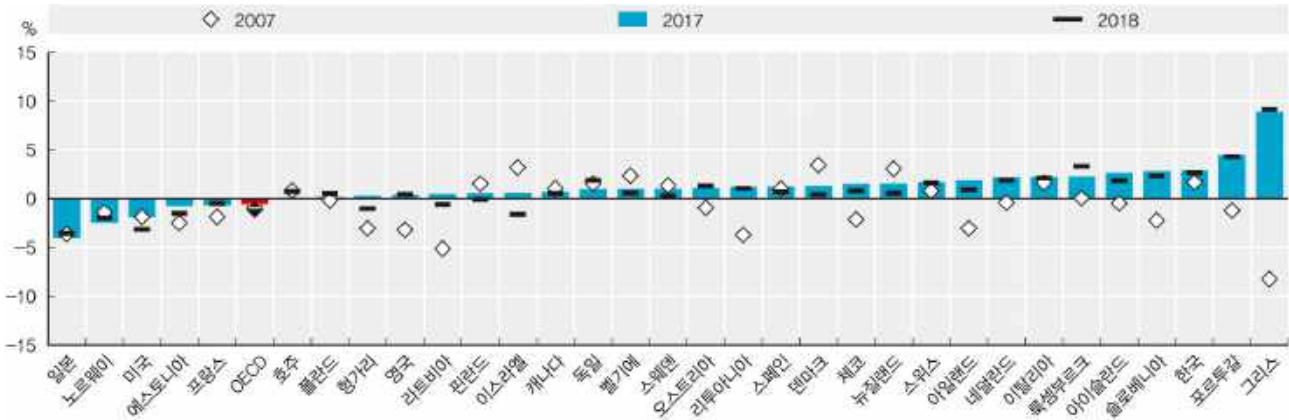
2.6. 일반정부 잠재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5, May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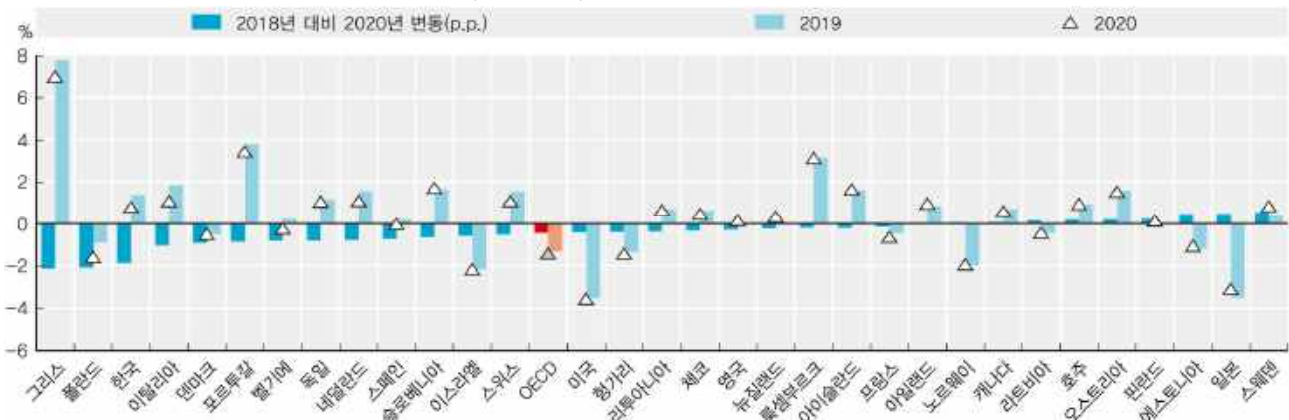
2.7. 일반정부 잠재 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5, May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389>

2.8. 일반정부 잠재 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추계 및 변동
(2019년, 2020년, 2018년 대비 2020년 변동)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5, May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408>

공공 부채 수준은 공공 재정과 경제 전체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 부채는 경상지출 또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에 대한 투자 시 이자지급의 형태로 비용이 조달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함께 경제적 능력의 격차, 인프라 개발 수요, 부문별·사회적 우선순위에 관한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다.

2017년 OECD국가의 평균 정부 총부채는 GDP의 110%에 달하며, 2007년과 비교하여 37.3%p 증가하였다. 정부 총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2010년대 초까지 OECD국가들에 만연했던 금융기관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와 경기침체에 대응한 확장적,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설명된다. 2017년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를 기록한 국가는 에스토니아(13%)와 칠레(29.6%)이다.

2007년~2017년 정부 총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75.9%p)와 스페인(72.8%p)이다. 그리스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부채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혁이 요구되며,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채무 구조조정(예를 들어, 현재의 낮은 이자율 고정)이 필요하다(OECD, 2018a). 스페인은 최근 낙관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17년~2018년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이 1.3%p 감소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 때, 중기재정목표를 유지함으로써 공공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한다(OECD, 2018b).

OECD국가의 1인당 정부 총부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5%씩 증가하여 2017년 평균 53,641달러(PPP 기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6년과 비교해서 2017년 평균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2%p 감소한데서 알 수 있듯이, 지난 몇 년간 정부 부채의 증가 추세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정부 총부채는 대부분 채무증권(83.0%)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차입금(8.6%)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부채’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활용하였다.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채무(debt)는 부채(liabilities)의 특정한 부분집합으로, 부채에 포함된 금융수단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의미한다. 모든 채무상품은 부채에 포함되지만, 부채 중 주식(shares), 자본(equity),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는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부채(예: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standardised guarantee scheme), 기타 미지급 계정,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등을 포함하여 일반정부의 대차 대조표에서 이용(적용)가능한 부채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계정 체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채무상품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일부 국가에서는 채무증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연금을 정부 부채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가 어렵다.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고용과 관련된 연금충당부채(적립 또는 미적립)를 정부 채무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미적립 연금 채무를 제외한 조정된 정부 채무 비율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인 정보는 StatLinks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부 채무는 정부보유 자산의 가치로 조정되지 않은 총채무를 의미한다. 국민계정체 계상 채무의 정의는 EU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채무 정의와는 다르다. 1인당 정부 부채에 대한 정보는 일반정부 수입(62쪽)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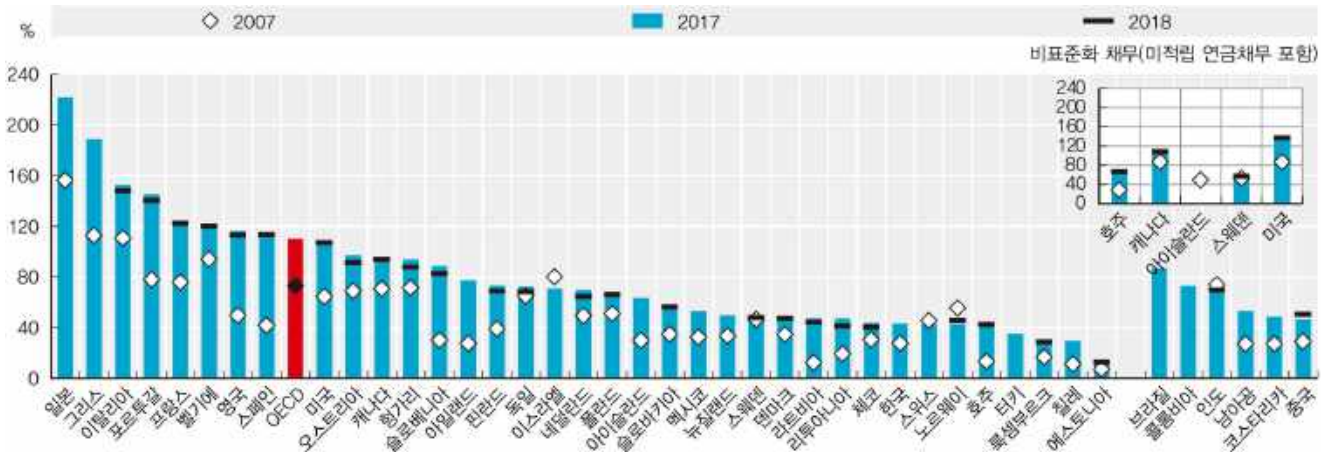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8a), OECD Economic Surveys: Greece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grc-2018-en
OECD (2018b), OECD Economic Surveys: Spain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esp-2018-en

그림 설명

-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미적립 연금채무를 제외한 조정된 정부 채무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칠레, 멕시코, 터키는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7년 자료 대신 콜롬비아와 러시아는 2016년의 자료, 브라질은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9. and 2.10. 아이슬란드의 2017년 자료와 한국의 2007년 자료는 OECD의 추정 값에 해당한다.
- 2.11.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 2.12. 1인당 정부 실질 총부채의 연평균 증가율(2007-17년, 2017-18년)은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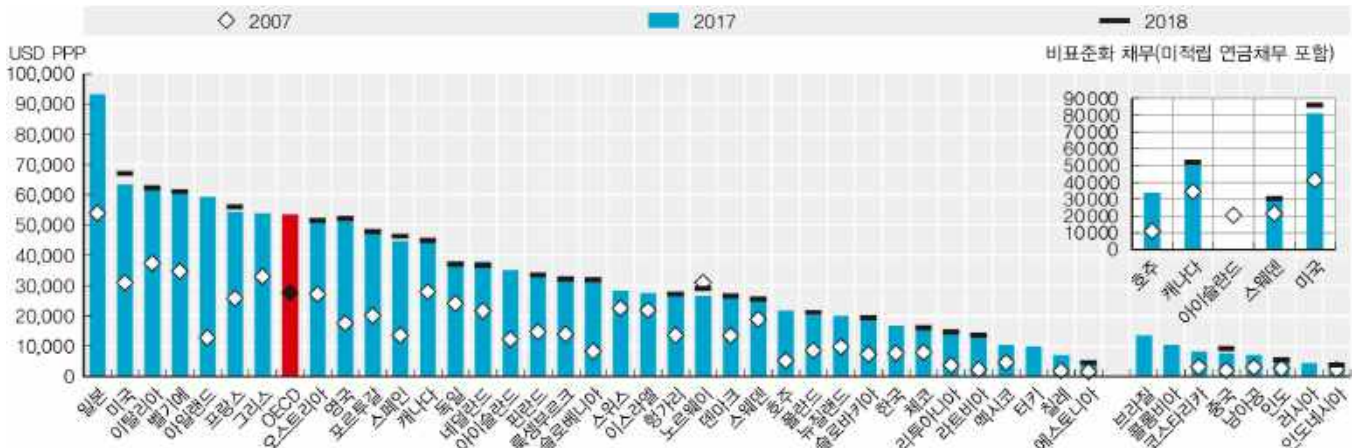
2.9.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을 제외한 기타 주요 경제국 및 코스타리카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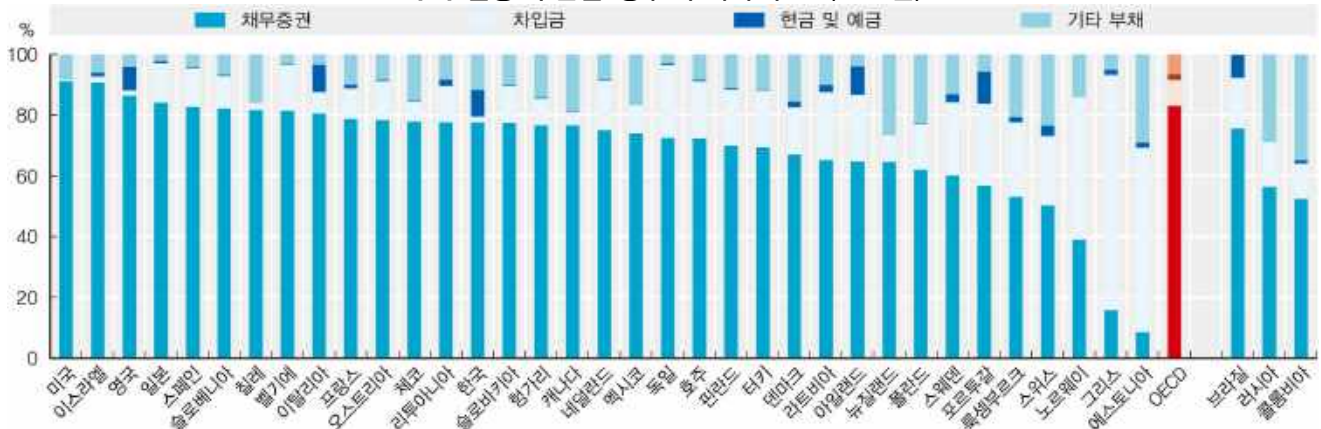
2.10. 1인당 일반정부 부채(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을 제외한 기타 주요 경제국 및 코스타리카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446>

2.11. 금융 수단별 정부 부채의 구조 (2017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465>

정부의 총금융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의미하는 순금융자산은 한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가 재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때, 자산은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과 소득을 포함하며, 부채는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채무를 포함한다. 정부의 순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공공부채로 인한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위험을 증가시키고,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7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순금융자산은 GDP의 -7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정부가 자산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그리스(-149%), 이탈리아(-125%), 일본(-124%), 포르투갈(-108%)의 순금융자산은 음(-)의 값을 기록했으며, 국가의 GDP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2008년 경제위기 이후 상당한 채무가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OECD 35개국 중 순금융자산이 양(+)의 값을 기록한 국가는 8개국이며, GDP 대비 순금융자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308%)와 핀란드(+59%)이다. 이는 노르웨이의 순금융자산에 국부펀드의 1조 달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석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되었다. 국부펀드는 재무부가 소유하되 중앙은행이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로 구성된다. 핀란드의 순금융자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용연금제도의 성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순금융자산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순금융자산의 비율이 0.4%p 증가하였다. 반면, 동기간 미국(-1.3%p), 칠레(-1.0%p), 프랑스(-0.2%p)에서는 추가적인 국공채 발행의 영향으로 GDP 대비 순금융자산의 비율이 하락하였다. 2017년 OECD 국가의 1인당 평균 순금융자산은 -34,591달러(PPP 기준)로 2007년(-15,523달러(PPP 기준))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 1인당 평균 순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91,667달러(PPP 기준))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51,921달러(PPP 기준))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순금융자산’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일반정부 순금융자산은 총금융자산과 발행부채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민계정체계는 제도 부문별 대차대조표에서 가용, 적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폐유급 및 특별인출권(SDRs); 현금통화 및 예금; 채무증권; 대출; 주식 및 투자펀드 지분;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제도; 파생금융상품 및 종업원 스톡옵션; 기타 지급/수취 계정이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부채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일부 국가에서는 채무증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브라질,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통합금융자산과 통합부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순부채는 총부채와 유사한 개념으로 총부채에서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순정부채무의 대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공공채무 통계: 편집자 및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에서 정의된 개념).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순금융자산에 미적립 연금채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OECD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정부 총부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된 순금융자산을 적용하였다. 1인당 순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는 일반정부 수입(62쪽)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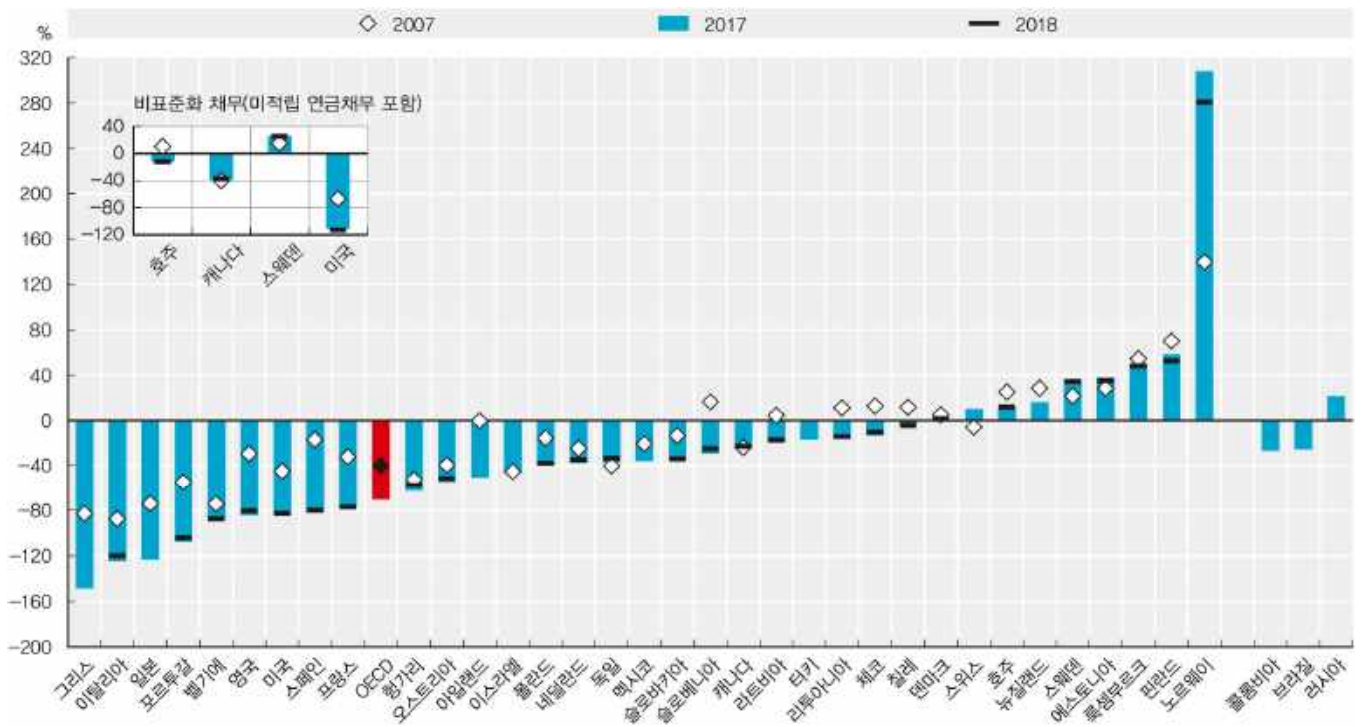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19),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data-00369-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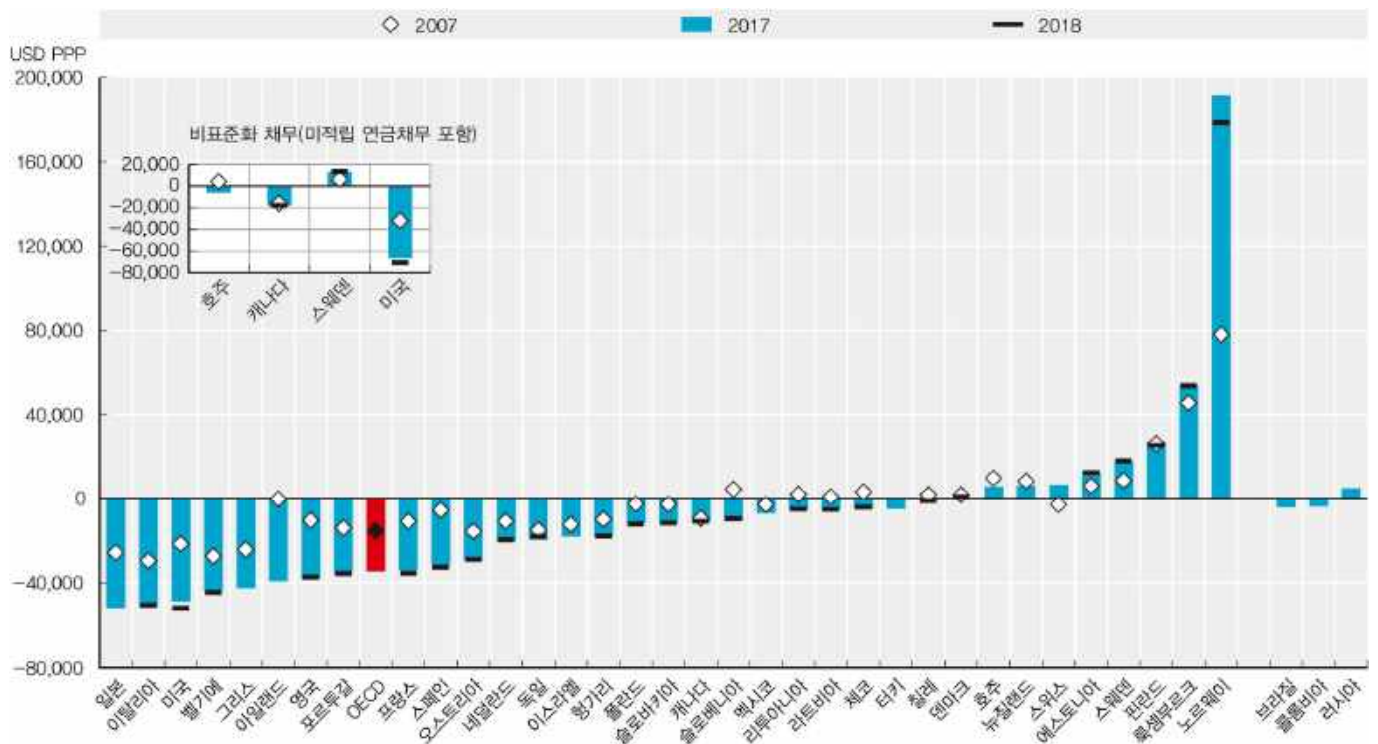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미적립 연금채무를 제외한 조정된 정부 채무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이슬란드와 한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칠레, 멕시코, 터키는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7년 자료 대신 콜롬비아, 러시아는 2016년의 자료, 브라질은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13. 일반정부의 GDP 대비 순금융자산 비율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427>

2.14 일반정부의 1인당 순금융자산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465>

2. 공공재정과 경제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각 국가의 행정제도에 따라 세입, 세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마다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의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준칙이 적용되며 특히 적자재정을 위한 정부부채의 발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1.9%인 반면, 지방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0.5%로 나타났다. 2017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며,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5.4%)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4.4%)이다. 연방제 국가 중에서 2017년 주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1.5%), 캐나다(-0.6%), 호주(-0.4%)이다.

2017년 지방정부 재정수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체코(0.8%)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3%)이다. 체코의 지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체코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채무준칙을 도입하였고, 지방정부 간 세입 조달 능력의 차이를 조정해 주기 위한 균등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OECD, 2018). 반면, 아이슬란드의 지방정부는 인프라, 도시계획, 환경 분야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은 소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지방정부는 관광산업, 긴급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상당한 정부 지출을 요구 받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원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즉 아이슬란드의 지방정부는 수입과 지출 간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OECD, 2017). 2018년 리투아니아는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재정수지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리투아니아에서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기여금의 채무를 변제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크게 하락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의 재정수지는 증가하였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 중앙정부 부채는 GDP 대비 95.7%인 반면, 지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20.3%를 기록하였다. 연방제 국가 중 주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47%)와 스페인(27%)이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적인 정부의 부채 수준은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 수준별로는 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2017-2018년 연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2.3%p)은 하락한 반면, 주정부의 부채 비율(1.2%p)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차원의 엄격한 채무준칙으로 인해, OECD 국가의 평균 지방정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7.2%로, 중앙정부와 주정부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과 준연방제 국가인 스위스, 미국 등 9개 국가에만 적용된다. 재정수지(fiscal balance)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순융자(net lending; +) 또는 순차입(net borrowing; -)을 의미한다. 정부 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일반정부 부채(56쪽)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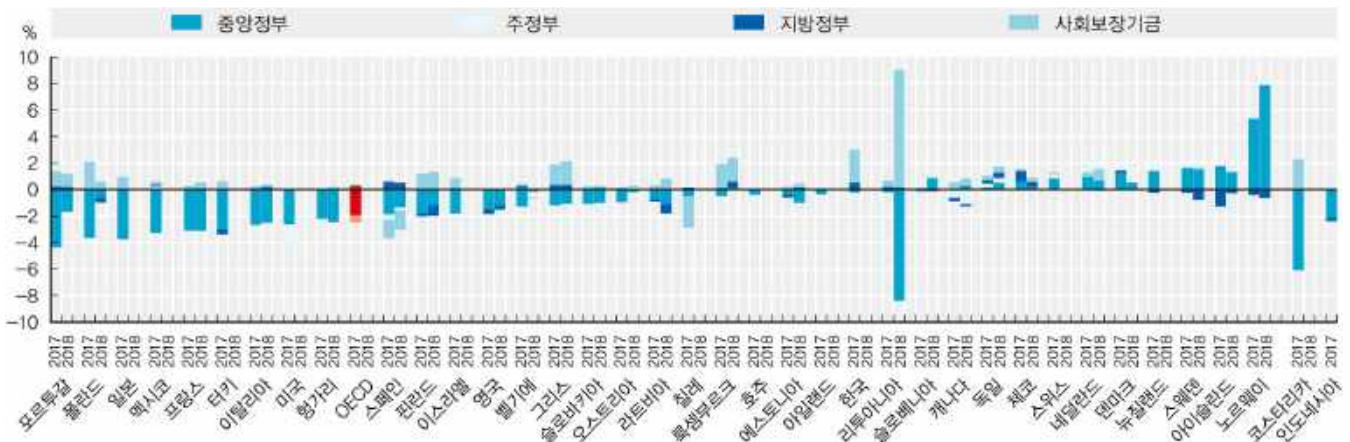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Czech Republic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cze-2018-en
- OECD (2017), OECD Economic Surveys: Iceland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eco_surveys-isl-2017-en

그림 설명

- 호주, 미국은 지방정부의 자료에 주정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의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칠레와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의 지방정부에 관한 자료는 회계연도를 참고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2.15.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16.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 2.16. and 2.17. 칠레, 한국, 멕시코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미국은 비표준화 기준(예: 미적립 연금 채무 포함)의 채무를 보고하였다.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은 콜롬비아는 비통합기준(non-consolidated basis)의 채무를 보고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17. 아이슬란드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2.17은 일반정부 수준별 총부채 현황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며, 하위정부 간 총부채의 추이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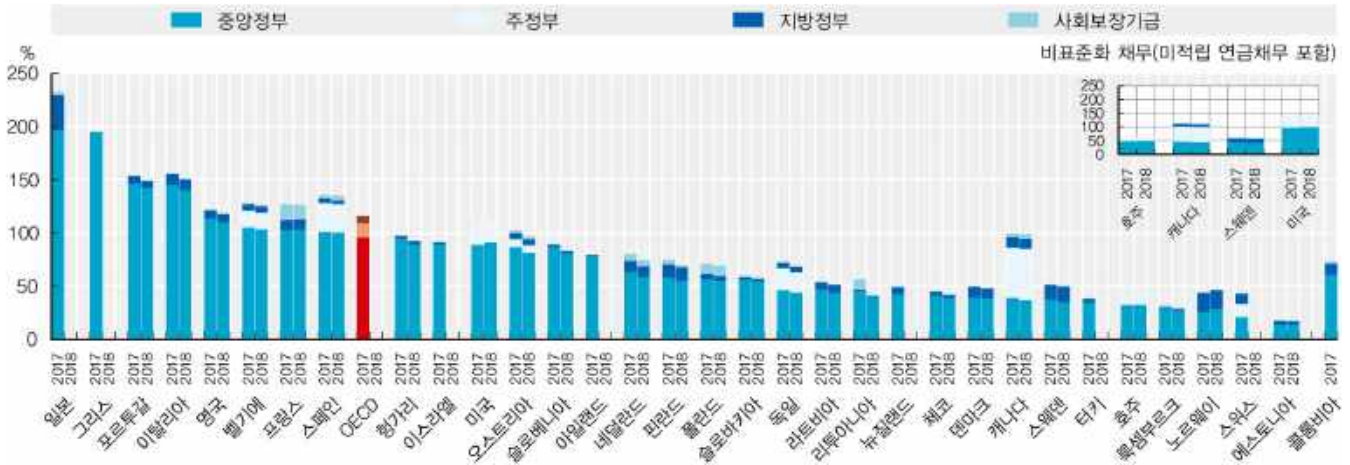
2.15. 정부 수준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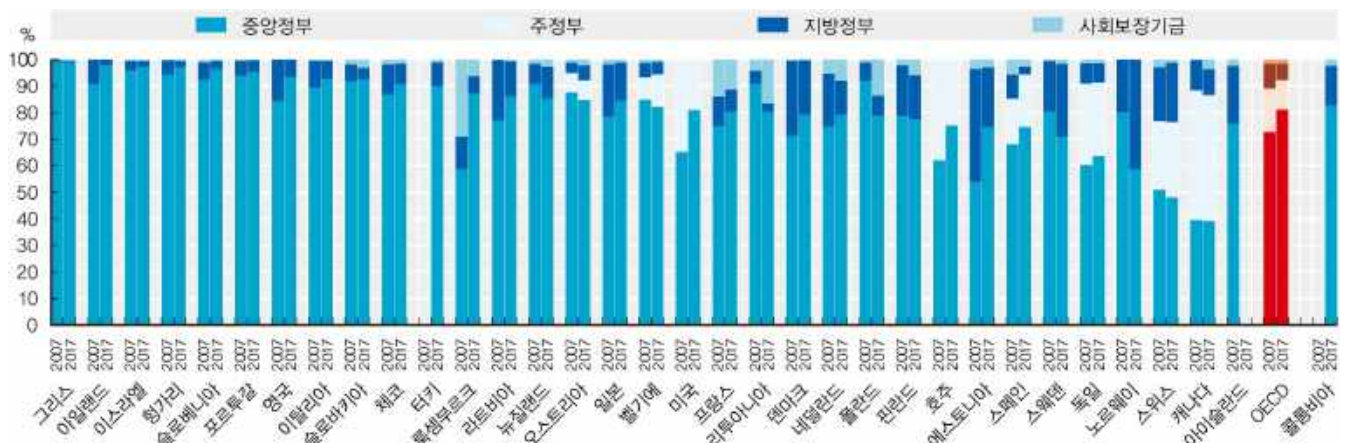
2.16. 정부 수준별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541>

2.17. 정부 수준별 총부채의 비중 (2007년, 2017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560>

정부 수입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보건의료 및 국방 등), 재분배(보조금, 사회적 혜택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주된 정부 수입은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정책 결정(예를 들어 보건의료, 연금 정책 등)과 경기 변동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재정 의무(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 수입의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 간 불균형은 채무를 통해 일정 기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부 수입은 GDP 대비 38.2%로 2007년 이후 1%p 증가하였다. 정부 수입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노르웨이(54.9%), 프랑스(53.7%), 핀란드(53.4%), 덴마크(52.6%), 벨기에(51.3%)이다. 반면, GDP 대비 정부 수입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23.7%)와 아일랜드(26%)이다. 아일랜드는 2007년 이후 GDP 대비 정부 수입이 10.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 정부 수입보다 명목 GDP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그리스는 같은 기간 GDP 대비 정부 수입이 7.7%p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부 수입보다 GDP가 빠르게 하락한데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007년과 비교하여 2017년 캐나다(-0.5%p), 헝가리(-0.1%p), 미국(+0.4%p), 호주·오스트리아(+0.5%p)의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정부 수입 규모는 각 국가의 1인당 정부 수입의 비교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수입은 17,535달러로 2007년 4,302달러(PPP 기준)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7-2017년 OECD 국가들의 1인당 정부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8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2017년 1인당 정부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7,749달러(PPP 기준))로 이는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cross-border workers)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1인당 정부 수입은 34,134달러(PPP 기준)이며, 석유 판매로 상당한 정부 수입을 충당하였다. 반면, 1인당 정부 수입이 가장 적은 국가는 비교적 세율이 작고 세율이 낮은 멕시코(4,658달러(PPP 기준)), 터키(8,840달러(PPP 기준)), 라트비아(10,565달러(PPP 기준))이다.

2007-2017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0.89%이다. 2007-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3.7%), 한국(+2.9%), 폴란드(+2.9%)이다. 2017-2018년 폴란드는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

(+9.1%p)을 기록했다. 폴란드는 공급 업체가 보유한 부가가치세 계좌에 구매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입금하는 분리납부(split pay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세 순응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OECD는 2017년 폴란드의 탈세로 인한 손실이 약 2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OECD, 2018).

반면, 2007-2017년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0.9%p)와 스페인(-0.8%p)이다. 두 국가 모두 2007-08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세원이 감소한 동시에 국가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회복이 늦어지면서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2018년 재정건전화 조치가 결실을 맺으면서 그리스와 스페인의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수입’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 수입은 조세, 순사회보장기여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1인당 정부 수입은 OECD와 Eurostat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 계산된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하여 총수입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한 후, 이를 국가의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지수는 A국가에서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B국가의 통화량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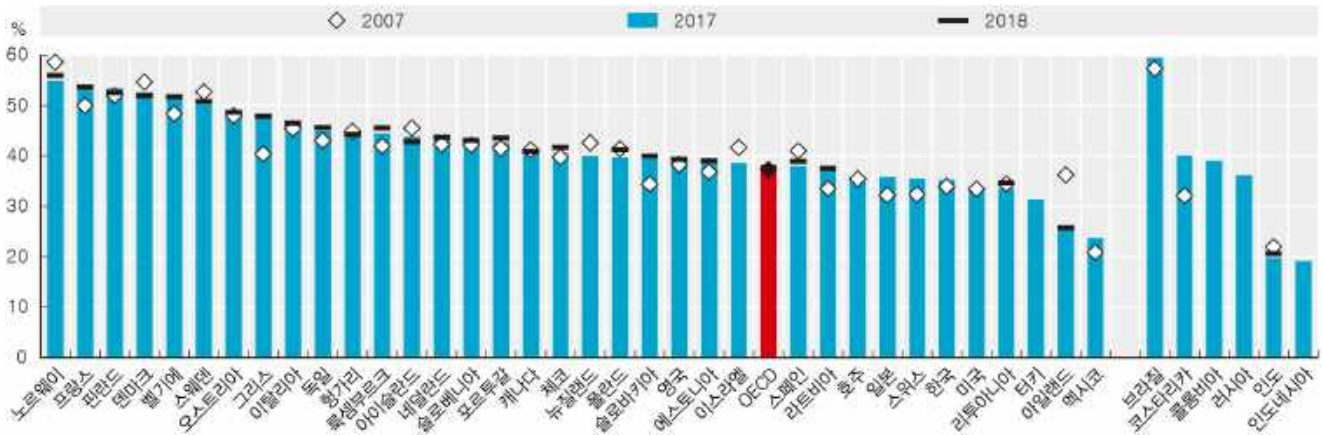
참고문헌

Lequiller, F. and D. Blades (2014), *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http://doi.org/10.1787/9789264214637-en>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2016년의 자료, 러시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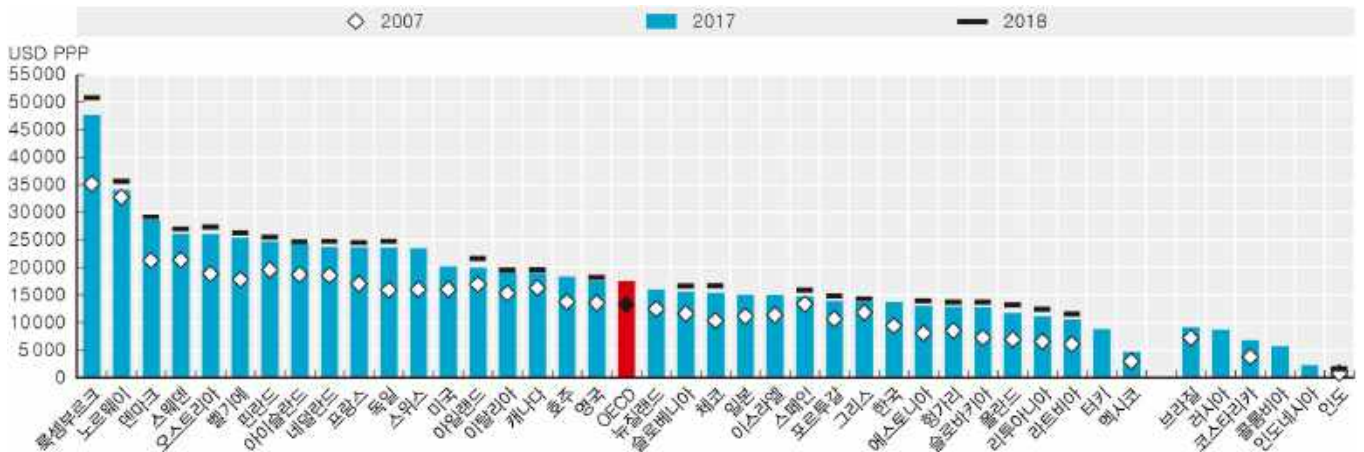
2.18. 일반정부의 GDP 대비 수입 비율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을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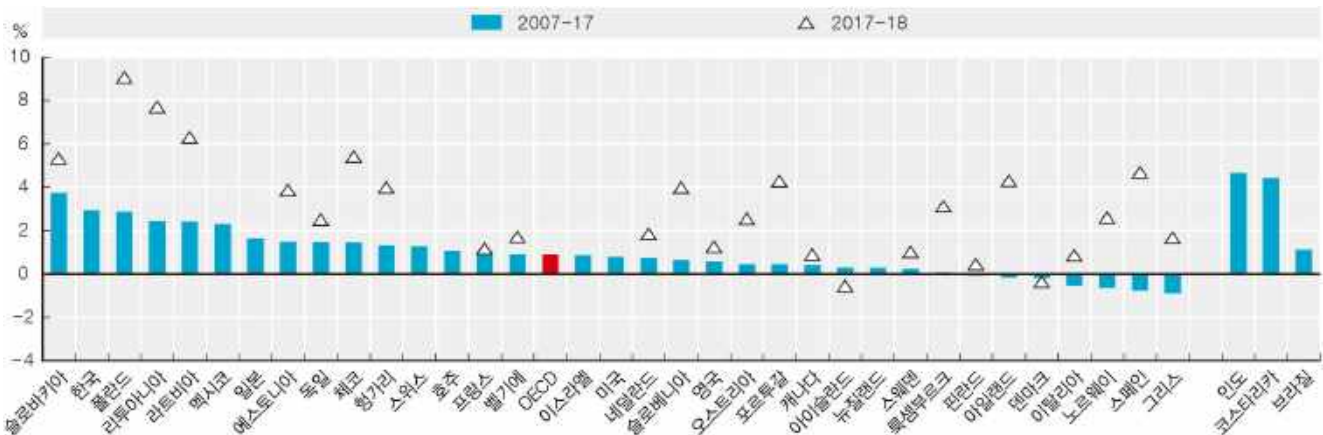
2.19 일반정부의 1인당 정부 수입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을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598>

2.20. 1인당 실질 정부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2007-17년, 2017-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을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617>

2. 공공재정과 경제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정부 수입은 주로 조세(예: 소득세 혹은 부유세)와 사회보장 기여금(피고용자가 직접 납부 혹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대납) 수입으로 충당되며, 일반정부의 재화·서비스의 판매 수입(예: 공공서비스 공급에 따른 사용료), 보조금 및 기타 수입(예: 재산 수입)은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정부 수입은 평균적으로 조세(60%), 사회보장기여금(8%), 판매 수입(8%), 보조금 및 기타 수입(7%)으로 구성되나, 이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 수입 중 조세 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88%), 호주·뉴질랜드·스웨덴(79% 이상)이다. 슬로바키아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조세 수입의 비중(46%)은 매우 낮으나 순사회보장기여금(37.5%)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조금과 기타 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천연자원(석유, 가스)의 개발이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인 멕시코(34%)와 노르웨이(23%)이다. 일반정부 판매 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13%), 스위스(13%), 미국(12%)이며, 판매 수입은 주로 정부의 서비스 공급에 따른 사용료에 의해 충당된다.

OECD 국가들은 2007년 대비 2017년 일반정부 수입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0.6%p), 조세 수입(-0.4%p)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동기간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조세 수입(-9.4%p), 보조금 및 기타 수입(-2.3%p)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순사회보장기여금(10%p)과 판매 수입(1.7%p)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높은 고용주 부담비율,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 경직된 노동 시장으로 인한 세원의 감소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리투아니아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회적 모델(New Social Model)을 도입하였고, 2017년과 2018년 노동, 실업, 연금제도 및 조세제도의 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OECD, 2018).

2016년 OECD 국가들의 조세 수입은 소득과세(34%)와 소비과세(33%)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6년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의 소득과세 비중은 약 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반면, 덴마크(63%), 호주(57%), 뉴질랜드(56%)는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과세(예: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55%), 터키(44%), 에스토니아(43%)인 반면, 미국(17%), 일본(20%), 스위스(21%)는 소비과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34%)로 2007년 대비 2016년 재산과세의 비중이 28%p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재산과세 증가는 일시적인 변화로 금융위기 때 도입한 자본통제를 자유화하기 위해 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안정분담금(stability contributions)을 받은 데서 기인한 결과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수입’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 수입은 조세(예: 소비세, 소득세, 부유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순사회보장기여금(예: 사회보험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연금, 건강 및 사회보장 기여금), 재화와 서비스 판매 수입(예: 정부의 시장 산출물, 입장료), 보조금 및 기타 수입(예: 경상 및 자본보조금, 재산소득, 보조금)을 포함한다.

정부 총수입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B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23의 자료는 OECD 수입 통계(OECD Revenue Statistics)를 활용하였다. OECD 수입 통계의 조세 수입에 대한 정의는 특히 강제적 사회보장기여금과 관련하여 국민계정체계의 정의와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계정체계에서 조세는 일반정부에 대한 현금 및 현물 형태의 의무적인 무보상적 지불금(mandatory unrequited payments)으로 정의된다. 순사회보장기여금은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실제 지급 또는 귀속된 지불금을 의미한다. 순사회보장기여금에는 강제적 혹은 자발적, 충당된 혹은 미충당된 사회보장기여금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 수입 통계상 조세에는 강제적 사회보장기여금만 포함되는 반면, 국민계정체계상 조세에는 순사회보장기여금 모두를 포함한다. 비록 사회보장기여금의 수령 규모가 반드시 기여금의 금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수령은 개인의 적정 기여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에 순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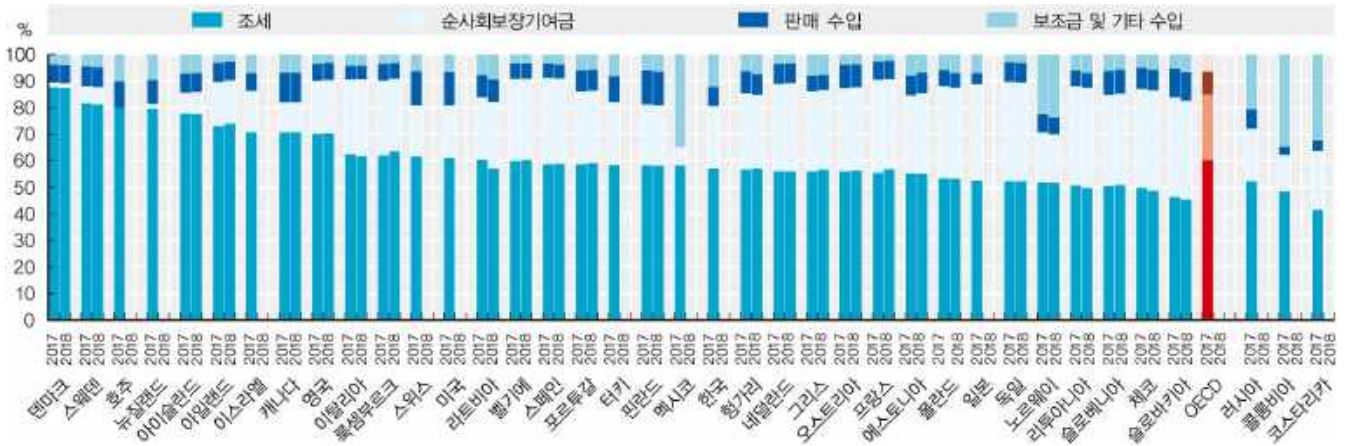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Lithuania 2018,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설명

- 2.21 and 2.22.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가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는 정부의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수입에 순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17년 대신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23. OECD 국가 중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의 총조세에는 관세를 포함한다. 세수구조별 조세 수입의 비중은 모든 OECD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연도인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 2.24 to 2.26. 정부 수준별 수입의 구조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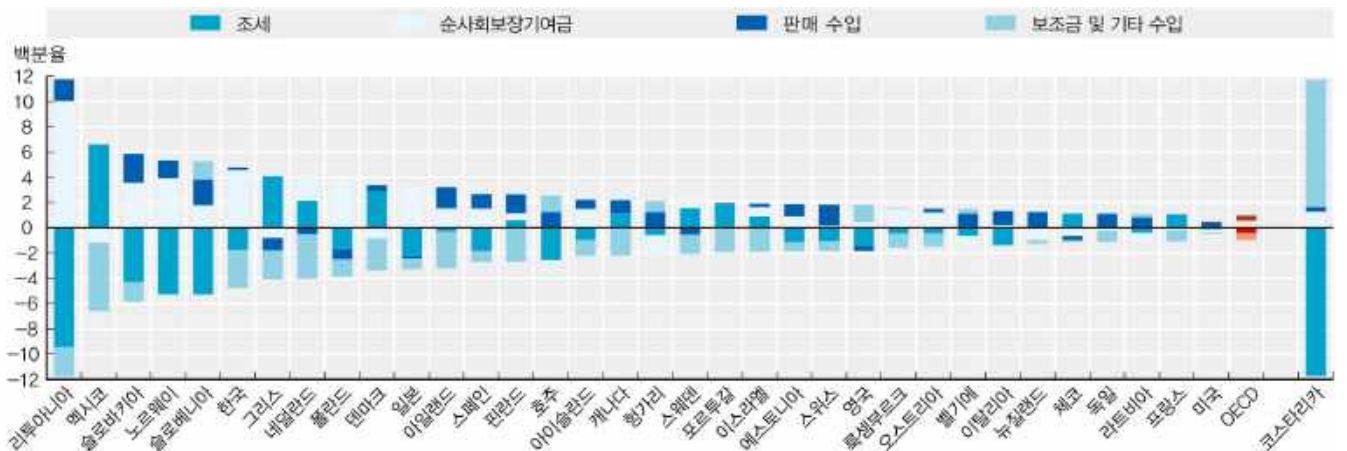
2.21.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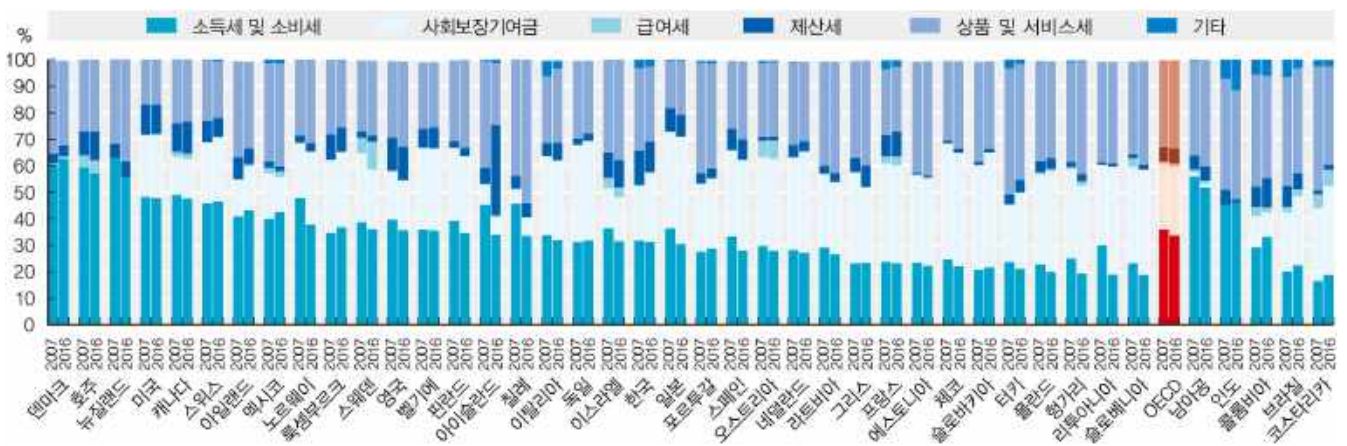
2.22. 일반정부 수입 구조의 변화 (2007년 대비 2017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655>

2.23. 세수구조별 조세 수입의 비중 (2007년, 2016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8).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674>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타적 권한(예: 법률의 집행)을 행사하며, 소득 재분배(예: 사회적 급여와 보조금 지급)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 지출은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과거와 현재의 정책 결정(특히, 복지 수급권 보장)을 반영해야 하므로 정부 수입에 비해 신축적인 운용이 어렵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일반정부 지출은 GDP의 40.4%로 2007년 대비 1.4%p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2007년(52.6%)과 2017년(56.5%) 모두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2007년에 비해 2018년 정부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노르웨이(7.3%p)로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지출 효율화 정책, 정부 회계의 개혁(중립성)을 실시하여 2017년 대비 2018년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1.3%p 감소하였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26.3%)와 멕시코(26.3%)이다. 아일랜드는 2007년에 비하여 2017년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9.6%p)하였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GDP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지적재산권을 이전하였고, 아일랜드에 거대한 자본소득이 축적되고 수탁 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GDP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멕시코는 사회복지 지출(예: 보건, 노령)의 증가로 2007년 대비 2017년 정부 지출의 비중이 4.7%p 증가하였으나, 향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수를 방지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OECD, 2019a).

2017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정부 지출은 18,441달러(PPP 기준)로 2007년 13,852달러(PPP 기준)에 비해 증가하였다. 룩셈부르크는 2017년 1인당 정부 지출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46,208달러(PPP기준))로 2007-2018년 동 수치가 16,454달러(PPP 기준)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룩셈부르크의 경기여행적 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cross-border workers)의 비율이 높아 분모에 해당하는 인구가 과소추정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향후 고령화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OECD, 2019b).

2007-2017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정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0%이다. 2007-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한 국가는 그리스(2.6%)와 이탈리아(0.4%)이다. 그러나 2017-2018년 그리스(0.9%)와 이탈리아(0.4%) 모두 1인당 정부 지출이 증가하였다. 2007-2017년 1인당 정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3.5%)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서 기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정부 지출은 낮은 수준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정부지출에는 중간 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이자지출 포함), 사회급여, 기타 정상지출(경상이전)과 자본지출(자본이전 및 투자)이 포함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1인당 정부 지출은 OECD와 Eurostat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 계산된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하여 총수입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한 후, 이를 국가의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지수는 A국가에서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B국가의 통화량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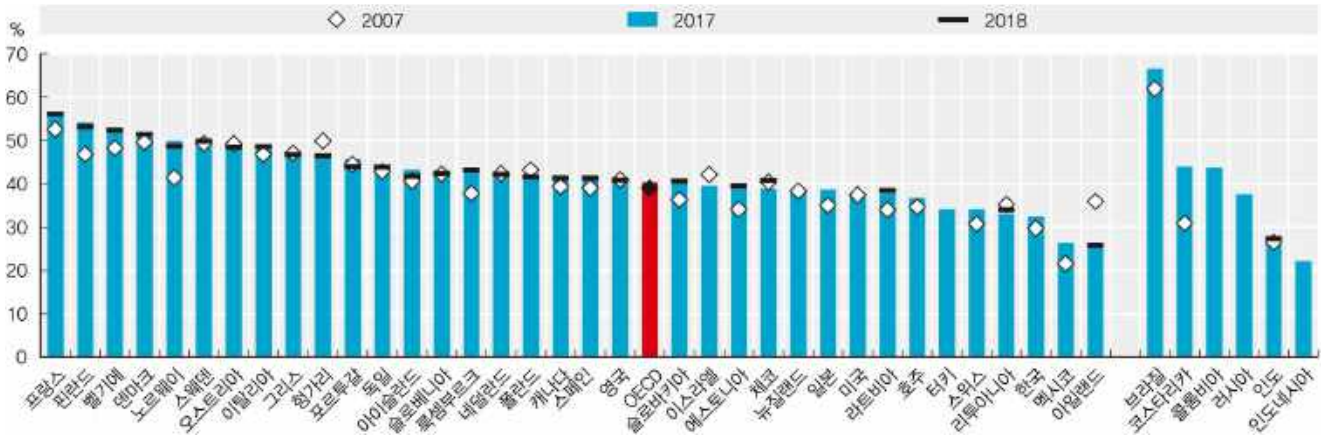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9a), OECD Economic Surveys: Mexico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536d00e-en>.
OECD (2019b), OECD Economic Surveys: Luxembourg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24839c1-en>.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Ireland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eco_surveys-irl-2018-en

그림 설명

-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2.27 and 2.28.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7년 자료 대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2016년의 자료, 러시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9. 칠레와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브라질은 2007-17년 자료 대신 2007-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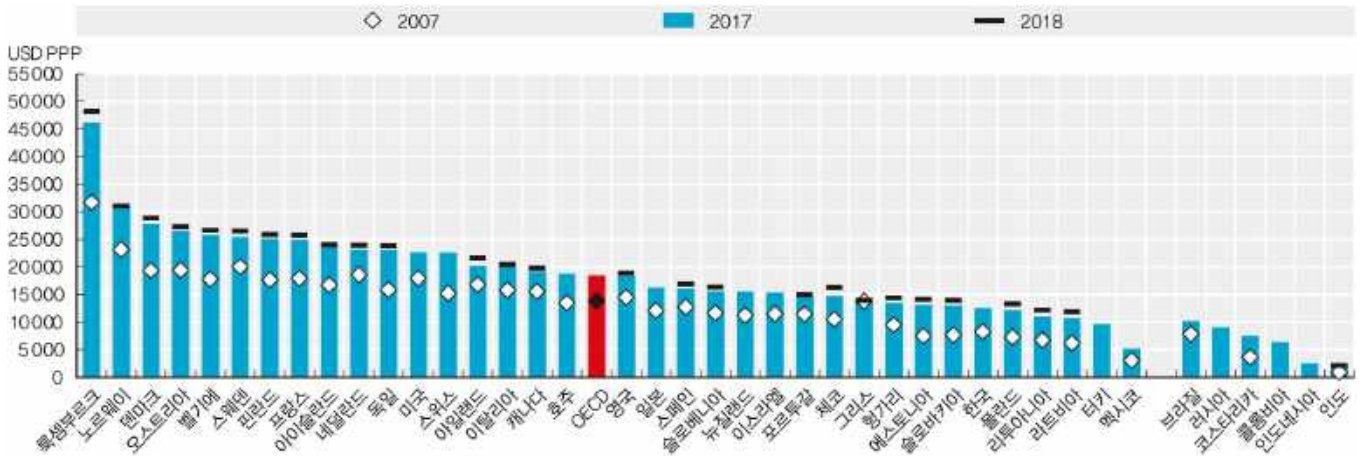
2.27. 일반정부의 GDP 대비 지출 비율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을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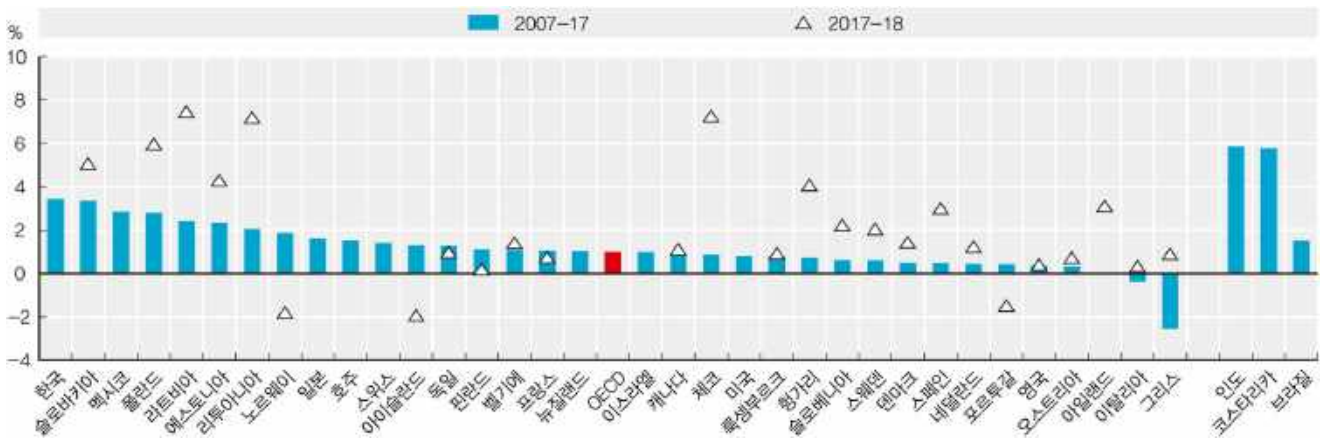
2.28. 일반정부의 1인당 지출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을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712>

2.29. 1인당 실질 정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2007-2017년, 2017-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9)을 참고.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731>

정부 지출은 보건의료, 교육, 국방서비스의 제공, 공공질서와 안전의 유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우선순위,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보여 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변화 또한 추적할 수 있다. 정부 지출의 구조는 정책 선택, 인구 변화(예: 고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 경기변동, 국제협약의 이행 등으로 인해 변화한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보호(GDP 대비 13.3%)로 예를 들어, 노령·장애·질병연금, 주거·실업급여 등의 지출이 이에 포함된다. 사회보호 분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24.9%), 프랑스(24.3%), 덴마크(22.4%)인 반면, 비중이 낮은 국가는 칠레(6.2%), 한국(6.6%), 미국(7.6%)이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GDP 대비 7.8%)으로 의료제품·기기·장비, 병원·외래진료 서비스 등의 지출이 이에 포함된다. 보건 분야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9.3%), 노르웨이(8.5%), 덴마크(8.4%)이다. 미국은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에 불과하지만, 1인당 보험비용과 행정경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다. 보건 분야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스위스(2.2%), 라트비아(3.5%), 칠레(4.0%)이다. 스위스의 보건의료 비용은 주로 의무 가입 민간건강보험을 통해 충당된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일반공공행정 분야(예: 공공채무 거래, 행정·입법 기능, 정부 간 이전 지출 등)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은 5.4%로 교육 분야(5.1%)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8.3%), 이탈리아(8.2%), 아이슬란드(8.1%)이며, 이들 세 국가에서는 일반행정 분야의 지출 중 공공채무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약(예: 파리기후협정)의 체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환경보호 분야의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5%로 가장 낮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출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 분야에는 폐기물 관리, 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등의 지출이 포함된다. 2017년 네덜란드(1.4%), 그리스(1.3%), 일본(1.2%)은 환경보호 분야에 OECD평균의 2배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미국, 칠레, 핀란드는 환경보호 분야에 정부 지출의 매우 적은 부분만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은 주로 고령화와 실업급여 지출의 증가에 따라 2007년 이후 GDP 대비 1.5%p 증가하였다. 핀란드(+5.7%p)와 노르웨이(+4.6%p)는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을 OECD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늘렸다. 반면, 헝가리와 아일랜드는 사회보호를 위한 지출을 각각 -3.2%p, -3.6%p 감소하였다. 아일랜드는 2007-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와 자녀수당을 삭감했다. 헝가리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연금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사회보호 분야와 같이 2017년 GDP 대비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 또한 2007년과 비교하여 1.1%p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은 노르웨이(+1.6%p), 미국(+1.6%p), 일본(+1.5%p)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아일랜드(-1.1%p), 포르투갈(-1.1%p)에서는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지출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지출은 기능별로 10개의 분야(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문화·종교, 교육, 사회보호)로 분류된다. 분야 및 부문별 정부기능별 분류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부록 C를 참고할 수 있다. 분야별 정부기능별 분류에 따른 정부지출 구조(정부 수준별)와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기능별 분류(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 포함)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설명

-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한국은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30.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칠레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31. 칠레와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2.30. 정부 기능별 분류에 따른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2017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호주	4.3	2.2	2.0	4.7	0.9	0.6	7.2	1.0	5.8	9.7
오스트리아	6.1	0.6	1.4	5.7	0.4	0.3	8.2	1.2	4.8	20.5
벨기에	7.2	0.8	1.7	6.3	0.9	0.3	7.7	1.3	6.3	19.5
칠레	2.9	1.0	2.0	2.6	0.2	0.9	4.0	0.4	5.2	6.2
체코	3.9	0.8	1.8	5.7	0.8	0.6	7.5	1.3	4.6	12.0
덴마크	6.2	1.2	0.9	3.3	0.4	0.2	8.4	1.7	6.5	22.4
에스토니아	3.9	2.0	1.9	4.3	0.7	0.4	5.0	2.1	5.8	13.0
핀란드	7.9	1.3	1.1	4.3	0.2	0.3	7.1	1.5	5.7	24.9
프랑스	6.0	1.8	1.6	5.9	0.9	1.0	8.0	1.4	5.4	24.3
독일	5.6	1.0	1.5	3.1	0.6	0.4	7.1	1.0	4.1	19.4
그리스	8.3	2.5	2.1	3.6	1.3	0.2	5.2	0.7	3.9	19.4
헝가리	8.0	1.0	2.4	7.1	0.4	0.8	4.8	3.5	5.1	14.0
아이슬란드	8.1	0.1	1.5	4.7	0.6	0.5	7.6	3.0	7.5	9.7
아일랜드	3.4	0.3	1.0	2.3	0.4	0.5	5.1	0.5	3.3	9.5
이스라엘	4.3	5.5	1.6	2.6	0.6	0.0	5.4	1.4	7.0	11.1
이탈리아	8.2	1.3	1.8	3.6	0.9	0.6	6.8	0.8	3.8	20.9
일본	3.8	0.9	1.2	3.6	1.2	0.6	7.6	0.4	3.3	16.1
한국	5.2	2.5	1.3	4.9	0.8	0.8	4.3	0.8	5.2	6.6
라트비아	4.1	1.7	2.3	5.5	0.6	1.1	3.5	1.7	5.8	11.7
리투아니아	3.5	1.7	1.5	2.8	0.4	0.4	5.7	1.1	4.9	11.2
룩셈부르크	4.9	0.5	1.1	5.7	1.0	0.6	4.9	1.3	4.7	18.4
네덜란드	4.3	1.1	1.9	3.8	1.4	0.3	7.6	1.2	5.1	15.9
노르웨이	4.5	1.7	1.2	5.3	0.9	0.8	8.5	1.6	5.6	19.8
폴란드	4.4	1.7	2.1	4.7	0.4	0.6	4.7	1.2	4.9	16.4
포르투갈	7.6	0.9	1.7	5.2	0.6	0.5	6.0	0.8	5.0	17.4
슬로바키아	5.6	1.0	2.1	4.1	0.7	0.5	7.1	0.8	3.8	14.5
슬로베니아	5.9	0.9	1.6	4.3	0.5	0.5	6.6	1.4	5.4	16.2
스페인	5.6	0.9	1.8	3.8	0.9	0.4	6.0	1.1	4.0	16.6
스웨덴	6.7	1.2	1.3	4.1	0.3	0.8	6.9	1.1	6.8	20.2
스위스	4.7	0.8	1.7	4.0	0.6	0.2	2.2	0.8	5.6	13.5
영국	4.7	1.9	1.8	3.1	0.7	0.7	7.4	0.6	4.6	15.2
미국	5.6	3.2	2.0	3.3	0.0	0.6	9.3	0.3	6.0	7.6
OECD	5.4	2.1	1.8	3.8	0.5	0.6	7.8	0.7	5.1	13.3
콜롬비아	4.9	1.3	2.2	3.1	0.6	0.5	4.9	0.7	4.8	9.0
코스타리카	3.9	0.0	2.6	3.7	0.5	0.8	6.1	0.2	8.1	8.5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참고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750>

2.31. 정부 기능별 분류에 따른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변화 (2007년 대비 2017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호주	0.8	0.9	0.3	0.8	0.2	-0.2	1.0	0.2	1.1	0.5
오스트리아	-1.5	-0.2	0.1	-0.2	-0.1	-0.1	0.8	-0.2	0.2	1.1
벨기에	-1.5	-0.2	0.0	0.8	0.2	-0.1	1.0	0.0	0.8	2.8
체코	-0.4	-0.3	-0.2	-0.7	-0.2	-0.4	0.7	-0.1	-0.1	0.1
덴마크	-0.5	-0.2	0.0	0.3	-0.1	-0.1	0.7	0.0	0.5	0.9
에스토니아	0.6	0.8	-0.2	0.0	-0.1	-0.3	0.7	0.1	-0.1	3.8
핀란드	1.2	-0.1	0.0	-0.1	-0.1	0.0	0.5	0.4	-0.1	5.7
프랑스	-1.3	0.1	0.2	1.6	0.1	-0.1	0.6	0.0	0.1	2.7
독일	-0.5	0.1	0.1	-0.1	0.1	-0.4	0.8	0.2	0.2	0.6
그리스	-3.3	-0.3	0.6	-0.6	0.5	0.0	-0.8	0.1	0.3	3.7
헝가리	-1.5	-0.3	0.4	0.6	-0.2	-0.2	-0.1	2.0	-0.5	-3.2
아일랜드	0.0	-0.1	-0.5	-1.3	-0.6	-1.2	-1.1	-0.1	-1.1	-3.6
이스라엘	-3.3	-1.5	0.1	0.1	0.0	-0.3	0.5	0.1	0.7	0.6
이탈리아	-0.4	0.1	0.0	-0.6	0.1	-0.1	0.1	0.0	-0.7	3.3
일본	-0.5	0.1	0.0	0.2	0.0	-0.1	1.5	0.0	-0.1	2.8
한국	0.0	0.1	0.1	-1.1	-0.1	-0.3	1.1	0.1	0.6	2.1
라트비아	0.2	0.2	-0.1	0.6	-0.3	-0.1	-0.5	0.0	0.2	3.7
리투아니아	-0.6	-0.2	-0.2	-1.4	-0.5	0.1	0.4	0.0	-0.4	0.5
룩셈부르크	0.3	0.2	0.2	1.1	-0.1	0.0	0.6	0.0	0.2	2.7
네덜란드	-1.3	-0.1	0.0	-0.5	-0.1	-0.1	0.8	-0.2	0.1	1.5
노르웨이	-1.3	0.1	0.3	1.6	0.3	0.2	1.6	0.4	0.7	4.6
폴란드	-1.0	-0.2	-0.1	-0.3	-0.2	-0.5	0.2	0.0	-0.8	0.8
포르투갈	0.6	-0.3	-0.1	1.1	0.0	-0.3	-1.1	-0.2	-1.2	2.7
슬로바키아	1.1	0.2	0.3	-0.3	0.0	-0.1	1.0	0.0	0.3	1.3
슬로베니아	0.4	-0.5	-0.1	0.2	-0.3	-0.1	0.7	0.2	-0.5	0.9
스페인	0.6	-0.1	0.0	-1.4	-0.1	-0.5	0.3	-0.5	0.0	3.7
스웨덴	-0.9	-0.4	0.0	0.2	0.0	0.1	0.5	0.1	0.5	0.0
스위스	0.1	0.0	0.2	0.3	0.0	0.1	0.5	0.0	0.7	1.5
영국	0.5	-0.2	-0.5	0.2	-0.2	-0.4	1.0	-0.3	-1.0	0.9
미국	-0.5	-0.8	-0.1	-0.3	0.0	0.0	1.6	0.0	-0.2	0.9
OECD	-0.5	-0.3	0.0	-0.1	0.0	-0.2	1.1	0.0	-0.1	1.5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참고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769>

정부는 이전지출(예: 보조금 및 사회 급여),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예: 병원용 백신 구입), 피고용자에 대한 보수 지급, 공공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지출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는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 지출을 경제적 거래별로 구분할 경우 정부지출의 구성과 공공자금의 배분을 수정하기 위한 여유 변동분을 파악할 수 있다.

2017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지출 중 40.9%는 연금과 기타 자격급여를 포함한 사회 급여에 지출되었고, 이 비율은 2007년 대비 4.2%p 증가하였다. 2017년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일반정부 지출 중 22.8%를 차지하여 2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적 거래에 해당하고, 2007년과 비교하여 1.3%p 하락하였다.

일반정부 지출 중 사회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4.9%)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9.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국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정부 지출 중 노령연금이 가장 중요한 지출인 반면, 멕시코는 비교적 청년기 사회(young society)가 유지되고 있어 사회보호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2007년 대비 2017년 사회급여 지출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6.3%p)한 국가로 이는 실업급여의 삭감과 장애 급여의 수급요건 강화에 기인한 결과이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는 사회급여 지출의 비율은 매우 높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공고용으로 인해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일본(14.0%), 독일(17.1%), 네덜란드(19.6%))은 매우 낮다(제3장. 공공고용 참고). 반면, 아이슬란드(32.4%)와 멕시코(32.0%)는 피고용자에 대한 보수 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 아이슬란드는 공적연금에 비해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회급여 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다. 따라서 아이슬란드는 상대적으로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이 높다. 아이슬란드는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유사하게 공공부문의 고용 수준 또한 높다. 멕시코의 경우,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 고위직에 대해서는 높은 보수가 지급된다.

2007-2017년 체코(+2.9%p)와 슬로바키아(+2.9%p)는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의 피고용자 보수 지출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포르투갈은 2007-08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2010-2015년 공공부문의 인력과 보수를 감축하였고, 그 결과로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5.5%p)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7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지출에서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2007년 대비 1.5%p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역행적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공공투자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2017년 OECD 국가 중 자본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18.8%)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지출 비율은 2007년과 비교해서 4.8%p 감소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지출에는 중간 소비(예: 주어진 회계연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 내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이자지출), 사회 급여(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한 사회급여와 시장의 공급자를 통해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구성), 기타 정상지출(정상이전, 생산세, 소득·부 등에 대한 정상세, 연금 수급의 증감 조정)과 자본지출(자본이전 및 투자)이 포함된다. 일반정부 수준의 모든 경제적 거래는 통합기준으로 기록되지만, 정부 간 거래는 제외된다.

참고문헌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Hungary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hun-2019-en.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eco_surveys-kor-2018-en.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2016년의 자료, 러시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42. 2017년, 2018년 경제적 거래별 중앙정부 지출의 구조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41. 경제적 거래별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
(2017년, 2018년, 2007년 대비 2017년)

	중간 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 (이자 포함)			사회 급여			기타 경상지출			자본지출		
	2017	2018	2007-17년 변화	2017	2018	2007-17년 변화	2017	2018	2007-17년 변화	2017	2018	2007-17년 변화	2017	2018	2007-17년 변화	2017	2018	2007-17년 변화	2017	2018	2007-17년 변화
호주	21.5	..	3.0	24.7	..	-2.1	3.3	..	-0.6	4.5	..	0.4	28.4	..	-0.4	6.7	..	-0.4	10.9	..	-0.1
오스트리아	12.7	12.5	0.4	21.5	21.4	0.1	2.9	3.1	-0.1	3.8	3.4	-2.6	45.0	45.0	2.9	6.3	6.8	0.5	7.9	7.7	-1.2
벨기에	7.6	7.8	-0.2	23.6	23.4	-0.2	6.5	6.3	0.9	4.7	4.3	-3.5	48.0	48.1	3.8	3.4	3.7	-0.2	6.1	6.4	-0.7
캐나다	17.8	17.6	-0.4	30.2	30.2	0.5	2.3	2.2	-0.1	6.9	7.1	-3.1	29.4	29.3	3.1	3.3	3.4	0.1	10.0	10.2	0.0
체코	15.1	15.0	-2.1	23.5	24.1	2.9	5.6	5.6	1.9	1.9	1.9	-0.7	38.1	36.6	2.1	5.3	5.0	1.0	10.5	11.9	-5.1
덴마크	17.2	17.1	1.0	29.8	29.7	-1.1	3.5	3.4	-0.3	2.1	2.1	-1.2	34.5	34.0	1.5	6.0	6.3	-0.6	6.9	7.4	0.7
에스토니아	16.8	16.2	-0.1	28.7	28.7	1.1	1.2	0.9	-1.3	0.1	0.1	-0.4	33.9	34.2	5.2	4.2	4.7	-0.5	15.1	15.1	-4.0
핀란드	20.1	20.2	1.2	23.1	23.2	-3.8	2.2	2.2	-0.4	1.8	1.7	-1.2	40.4	40.1	4.9	4.5	4.8	-0.6	7.8	8.0	-0.1
프랑스	8.9	8.9	0.0	22.5	22.3	-1.1	4.4	4.8	1.8	3.1	3.0	-2.0	45.6	45.5	1.9	6.9	7.1	0.3	8.7	8.4	-0.8
독일	10.9	10.9	1.9	17.1	17.3	0.0	2.0	1.9	-0.3	2.3	2.1	-3.9	54.5	54.3	0.4	5.2	5.6	1.2	8.0	7.9	0.6
그리스	10.6	9.4	-3.7	25.2	25.2	1.7	2.0	1.8	1.8	6.6	7.1	-3.0	45.0	44.4	8.5	3.1	3.8	-0.7	7.4	8.4	-4.7
헝가리	16.9	15.4	4.3	23.3	22.7	0.5	2.8	2.7	0.1	5.9	5.5	-2.2	29.6	28.9	-6.3	7.0	7.8	1.5	14.5	17.1	2.1
아이슬란드	24.5	24.9	-1.2	32.4	34.1	-1.1	3.1	3.1	-1.1	9.0	7.4	3.1	14.7	15.5	1.2	4.2	4.3	0.1	12.2	10.7	-1.0
아일랜드	12.8	13.3	-1.0	26.7	27.1	-1.4	2.4	2.1	-0.2	7.5	6.4	4.7	37.6	36.4	4.8	4.1	4.5	-0.3	9.0	10.3	-6.6
이스라엘	23.2	..	0.1	26.3	..	1.5	2.1	..	0.6	5.5	..	-6.2	22.4	..	2.7	12.0	..	1.0	8.5	..	0.2
이탈리아	11.5	11.5	1.1	19.7	20.1	-2.1	3.1	3.1	0.6	7.8	7.6	-2.4	45.7	46.2	5.0	4.3	4.6	-0.4	8.0	6.8	-1.7
일본	9.4	..	-0.4	14.0	..	-3.0	1.4	..	-0.1	4.5	..	-1.0	54.9	..	4.9	3.9	..	0.5	12.0	..	-1.0
한국	13.3	..	-1.3	21.0	..	-2.0	0.9	..	-0.2	4.0	..	-2.6	29.0	..	8.0	12.9	..	2.9	18.8	..	-4.8
라트비아	15.1	15.3	-0.9	27.0	26.4	-2.2	3.4	2.6	0.8	2.4	1.9	1.4	30.9	29.8	8.1	7.8	9.5	-1.5	13.3	14.5	-5.8
리투아니아	13.8	12.8	-0.7	28.7	28.8	1.0	1.0	1.2	-1.5	3.4	2.6	1.5	38.0	39.8	6.1	4.3	4.7	0.5	10.8	10.0	-7.0
룩셈부르크	8.6	8.6	0.3	20.9	21.3	-0.4	2.5	2.9	-0.7	0.8	0.8	0.0	47.1	46.2	-0.1	7.9	8.3	1.8	12.0	12.1	-0.7
멕시코	12.3	..	1.2	32.0	..	-4.9	1.4	..	-2.2	9.4	..	-0.8	9.7	..	2.1	21.2	..	7.6	13.9	..	-3.0
네덜란드	13.8	13.8	-1.4	19.6	19.5	0.2	2.7	2.7	-0.1	2.4	2.1	-2.3	49.6	48.9	5.9	3.3	3.8	-1.4	8.7	9.1	-0.8
뉴질랜드	16.1	..	0.2	22.6	..	-1.2	0.9	..	0.0	4.3	..	0.2	35.2	..	-1.2	6.0	..	-0.5	14.9	..	2.5
노르웨이	14.0	13.8	0.6	30.3	30.3	1.2	4.2	4.2	0.0	0.8	0.9	-5.4	34.3	33.8	1.2	5.6	5.5	0.7	10.9	11.5	1.7
폴란드	13.4	13.4	-0.7	24.8	24.3	0.6	1.2	1.0	-0.9	3.8	3.5	-1.3	41.1	40.5	4.1	4.5	4.9	-1.0	11.2	12.4	-0.7
포르투갈	11.9	12.3	-0.3	24.0	24.6	-5.5	1.0	0.9	-0.7	8.4	7.9	1.7	40.1	41.5	3.8	5.0	5.6	-0.4	9.7	7.3	1.4
슬로바키아	14.1	13.4	-0.1	22.9	22.9	2.9	1.1	1.1	-1.2	3.5	3.2	-0.4	46.1	44.6	1.3	3.8	5.1	-0.7	8.6	9.8	-1.8
슬로베니아	14.5	14.8	1.4	25.9	25.8	1.4	1.7	1.8	-2.0	5.8	4.7	2.8	39.5	39.0	1.5	3.9	4.0	-1.2	8.7	9.9	-4.0
스페인	12.3	12.1	-0.6	25.7	25.4	0.3	2.5	2.4	-0.3	6.2	6.0	2.2	43.4	43.2	7.9	3.4	3.6	-0.7	6.4	7.2	-8.9
스웨덴	15.9	16.0	0.2	25.6	25.4	0.6	3.2	3.2	0.3	1.3	1.4	-2.3	33.7	32.7	0.8	10.8	11.2	-0.6	9.5	10.1	1.0
스위스	14.4	..	1.2	22.3	..	0.1	9.0	..	0.3	1.3	..	-2.3	33.9	..	-0.1	7.3	..	0.9	11.8	..	-0.1
터키	16.0	22.1	5.1	6.4	32.8	3.1	14.5
영국	19.3	19.5	-0.6	21.9	21.9	-2.9	1.9	2.1	0.5	6.6	6.1	1.3	37.5	37.3	2.9	4.4	4.5	-1.7	8.4	8.6	0.3
미국	16.3	..	-1.9	25.0	..	-1.5	0.8	..	-0.2	10.2	..	-0.7	38.2	..	6.6	0.7	..	-0.1	8.8	..	-2.2
OECD	14.0	..	-0.5	22.8	..	-1.3	2.0	..	0.1	6.5	..	-1.3	40.9	..	4.2	4.3	..	0.4	9.5	..	-1.5
브라질	8.3	20.3	0.7	12.4	38.9	15.7	3.6
콜롬비아	12.7	16.7	0.3	6.2	28.1	26.5	9.6
코스타리카	7.7	..	-0.5	31.8	..	-2.2	0.0	..	0.0	8.2	..	-1.7	10.8	..	2.3	28.9	..	0.9	12.6	..	1.1
인도네시아	17.8	24.0	5.1	6.7	0.0	19.2	27.3
러시아	15.4	27.2	1.6	1.9	31.2	7.4	15.2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참고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788>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정부는 재원확보 능력이 상이하다.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능력은 국가별 재정연방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방정부의 징세 권한이 제한된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주된 수입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지출이다.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세계 시장경제와 통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입과 세출이 비슷한 수준에서 분권화 되어야 한다. 재정의 분권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Kim and Dougherty, 2018).

세입 분권화의 관점에서 OECD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나, 평균적으로 중앙정부의 세입이 가장 큰 비중(52.9%)을 차지한다. 중앙정부 세입의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아일랜드(95.0%), 영국(91.6%), 뉴질랜드(89.2%), 노르웨이(83.8%), 에스토니아(81.3%)이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중앙정부 세입의 비율이 28.0%에 불과하며,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47.2%이며, 중앙정부 세입의 비중은 36.9%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OECD국가의 정부 수입 중 지방세입의 비중(10.5%)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33.9%)과 스웨덴(33.3%)에서는 지방세입이 정부 수입의 1/3을 차지한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 수준별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는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 캐나다는 중앙정부(35.6%)보다 주정부(44.0%)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대신하여 모든 조세를 거둬들이지만, 주정부 스스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의 주정부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전체 수입 중 주정부 수입이 3.9%, 지방정부 수입이 6.3%를 차지한다.

정부수준별 지출 또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OECD국가의 일반정부 지출 대비 중앙정부의 지출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41%를 차지한다. 중앙정부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아일랜드(91.5%), 뉴질랜드(88.3%), 영국(76.7%)이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49.7%), 프랑스(45.1%), 독일(43.4%)이다. 덴마크에서는 중앙정부 세입의 비중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전체 정부 수입의 64%를 지출한다. 이와 비슷하게 지방정부 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는 스웨덴(50.5%), 핀란드(39.6%)이다. 전체 정부 지출 중 주정부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

(47.1%), 스위스(37.0%)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주정부는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과 준연방제 국가인 스위스, 미국 등 9개 국가에만 적용된다. 호주, 한국, 터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OECD 국가의 자료에는 일반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하위 항목 간 구성을 보기 위하여 정부 간 이전수입과 지출이 제외된다.

정부 수입은 조세(예: 소비세, 소득세, 부유세), 순사회보장기여금(예: 사회보험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연금, 건강 및 사회보장 기여금), 재화와 서비스 판매 수입(예: 정부의 시장 산출물), 보조금 및 기타 수입(예: 경상 및 자본보조금, 재산소득, 보조금)을 포함한다. 정부 총수입의 하위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B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지출에는 중간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소득(이자지출 포함), 사회급여, 기타 경상지출(경상이전)과 자본지출(자본이전 및 투자)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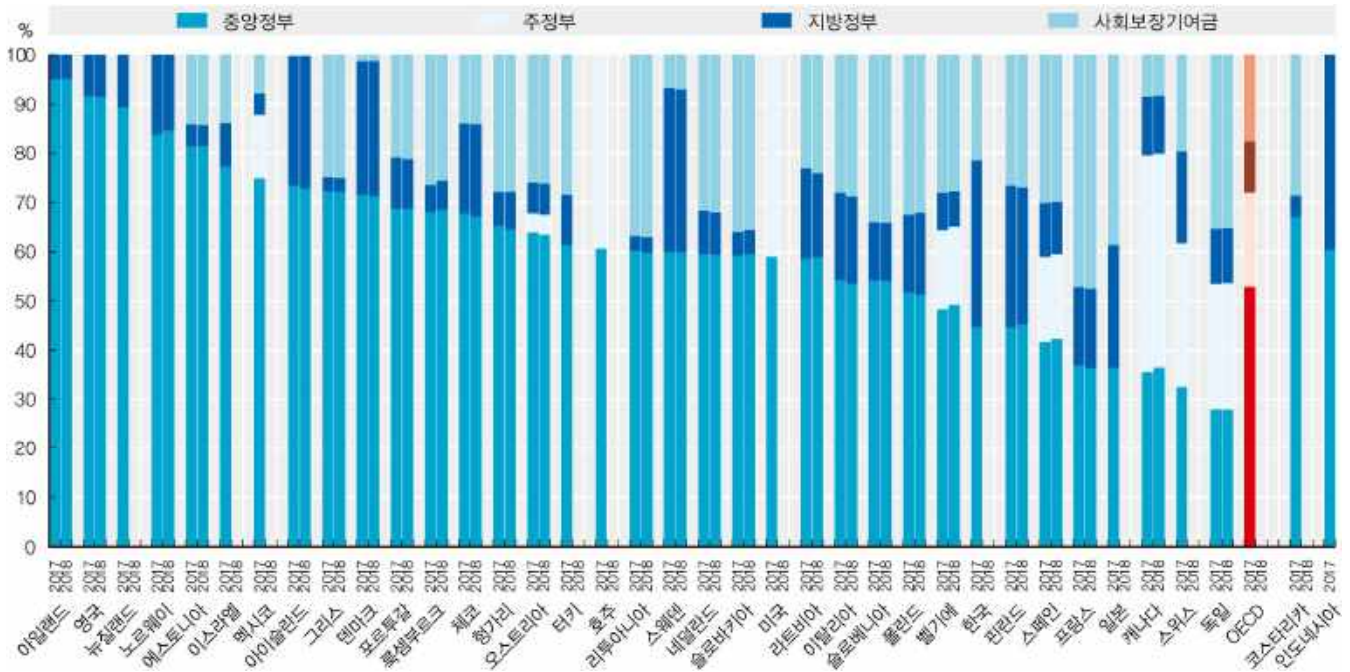
Kim, J. and S. Dougherty (eds.) (2018), Fiscal Decentralisation and Inclusive Growth, OECD Fiscal Federalism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KIPF, Seoul. <https://doi.org/10.1787/9789264302488-en>.

그림 설명

호주, 미국은 지방정부의 자료에 주정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의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일본의 지방정부에 관한 자료는 회계연도를 참고해야 한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45 and 2.46. 2007년 대비 2017년 정부 수준별 수입과 지출의 변화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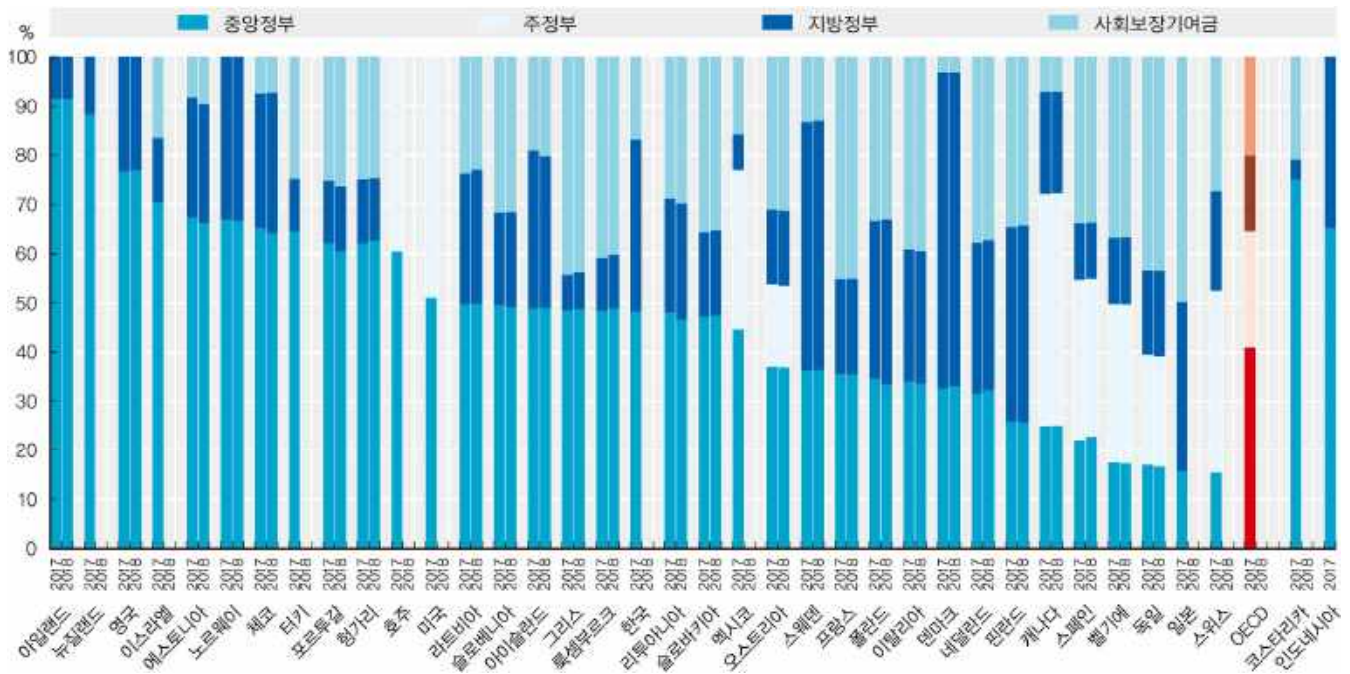
2.43. 정부 수준별 일반정부 수입의 비중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807>

2.44. 정부 수준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826>

공공투자는 사회적 웰빙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공투자는 일반적으로 교통 인프라, 군사방어시설, 건물(학교, 병원) 이외의 유무형 자산을 구축하는데 쓰인다.

2017년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은 3.1%로 2007년보다 0.5%p 감소하였다. 에스토니아(5.3%)와 노르웨이(5.3%)는 GDP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의 가장 큰 국가이다. 에스토니아는 주요 공공자산의 개발에 있어 공공인프라의 질 향상, 공공투자 결정의 친환경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전략적 공공투자를 국가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1.4%)은 GDP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선진국들과 인프라 갭(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인프라 스톡)을 줄이기 위해 주로 교통, 에너지, 물 담수화, 폐기물 처리 분야를 포함한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인프라전략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래 계획과 실제 전략이 수행되는 방식 간 차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공투자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율은 7.7%로 2007년의 9.3%보다 감소했다. 2017년 정부지출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15.6%), 에스토니아(13.5%), 라트비아(11.7%)이다. 반면, 정부지출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3.6%), 포르투갈(4.1%), 벨기에(4.4%)이다. 포르투갈과 벨기에의 경우 이는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인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기능별 공공투자지출의 수준 또한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평균적으로 공공투자지출의 1/3 이상(34.4%)은 교통을 포함한 경제활동 분야에 배분되며 그 다음으로는 국방(15.4%) 분야와 교육(14.1%) 분야에 배분된다.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지출은 전체 투자지출의 4%에 불과하나, 환경과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국가인 네덜란드(12.2%)와 일본(11.3%)에서는 환경보호 분야의 공공투자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정부 수준별 공공투자지출의 현황은 연방제 국가와 비연방제 국가 간 큰 차이가 있다. 2018년 벨기에(89.8%)와 캐나다

(87.8%)에서는 전체 공공투자지출 중 지방정부의 투자지출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리스와 헝가리에서는 중앙정부가 전체 공공투자지출의 3/4을 수행한 반면,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지출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투자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일반정부 투자에는 총자본형성 및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순취득이 포함된다. 총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는 정부 투자의 주요 구성요소로 교통 인프라, 건물, 주택, 학교, 병원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지출 또한 고정투자에 포함된다. 정부의 자본지출에는 자본이전과 정부 투자가 포함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주정부는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과 준연방제 국가인 스위스, 미국 등 9개 국가에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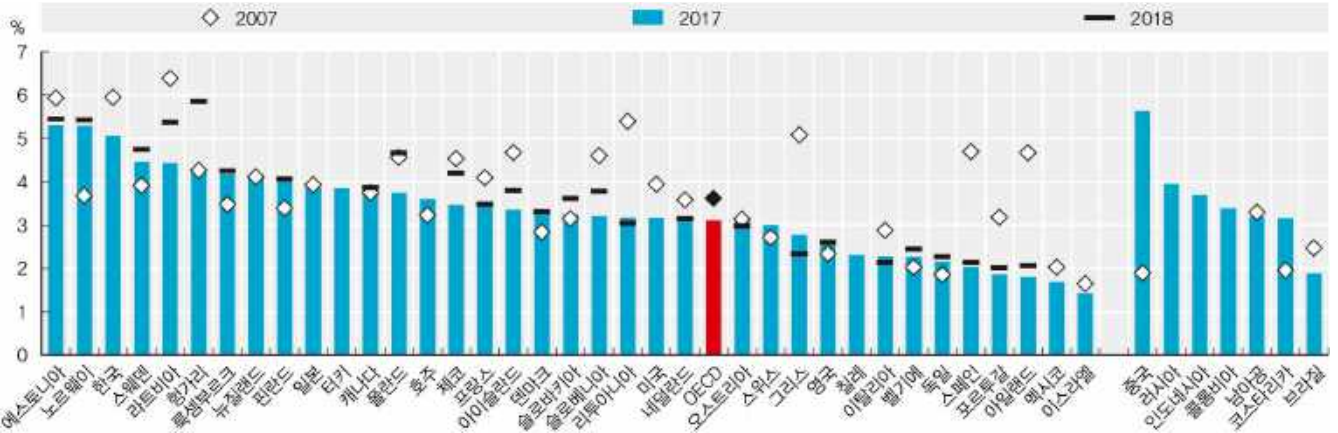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Norway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eco_surveys-nor-2018-en

그림 설명

- 2.47 and 2.48. 칠레와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는 2016년의 자료, 러시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49.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 미국은 지방정부의 자료에 주정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의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 2.50. (총투자 중 정부투자의 비율)과 그림 2.51(정부기능별 일반정부 투자의 구조)의 자료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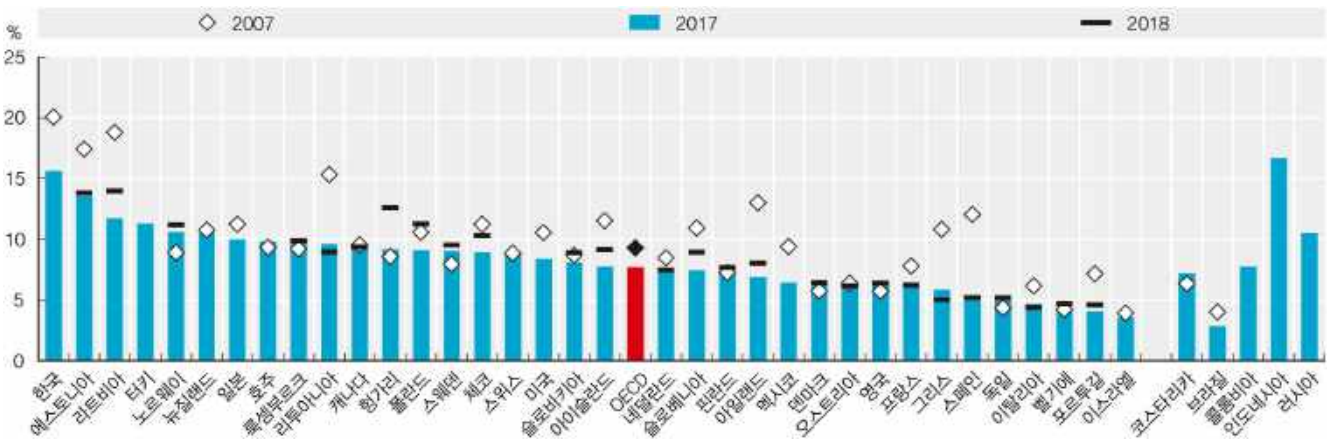
2.47. 공공투자지출의 GDP 대비 비율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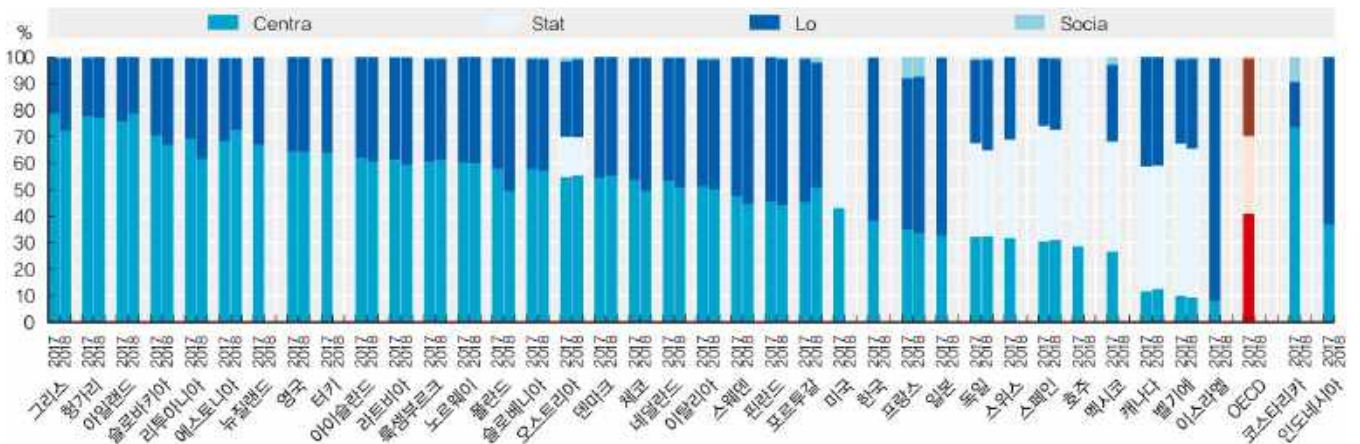
그림 2.48. 전체 정부지출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율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864>

그림 2.49. 정부수준별 공공투자지출의 비율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883>

정부는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인력, 자본, 비영리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의 구매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아웃소싱에는 투입물(중간 소비)로 활용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민간 또는 비영리기관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위탁 등의 2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2017년 OECD 국가의 정부 생산비용은 GDP 대비 20.6%이다. 정부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피고용자 보수(9.2%)이며, 다음으로는 정부가 직접 사용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8.7%)으로 해당 비율은 2007년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GDP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로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의 일반화된 공급을 반영한다. GDP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1.8%)로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민간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한 고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2007-2017년)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은 0.4%p 증가하였으나,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은 0.2%p 감소하였다. 2007년 대비 2017년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 포르투갈이다. 2008년 이후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수 삭감, 수당의 삭감 또는 폐지, 성과급 삭감, 임금 동결 등 포괄적인 보수 개혁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일랜드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보수개혁을 단행하였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의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은 3.1%p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공공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산비용의 구조는 OECD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2017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총생산비용의 44.8%를 피고용자 보수, 42.3%를 정부가 직접 사용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 12.9%를 기타 생산비용에 지출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총생산비용 중 피고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1.5%로 매우 높고, 정부가 직접 사용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이 27.5%, 기타 생산비용이 1.0%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생산비용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는다. 일본의 생산비용은 정부가 직접 사용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이 58.7%, 피고용자 보수가 25.5%, 기타 생산비용이 15.7%를 차지하였다.

2017년 OECD 평균, GDP 대비 정부가 직접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5.7%이며, 민간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지출의 비중은 3.0%이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민간 공급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10.2%)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보건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지만, 민간 보험업자에 의해 자금이 충당된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민간 공급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지출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는 일본(8.8%)으로, GDP의 3.7%를 중간 소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정부의 주요 역할이 재화와 서비스의 규제 및 부분적인 자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의 큰 부분은 민간 영역에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생산비용의 개념 및 방법론’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정부지출 분류에 기초하였다.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 생산비용에는 현금과 현물 보상을 포함한 피고용자 보수 비용에 피고용자가 직접 납부 혹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대납한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다.

정부 아웃소싱에는 첫째, 정부가 직접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이는 중간 소비(정부 생산에 필요한 중간 재화의 조달)를 포함한다.

둘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시장의 공급자에게 지급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한다.

기타 생산비용에는 고정자본의 소비(자본의 감가상각)와 생산을 위한 기타 보조금을 차감한 생산세가 포함된다.

‘일반정부의 생산비용과 아웃소싱’의 자료에는 정부 고용과 정부 생산에 필요한 중간 재화의 소비가 포함된다. 이하에 제시된 생산비용은 국민계정체계에서 산출한 값과 같지 않다.

참고문헌

OECD (2012) Competitive neutrality: Maintaining a Level Playing Field between Public and Private Busines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78953-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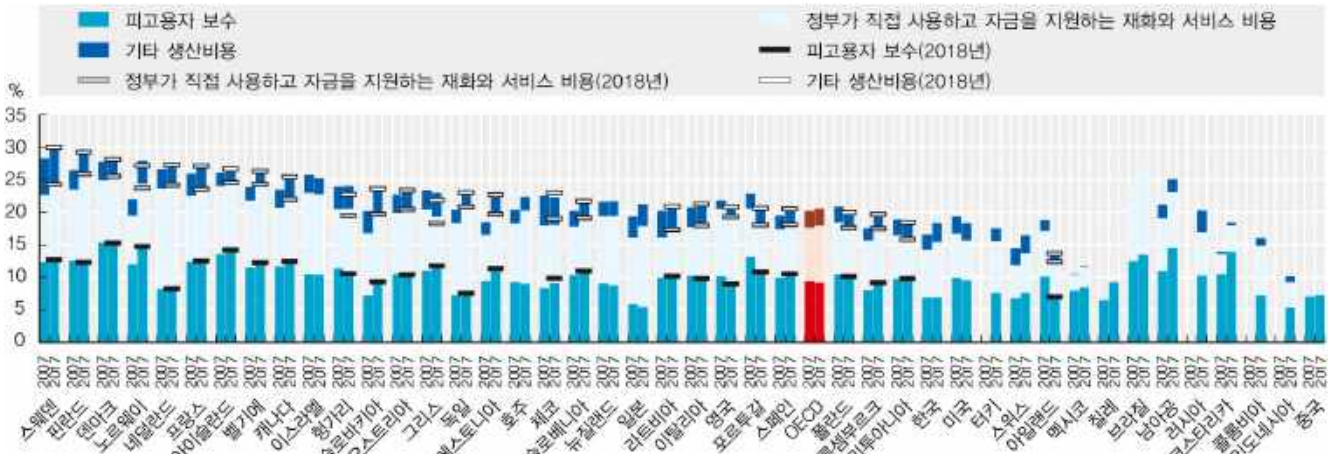
아이슬란드, 멕시코,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의 국가 계정에는 일반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계정이 없다.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2016년의 자료, 러시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55. 2017년, 2018년 정부 아웃소싱 지출의 구조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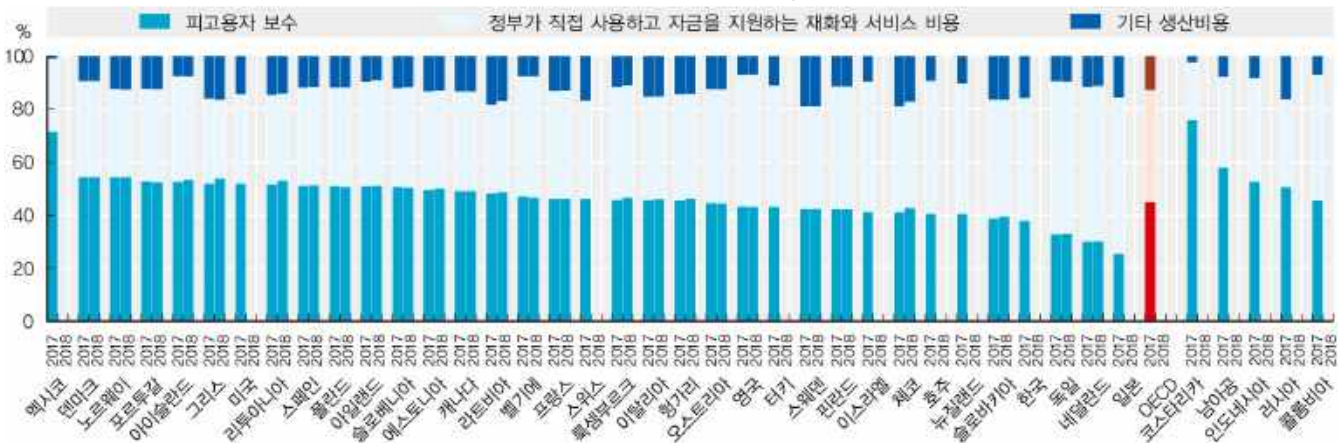
2.52. GDP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 (2007년,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참고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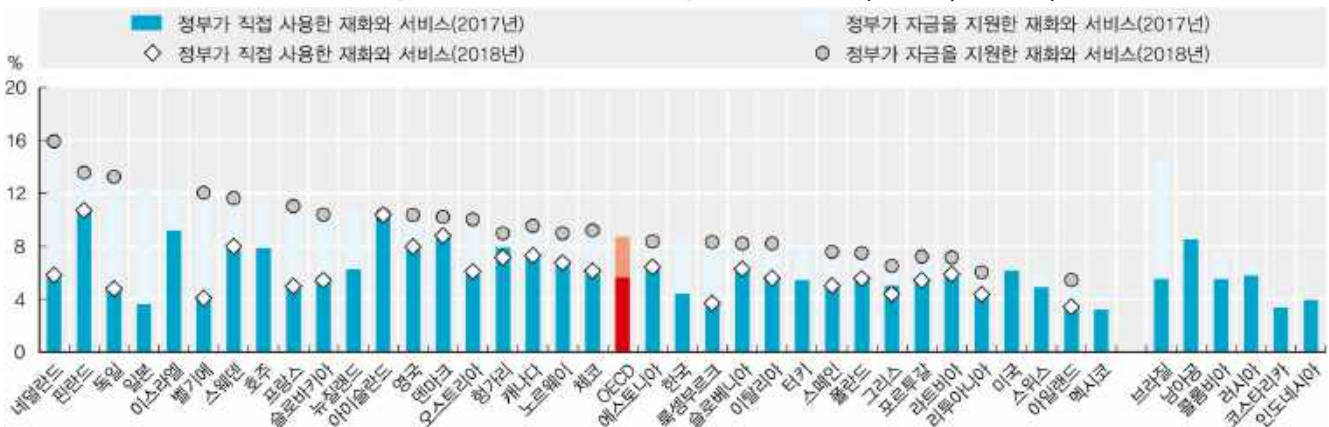
2.53 생산비용의 구조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참고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921>

2.54 일반정부의 GDP 대비 아웃소싱 지출의 비율 (2017년, 2018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참고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940>

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연금, 실업급여, 가족수당과 같이 특정한 인구 집단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부 서비스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보건의료 및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이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진행된 인구 변화와 기술의 변화로 인해 보건의료와 사회보호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와 관련된 정년 인구의 수가 증가했고, 은퇴 이후의 기간 또한 늘어났다. OECD조사에 의하면, OECD국가의 평균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는 1970년 기준 18명이었으나, 2015년 기준 28명으로 증가하였다. 2060년에는 이 비율이 5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OECD, 2019). 또한 은퇴이후 평균 기대여명이 1970년 기준 남자 11년, 여자 15년인데 반해, 2016년에는 남자 18년, 여자 22년으로 각각 증가하였다(OECD, 2017).

2017년 사회보호를 위한 기금의 절반 이상이 노령연금에 지출되었고,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핀란드,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는 GDP의 13% 이상을 노령연금에 지출한다. 반면, 아이슬란드(3.0%), 아일랜드(3.4%), 이스라엘(5.0%)은 노령연금의 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연금이 노년층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주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개인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대체 수준)은 OECD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노인 빈곤으로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OECD, 2017).

다음으로, 2017년 사회보호 지출의 약 15%는 질병 및 장애 급여에 지출되었고,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노르웨이(6.7%), 덴마크(4.4%), 네덜란드(4.1%)는 GDP 대비 질병 및 장애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반면, 일본은 GDP의 0.9%만을 질병 및 장애급여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일본의 장애 연금 수급요건, 상대적으로 장애를 경험한 생산가능인구의 낮은 비중, 장애연금의 청구, 심사, 승인의 낮은 수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이다(Rajnes, 2010).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질병 및 장애급여에 비해 가족 및 자녀 수당을 위한 지출이 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OECD 평균 출산율을 밑돌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전략적 우선순위이다(OECD, 2019).

보건 분야에서는 병원 서비스의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2017년 평균 GDP의 3.1%), 외래환자 서비스(1.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질병 및 장애 급여와 유사하게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는 병원 서비스(예: 일반 및 전문 병원, 의료 및 분만센터, 방문 간호 및 요양 서비스)에 OECD 평균 이상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 지출’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 지출은 정부기능별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에 따라 10개 분야로 구분된다(자세한 정보는 부록 C 참고). 보건 분야의 지출은 6개의 부문(의료 제품기타장비, 외래환자 서비스, 병원 서비스, 공공보건 서비스, 보건 R&D, 기타 미분류 보건)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은 9개의 부문(질병 및 장애, 노령(예: 연금),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으로 구분된다. OECD 소득분포통계(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노인빈곤은 65세 이상 개인의 소득이 중위소득(균등화 가구소득 기준(equivalised household income))의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9-en.
-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
- Rajnes, David (2010), “Permanent Disability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Japan”, *Social Security Bulletin*, Vol. 70, No. 1, pp. 61-84.

그림 설명

OECD 국가 중 이스라엘과 일본을 제외한 비유럽국가와 터키의 자료는 결측 값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 를 참고하였다. OECD Europe은 OECD 국가 중 유럽연합회원국을 의미한다. 아이슬란드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58 - 2.61. 사회보호 분야와 보건 분야의 기능별 정부 지출구조(2017년, 2017년 대비 2019년)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특집: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사회보호분야와 보건분야의 일반정부 지출

2.56 사회보호 분야 기능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2017년)

	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오스트리아	1.82	12.51	1.38	2.16	1.30	0.11	1.04	0.01	0.20
벨기에	3.29	9.19	1.72	2.19	1.65	0.21	1.13	0.01	0.16
체코	2.10	7.34	0.54	1.01	0.17	0.22	0.38	0.00	0.21
덴마크	4.44	8.24	0.01	4.39	2.26	0.67	1.88	0.02	0.47
에스토니아	2.13	6.79	0.06	2.53	1.15	0.02	0.18	0.04	0.14
핀란드	3.14	13.80	0.67	3.05	2.26	0.56	1.05	0.02	0.31
프랑스	2.94	13.36	1.51	2.38	1.94	0.96	1.06	0.00	0.18
독일	3.22	9.35	1.85	1.63	1.64	0.33	0.62	0.00	0.72
그리스	1.54	13.77	2.11	0.65	0.48	0.02	0.78	0.02	0.05
헝가리	2.58	6.96	0.97	2.08	0.30	0.15	0.78	0.00	0.19
아이슬란드	3.11	3.04	0.01	2.02	0.49	0.42	0.32	0.00	0.33
아일랜드	1.90	3.42	0.56	1.34	1.09	0.82	0.30	0.00	0.05
이스라엘	2.63	4.97	0.58	1.42	0.27	0.16	0.54	0.00	0.48
이탈리아	1.82	13.35	2.62	1.56	1.11	0.04	0.36	0.00	0.01
일본	0.91	10.88	1.50	1.85	0.27	0.00	0.29	0.00	0.43
라트비아	2.15	6.90	0.17	1.19	0.49	0.11	0.38	0.00	0.27
리투아니아	3.08	5.75	0.31	1.06	0.57	0.05	0.25	0.00	0.15
룩셈부르크	2.84	9.89	0.00	3.74	1.06	0.08	0.68	0.00	0.16
네덜란드	4.11	6.55	0.07	1.35	1.62	0.47	1.69	0.01	0.00
노르웨이	6.71	7.31	0.19	3.52	0.49	0.11	0.95	0.04	0.44
폴란드	2.37	8.99	1.66	2.67	0.37	0.04	0.21	0.00	0.12
포르투갈	1.29	11.73	1.73	1.07	0.80	0.03	0.23	0.00	0.56
슬로바키아	2.91	7.77	0.81	1.21	0.20	0.00	0.25	0.00	1.36
슬로베니아	2.20	9.18	1.27	1.85	0.50	0.02	0.88	0.00	0.26
스페인	2.37	9.11	2.22	0.70	1.60	0.02	0.33	0.00	0.20
스웨덴	4.11	10.31	0.25	2.45	1.29	0.28	1.41	0.00	0.08
스위스	2.93	6.81	0.31	0.48	1.19	0.02	1.53	0.00	0.27
영국	2.45	8.35	0.05	1.28	0.10	1.10	1.58	0.00	0.28
OECD	2.78	9.97	1.35	1.71	1.20	0.43	0.86	0.00	0.29
콜롬비아	0.01	6.40	..	0.83	..	0.29	1.16	..	0.26
코스타리카	0.62	4.72	0.69	0.24	0.00	0.00	0.01	0.00	2.20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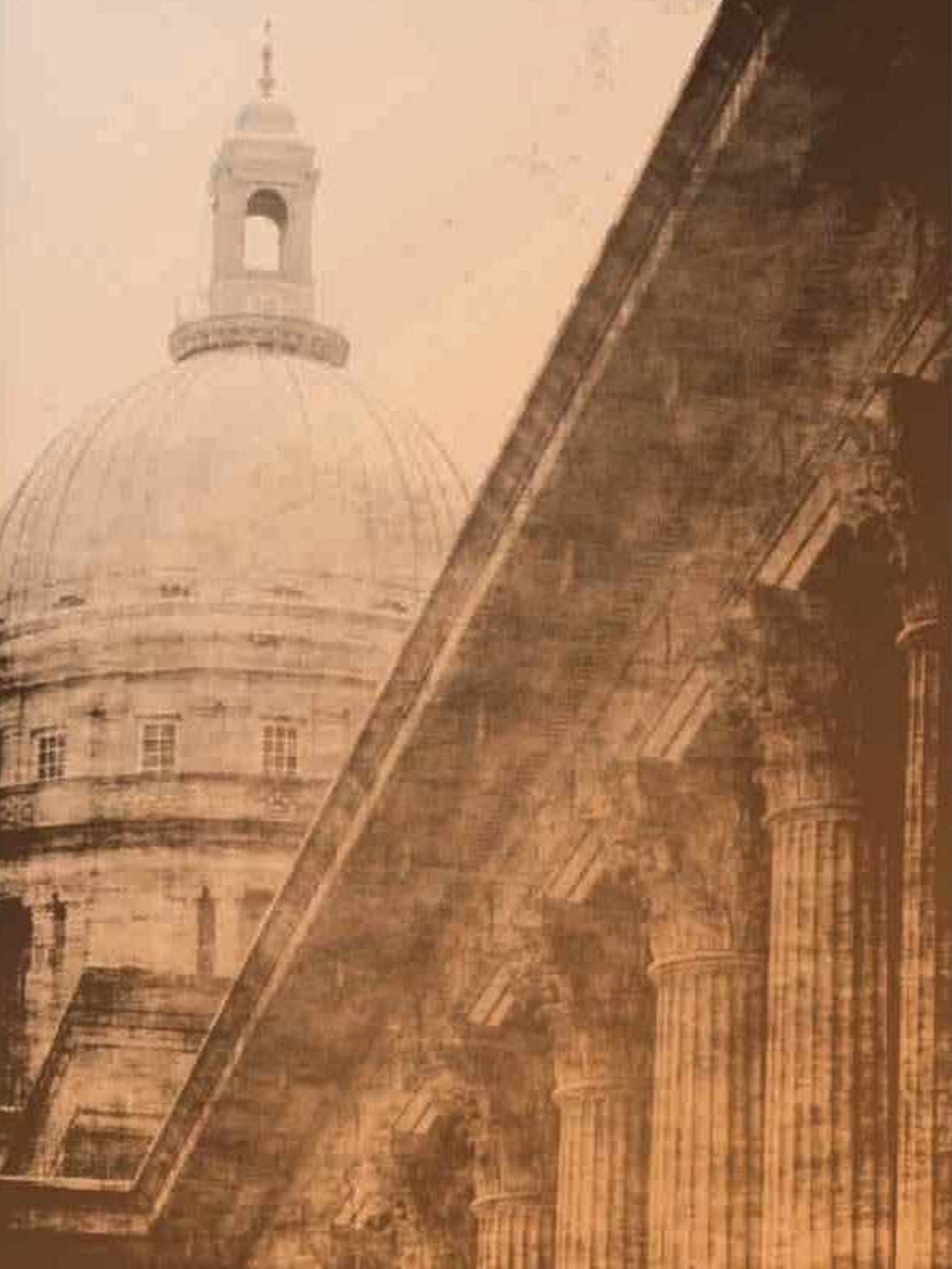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959>

2.57 보건 분야 기능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2017년)

	의료제품, 기기, 장비	외래환자 서비스	병원 서비스	공공보건 서비스	보건 R&D	기타 미분류 보건
오스트리아	1.12	1.47	4.64	0.18	0.46	0.31
벨기에	0.79	2.66	3.91	0.13	0.02	0.17
체코	0.90	1.57	3.40	1.34	0.05	0.21
덴마크	0.55	1.18	5.96	0.15	0.20	0.34
에스토니아	0.66	0.54	3.64	0.04	0.12	0.05
핀란드	0.63	3.15	3.10	0.03	0.12	0.04
프랑스	1.43	2.91	3.39	0.11	0.09	0.10
독일	1.60	2.13	2.72	0.06	0.08	0.51
그리스	1.49	0.48	3.20	0.00	0.04	0.03
헝가리	0.90	1.36	2.15	0.13	0.03	0.24
아이슬란드	0.49	1.80	5.09	0.02	0.00	0.16
아일랜드	0.76	1.86	1.95	0.14	0.01	0.42
이스라엘	0.69	1.57	2.87	0.11	0.00	0.11
이탈리아	0.81	2.59	2.99	0.27	0.07	0.09
일본	1.26	2.97	2.78	0.45	0.01	0.16
라트비아	0.55	0.93	1.88	0.05	0.00	0.09
리투아니아	0.74	1.46	2.11	0.06	0.00	1.29
룩셈부르크	3.44	1.06	0.07	0.05	0.19	0.07
네덜란드	0.75	2.49	3.50	0.22	0.34	0.27
노르웨이	0.54	2.00	5.03	0.25	0.41	0.31
폴란드	0.06	1.46	2.89	0.07	0.08	0.12
포르투갈	0.35	2.08	3.30	0.04	0.11	0.12
슬로바키아	1.48	2.22	3.02	0.04	0.00	0.35
슬로베니아	0.95	2.21	2.73	0.34	0.08	0.27
스페인	0.97	4.60	..	0.09	0.25	0.03
스웨덴	0.75	3.03	2.55	0.22	0.18	0.19
스위스	0.00	0.19	1.70	0.13	0.11	0.05
영국	0.52	1.00	5.37	0.22	0.16	0.16
OECD	0.97	2.23	3.14	0.16	0.13	0.22
콜롬비아	4.58	0.21	0.03	0.07
코스타리카	0.27	2.32	3.03	0.13	0.12	0.24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978>





3. 공공 고용

일반정부 고용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정치의 성평등
사법의 성평등

3. 공공 고용

일반정부 고용

OECD 국가의 정부는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수많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이때 정부는 각 국가의 독특한 행정문화와 시민들의 각기 다른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이렇듯,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공공부문 고용의 상대적 규모에 있어 OECD 국가 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OECD 국가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습도 매우 상이하다. 정부의 서비스는 직접 고용을 통해 전달되거나 민간 및 비영리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의료인, 교사, 응급의료 종사자 등 특정 전문가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민간부문 혹은 비영리조직이 고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OECD 국가별 공공부문 고용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반정부의 고용규모가 높은 수준이며, 2017년 기준 노르웨이의 총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의 비중은 30%를 상회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일반정부 고용의 비율은 18%인 반면, 일본(6%)과 한국(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고용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일부 OECD 국가들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정부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2017년 OECD 국가들의 총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의 비중은 17.7%로 2007년 동 수치(17.8%)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7년 영국, 이스라엘, 터키의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각각 3.1%p, 2.9%p, 2.3%p 감소한 반면, 노르웨이의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1%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정부의 연간 고용 증가율과 관련하여, OECD 평균은 2007-09년 0.6%에서 2011-12년 0.2%로 감소하였으나, 2016-17년 0.4%로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들은 금융위기(2011-12년) 동안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정부의 고용을 감소시켰으나, 2017년 이후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고용 규모의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6-17년 일반정부의 고용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아일랜드(3.5%)인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에스토니아(5.5%)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고용’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를 이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한다. 일반정부 고용의 범위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모든 고용을 포함한다. 또한 각 정부의 핵심 부처, 기관, 부서,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한다. 이때 고용의 규모는 해당 기관들이 직접 고용한 총 인원수를 의미한다. 총고용은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production boundary)에 한정되므로 무급고용은 제외되며,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 유급고용 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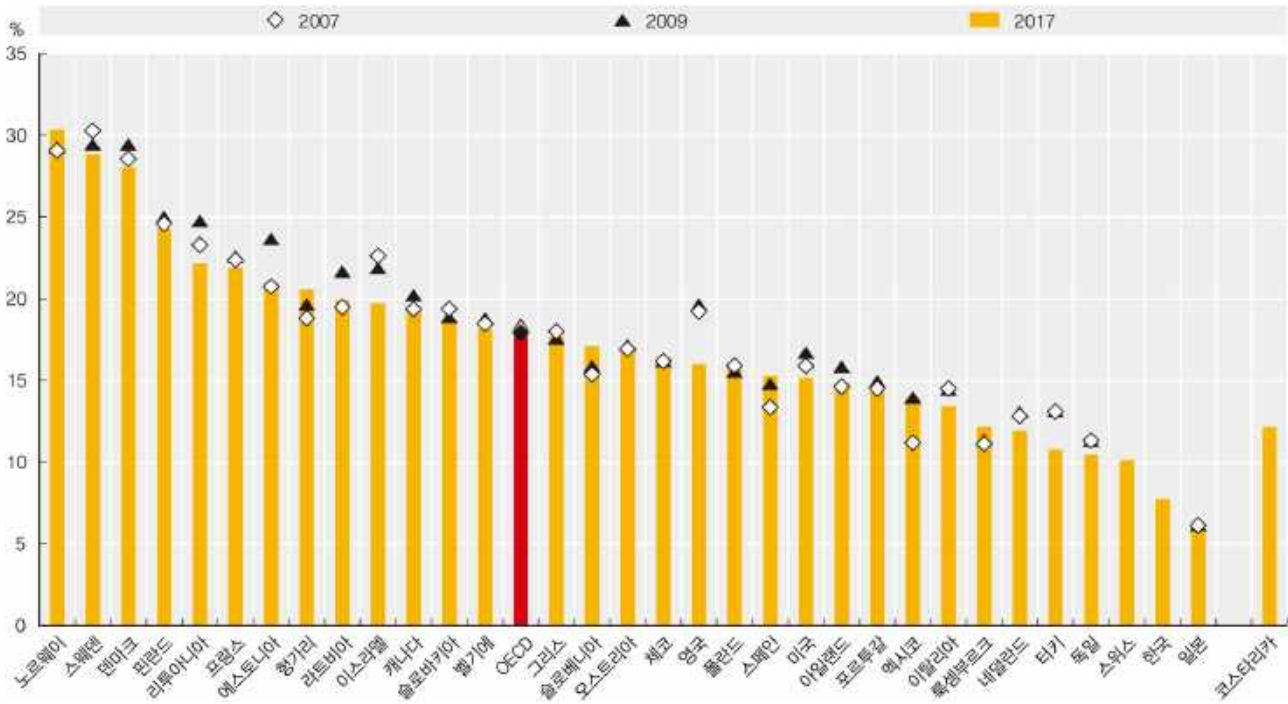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5>.
OECD/LEGAL/0445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OECD (2016), *Engaging Public Employees for a High-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7190-en>.

그림 설명

-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한국, 스위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폴란드의 2010년 이전의 자료는 추정치이다.
- 3.1. 멕시코, 스위스, 코스타리카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국은 2009년 자료 대신 200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 3.2. 그림 3.2의 범례 중 2007-09는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한다. 멕시코, 스위스, 코스타리카는 2016-17년 자료 대신 2015-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국은 2007-2009년 자료 대신 2008-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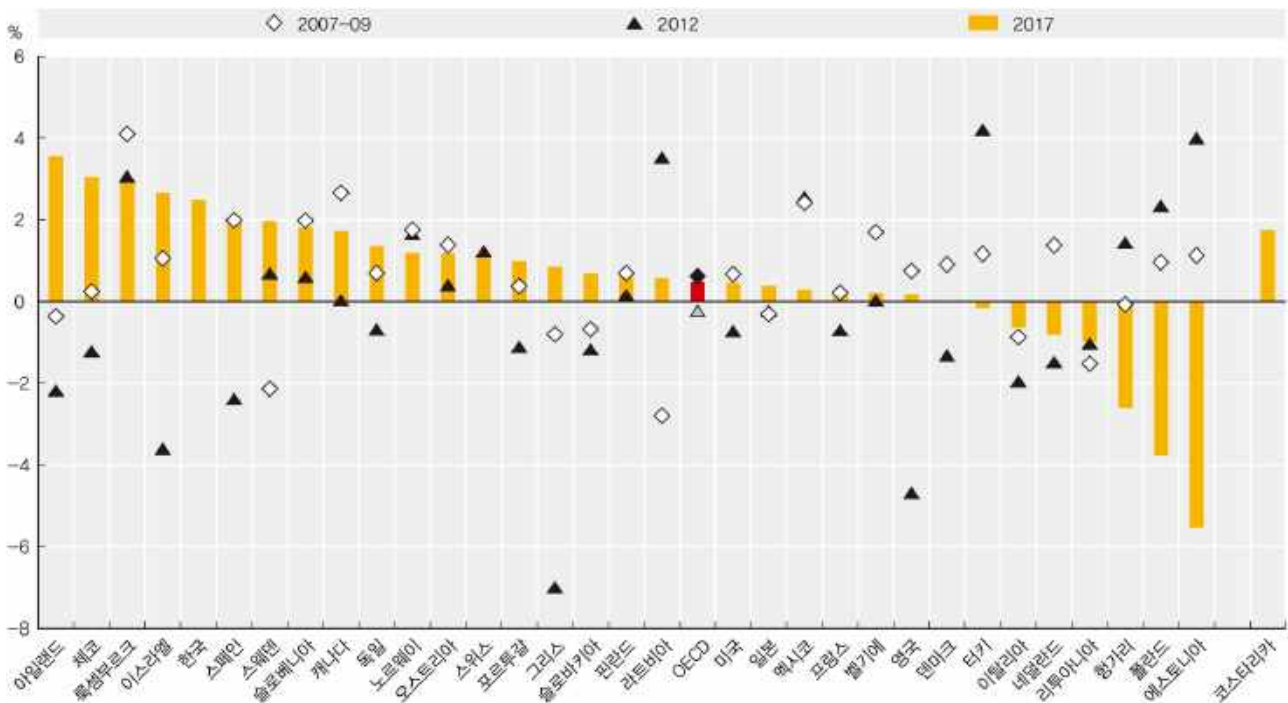
3.1. 총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 (2007년, 2009년, 2017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에서 국민계정 체계의 부문별, 하위부문별 공공 고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997>

3.2. 일반정부의 연간 고용 증가율 (2007-09년, 2012년, 2017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에서 국민계정 체계의 부문별, 하위부문별 공공 고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016>

3. 공공 고용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지방정부의 고용 규모는 행정의 분권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방정부의 고용 규모가 크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큼을 의미한다. 분권화는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내 서비스 전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수준별 고용의 규모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고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방국가(벨기에, 독일, 스위스)에서는 전체 정부의 고용 대비 지방정부 고용의 비중이 더 높지만, 단방국가(아일랜드, 이스라엘, 터키)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인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7년 전체 정부 고용 대비 중앙정부 고용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9-2014년 동안 관찰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정부의 고용 규모를 감축한 국가(3.1 일반정부 고용 참조)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고용 또한 동등하게 감축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헝가리에서는 동기간에 일부 지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행정 조직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 고용의 비율이 27%p 증가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2011-2017년 동안 네덜란드(5%p)와 영국(8.5%p)의 중앙정부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정부 총 고용의 감축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고용’의 자료는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를 통해 수집하였고,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고용을 포함하였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며, 지방

정부에는 주정부(state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포함된다. 사회보장기금에는 중앙, 주, 지방의 모든 기관에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활동들이 포함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사회보장기금의 고용 규모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고용 규모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의 고용 규모가 매우 작다. 총고용은 일반정부, 사회보장기금에 직접 고용된 총 인원을 의미한다. 준연방제 국가인 벨기에, 독일, 멕시코, 스페인과 스위스, 미국은 연방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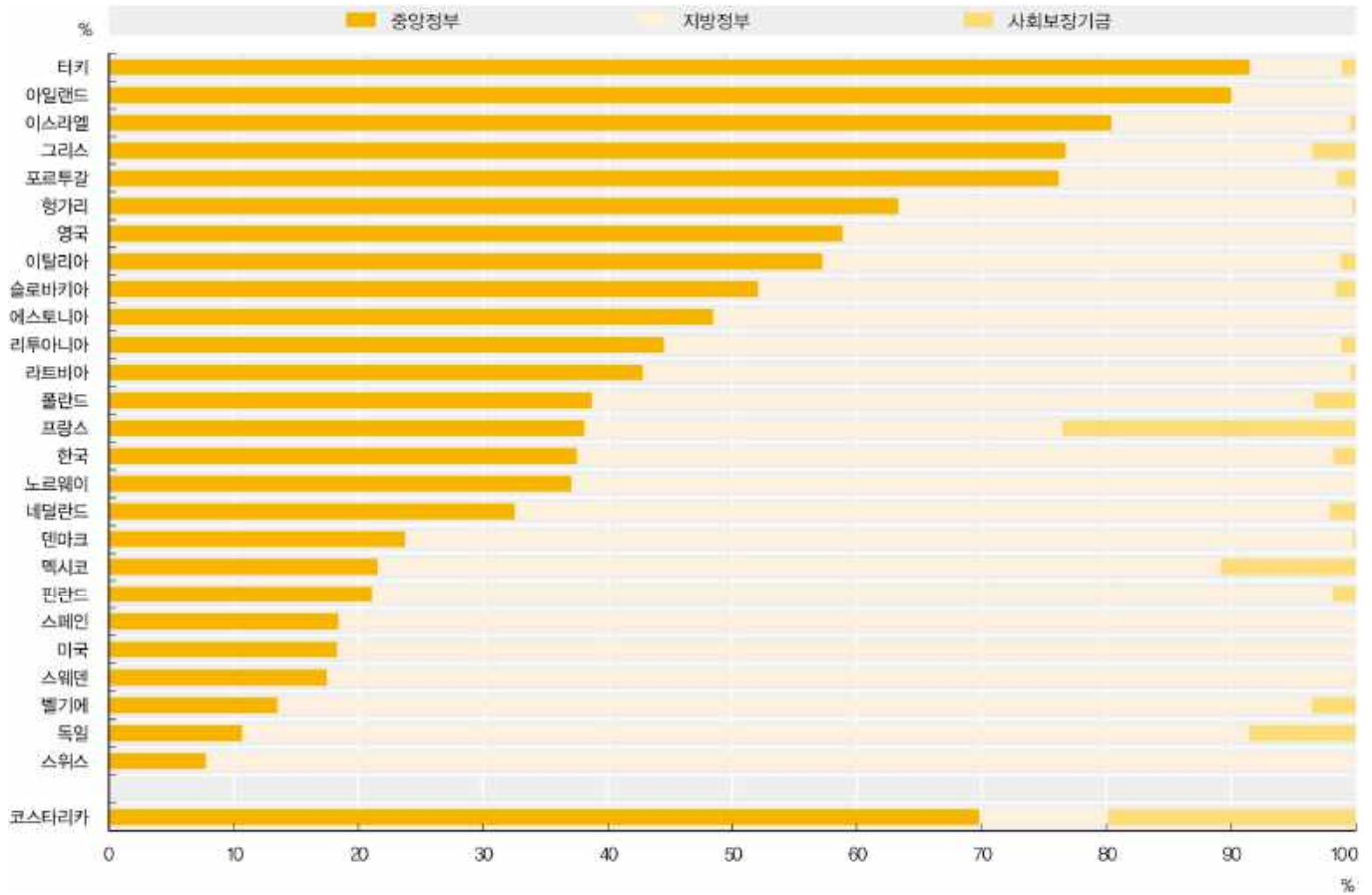
-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5>
-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 OECD (2016), *Engaging Public Employee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7190-en>.

그림 설명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코스타리카는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의 고용 규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 스위스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폴란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영리기구(NPIs)의 고용 규모를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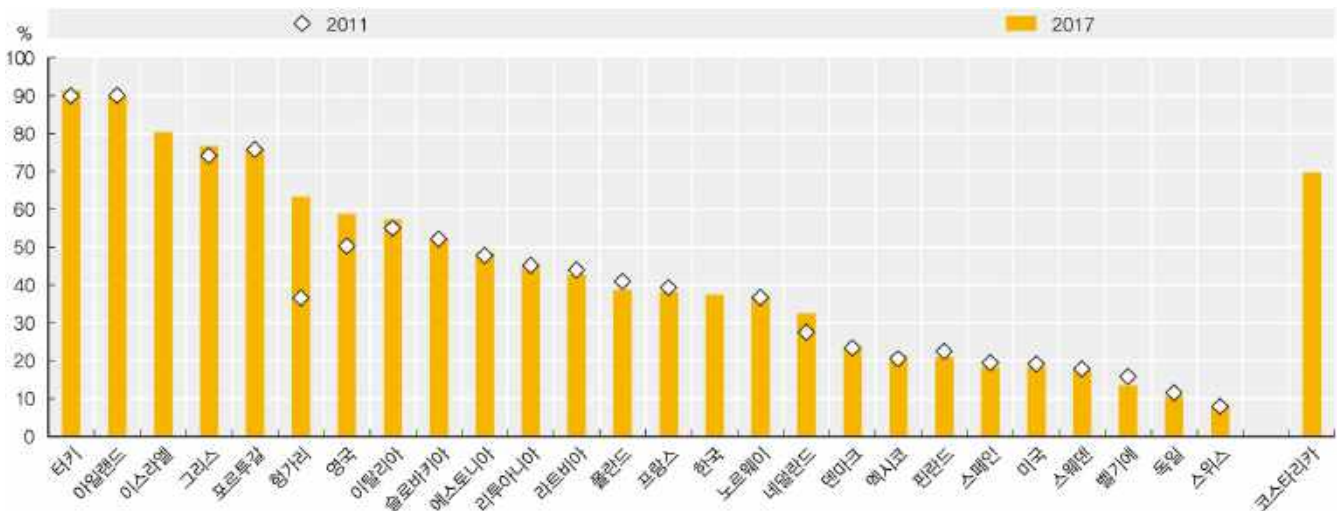
3.4. 리투아니아는 2009년 자료 대신 2010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3.3.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규모 (2017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Public employment by sectors and sub-sectors of national account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035>

그림 3.4. 전체 정부 고용 대비 중앙정부 고용의 비율 (2011년, 2017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Public employment by sectors and sub-sectors of national account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054>

3. 공공 고용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수준은 노동 인구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의 진전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공공부문은 선제적으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준과 방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에 있어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고, 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돕는다.

2017년 OECD국가의 공공부문 내 여성 인력의 비율은 평균 59.6%로 여성이 과다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2017년 북유럽 국가(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공공부문 내 여성 인력의 비율은 69.3%~71.3%로 나타난 반면, 터키에서는 여성 인력의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멕시코(51.5%)와 그리스(48%)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의 고용이 양성평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공공부문 내 여성인력의 비율은 2011-2017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동기간 일본에서는 공공부문 여성인력의 비율이 약 3%p 증가하였다.

OECD회원국의 공공부문 내 여성 인력의 비율(60.1%)은 총 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45.9%)보다 높았다. 이는 공공부문 내 여성 인력의 비율이 낮은 네덜란드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전체 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는 전체 고용과 비교할 때,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이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교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특정 직종이 여성의 일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폭 넓은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OECD 국가 전반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적이던 고위직(리더십,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부문 고용의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적인 움

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부문 고용’의 자료는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공부문 고용의 범위는 일반정부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 총고용은 해당 기관들이 직접 고용한 총 인원 수를 의미하며, 시간 근무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고용은 제외한다. 또한 고용은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 유급 고용 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자인 모든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하되, 무급고용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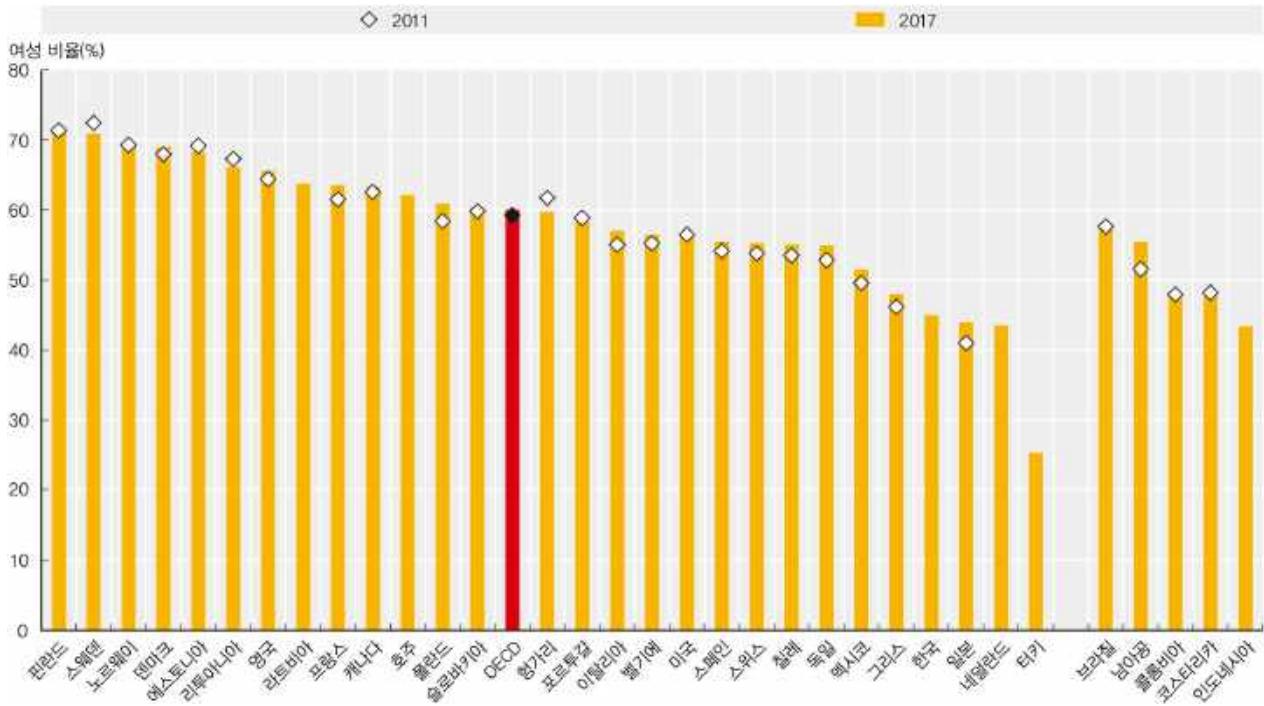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5>.
-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 OECD (2014), *Women, Government and Policy Making in OECD countries: Fostering Diversity for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10745-en>.

그림 설명

오스트리아, 체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호주, 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덴마크, 독일, 스위스는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records)와 사업체 자료(establishment survey)를 활용하였다. 2011년 자료 대신 일본은 2010년의 자료, 브라질은 2012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스위스는 2015년의 자료, 인도네시아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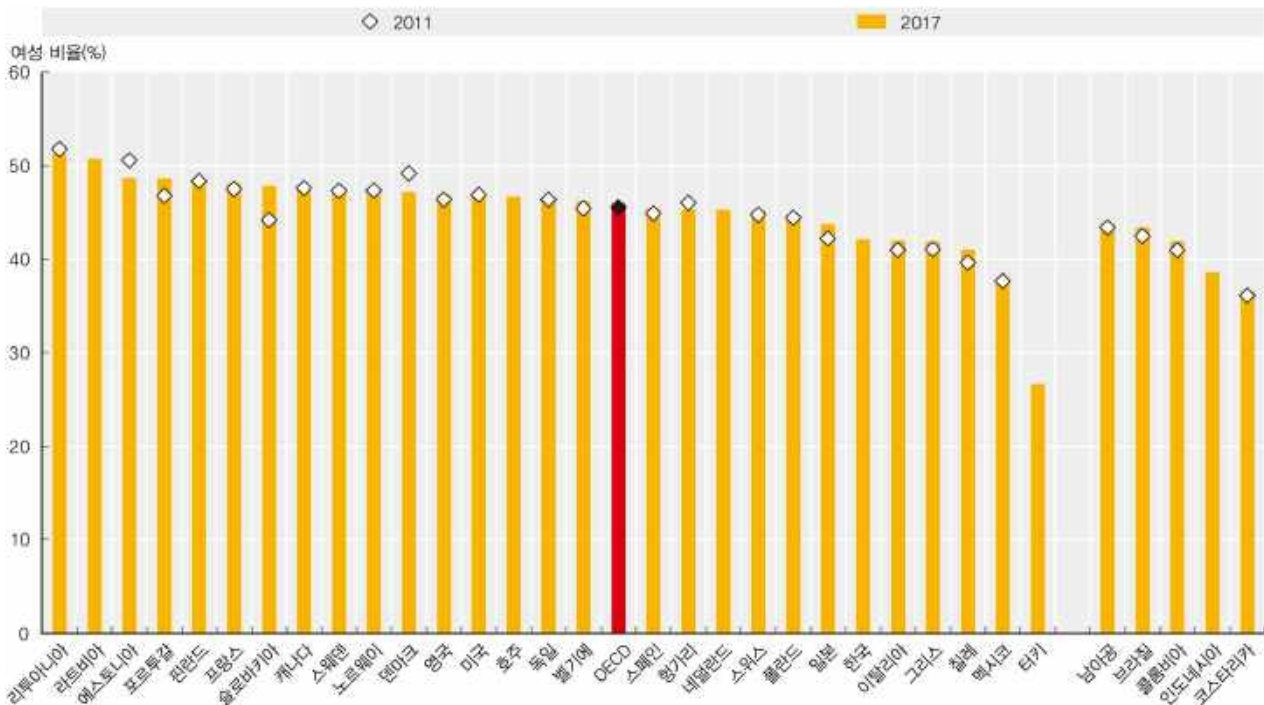
그림 3.5.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2011년, 2017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Employment by sex and institutional sector.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은 정부 당국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073>

그림 3.6. 전체 고용의 성평등 (2011년, 2017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Employment by sex and institutional sector.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은 정부 당국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092>

3. 공공 고용

정치의 성평등

행정부와 의회는 공공 부문의 성평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주요한 행위자이다. 의회는 법률과 정책을 발의하고 논의하며 채택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성차별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규제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여성의 역할, 역량, 책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의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고, 남성과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의 성평등은 단지 의석과 직위의 균등한 할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위해 공공 정책, 서비스, 예산이 구체적인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 전체의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

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중은 30.1%이다. OECD 국가 중 핀란드, 멕시코, 스웨덴의 여성의원 비중은 45% 이상으로 가장 높고, 헝가리와 일본은 15% 미만으로 가장 낮다. 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중은 2012년 대비 3.8%p 상승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동기간에 멕시코, 프랑스, 이탈리아의 여성의원 비중은 10%p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선거 이니셔티브와 이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승리가 예상되는 지역 구”에 여성위원을 지명하기로 한 여당의 결정이 선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017년 정당 내 여성위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5-2019년 네덜란드(-6%p), 독일(-5.6%p), 슬로베니아(-12.3%p)에서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여성의 지속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장관의 비중은 1/3 수준이며, 2012년 대비 6%p 증가하였다. 내각 내 여성의 비중은 성평등에 관한 정당 간 협약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OECD 국가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내각은 2015년 양성평등을 달성했고, 2019년 스페인의 여성장관 비율은 65%로 2015년에 비해 약 34%p 이

상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2019년 핀란드(-25%p), 리투아니아(-21%p), 슬로베니아(-19%p)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내각 참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의회의 성평등’은 의회 전체 의석 중 여성위원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PARLINE 자료를 활용하였다. 후보자 할당제는 모든 정치 주체가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선거법, 정당법상 규정되어 있다. 의회의 여성 할당제 자료는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성 장관’에 관한 자료는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여성의 정치 참여(Women in Politics)”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여성 장관의 현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다. 여성 장관에는 부총리 및 장관 그리고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총리, 정부 수반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통령, 정부 수반, 공공기관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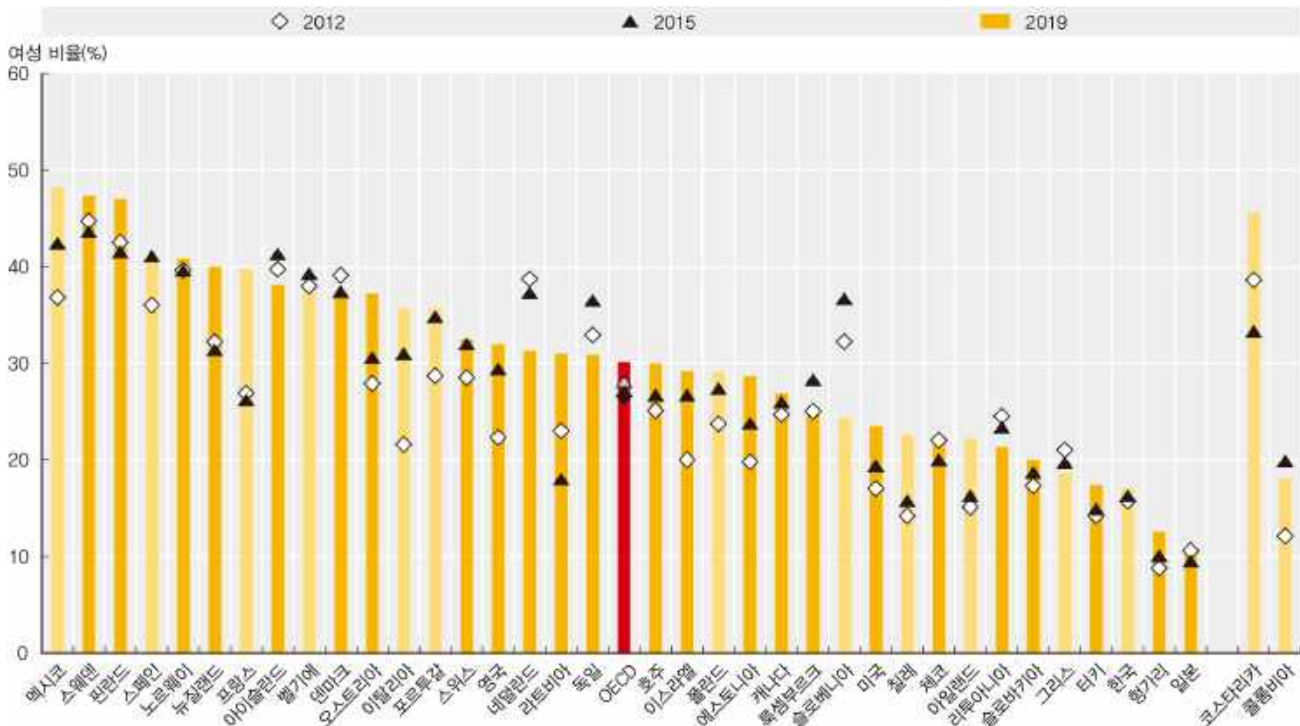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9), Fast Forward to Gender Equality: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and Leadership, OECD, Paris. <https://doi.org/10.1787/g2g9faa5-en>
- OECD (2018), Gender Equality in Canada: Mainstreaming, Governance and Budget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1108-en>
- OECD (2016), 2015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52820-en>

그림 설명

- 3.7. 연한 파랑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2019년 4월 기준, 여성위원에 대한 후보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나타낸다. 의회 여성위원의 비율은 총 의석 대비 여성위원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이며, 2019년 1월 1일, 2015년 12월 1일, 2012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3.8. 여성 장관의 비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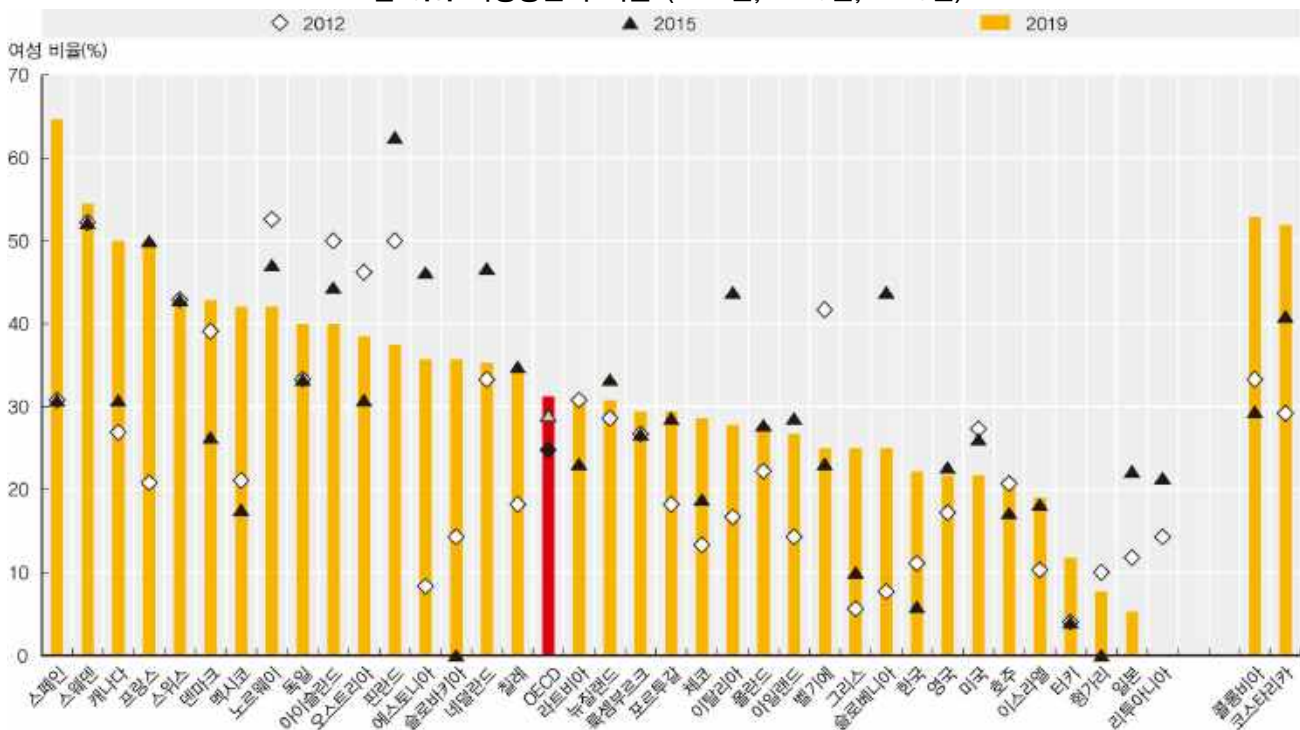
그림 3.7. 의회 여성의원의 비율 (2012년, 2015년, 2019년)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PARLINE (database), and IDEA Quota Project (database). 핀란드의 2019년 자료는 정부 당국에 의해 제공받았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199>

그림 3.8. 여성장관의 비율 (2012년, 2015년, 2019년)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omen in Politics", 2019, 2015 and 2012.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218>

3. 공공 고용

사법의 성평등

사법부 리더십의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법치주의의 효과성과 관련된 주요 거버넌스 이슈로서 OECD 국가들에 의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사법부를 구성할 경우, 재판에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고, 청렴성을 제고하여 사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법조계 고위직의 여성 진출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법조계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2016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 직업 법관의 비율은 50%로, 2010년(44%)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여성 직업 법관의 비율은 라트비아가 77%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터키의 여성 법관의 비율은 2010년에 비해 최소 10%p 이상 증가하였다. OECD 국가 간 사법부 내 성평등 정도를 비교할 때에는 각 국가의 고유한 법률 체계의 특징과 법관이 되기 위한 전문성 개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로스쿨 졸업 이후 여성이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영미법 체계에서는 최소 5년 또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연방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주에서 직접 임명된 법관이거나 혹은 주에서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미법 체계 하에서는 경력 조건으로 인해 법관으로 임명되는 시기가 매우 늦기 때문에 여성들이 법조계 고위직으로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법조계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최고 법원에서 여성법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6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법관의 비율은 1심법원에서 56%, 2심법원에서 48%로 나타났지만, 최고법원에서는 33%에 그쳤다. 특히 젊은 여성은 법관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편향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법관의 채용 단계에서 여성은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사법부 내 고위직의 인사를 담당하는 수석 변호사들 사이에서 여성의 존재감을 저해할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사법의 성평등’ 자료는 2010년, 2016년 전체 직업법관 중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성 직업법관의 비율’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의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의 자료와 2017년 OECD에서 수행한 사법부의 성인지적 실무에 대한 설문조사(OECD 2017 Survey on Gender-sensitive Practices in the Judiciary)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법원의 심급은 삼심제로 1심, 2심, 최고심으로 구분된다.

‘법원의 심판 단계별 여성 직업법관의 비율’ 또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의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의 자료와 2017년 OECD에서 수행한 사법부의 성인지적 실무에 대한 설문조사(OECD 2017 Survey on Gender-sensitive Practices in the Judiciary)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1심법원(*Courts of first instance*)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곳이며, 2심법원(*courts of second instances*)에서는 항소를 통해 1심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3심(최고심)법원(*supreme courts*)은 대법원을 의미하며, 상고를 통해 1심법원, 2심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직업법관(*professional judges*)은 직업으로 법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훈련된 동시에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1심법원, 2심법원, 최고법원 모든 직업법관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OECD (2019), Fast Forward to Gender Equality: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and Leadership,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g2g9faa5-en>

OECD (2016), 2015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52820-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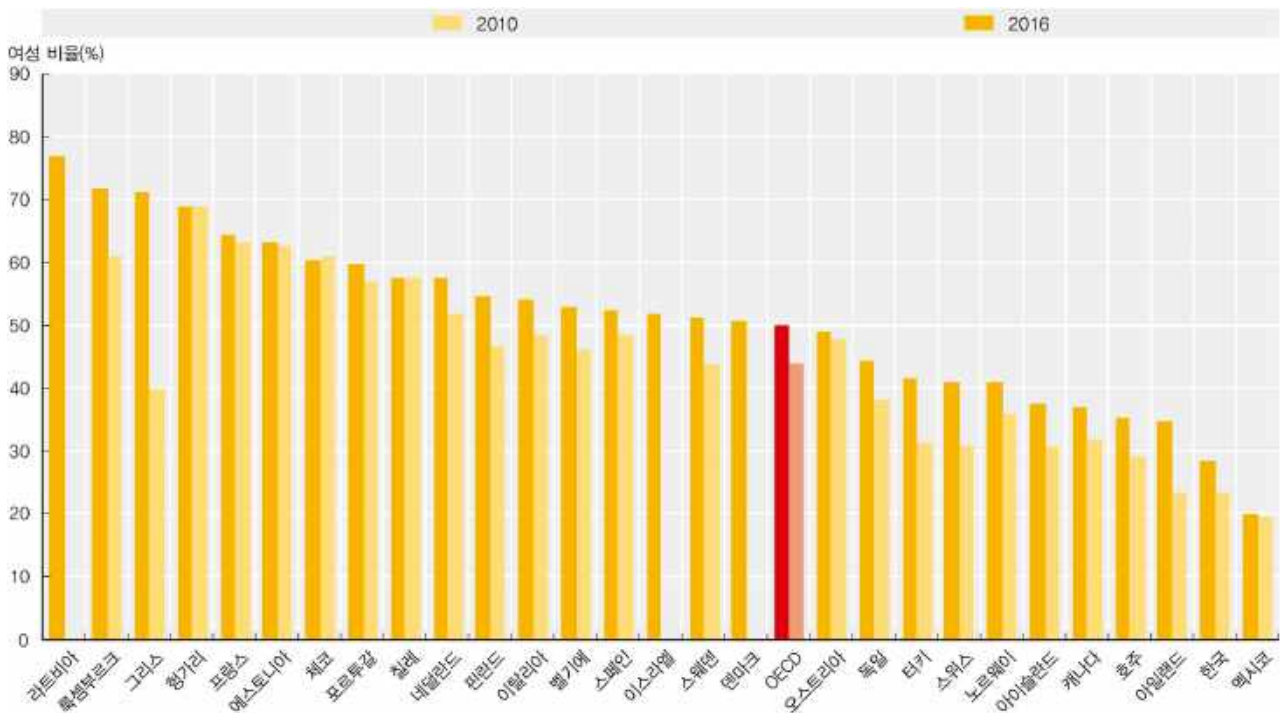
그림 설명

OECD 평균은 산술평균(arithmetic average) 값에 해당한다.

3.9. 라트비아, 룩셈부르크는 2016년 자료 대신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포르투갈은 2010년 자료 대신 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덴마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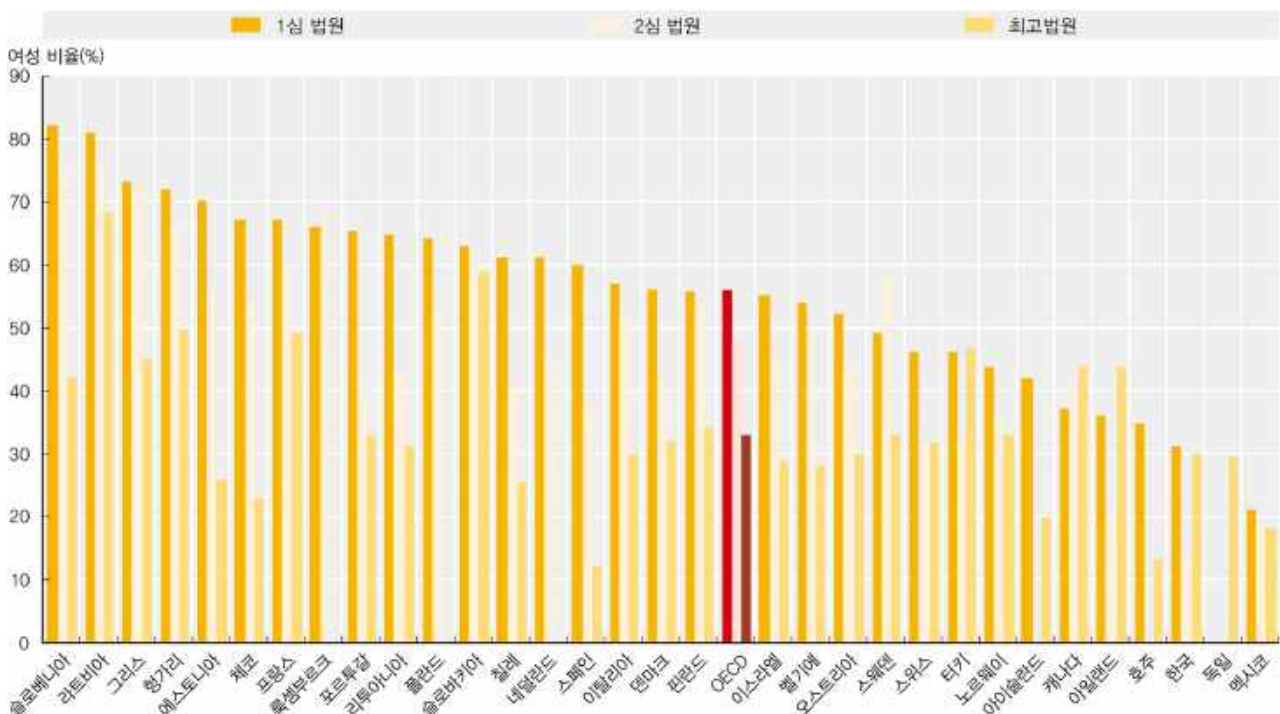
그림 3.9. 여성 직업법관의 비중 (2010년, 2016년)



출처: OECD 2017 Survey on Gender-sensitive Practices in the Judiciary. 독일과 포르투갈의 자료는 정부 당국에 의해 제공받았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111>

그림 3.10. 법원의 심판 단계별 여성 직업법관의 비중 (2016년)



출처: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data (2016); OECD 2017 Survey on Gender-sensitive Practices in the Judiciary. 독일과 포르투갈의 자료는 정부 당국에 의해 제공받았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237>





4. 정부기관

정부수뇌기관(centres of government)의 역할 및 책임
열린정부에서의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정책평가체계의 제도화
정책평가의 활용 촉진

4. 정부기관

정부수뇌기관(centres of government)의 역할 및 책임

정부수뇌기관(centres of government; CoG)은 내각실(Cabinet Office), 대통령실(Office of the President), 추밀원(Privy Council), 정부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등 국무총리(수상)와 국무회의(예: 정부 장관들로 구성된 합의체 의사결정기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수뇌기관에는 정부수반과 의회를 지원하는 기구와 정부수반을 지원하는 특별한 정부 부처(예: 총리실, 수상실)가 포함된다.

정부수뇌기관에 부여된 책임의 범위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그리스에서 정부수뇌기관은 국민들과의 소통, 정책의 수립과 분석 등 11개 업무를 수행한다. 아일랜드와 일본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국무회의의 준비만을 담당한다. 정부수뇌기관의 고유 업무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모두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정부수뇌기관의 기능이 가장 방대한 국가는 멕시코, 미국, 그리스(16개 업무 수행)이다. 반면, 네덜란드의 정부수뇌기관은 조정과 의사소통 기능만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된 기능(예: 정책분석, 정부 사업의 검토)은 수행하지 않는다.

모든 OECD 국가에서 국무회의의 준비 업무는 정부수뇌기관이 담당한다. 국무회의의 준비는 브리핑, 장관급 위원회, 부처 회의, 부서 회의 등 대부분 조정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수뇌기관은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정부수뇌기관은 국무회의 제출된 의안이 준비 및 발표 절차를 이행했는지 검토한다. 또한 대다수의 정부수뇌기관은 의안이 적절한 협의 절차(예: 외부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행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법안이 국무회의의 의안으로 상정된 경우, 법무부 또한 정부수뇌기관에 포함된다. 핀란드, 일본, 스위스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협의 절차를 검토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28개국은 정부수뇌기관에서 국무회의의 의안이 정부의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소관 부처가 담당한다.

의안에 대한 비용 검토가 정부수뇌기관의 고유 업무인 국가는 11개국이고,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국가는 9개국이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에서는 재무부가 의안에 대한 비용을 검토한다.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정부 전반에 대한 정책 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멕시코(4개국)에서는 재무부 또한 정책 조정에 관여한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4개국)에서는 개별 부처가 함께 정책 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는

정기 국무회의(28개국)와 고위 공직자의 임시회의(26개국)가 선호된다. 헝가리, 스페인은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정기 국무회의만을 활용하는 반면,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는 성과관리, 작성지침의 제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에서 전략적 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터키는 해당 업무를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칠레,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6개국)에서는 정부수뇌기관과 재무부가 전략적 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전환 계획(transition planning)과 관리가 정부수뇌기관의 고유 업무인 국가는 12개국이고,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국가는 11개국이다. 이중 5개 국가에서는 개별 정부 부처가 차기 정부에 전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의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업무를 정부수뇌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중 16개 국가에서는 의회에 대한 대응 업무가 정부수뇌기관의 고유 업무인 반면, 사안에 따라 다른 부처와 협업하고 있는 국가는 18개국에 해당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해당 자료는 2017년 OECD에서 수행한 정부수뇌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OECD 회원국(34개국)과 기타 주요 경제국(4개국)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정부수반과 국무회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고위 공직자이며, 제공된 정보는 2016년 자료에 해당한다.

정부수뇌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내각실 등이 포함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의 기능을 다른 부처(정책기획실, 예산처)가 수행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OECD (2018), *Centre Stage II: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in OECD countries* (<https://www.oecd.org/gov/centre-stage-2.pdf>)

OECD (2014), *Centre Stage: Driving Better Policies from the Centre of Government*(<https://www.oecd.org/gov/Centre-Stage-Report.pdf>)

그림 설명

한국과 폴란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탈리아는 2016년 자료 대신 2019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4.3(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의 검토 항목과 주체)과 그림 4.4(정부수뇌기관이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적 수단)의 자료는 부록 F에 제시된 온라인 주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4.1. 정부수뇌기관의 책임 (2016년)

	국무회의의 준비	정책 조정	전환계획 및 관리	전략적 기획	정부 프로그램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회 대응 업무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	●	●
체코	●	●	●	◐	○	◐	◐
덴마크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	○	◐
라트비아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멕시코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터키	●	●	●	○	●	◐	●
영국	●	●	●	◐	●	◐	●
미국	●	●	●	●	◐	◐	◐
OECD 합계							
● 정부수뇌기관의 고유 업무	34	24	21	20	18	16	16
◐ 다른 부처와 협업	0	10	11	13	12	15	18
○ 다른 부처의 업무	0	0	1	1	4	3	0
브라질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출처: OECD (2017), "OECD Survey on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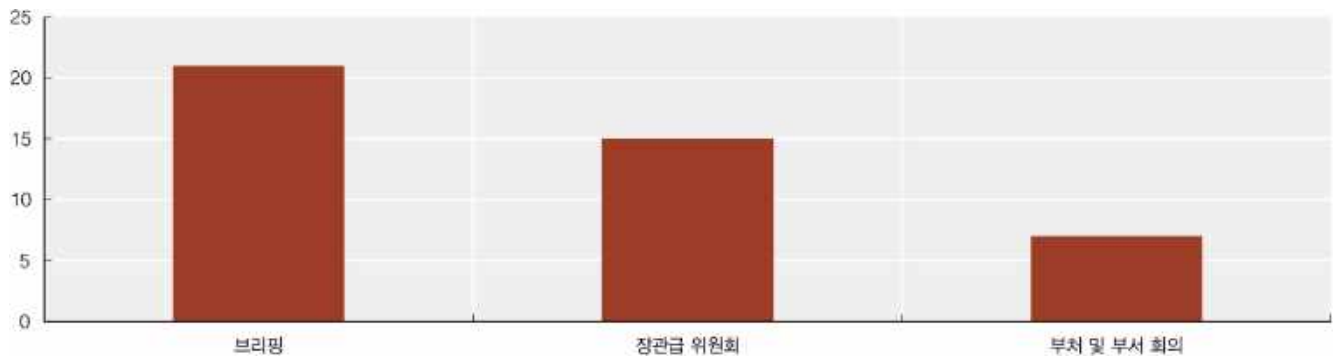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130>

그림 4.2. 국무회의 의안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조정 수단



출처: OECD (2017), "OECD Survey on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149>

4. 정부기관

열린정부에서의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열린정부(open 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증진하는 거버넌스 문화를 의미한다(OECD, 2017). 국가의 전략, 정책 및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OECD는 제도 간 조정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독립 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수뇌기관은 전체 정부 부처에게 정치적 수단, 협약, 지원, 리더십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정부 전략 및 이니셔티브를 조정 및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하는데 있어 전략적 우위를 갖는다.

대다수의 OECD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열린정부 전략 및 이니셔티브의 설계, 집행, 의사소통, 조정, 모니터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열린정부 전략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슬로베니아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열린정부 전략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에서는 정부수뇌기관 외 다른 부처에서 열린정부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국토정책행정부(Ministry of Territorial Policy and Public Administration), 핀란드에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OECD 28개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직접 이해관계자와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의 주체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해관계자는 시민, 직업 단체(예: 노동조합), 학문연구기관이다. 호주,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시민사회단체, 언론, 독립기관, 지방정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이중 24개 국가에서는 정책 단계에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책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는 제2차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국가실행계획 자체평가 보고서 및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작성 과정과 로비활동 및 내부고발자 규정의 제정 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였다. 또한 호주,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 정책의 집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한다.

정부수뇌기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리투

아니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한 열린정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정책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17년 캐나다 추밀원에서는 연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시민들이 설문을 완료한 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캐나다의 정부수뇌기관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user-friendly interface)를 제공하여 시민 특히,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정부수뇌기관은 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해당 자료는 2017년 OECD에서 수행한 정부수뇌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OECD 회원국(34개국)과 기타 주요 경제국(4개국)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정부수뇌기관과 국무회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고위 공직자이며, 제공된 정보는 2016년 자료에 해당한다.

정부수뇌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내각실 등이 포함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의 기능을 다른 부처(정책기획실, 예산처)가 수행하기도 한다.

열린정부 전략(open government strategy)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논의된 열린정부 아젠다를 정리한 문서를 의미한다. 열린정부 전략에는 단기,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지표, 열린정부에 관한 주요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된다.

열린정부 이니셔티브(open government initiative)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열린정부와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치(행동)를 의미하며, 법률의 입안부터 특정한 정부 활동(예: 온라인 협의)까지의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참고문헌

OECD (201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38>.

OECD (2016), Open Government: The Global Context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68104-en>.

그림 설명

한국과 폴란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탈리아는 2016년 자료 대신 2019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4.7 정부수뇌기관과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현황을 정책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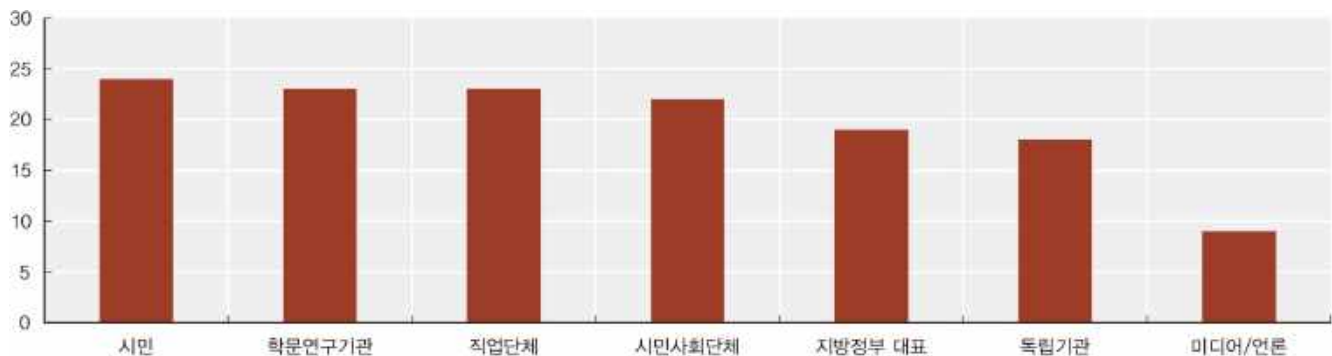
4.5. 열린정부 전략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2016년)

	설계	집행	의사소통	조정	모니터링	평가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캐나다	○	○	○	○	●	○
칠레	●	●	●	●	○	○
체코	●	●	●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	●	○	○	○	○
라트비아	●	●	●	●	●	●
리투아니아	●	●	●	●	●	●
룩셈부르크	●	●	●	○	○	○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	●	●	●	○	○
영국	●	●	●	●	●	●
미국	●	●	●	●	●	○
OECD 합계						
● 해당함	21	20	19	18	14	11
○ 해당하지 않음	13	14	15	16	20	23
브라질	●	○	○	○	○	○
코스타리카	●	○	●	●	●	○

출처: OECD (2017), "OECD Survey on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168>

4.6. 정부수뇌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현황 (2016년)



출처: OECD (2017), OECD Survey on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187>

4. 정부기관

정책평가체계의 제도화

정책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혹은 미래의 정책 이니셔티브의 설계와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의 목표는 주어진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 또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성공(또는 실패)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같이, 정책평가는 증거영향정책(evidence-informed policy making)과 굿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정책평가의 중요성은 법에 정책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독일, 멕시코, 스위스는 정책평가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미국은 2010년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을 목표로 대규모 공공관리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GPRA(정부 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에 정책평가를 규정하였다.

정책평가는 각 국가의 제도적 배열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제외한 대다수의 OECD 국가와 협력국에서는 행정부 내의 단일한 기관에서 정책평가를 수행하거나 혹은 다수의 기관이 정책평가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21개국에서는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인 반면, 나머지 12개국에서는 단일한 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특히, 프랑스와 슬로바키아는 다수의 기관에서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수뇌기관은 가장 제도화된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그리스, 한국, 라트비아, 터키는 정부수뇌기관에서 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국가는 22개국으로 이중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오직 재무부만이 정책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에서는 공공부문개혁부(Ministry of Public Sector Reform) 또는 이에 준하는 부처가 정책평가를 수행하며, 체코에서는 지역개발부(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미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앙 정부 이외의 독립적인 기관에서도 정책평가를 수행한다.

정부 정책평가 기능을 정부수뇌기관에 부여한 국가 중 19개국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정책평가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정책평가 활용의 책임을 오직 정부수뇌기관에만 부여하였다. 16개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평가정책에 대한 정의 및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14개국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정책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수뇌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정책평가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응답한 국가는

13개국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에서 정부수뇌기관은 지식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포르투갈은 OECD국가 중 정부수뇌기관에 가장 넓은 범위의 책임을 부여한 국가로, 정부수뇌기관은 정책평가와 관련된 1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정부수뇌기관은 정책평가, 평가자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OECD 12개 국가에서는 재무부가 정책평가와 함께 가이드라인의 개발, 정책평가의 활용 촉진의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OECD 7개 국가에서는 공공부문개혁부가 정책평가와 함께 가이드라인의 개발, 교환을 위한 플랫폼 제공, 지식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해당 자료는 2018년 5월 OECD가 수행한 정부수뇌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국가별 정책평가체계의 제도화 수준과 주요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크게 정책평가의 제도화 수준(경향, 실무, 도전), 정책평가의 질 개선, 정책평가 활용의 촉진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는 OECD 회원국과 기타 주요 경제국의 정부수뇌기관과 일선부처(보건부, 공공부문 개혁부, 제3의 일선부처)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3월, 37개 OECD 회원국과 기타 주요 경제국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국가의 현재 제도와 실무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응답하였다.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앙(연방) 정부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참고문헌

OECD (Forthcoming), *Institutionalisation, Quality and Use of Policy Evaluation: Governance Lessons from Countries' Experience*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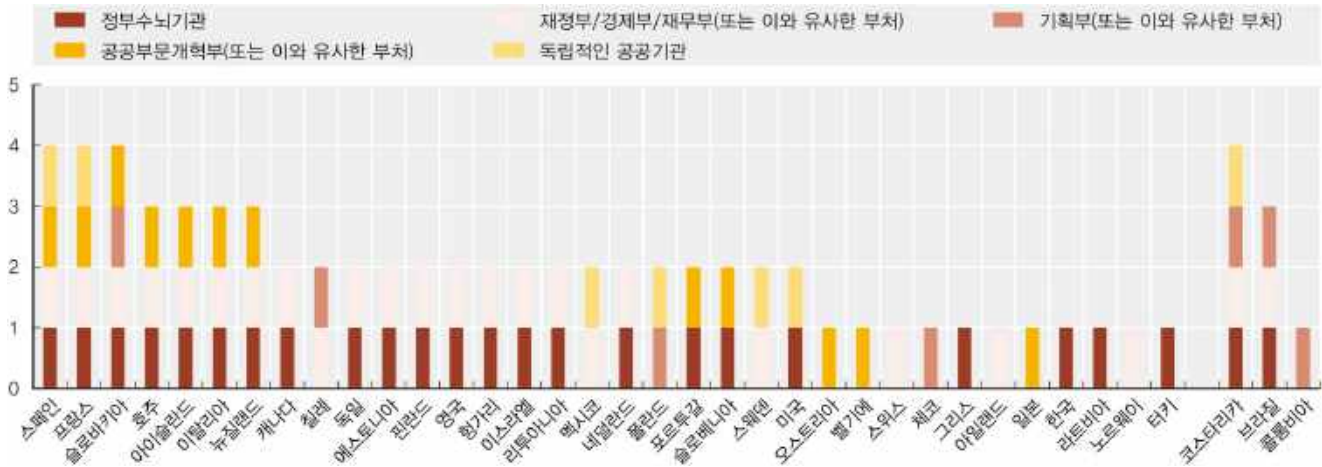
OECD (2018), "Survey on Policy Evaluation", OECD Publishing, Paris. Available online at: www.oecd.org/gov/policy-monitoring-evaluation.htm

그림 설명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행정부 내 정책평가 수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룩셈부르크의 자료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 4.8 “행정부 내 기관 중 정부의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 4.9 “정부의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 4.10 정부 정책평가의 지침에 관한 법 체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4.8. 행정부 내 정부 정책평가 수행 기관 (2018년)



출처 : OECD (2018) Survey on Policy Evaluation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206>

4.9. 정부 정책평가 수행기관의 임무 및 책임 (2018)

	평가정책의 정의 및 업데이트	정책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	정책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 기관에 특정 정책평가의 실시 요구	정책평가의 질 보장	정책평가의 활용 촉진	지식센터의 역할 및 교환을 위한 플랫폼 제공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	■◆	■◆
체코	◆	◆	◆	◆	◆	◆	◆
덴마크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	▲	▲
한국	●	●	●	●	●	●	●
라트비아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멕시코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터키	●	○	○	●	○	○	○
영국
미국	●	●	●	●	●▼	●▼	●▼
OECD 합계							
● 정부수뇌기관	15	13	14	13	10	19	12
■ 재무부(또는 이와 유사한 부처)	9	12	8	9	4	13	9
▲ 공공부문개혁부(또는 이와 유사한 부처)	6	7	2	4	4	5	7
◆ 기획부(또는 이와 유사한 부처)	4	4	1	1	3	3	3
▼ 독립적인 공공기관	1	2	0	2	2	4	1
○ 수행기관이 없음	7	7	14	13	15	5	9
브라질	○	●	●◆	●◆	○	○	○
콜롬비아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출처: OECD (2018) Survey on Policy Evaluation.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225>

4. 정부기관

정책평가의 활용 촉진

정책평가의 활용은 정책 주기 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평가의 활용을 통해 사전적(ex ante)으로는 향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고, 사후적(ex post)으로는 정책 집행의 성과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정책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환류하는 과정은 의사결정자들이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책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적, 인적, 재정적 자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평가에 투입된 자원이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를 제외한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예: 정책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국무회의에 보고)등을 도입하였다.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정책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5개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라트비아는 4개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3개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8개국이며, 2개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또한 8개국이다. 하나의 제도만을 운영하는 국가는 9개국이다.

OECD국가 중 21개 국가에서는 정책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에서는 정책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캐나다에서는 정부 지출의 총량과 배분을 결정하는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에 정책평가 결과를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책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국가는 11개국으로, 이는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의 유일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일선 부처가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관리예산처(Office on Management and Budget ; OMB)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범부처 평가 정책 위원회(Interagency Council on Evaluation Policy)를 구성하여 매달 10여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책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OECD 10개 국가에서는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리·대응 체계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뉴질랜드에서 활용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OECD 11개 국가(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미국)에서는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촉진을 위한 조정

체계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노르웨이에서 활용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중 8개 국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평가 결과를 실무자 및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국가의 모든 정책 분야 및 향후 정책평가의 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한 정책평가 결과를 한 곳에 모으는 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7개 국가에서는 정책 설계시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에스토니아와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의 맵핑(mapping)과 정부 간 연결 기능은 활용하지 않는다. 독일과 멕시코에서는 조정 체계가 4가지의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폴란드와 일본은 앞서 언급한 기능 중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해당 자료는 2018년 5월 OECD가 수행한 정부수뇌기관의 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OECD 회원국과 기타 주요 경제국의 정부수뇌기관과 일선부처(보건부, 공공부문 개혁부, 제3의 일선부처)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정책(또는 개혁)의 설계, 집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정의된다. 정책 평가의 목표는 목적, 효율성, 효과성, 영향, 지속가능성의 달성도와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 평가란 정책의 가치나 의의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OECD (forthcoming), *Institutionalisation, Quality and Use of Policy Evaluation: Governance Lessons from Countries' Experie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9) *Building Capacity for Evidence Informed Policy Making, lessons from the countries experie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8), "Survey on Policy Evaluation", OECD Publishing, Paris. Available online at: www.oecd.org/gov/policy-monitoring-evaluation.htm

그림 설명

룩셈부르크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 4.11 “당신의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4.12 “범정부 조정기구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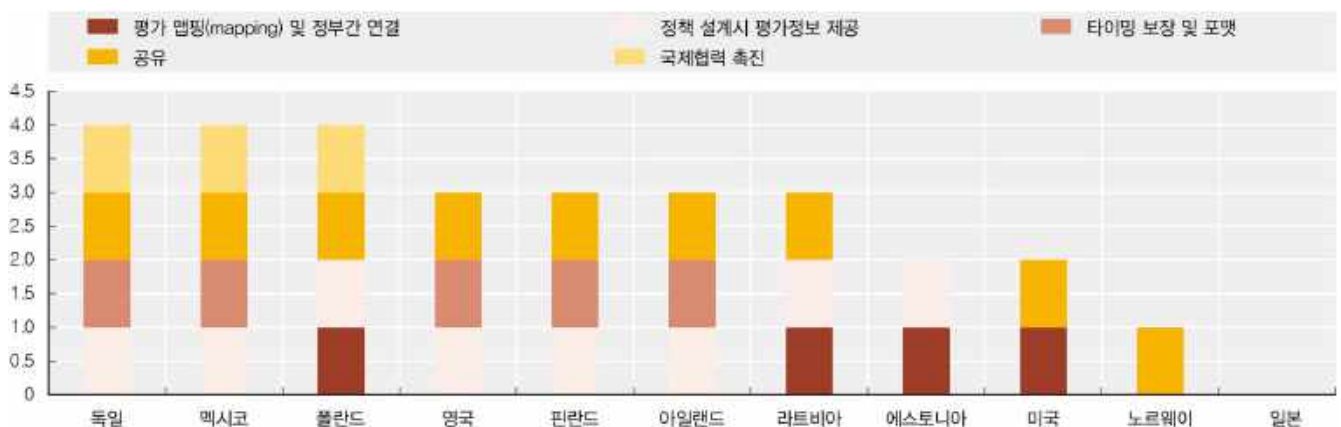
4.11.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018년)

	정책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국무회의에서 정책평가 결과 보고	정책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조정기제	기관 차원의 관리·대응 체계	정책평가 결과의 강건성 등급 체계	기타	특정 수단이 없음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	○	○
체코	○	○	○	○	○	○	●
덴마크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	○	○
한국	○	●	○	●	○	○	○
라트비아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멕시코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터키	○	○	○	○	○	○	○
영국	●	○	●	○	○	○	○
미국	●	○	●	○	○	○	○
OECD 합계							
● 있음	16	10	8	9	2	7	3
○ 없음	19	25	27	26	33	28	32
브라질	○	○	○	○	○	○	○
콜롬비아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출처: OECD (2018) Survey on Policy Evaluation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244>

4.12. 정책결정시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 체계의 기능(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Policy Evaluation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263>





5. 예산제도와 실무

- 자본예산과 인프라
- 재정위험(fiscal risk)의 관리
- 성인지 예산
- 예산의 투명성
-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

5. 예산제도와 실무

자본예산과 인프라

건전한 자본예산체계는 예산이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돕는다. OECD의 예산관리 원칙(OECD Principles of Budgetary Governance)은 건전한 자본예산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소에 주목한다. 1) 경제적 역량의 격차, 인프라 개발 수요, 사회·산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본투자계획의 기반 마련, 2) 투자의 비용과 편익, 지불능력(affordability), 사업 간 상대적 우선순위, 적격성(overall value for money)에 관한 신중한 평가, 3) 특정한 재정 메커니즘과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 4) 공공투자의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발 및 이행

예산 과정에 자본지출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경상지출과 통합하는 방안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예산 과정에 통합하는 방안은 인프라 투자 계획의 개선, 사업 간 조정, 지출의 유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분리하는 방안의 장점은 의무지출(보장성 사업)로 인한 재량지출(자본투자사업)의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osner, 2009). OECD(2018)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 중 74%는 일선부처가 중앙예산기관(central budget authority; CBA)에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을 통합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의 국가에서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이 별도의 예산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은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총체적인(overall) 관점에서 전략적인 장기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새롭게 전략적 인프라 계획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운송 부문의 병목 현상(transport bottlenecks), 인구 동향, 지역 개발의 불균형 등이 주된 원인이다. 현재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 목록(shortlists)을 만들어 전체적인 사업의 기획과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프라 사업은 불가피하게 준비 및 건설 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인프라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서는 준비 및 건설 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 과정에 책임이 분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

(69%)에서는 관련 부처 혹은 소속기관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31%는 중앙정부가 성과평가 정책을 관리하는 반면, 38%는 관련부처에 권한을 위임하되 일선부처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본예산과 인프라’의 자료는 2018년 OECD에서 수행한 자본 예산과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설문조사(2018 OECD Survey of Capital Budgeting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초 OECD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중 26개 국가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주로 중앙(연방)정부의 재무부 및 기타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거버넌스는 다양한 절차, 수단, 상호작용의 규범, 의사결정, 인프라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 내부의 부처 간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사업의 적격성(Value for money; VfM)은 정부가 사업의 전체 수명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 품질, 특징 및 가격(예: 비용)의 최적 조합에 대해 판단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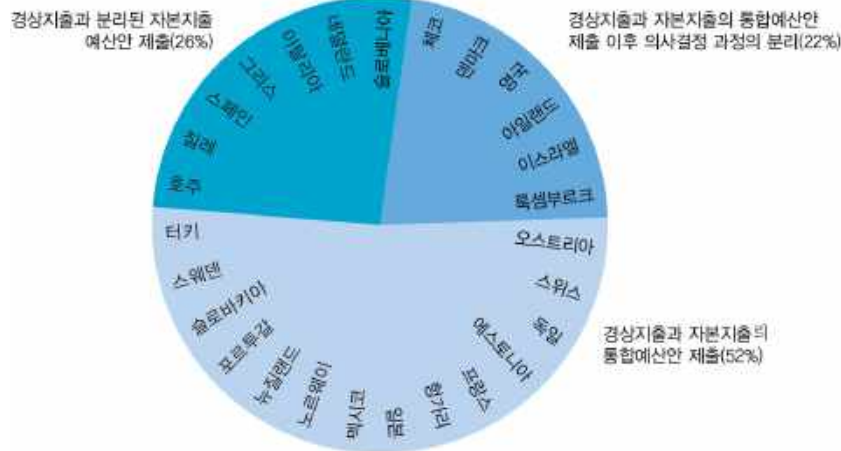
-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OCDE,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957-en>.
- Posner, P. (2009),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relevance of budget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Volume 2009/1, pp. 49-74.
- OECD (2017), “Getting Infrastructure right: a Framework for Better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2453-en>.

그림 설명

리투아니아의 자료는 수집되지 않았다.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라트비아, 폴란드, 미국의 자료는 결국 값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5.1. 독일은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을 분리하여 예산에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및 협의 과정에서는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을 통합하여 결정한다.
- 5.2. 슬로바키아는 부총리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서 국가투자계획(National Investment Plan)의 책임을 진다.
- 5.3. 해당 질문에 대한 포르투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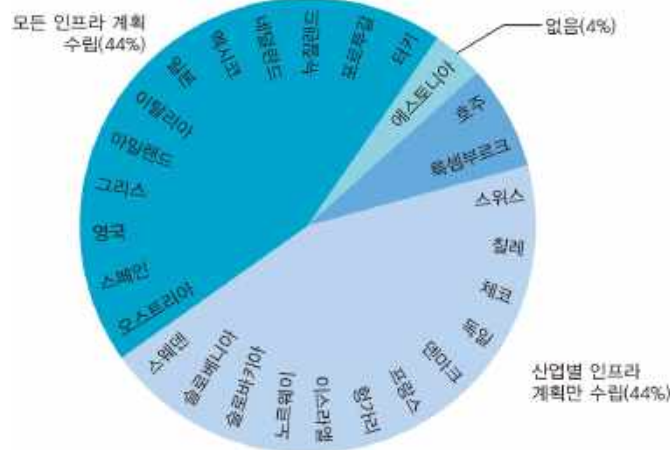
5.1. 자본지출 예산안과 경상지출 예산안의 분리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Survey of Capital Budgeting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282>

5.2. 전략적 장기 인프라 계획의 수립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Survey of Capital Budgeting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301>

5.3.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정책의 수립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Survey of Capital Budgeting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320>

5. 예산제도와 실무

재정위험(fiscal risk)의 관리

정부는 경제체제 전반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기 다른 책임들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위험들이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예측과 계획 또한 부정확하거나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재정위험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 위험에 대응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재정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2015년 예산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의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udgetary Governance)에 따르면, OECD는 각 국의 정부가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기타 재정위험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며,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8년 대다수의 OECD국가들은 재정위험의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OECD 국가의 60%는 초국가적 지침, 법률, 정책 문서 등을 통해 재정위험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재무부가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위험의 관리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행위자들 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벨기에, 체코, 룩셈부르크, 영국에서는 정부의 경제예측 및 재정추계에 대한 감독 기능의 일환으로 재정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적 재정 기구를 설립하였다(OECD, 2019).

재정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 또한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실무가 되고 있다. OECD 국가의 75%는 재정위험에 대한 일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정보 공개의 수단, 공개된 정보의 양과 질은 매우 상이하다. 재정위험에 대한 정보는 연간 예산문서를 통해 경제·재정전망과 함께 공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경제·재정전망의 상방위험요인(upside risk)과 하방위험요인(downside risk)에 관한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와 영국은 재정위험에 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위험의 통합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지만, 특정 위험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질 높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재정위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재정 위험의 큰 범주는 경제·재정전망의 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변수

(정부 채무, 경제성장률, 인구 변화), 금융 부문의 안정성, 정부 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 등의 예산자원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claim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특정한 재정위험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채무와 관련된 위험에는 금융 위험(유동성 및 차환위험(refinancing risks)), 시장 위험(이자 및 외환 위험), 신용 위험, 법률 및 운영 위험, 모형 위험 등이 포함된다. 거시경제와 관련된 위험에는 예상치 못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재정적 영향들을 포함하며, 인구 변화와 관련된 위험에는 연금, 보건의료 지출(예: 멕시코)과 같은 고령화 지출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위험으로 정부 소송, 민관협력과 관련된 정부 보증, 공기업 자본구조의 재조정(recapitalisation), 지방정부의 긴급지원(bailouts), 자연재해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세지출(프랑스), 의무지출(이탈리아) 등이 기타 재정위험에 포함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재정위험의 관리’의 자료는 2018 년 OECD에서 수행한 예산 제도과 실무에 대한 설문조사(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를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OECD회원국의 고위 예산담당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국가의 현재 예산 제도과 실무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응답하였다.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앙(연방) 정부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재정위험은 재정성고가 기대치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으로, 거시경제적 충격이나 우발채무의 실현 등의 요인을 의미한다(IMF, 2016).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을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Kopits, G. (2014), “Coping with fiscal risk: Analysis and practice”,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4/1, <https://doi.org/10.1787/budget-14-5jxrgssdqnl>.
- Moretti, D. and Youngberry T. (2018), “Getting Added Value out of Accruals Reform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8/1, <https://doi.org/10.1787/budget-18-5j81804hpmnt>.
-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957-en>

그림 설명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 하였다.

그림 5.4.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체계와 지침의 수립 (2018년)



그림 5.5. 재정위험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339>

출처: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358>

5.6. OECD 국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재정위험의 유형 (2018년)

국가명	거시경제 충격	금융부문 위기	이자율 (채무)변동	인구변화	자연재해	정부보증	정부소송	민관협력 및 민간투자	환경오염	지방정부	공기업
호주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OECD합계											
●모니터링하는국가	29	18	28	25	7	30	18	15	8	13	15
○모니터링하지않는국가	5	16	6	9	27	4	16	19	26	21	19

출처: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377>

5. 예산제도와 실무

성인지 예산

성 불평등은 여전히 공공 정책 분야에 내재되어 있으며, 종종 자원의 배분과 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화된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이 체계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공적 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2015)’에서는 공공 부문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성인지 예산은 정책과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2018년 OECD가 수행한 예산 제도와 실무에 대한 설문조사(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은 2016년 12개국에서 2018년 1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17개국 중 1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단기의 경제적·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성인지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의 운영 방식은 각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OECD는 성인지 예산의 핵심 요소에 대한 개별적이고 질적인 정보들을 요약·제공하고,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만들었다. OECD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전략적 분석틀(strategic framework), 효과적인 집행수단(tool of implementation), 정책환경 구현(enabling environment)을 제시하였다. 또한 OECD에서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각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의 핵심 요소를 측정할 종합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요소 중 효과적인 집행수단은 성인지 예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전략적 분석틀, 정책환경 구현은 성인지 예산의 효과적인 실행을 담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종합지수의 평가 시 핵심 요소 간 가중치를 집행 수단(40%), 전략적 분석틀(30%), 정책환경 구현(30%)으로 다르게 부여하였다.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종합 지수(composite index)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종합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전략적 분석 틀을 수립한 동시에 예산 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수단을 갖추고, 성인지 예산의 시행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환경을 구현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의 값이 0.9점 이상일 경우 선진화된(advanced) 단계의 국가, 0.5점 이상 0.9점 미만일 경우 보편화된(mainstreamed) 단계의 국가, 0.2점 이상 0.5점 미만일 경우 제도 도입(introductory) 단계의 국가, 0.2이하일 경우 제도가 없거나 제한된(threshold) 단계의 국가로 분류한다. 2018년 종합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을 선진화된 단계로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보편화된 단계로 분류되는 국가는 스페인, 멕시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한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멕시코, 아이슬란드는 성인지 예산의 실행지침인 국가양성평등 전략(national gender equality strategy)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집행 수단을 활용하는 동시에 성별분리통계(gender-disaggregated data)를 공개하고 있다.

향후 OECD는 성인지 예산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이 고려되도록 종합지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성인지 예산’의 자료는 2018년 OECD에서 수행한 예산 제도와 실무에 대한 설문조사(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를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OECD 회원국의 고위 예산담당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국가의 현재 예산 제도와 실무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응답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연방) 정부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성인지 예산의 종합지수는 15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하여 변수 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변수들은 관련 개념의 적절성을 반영하여 OECD 전문가들이 선정하였다. 또한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각 국의 고위 예산담당관들이 이를 검토하였다. 종합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정규화(normalised)하여 개별 점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부록 E에는 종합지수에 활용된 질문지, 가중치 구조 및 지수의 산출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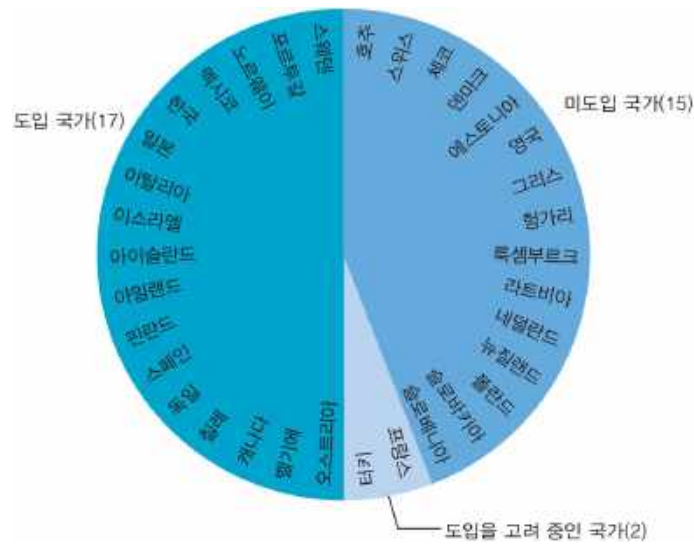
참고문헌

- Downes, R., L. von Trapp and S. Nicol (2017),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6/3, <https://doi.org/10.1787/budget-16-5jfq80dq1zbn>
-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957-en>.
-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18>.

그림 설명

-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5.7. 프랑스와 터키는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 5.8.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자료만을 보여준다. 캐나다의 자료는 2018년 12월 제정된 캐나다 성인지예산법(Canada Gender Budgeting Act)을 반영한다. OECD 국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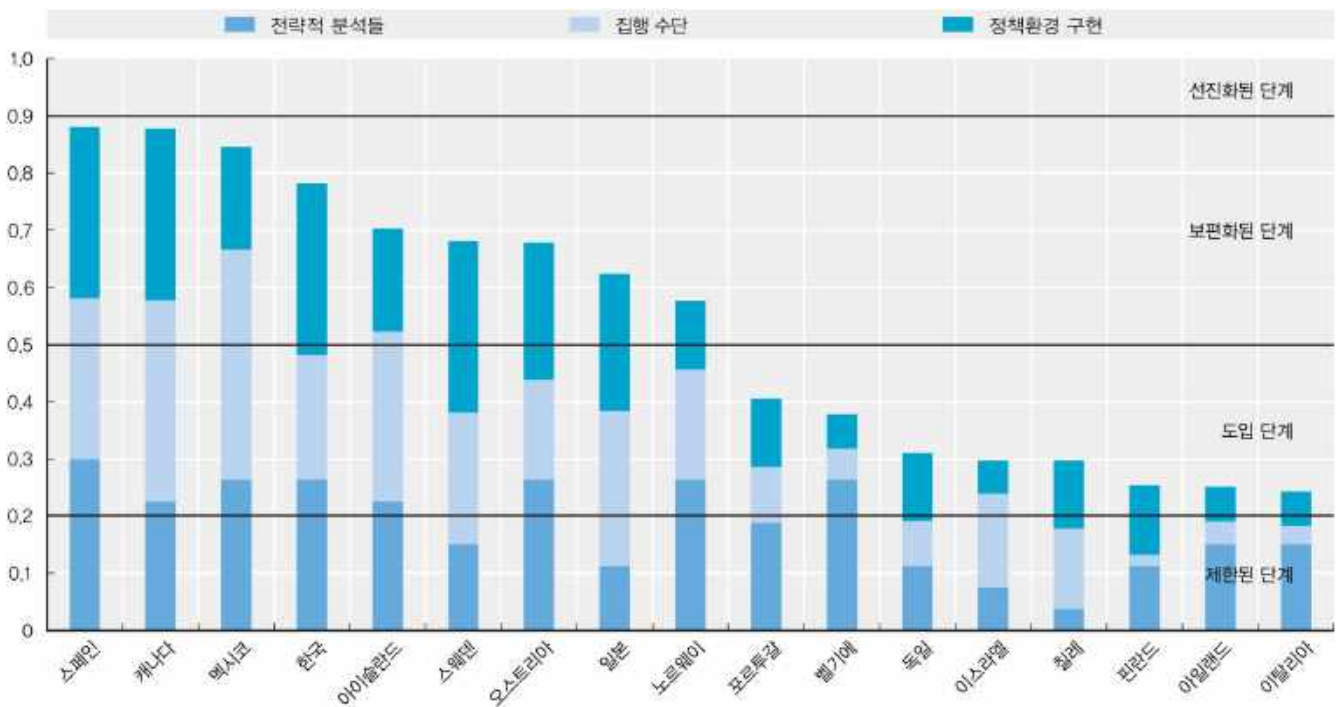
5.7. 성인지 예산의 도입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415>

5.8. 성인지 예산의 종합지수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256>

5. 예산제도와 실무

예산의 투명성

예산의 투명성은 적시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든 재정 정보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의미한다. 예산의 투명성은 명확성(clar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신뢰성(reliability), 적시성(timeliness), 공공 재정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접근 및 이용가능성(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public reporting on public finances), 예산과정의 시민 참여(citizen engagement in the budget process) 등을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예산의 투명성 제고는 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 정당성(legitimacy), 통합성(integrity), 포괄성(inclusiveness), 예산결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 간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 예산의 투명성은 예산 정보의 공개뿐만 아니라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한다(OECD 2017; OECD 2019). OECD는 예산투명성에 관한 최적 실무(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2001)), 예산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의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udgetary Governance (2015)), 예산투명성을 위한 정책도구(OECD Budget Transparency Toolkit(2017))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추세로서, 최근 몇 년 동안 OECD 국가들은 주요 예산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예산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모든 OECD 국가들(34개국)은 예산안과 확정예산에 관한 문서를 발간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예산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셋을 오픈 데이터(open data)와 같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 제공하고 있다(확정예산(27개국), 예산안(24개국)). OECD국가들은 시민들에게 예산 결정을 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주요 예산 문서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한 가이드(citizens' guide)를 발간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를 발간하는 OECD국가는 2012년 14개국(42%)에서 2018년 23개국(68%)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이후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국가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9개국이다. 2018년에는 주로 의회 확정 예산(17개 국가), 행정부 제출 예산안(11개 국가)에 한정된 가이드가 발간되었고 시민들은 해당 문서 내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다.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였는가를 심의하여 예산을 확정할 책임이 있다. 2012년 이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문서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 예산 심의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OECD 국가들의 노력을 보여 준다. 2018년 기준, 모든 OECD 국가가 의회에 거시경제적 가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97%는 의회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출했으며, 82%는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적(ex ante) 예산심의 권한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예산보고서(pre-budget report)를 제출하는 국가는 2012년 19개국에서 2018년 22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의회가 사전 예산 논의(pre-budget debate)를 하는 국가는 2012년 3개국에서 2018년 15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과반수의 국가에서 사전예산의 논의 결과를 다시 행정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예산의 투명성’의 자료는 2012년, 2018년 OECD에서 수행한 예산 제도와 실무에 대한 설문조사(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를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OECD 회원국의 고위 예산담당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에서는 모든 OECD국가(34개)가 응답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미국이 제외되었다. 의회의 예산 제도에 관한 자료는 2018년 OECD 의회예산지원조직 네트워크(2018 OECD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PBO) Network)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OECD 회원국의 의회예산지원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이다. 응답자들은 국가의 현재 예산 제도와 실무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응답하였다.

오픈 데이터(open data)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재사용 및 재배포를 허용함으로써 법적 개방성 및 기술적 개방성을 갖춘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citizen's guide)는 연간 예산문서 또는 기타 예산 관련 문서의 주요 특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요약한 문서를 의미한다.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는 일반적인 독자들이 기술적 정보(technical information)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여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Éditions OECD,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957-en>.
- OECD (2017), “OECD Budget Transparency Toolkit: Practical Steps for Supporting Openness,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2070-en>.
-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udgetary Governance,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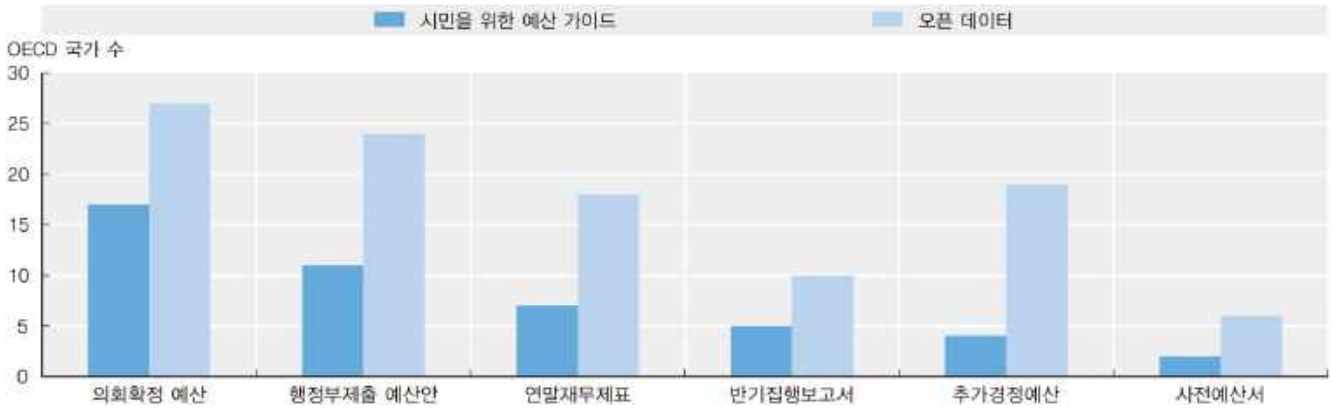
그림 설명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5.9 및 5.10.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5.11. 멕시코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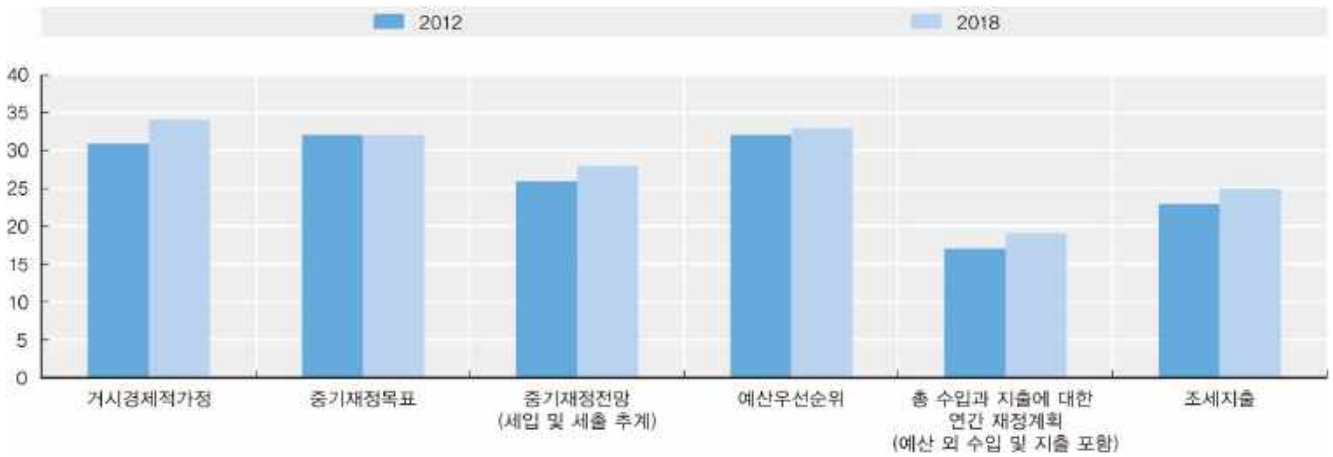
5.9. 주요 예산 정보의 투명성 및 이용가능한 수단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415>

5.10.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문서의 종류 (2018년)



출처: OECD (2012),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and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434>

5.11. 의회의 사전예산논의(pre-budget debate) 시행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PBO Network Survey on Parliamentary Budgeting Practice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453>

5. 예산제도와 실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

국가가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부 예산 배분의 절차와 방식의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10년간 전세계 국가들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목표를 만들고, 국가적 정책 대응을 마련하는데 전념해왔다. OECD는 각 국가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계획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의 촉진, 국가 및 국제적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과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파리협약을 통해 마련된 녹색 예산(Green Budgeting)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환경 목표와 국가 예산체계의 조화를 위한 OECD 국가들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보여준다.

녹색 예산은 예산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정책결정자, 의회, 대중들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할 수 있고, 예산 배분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이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되고 있다. 2018년 OECD 국가 중 예산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표하는 국가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독일, 이탈리아는 전체 예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예산이 사회적 웰빙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국가 또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 응답한 OECD 국가의 26%). 예를 들어, 자본 투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인프라사업의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중 12개 국가에서만 공공인프라사업의 잠재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및 기후, 교통, 보건, 재정 등 모든 분야의 예산에 환경이 고려되도록 통합할 경우, 환경정보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예산 및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 부처에 환경예산 편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핀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부처의 예산사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을 주무부처(예: 환경부)의 예산사업으로만 반영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된 성과정보에 환경을 고려할 경우, 환경 목표와 국제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OECD국가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체계적

으로 반영(6%)하거나 긴밀하게 연계(19%)하고 있는 국가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조정부처(co-ordinating ministry)가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부 목표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예산 문서화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2018년 성과평가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예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의 자료는 2018년 OECD에서 수행한 예산 제도와 실무에 대한 설문조사(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와 자본 예산과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설문조사(2018 OECD Survey of Capital Budgeting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를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재무부 및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연 자원의 보존을 전제로 한다.

녹색 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협약과 녹색 성장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최초의 국가 간, 부문 간 이니셔티브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방법론, 분석적 기초를 다지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국가 간 상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녹색 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은 혁신적인 수단과 시범 사업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이러한 지식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체계가 기능별 분류 또는 프로그램별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분류와 소관별 분류 방식이 추가되기도 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프로그램 예산 분류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OECD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http://www.oecd.org/environment/green-budgeting/>

그림 설명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5.13. 그리스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예산 사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5.14.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5.15. 공공인프라 사업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5.12. 환경 및 사회적 웰빙을 고려한 예산의 공표 (2018년)

국가명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웰빙 지표에 미치는 영향
호주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캐나다	☒	☒
칠레	☒	☒
체코	⊖	⊖
덴마크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	☒
한국	☒	☒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	☒
멕시코	⊖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	☒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
스페인	⊖	⊖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	☒
영국	☒	☒
OECD 합계		
공표하지 않는 국가⊖	25	25
개별 조치의 영향만을 공표하는 국가⊖	7	6
전체 예산의 영향을 공표하는 국가●	2	3

출처: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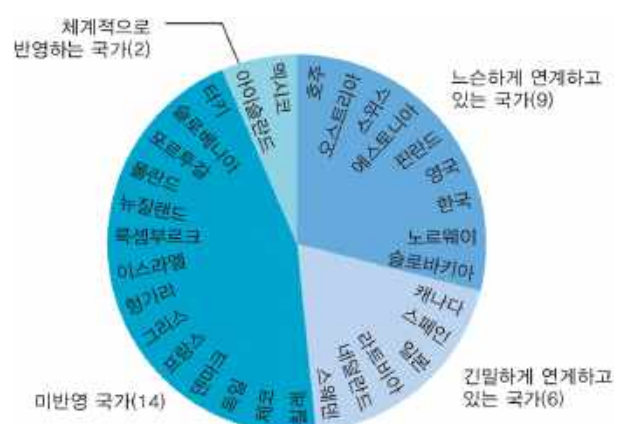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472>


그림 5.13. 기후변화를 예산에 통합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491>

그림 5.14.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반영하는지 여부 (2018년)



출처: OECD (2018),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OECD (2018),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510>





6. 인적자원관리

공무원(civil servants)과 공공부문 근로자(public employees)의 고용 조건
공무원의 학습과 경력개발
고위 공무원의 성과관리

6. 인적자원관리

공무원(civil servants)과 공공부문 근로자(public employees)의 고용 조건

정부가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고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계약 방식이 적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공무원(civil servants)과 공공부문 근로자(public employees)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 공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공공부문 근로자는 노동법과 같은 사법에 의해 계약되므로 다른 고용 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의 유형에 따라 보수, 직업안정성, 성과평가, 교육훈련의 접근성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용 제도는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굿거버넌스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고용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는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노동력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의 다양한 기능, 고용 계약 및 유형의 조합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고용 제도를 운영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내부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는 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statutory civil servants)이다. 2018년 OECD 국가들의 중앙행정기관 근로자 중 공무원의 비율은 평균 68%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는 비정규직과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근로자는 모두 공무원에 해당한다. 반면, 덴마크, 멕시코, 아일랜드는 중앙행정기관의 근로자 중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적고, 극단적으로 스웨덴에서는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이 국가마다 상이함을 보여준다.

OECD 국가 중 67%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여타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8%의 국가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엄격한 채용 과정에 따라 선발되며, 유리한 승진 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성과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게 특정한 공직 가치와 윤리를 적용하는 국가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연금 수급권에 있어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 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사회의 정책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역량과 기술을 조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요구된다(OECD, 2017). 고용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춰 명확하고 투명한 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 준비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공공부문 특히, 기술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인적자원관리’의 자료는 2016년 OECD에서 수행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SHRM)에 관한 설문조사를 업데이트한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내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 공직자이며,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2019년 설문조사는 모든 OECD 국가뿐만 아니라 회원 후보국인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가 참여하였다. 개별 국가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중앙정부의 조직 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civil servant)의 범위를 특정한 공법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반면, 공공부문 근로자(public employees)는 공무원과 고용 조건이 다르고, 노동법과 같은 사법에 의해 계약된 근로자들을 의미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 외에 다른 고용 제도에 의해 계약된 전문가 등은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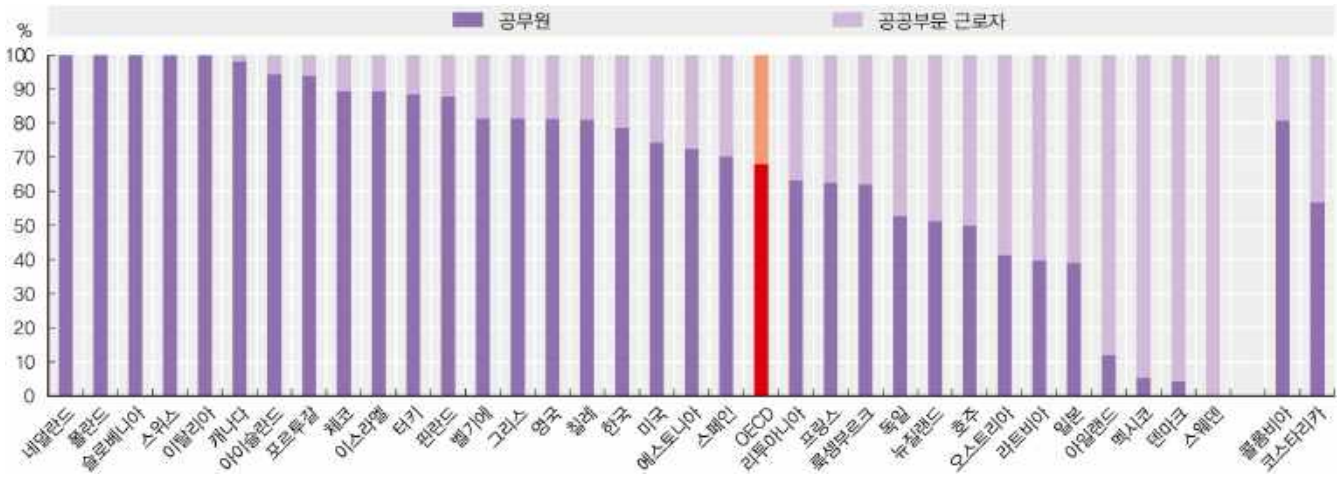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5>.
-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그림 설명

- 아이슬란드, 터키, 콜롬비아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6.1. 덴마크,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는 2019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프랑스, 독일, 한국, 폴란드는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탈리아, 라트비아, 미국은 2016년의 자료, 슬로베니아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헝가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는 공무원 외 공공부문 근로자(public employee)에 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인사혁신처, 그 외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였다. 포르투갈은 공공부문 근로자에 기간제 행정 관리자를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특정한 공법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공무원을 “civil servants”가 아닌 “civil public employees(tjenstemænd)”로 표현하고 있다.

6.1.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로자 현황 (2018년)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529>

6.2.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 체계 차이 (2019년)

	공무원에게 더 많이 적용(more)					공무원에게 더 나은 적용(better)	공무원만 적용(specific)		공공부문 근로자와의 차이(different)
	직업안정성	건강보험	직업훈련의기회	경력개발의기회	엄격한채용과정	퇴직연금	공직가치와우려	성과관리	급여체계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	■	■	■	■	■	■	■	■
칠레	■	□	■	■	■	□	■	■	■
체코	■	□	□	□	■	□	□	■	■
덴마크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핀란드	■	□	□	□	□	□	■	□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	■	□	□	■
그리스	□	□	□	■	■	□	□	■	□
헝가리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일본	□	x	x	■	x	x	□	■	■
한국	■	□	■	■	■	x	■	■	■
라트비아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스페인	■	□	□	■	■	□	□	□	■
스웨덴	□	□	□	□	□	□	□	□	□
스위스	□	□	□	□	□	□	□	□	□
터키	■	□	□	■	□	□	□	■	■
영국	□	□	□	□	□	□	■	■	■
미국	□	□	□	□	□	□	□	■	■
OECD합계									
예 ■	24	6	11	20	20	8	14	17	21
아니오 □	12	29	24	16	15	27	22	19	15
해당없음x		1	1		1	2			
콜롬비아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548>

6. 인적자원관리

공무원의 학습과 경력개발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채용 제도와 경력개발 제도는 신입 공무원을 채용한 후 특정한 교육훈련을 통해 경력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긴축재정의 운용으로 인해 교육훈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많은 OECD 국가들은 전통적인 집합교육(classroom training)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다(OECD, 2016). 그러나 공공서비스가 급변하는 시민의 수요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특성화된 교육 훈련과 경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이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9년 공공리더십과 역량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2019 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에 따르면, 전통적인 집합교육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학습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전체 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한 국가는 OECD 회원국의 약 61%(36개국 중 22개국)로, 2016년과 비교하여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포르투갈은 2016년 공무원 역량개발 제도를 개편하여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 전략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본교육(initial training), 지속적인 교육훈련(continuous training), 자기주도형 훈련(self-training)이 포함된다. OECD 국가 중 약 70%의 국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직 차원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개인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국가는 절반(18개국)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은 교육훈련 중 고위 공무원에 대한 리더십 훈련과 코칭, 혼합형 학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반 공무원을 위한 코칭과 멘토링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이다. 공무원 연수 등 인력 이동 학습(mobility programmes)의 전략적인 활용은 공무원 및 조직 차원의 경력 개발을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이동 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의 절반 미만에 해당한다. 한편, 연간 교육훈련 일수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의 1/3에 불과하다.

공무원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OECD 국가는 22개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학습과 경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 국가 중 2/3의 국가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리더십 훈련을 교육훈련의 우선순위로 택했다. 이는 고위 공무원이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전략적 개혁의 촉매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코칭을 위해 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리더십 개발 센터(Centre for Leadership Development)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교육훈련에 비해 코칭 및 멘토링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향후 제도적 지식에 기반한 공무원의 학습과 경력개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인적자원관리’의 자료는 2016년 OECD에서 수행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SHRM)에 관한 설문조사를 업데이트한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내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 공직자이며,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2019년 설문조사는 모든 OECD 국가뿐만 아니라 회원 후보국인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가 참여하였다.

개별 국가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중앙정부의 조직 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civil servant)의 범위를 특정한 공법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고위 관리자의 분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D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5>.
-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 OECD (2016), *Engaging Public Employees for a High-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7190-en>.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터키, 콜롬비아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6.3. 중앙행정기관의 학습 및 교육훈련 계획과 우선순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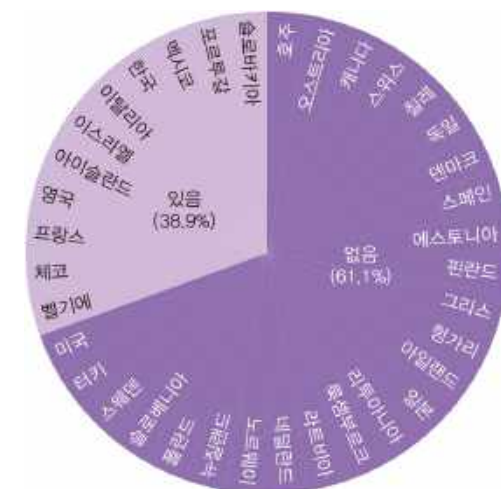
	학습 및 교육훈련의 계획			교육훈련의 우선순위				
	교육훈련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조직 차원의 학습 계획 수립	공무원 개인별 인력개발 계획 수립	온라인 학습(m-learning),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온라인 학습(e-learning), 모바일	고위공무원 리더십 훈련 및 코칭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 훈련	코칭 및 멘토링
호주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벨기에	■	□	■	■	■	■	□	■
캐나다	■	□	■	■	■	■	□	□
칠레	□	■	□	■	■	■	□	□
체코	■	■	■	□	□	□	□	□
덴마크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핀란드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그리스	■	□	□	□	■	■	■	□
헝가리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일본	■	■	□	□	□	□	□	■
한국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멕시코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스페인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위스	■	□	■	■	■	■	■	□
터키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OECD 합계								
해당 ■	22	25	18	23	25	18	11	
해당없음 □	14	11	18	13	11	18	25	
콜롬비아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567>

6.4. 공무원의 인력 이동 학습 프로그램의 존재 (2016년)

6.5. 연간 교육훈련 일수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 보장 (2018년)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586>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605>

6. 인적자원관리

고위 공무원의 성과관리

고위 공무원은 다양하고 폭 넓은 경험을 통해 구축된 방대한 제도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고위 공무원은 다양한 성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 예산, 인력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리자로서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성과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할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고, 고위 공무원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OECD(2015)에 따르면, 성과급 제도의 개혁과 같이 모든 관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 모니터링 제도와 계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2/3에 해당한다. 이중 고위 공무원이 소속 부처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는 국가는 15개국이며, 공무원의 상위 감독자와 성과 계약을 맺는 국가는 7개국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둘다를 활용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고위 공무원의 성과와 승진을 연계하고 있는 국가는 17%인 반면, 18개 국가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3/4이 조금 넘는 국가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임명 시 고정된 임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고위 공무원의 부처 간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60%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임명 기간을 연장할 때 성과와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70%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은 고성과자 보다 저성과자를 가려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우선 인사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충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될 대상을 미리 가려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OECD 국가의 60%에 해당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인적자원관리’의 자료는 2016년 OECD에서 수행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SHRM)에 관한 설문조사를 업데이트한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내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 공직자이며,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2019년 설문조사는 모든 OECD 국가뿐만 아니라 회원 후보국인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가 참여하였다. 개별 국가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중앙정부의 조직 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civil servant)의 범위를 특정한 공법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고위 관리자는 고위 공무원과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D1관리자, D2 관리자를 의미한다. “고위(senior)”는 직급을 의미하며, 경력 혹은 재직기간의 측면에서 나이나 연공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위 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 비해 연령이 낮거나, 경력이 적을 수 있다. D1관리자 및 D2관리자에 대한 자료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의해 개발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를 재구성하였다. 직업의 분류와 정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D를 참고할 수 있다. 성과계약(performance agreement)은 근로자의 성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근로자와 상위 감독자 간에 맺는 계약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5>.
-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 OECD (2016), *Engaging Public Employees for a High-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9789264267190-en>.

그림 설명

- 아이슬란드, 터키, 콜롬비아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6.6.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코스타리카에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동일한 성과관리 제도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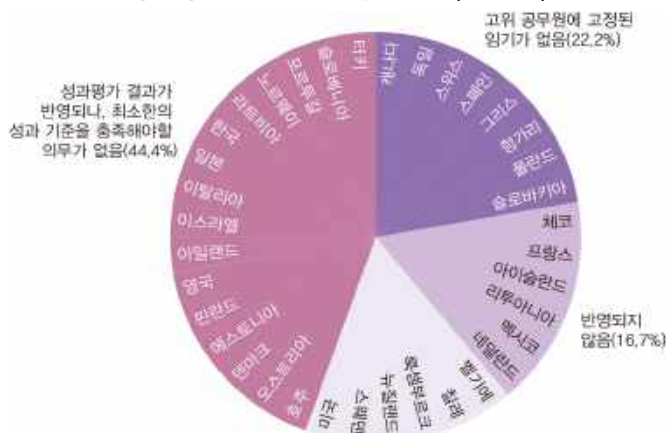
6.6.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특징 (2019년)

	고위관리자를 위한 성과관리 제도	성과급 체계	소속부처 장관과의 성과계약 (D1관리자)	행정부내상위 감독자와의 성과계약 (D1관리자)	성과평가제도				고성과자 승진제도	저성과자 해고제도
					결과지표	산출지표	조직관리 지표	다면평가제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OECD 합계										
해당함 ■	25	20	15	7	16	15	16	9	6	19
해당하지않음 □	11	16	21	29	20	21	20	27	30	17
콜롬비아	■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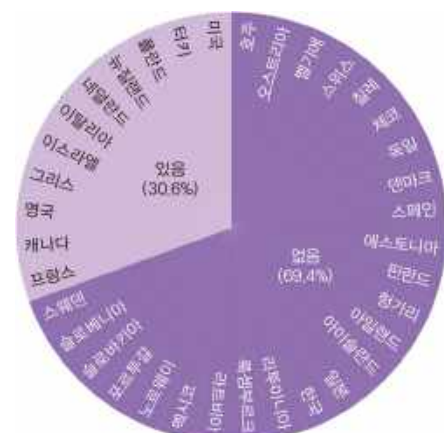
6.7. 고위공무원의 임명기간 연장 시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2019년)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643>

6.8. 고위 공직자 우선 인사 정책 (2019년)



출처: OECD (2019) "OECD Survey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662>





7. 규제거버넌스

규제 제·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규제영향분석
규제의 사후평가

7. 규제거버넌스

규제 제·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시민, 기업, 시민사회 등의 필요에 따라 규제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해관계자는 전문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제·개정에 있어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규제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규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결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규제의 준수, 사회통합,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이 시민들에게 보다 폭 넓게 개방되고, 유용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OECD 국가들은 최소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도입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의 입안을 위한 공식 요건과 협의 절차의 마련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정책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초기 협의(early consultation)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아이슬란드, 유럽 위원회에서는 규제의 개발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한 개혁들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규제의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OECD 국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향후 협의의 일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고지하지 않는다. 또한 감독 및 질 관리 지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3년간(2014-2017년) 규제의 제·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은 약간 개선되었으며, 하위법령 보다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는 폭 넓은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2014년에 비해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의 점수가 하락하였다.

아래 그림에서는 OECD 국가가 증거기반 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의 일부를 보여준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2012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2012 OECD Recommendation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 기초하였다.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더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지표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 4개 항목(방법론, 감독 및 질 관리,

체계적 도입, 투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법론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측정한다. 둘째, 감독 및 질 관리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측정한다. 셋째, 체계적 도입은 공식 요건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공식 요건이 얼마나 실제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열린 정부의 원칙과 관련된 정보들을 측정한다. 개별 항목의 최대 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 점수는 0-4점으로 구성된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OECD 더 나은 삶 지수(OECD Better Life Index)에 포함된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지표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14년, 2017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The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는 38개 OECD 회원국, 회원 후보국, 유럽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지표는 OECD 규제 정책 위원회(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대표단과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자료의 범위는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상위법령이 대부분 정부입법 되는 반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한국, 멕시코는 의원(의회)입법에 의해 상위법령이 제정된다. 미국은 상위법령에 대한 정부입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관련한 모든 조사 항목에 응답하지 않았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oe.cd/ireg>)와 부록 E에서 얻을 수 있다.

상위법령(primary laws)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인 반면, 하위법령(subordinate regulations)은 정부 수반(대통령 등), 각 부의 장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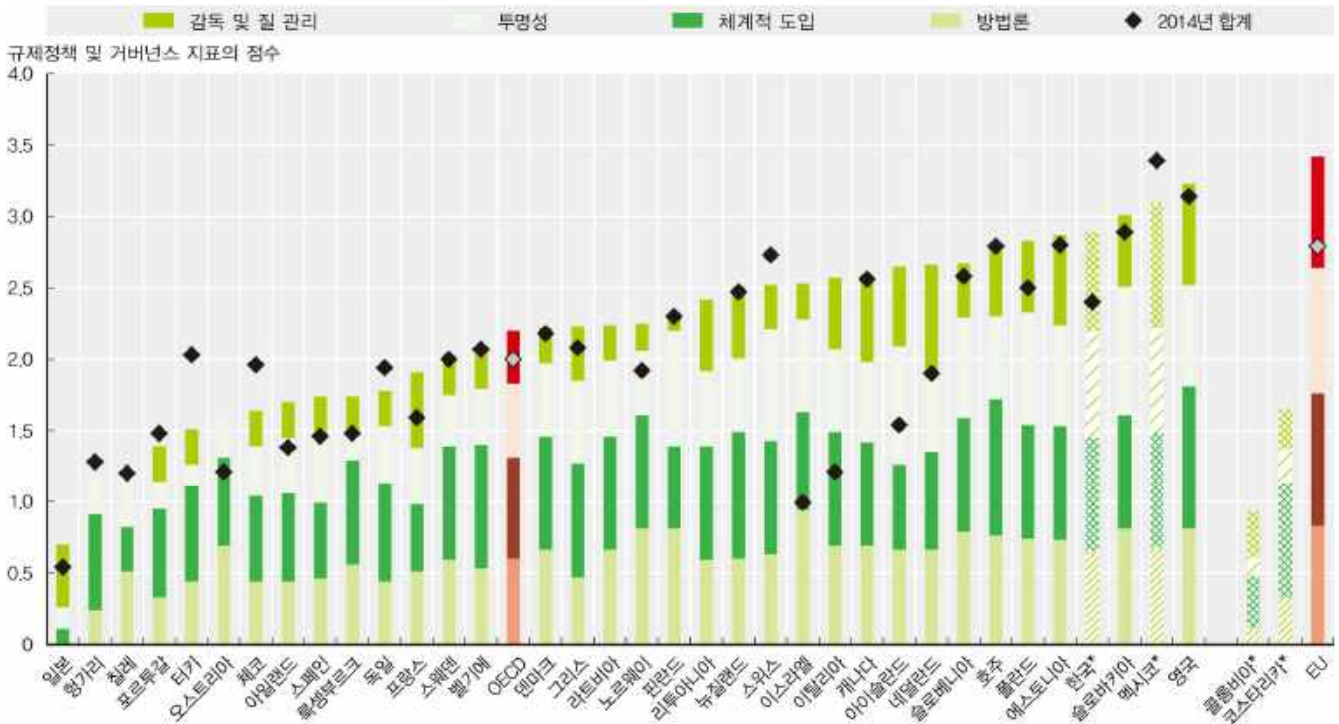
- OECD (forthcoming),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Stakeholder Engagemen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8),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3072-en>.
-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90>

그림 설명

2014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의 자료는 결측 값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7.1. 미국의 상위법령에 대한 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상위법령이 대부분 정부입법 되는 반면, 한국,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의원(의회) 입법에 의해 상위법령이 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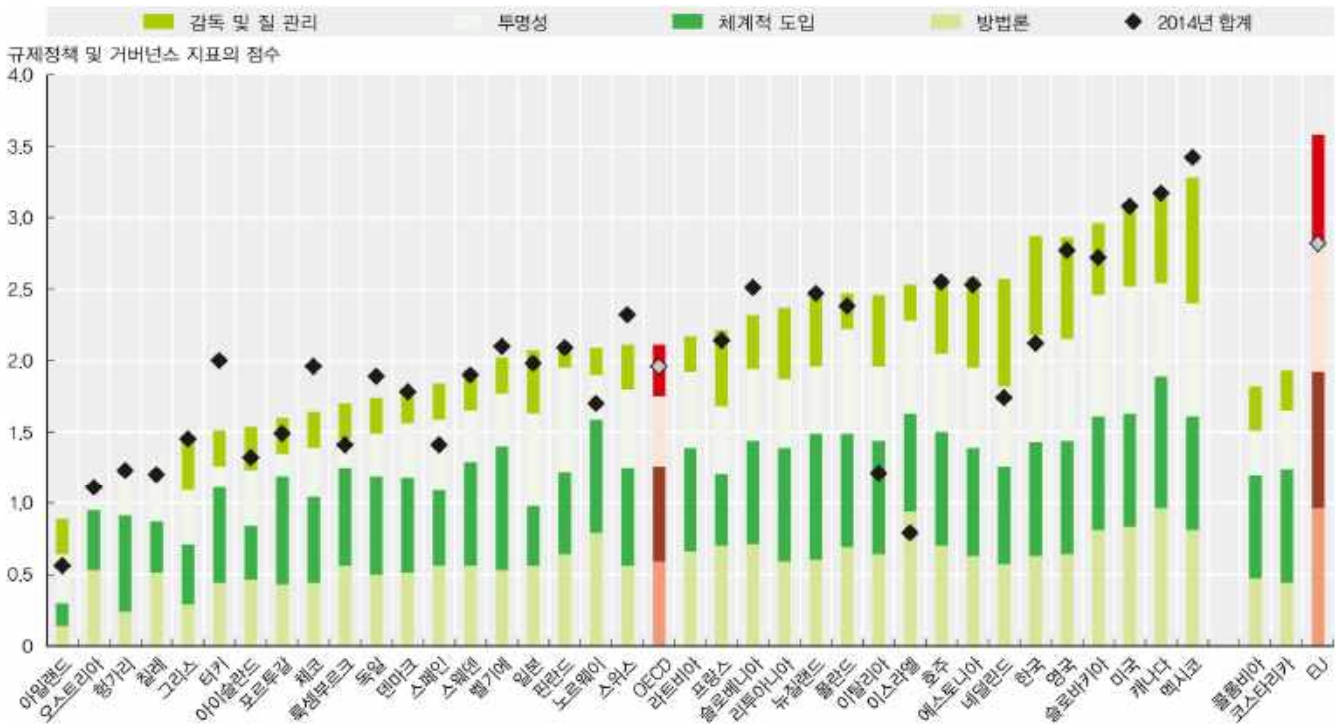
7.1. 상위법령(primary law)의 입안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2014년, 2017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2015 and 2018, <http://oe.cd/ireg>.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161>

7.2. 하위법령(subordinate regulations)의 입안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2014년, 2017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2015 and 2018, <http://oe.cd/ireg>.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681>

7. 규제거버넌스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은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때 정책결정자의 판단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와 비규제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가장 큰 사회적 순편익을 제공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접근법이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로 인한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를 파악할 수 있고, 규제안(regulatory proposals)의 상충된 효과를 밝힐 수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며, 규제의 실패(예: 불필요한 규제 또는 규제의 부족)가 나타나지 않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들을 문서화함으로써 정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전체 OECD 국가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 2017년 기준, 모든 OECD 회원국, 회원 후보국, 유럽위원회는 일부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요건(formal requirements)의 확대와 비례성 원칙(proportionate approaches)에 대한 투자 등 규제영향분석의 체계적 도입(systematic adoption)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2016년 칠레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의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Presidential Instruction)을 제정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는 정부 부처에 규제의 신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고, 시민에 미치는 입법적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외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규제영향분석 절차와 지침을 발표했다. 규제영향분석이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안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수행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치 분석(threshold test)을 도입하였다.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감독과 질 관리는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 중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한 일부 국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규제개혁위원회(Norwegian Better Regulation Council), 핀란드는 규제영향분석위원회(Finish Council for Regulatory)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정부와 독립된 기구로서 규제안과 선정된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검토한다. 또한 2015년 슬로바키아는 경제부에 상설 위원회인 입법 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질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에서는 OECD 국가가 증거기반 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의 일부를 보여준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2012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2012 OECD Recommendation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 기초하였다.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더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지표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 4개 항목(방법론, 감독 및 질 관리, 체계적 도입, 투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법론은 규제영향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영향분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측정한다. 둘째, 감독 및 질 관리는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보장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측정한다. 셋째, 체계적 도입은 공식 요건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공식 요건이 얼마나 실제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공개 정도를 측정한다. 개별 항목의 최대 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 점수는 0~4점으로 구성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14년, 2017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The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는 38개 OECD 회원국, 회원 후보국, 유럽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지표는 OECD 규제정책 위원회(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대표단과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자료의 범위는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상위법령이 대부분 정부입법 되는 반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한국, 멕시코는 의원(의회)입법에 의해 상위법령이 제정된다. 미국은 상위법령에 대한 정부입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관련한 모든 조사 항목에 응답하지 않았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oe.cd/iereg>)와 부록 E에서 얻을 수 있다.

상위법령(primary laws)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인 반면, 하위법령(subordinate regulations)은 정부 수반(대통령 등), 각 부의 장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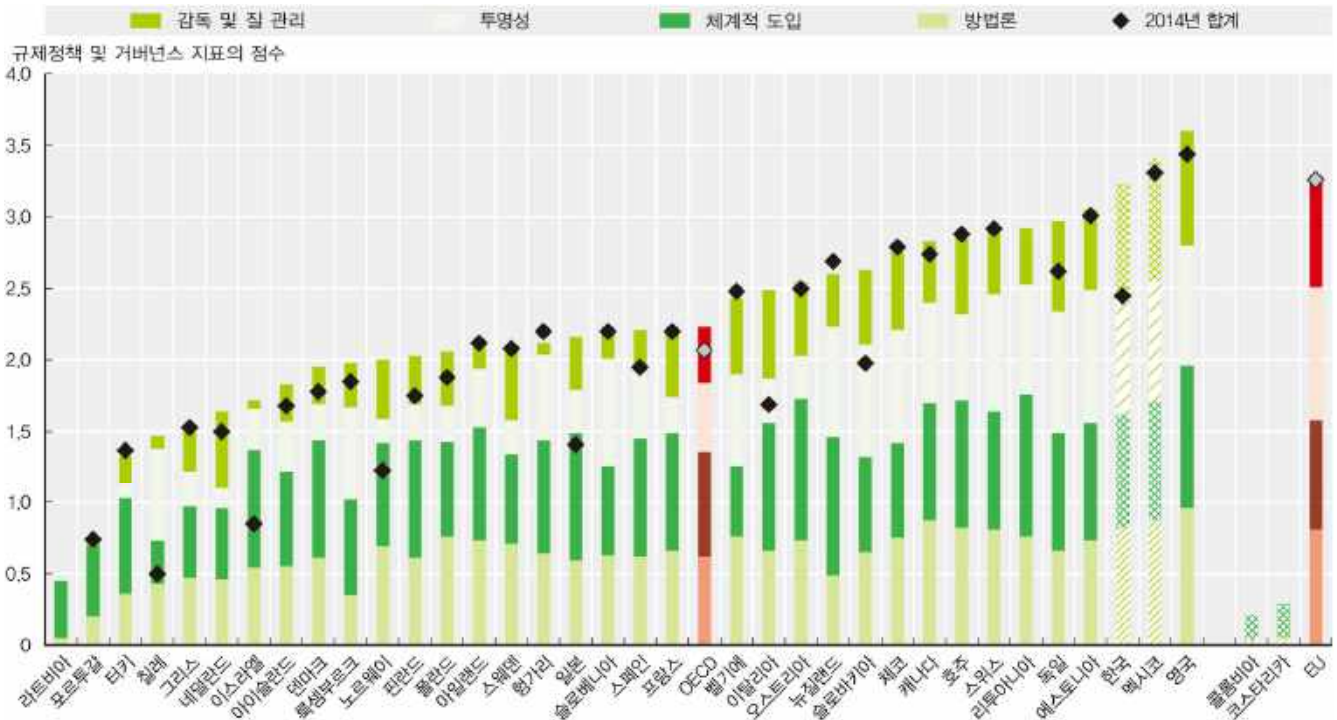
- OECD (forthcoming),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8),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3072-en>.
-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90>.

그림 설명

2014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의 자료는 결측 값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7.3. 미국의 상위법령에 대한 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상위법령이 대부분 정부입법 되는 반면, 한국,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의원(의회)입법에 의해 상위법령이 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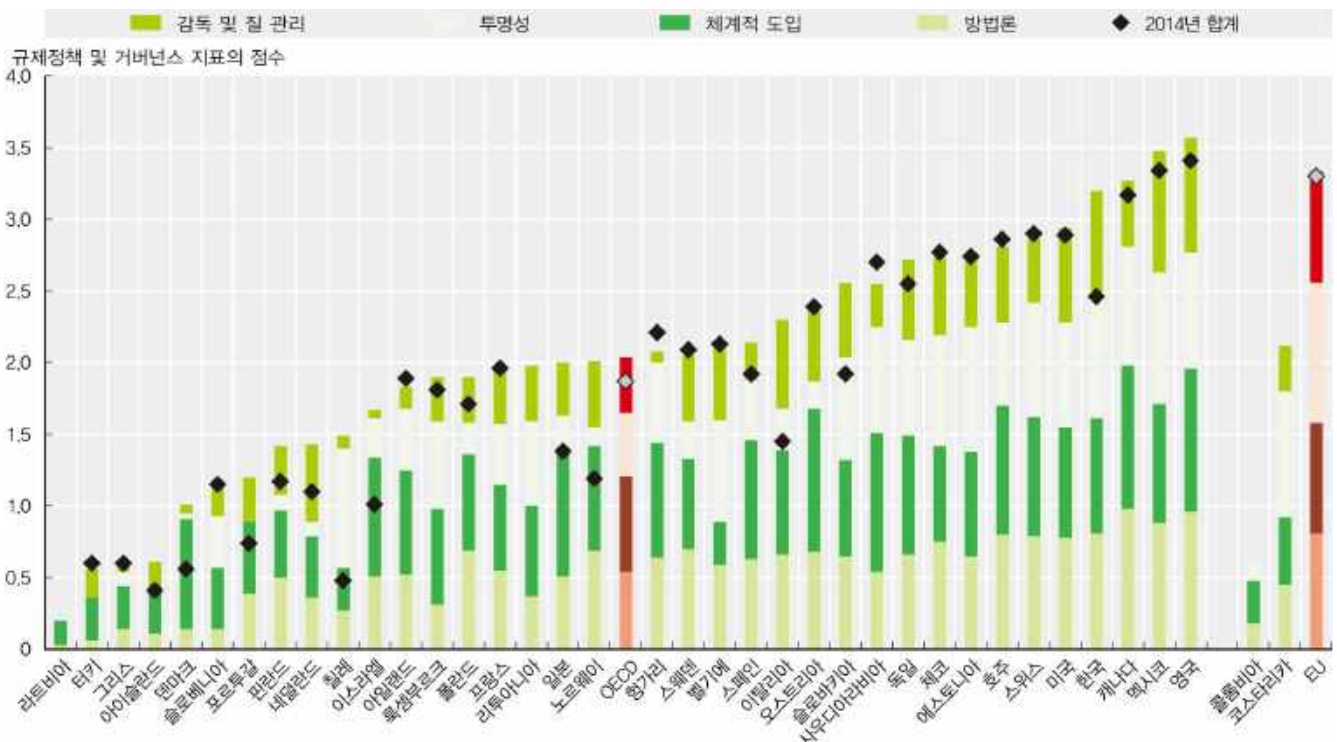
7.3. 상위법령의 입안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2014년, 2017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2015 and 2018, <http://oe.cd/ireg..>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700>

7.4. 하위법령의 입안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2014년, 2017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2015 and 2018, <http://oe.cd/ireg..>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719>

7. 규제거버넌스

규제의 사후평가

OECD국가들은 기존에 설치된 규제들이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규제의 효과, 비용, 편익,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목적에 맞는 규제라 하더라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의 진보로 인해 낡은 규제가 되거나 시민들의 삶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복잡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후평가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 계획과 신설 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또한 사후평가는 규제 성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 신뢰를 높여준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사후평가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수준이며, 규제 정책의 주기 또한 불완전하다. OECD 국가들은 규제의 시행, 평가보다 법과 규제의 설계 및 도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사후평가 수준과 매우 유사하다. 호주와 영국은 OECD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권고안에 따라 사후평가의 체계적 도입, 방법론, 투명성, 감독 및 질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와 터키를 포함한 일부 OECD 국가들은 규제가 효과적 인지,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사후평가를 위한 전반적인 요건, 확립된 방법론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기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한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에 따라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후평가 시 규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OECD국가들에서 사후평가의 감독 및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반면, OECD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개선되고 있는 지표는 사후평가의 실시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지난 3년간 사후평가의 활용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2014년 이후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사후평가의 체계적 도입, 감독 및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일본, 스페인은 사후평가의 수행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치 분석(threshold test)을 도입하였다. 특히, 일본은 기준치 분석을 통해 사후평가의 대상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을 결정한다. 덴마크의 규제개혁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Danish Business Forum for Better Regulation)에서는 교통, 디지털화, 순환경제를 포함한 각각의 정책 분야에 대한 규제의 누적효과(cumulative impact)를 심도 깊게 검토

한다. 또한 이탈리아와 한국은 정기적으로 사후평가제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평가를 감독하고 있다.

사후평가에 대한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2012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2012 OECD Recommendation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 기초하였다.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후평가에 관한 더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지표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 4개 항목(방법론, 감독 및 질 관리, 체계적 도입, 투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법론은 사후평가에 포함된 다양한 평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측정한다. 둘째, 감독 및 질 관리는 사후평가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보장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측정한다. 셋째, 체계적 도입은 공식 요건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공식 요건이 얼마나 사후평가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사후평가의 공개 정도를 측정한다. 개별 항목의 최대 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 점수는 0~4점으로 구성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14년, 2017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The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는 38개 OECD 회원국, 회원 후보국, 유럽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지표는 OECD 규제 정책 위원회(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대표단과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oe.cd/ireg>)와 부록 E에서 얻을 수 있다.

상위법령(primary laws)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인 반면, 하위법령(subordinate regulations)은 정부 수반(대통령 등), 각 부의 장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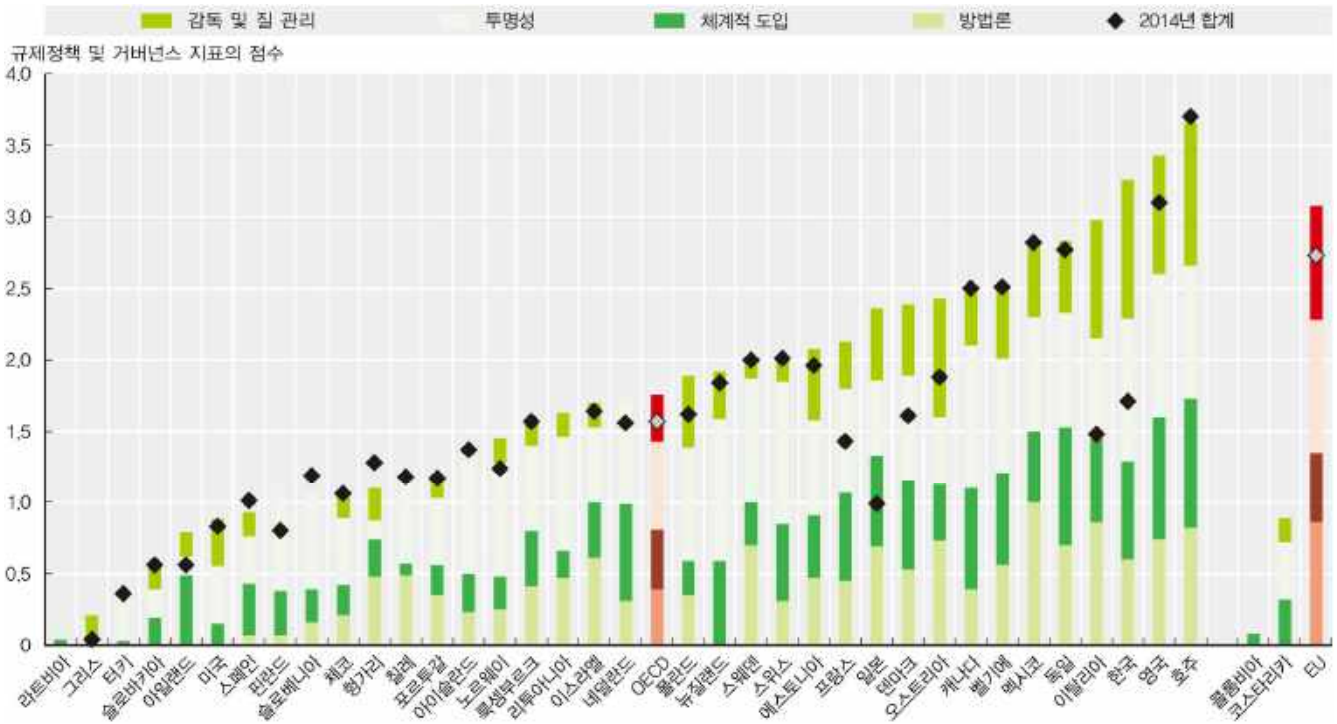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forthcoming),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Reviewing the Stock of Regulation*,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8),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3072-en>.
-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90>.

그림 설명

2014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의 자료는 결측 값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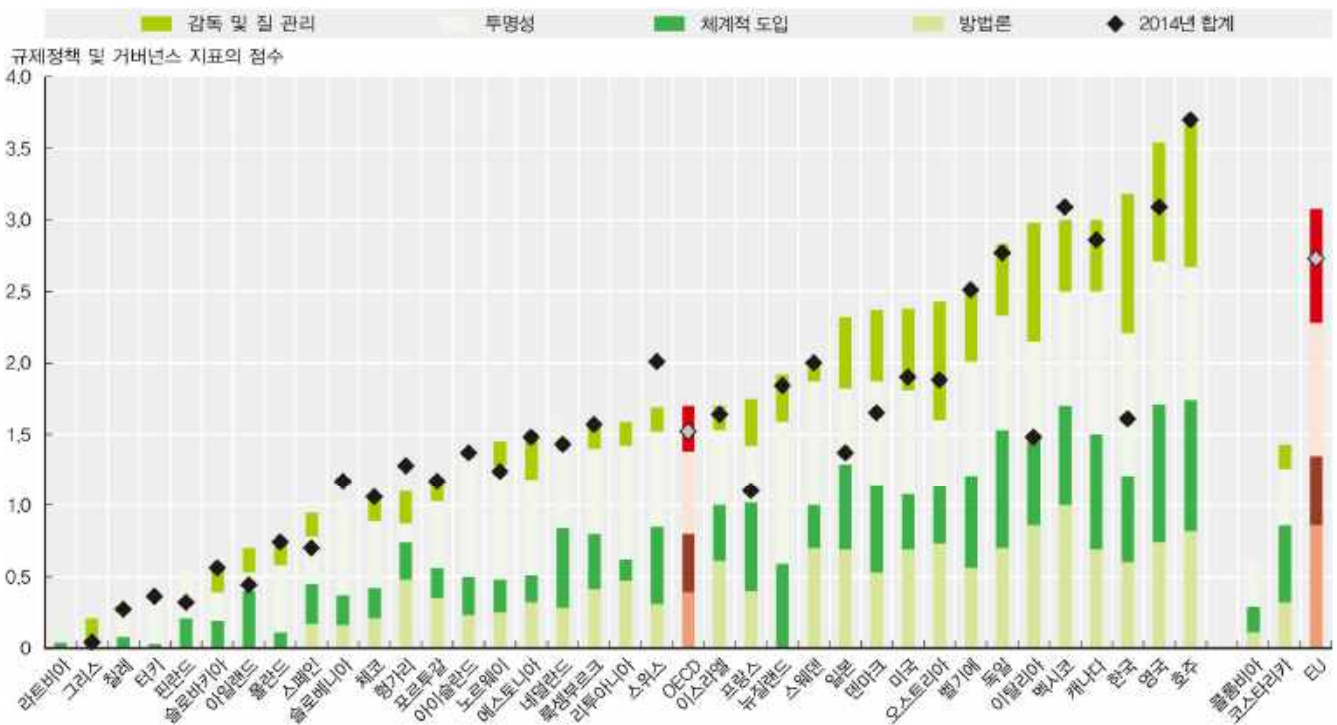
7.5. 상위법령에 대한 사후평가 (2014년, 2017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2015 and 2018, <http://oe.cd/ireg>.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738>

7.6. 하위법령에 대한 사후평가 (2014년, 2017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2015 and 2018, <http://oe.cd/ireg>.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757>





8.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규모
전략적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
공공조달 역량 및 성과
공공조달의 위험 관리

8.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규모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기업이 민간으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 용역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부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표준 원칙과 규칙에 따라 공공조달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공공조달은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목표(혁신의 촉진, 지속가능성, 사회통합, 중소기업 지원)의 실현은 점차 공공조달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OECD 국가의 공공조달 규모(GDP 대비 약 12%)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조달은 정부의 주요한 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공공조달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19.5%)인 반면, 가장 작은 국가는 멕시코(4.9%)이다. 특히 공공조달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은 경기침체 시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OECD 국가 중 3/4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공공조달 지출의 상대적 규모가 경기침체가 심각했던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OECD 국가의 공공조달 지출의 상대적 규모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GDP 대비 비중(2017년 11.8%), 일반정부 지출 대비 비중(2017년 29.1%)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재정적 압력 하에 놓인 정부들은 공공조달의 항목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공공조달의 규모가 OECD 국가 전체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 간 제도적 편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공공조달은 보건, 환경보호, 공공질서, 경제활동(인프라, 교통,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R&D 포함) 등의 분야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은 보건 분야의 공공조달 지출의 비중이 약 30%로 가장 크다. 일부 유럽 국가(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와 일본에서는 보건 분야의 공공조달 지출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헝가리, 라트비아, 미국에서는 경제활동 분야의 공공조달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공공조달 지출 중 경제활동(16.3%), 교육(11.7%), 국방(10%), 사회보호(10.2%) 분야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조달 지출의 규모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산하였다. 정부조달은 중간 소비(정부 자체 사용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구매(예: 회계, 정보통신 서비스), 총고정자본형성(건물, 도로 건설 등 고정자산의 판매를 제외한 자본의 구매), 시장의 생산자를 통한 사회적 현물 이전(시장 공급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 일반정부가 구입)의 총합이다. 공공조달의 지출 규모를 추산할 때 공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은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표 8.2 참고). 정부기능별분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C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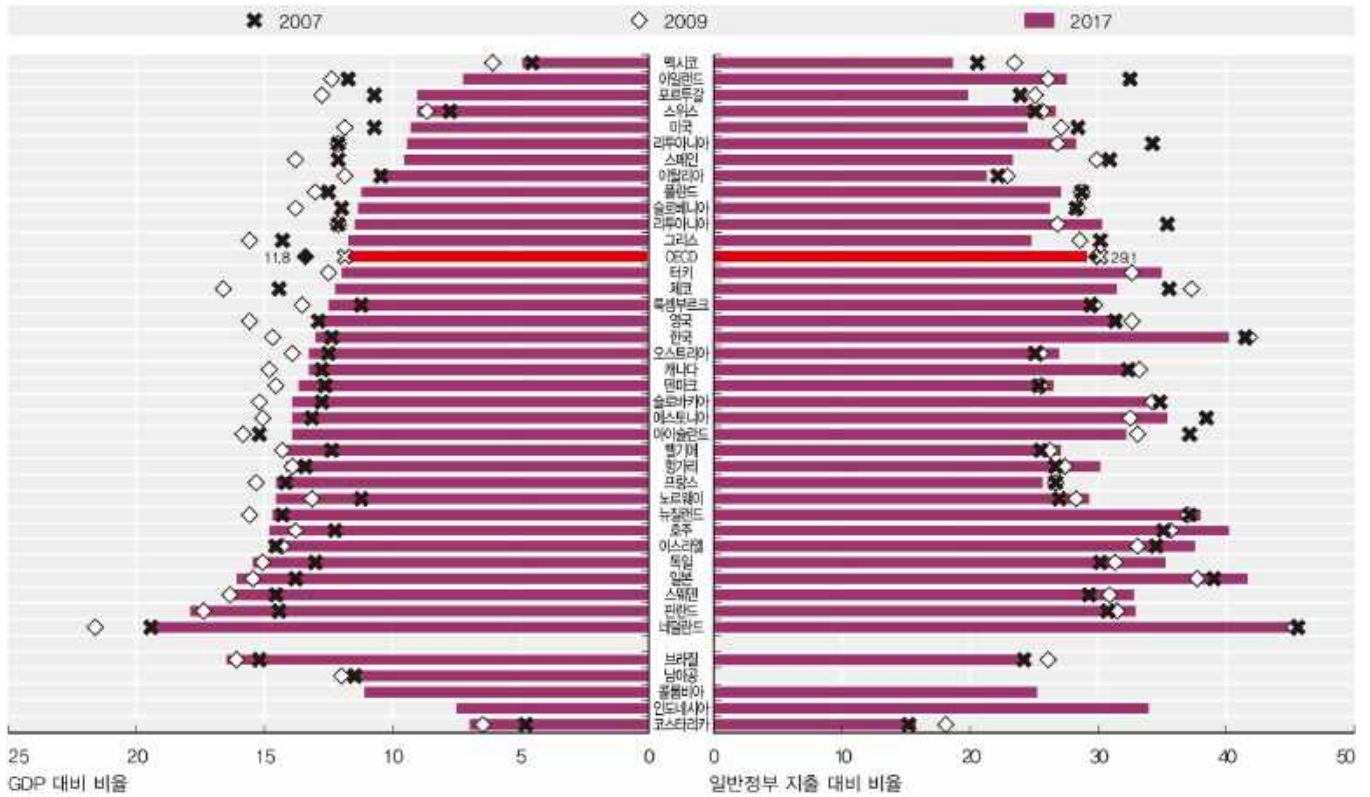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11>
OECD (2019), *Productivity in Public Procurement: A Case Study of Finland: Measur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http://www.oecd.org/gov/public-procurement/publications/productivity-public-procurement.pdf>.

그림 설명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8.1.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일반정부 조달의 많은 부분은 시장의 생산자를 통한 사회적 현물 이전으로 지출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적 공급자에 의해 개인이 서비스를 구입한 후 정부가 이를 보조해주는 학자금 지원, 건강보험 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8.2.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칠레, 아이슬란드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칠레의 자료에는 재고 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분이 포함되어 있다. 칠레와 한국은 2017년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8.3. 2012년 대비 2017년 정부기능별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 구조의 변화, 정부수준별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2009년, 2015년, 2017년)에 대한 자료는 부록 F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8.1. 일반정부 GDP 및 총지출 대비 공공조달 지출의 비율 (2007년, 2009년, 2017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후주의 자료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와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National Accounts)를 참고하였다.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776>

8.2. 정부기능별 공공조달 지출의 구조 (2017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오스트리아	11.8	1.5	3.1	21.9	1.3	0.7	35.8	3.9	9.2	10.7
벨기에	11.9	1.2	2.1	10.3	3.3	1.1	49.3	3.1	7.4	10.3
칠레	6.0	5.5	8.5	19.1	1.3	6.9	21.6	2.6	16.9	11.5
체코	6.5	2.2	3.6	20.4	5.3	3.0	35.2	5.0	14.0	4.8
덴마크	14.7	5.1	2.7	11.0	1.3	0.8	31.1	5.5	11.8	16.0
에스토니아	12.0	10.1	4.5	19.6	4.0	2.0	22.6	7.1	14.4	3.7
핀란드	21.8	4.6	2.2	13.3	0.6	1.1	22.8	3.8	11.6	18.3
프랑스	7.0	6.3	2.5	12.4	4.1	3.0	38.5	4.6	6.7	14.8
독일	10.0	4.0	3.2	9.3	2.6	1.0	40.6	2.3	6.5	20.6
그리스	16.3	7.7	1.0	29.3	3.6	1.3	31.7	2.4	5.2	1.6
헝가리	18.1	3.7	4.1	23.4	2.2	2.3	21.9	9.5	10.0	4.8
아이슬란드	8.9	0.4	3.8	19.4	2.6	2.2	25.5	9.1	20.8	7.3
아일랜드	5.5	0.8	4.6	15.1	3.0	4.9	34.4	4.0	9.7	17.9
이스라엘	6.9	25.5	3.6	2.8	2.7	1.6	31.8	4.1	10.0	11.0
이탈리아	11.6	3.9	3.6	9.0	7.8	3.4	44.4	4.7	5.3	6.4
일본	6.2	3.2	1.9	14.3	5.9	2.1	44.6	1.6	6.5	13.8
한국	11.5	11.1	3.1	18.3	4.1	4.6	31.4	2.8	10.7	2.4
라트비아	8.3	8.5	7.1	20.2	2.6	6.8	14.7	7.0	18.1	6.8
리투아니아	7.7	8.3	5.0	19.2	3.0	3.4	26.0	4.8	15.3	7.4
룩셈부르크	9.8	1.0	2.3	23.6	4.3	2.8	29.7	5.7	7.6	13.2
네덜란드	6.6	2.8	3.6	11.8	5.1	1.5	35.7	3.1	8.7	21.1
노르웨이	10.9	7.3	2.7	19.6	4.1	4.3	25.0	4.8	11.1	10.0
폴란드	6.5	7.0	4.4	25.2	2.3	4.2	29.4	5.4	11.6	3.9
포르투갈	14.5	2.3	2.9	22.1	4.3	2.5	33.8	4.7	9.9	3.1
슬로바키아	10.9	3.3	4.3	20.1	3.7	2.6	42.8	3.1	6.8	2.5
슬로베니아	11.4	2.3	3.6	20.5	2.5	3.4	33.7	5.4	13.2	4.0
스페인	10.6	3.7	3.3	14.0	6.9	2.8	32.8	5.8	11.5	8.5
스웨덴	19.0	4.5	2.8	13.0	1.1	3.7	21.5	2.9	15.4	16.1
스위스	23.1	5.9	5.8	14.7	4.2	1.4	1.6	2.9	18.7	22.0
영국	3.4	10.2	6.3	13.2	4.4	3.2	31.6	2.9	10.9	13.8
미국	9.9	20.3	6.6	22.3	0.0	2.4	14.4	1.7	19.0	3.4
OECD	9.2	10.0	4.3	16.3	3.0	2.4	30.1	2.8	11.7	10.2
코스타리카	4.4	0.0	7.4	19.5	3.5	4.3	34.1	1.8	20.4	4.7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795>

8. 공공조달

전략적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은 경제의 생산성과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OECD 국가들은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활용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정부의 정책 목표(예: 혁신 촉진, 친환경 공공조달, 순환경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기업의 책임 경영과 윤리적 책임의 고취)를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이자 전략적 수단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모든 OECD 국가들은 광범위한 정책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8개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29개국), 혁신지향 공공조달(26개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전략적 수단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함에 있어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된다. 공공조달이 혁신, 환경, 지속가능성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최저 가격이 낙찰 기준(award criterion)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최저 가격 외에 재화 및 상품의 유지비용, 개발원가, 생애주기 비용(납품 후 제품이 교체되기 전까지 드는 총비용), 환경 성과, 혁신 등을 낙찰 기준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시스템과 절차의 복잡성은 재정적, 기술적, 관리적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함에 있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계약으로 분할, 전자조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입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2016-2018년 OECD 국가들은 친환경 공공조달, 특히 기업의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과 관련된 공공조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윤리적 조달 이니셔티브(인증 위반은 계약 해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조달 시 입찰 과정의 한 부분으로 공급자에 대한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기업의 책임경영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수준별 보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공공조달(73%), 중소기업 지원(67%) 성과를 측정하는 국가는 많았던 반면, 혁신, 기업 책임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국가는 한국, 슬로베니아 등 30%의 국가에 불과하였다. 칠레, 한국,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여성기업의 참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 또한 측정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전략적 공공조달’의 자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2018년 OECD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이사회 권고에 포함된 12개의 개별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 OECD 31개 국가와 코스타리카(회원 후보국)이다. 응답지는 주로 중앙정부 내 조달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구매 기구(central purchasing bodies)의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위원회는 친환경 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을 “공공부문이 재화와 용역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화와 용역 및 서비스가 조달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기업의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가치 사슬 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결하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의 활동과 기업 간 관계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OECD (2018), *SMEs in Public Procurement: Practices and Strategies for Shared Benefit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476-en>.
- OECD (2017),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Good Practices and Strateg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476-en>.
- OECD (2015), *Going Green: Best Practices for Sustainable Procurement*, https://www.oecd.org/governance/ethics/Going_Green_Best_Practices_for_Sustainable_Procurement.pdf

그림 설명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체코,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 8.5. 캐나다의 원주민 기업 우선구매 전략(Procurement Strategy for Aboriginal Business; PSAB)은 기업의 책임경영 정책(전략)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주민 기업 우선구매 전략은 의무적, 선별적 할당 방식과 공급자 개발 활동을 통해 정부 조달에 대한 원주민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제도를 의미한다.
- 8.6. 프랑스는 2016년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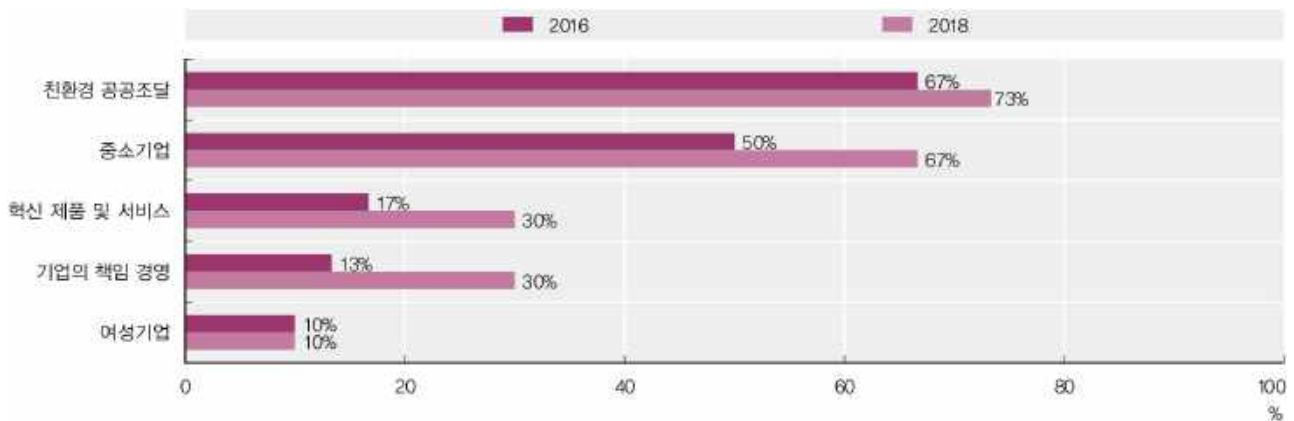
8.5. 보완적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전략 및 정책의 수립 (2016년, 2018년)

	친환경 공공조달		중소기업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책임 경영		여성기업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OECD 합계										
● 중앙정부 수준에서 전략 및 정책 수립	26	28	24	24	20	22	15	18	6	6
◆ 조달기관 수준에서 내부 전략 및 정책 수립	10	10	8	8	9	8	5	8	1	1
■ 전략 및 정책의 폐지	1	0	0	0	0	0	0	0	0	0
○ 전략 및 정책의 미수립	0	0	1	2	6	5	14	9	24	24
코스타리카	●	●	●	●	○	●	○	●	○	○

출처: OECD (2016)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814>

8.6. 보완적 정책 목표에 관한 공공조달의 성과 측정 여부 (2016년, 2018년)



출처: OECD (2016),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833>

8.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

전자조달 제도는 정부가 조달 과정의 일관된, 신뢰할 만한, 최신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공공조달 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전자조달 데이터는 자동 데이터 교환기에 의해 데이터의 오류와 중복이 제거된 상태로 다른 정보통신 시스템에 반영된다. 전자 청구서(digital invoicing)와 같은 다른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통합은 계약 실행, 계약금 지급 등을 포함한 조달의 전 과정이 완전히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이다.

기술의 진화, 데이터의 확산으로 정부의 정보제공 역량이 강화되면서, 2016-2018년 공공조달 문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공공조달 과정의 참여 가능성, 경쟁, 연구의 기회 또한 증가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공개, 데이터, 참여를 통해 인프라를 포함한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추적과 감사가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픈 데이터와 관련하여 경쟁과 책임성의 제고, 영업 비밀과 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은 전자조달 시스템과 다른 전자정부 시스템(예산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사업자 및 세금 등록, 사회 보장 데이터베이스, 공공재정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등)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또한 통합 제공하고 있다.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합한 국가는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37%에 불과한 반면, 2018년 72%로 증가하였고, 조달 계획, 준비, 계약 이행, 계약금 지급 등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통합하고 있다.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과 중앙정부 예산 및 회계의 전사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과 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통합하였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전자조달 시스템과 지방세 등록 시스템을 통합하였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전자조달 시스템과 전자서명, 전자청구 시스템을 통합해오고 있다. 한국의 나라장터(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KONEPS)는 전자조달 시스템과 외부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성이 가장 높은 사례에 해당한다. 나라장터 시스템에는 200종이 넘는 데이터가 상호연계되어 있고, 65개 공공부문 조직의 데이터 및 상업은행의 자금결제 시스템, 민간기업 협회, 신용평가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간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성을 측정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의 자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2018년 OECD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이사회 권고에 포함된 12개의 개별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 OECD 31개 국가와 코스타리카(회원 후보국)이다. 응답자는 주로 중앙정부 내 조달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구매기구(central purchasing bodies)의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공공조달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17년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의 공공조달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전자조달(E-procurement)은 공공조달의 전체 주기 동안 서류 중심의 절차를 디지털 기술로 대체 또는 재설계하여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조달의 주기는 수요 조사, 경쟁, 낙찰, 계약금 지급, 계약 관리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니터링,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조달 문서에 대한 이용 가능성(공공조달 문서의 공개)은 일반 대중이 공급자로서 등록하지 않고 문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OECD (2018), Mexico's e-Procurement System: Redesigning CompraNet through Stakeholder Engagement,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7426-en>
- OECD (2016),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novating for Effectivenes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49431-en>.

그림 설명

- 체코,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8.7. 일부 응답자들은 특히 계약 문서와 관련한 영업 비밀, 독점적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계약 문서상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당국과 공급업체 모두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계약 문서(계약의 자세한 정보 삭제) 일부를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모든 공공조달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 8.8. 독일, 아일랜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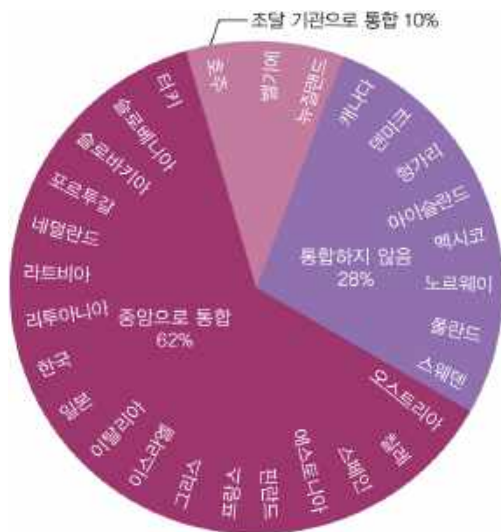
8.7. 공공조달 문서의 공개 (2016년, 2018년)

	입찰 공고		입찰 문서		평가 기준		낙찰 통지서		계약 문서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OECD 합계										
● 공개	29	31	18	25	26	30	27	30	17	18
○ 비공개	1	0	12	6	4	1	3	1	13	13
코스타리카	●	●	●	●	●	●	●	●	●	●

출처: OECD (2016)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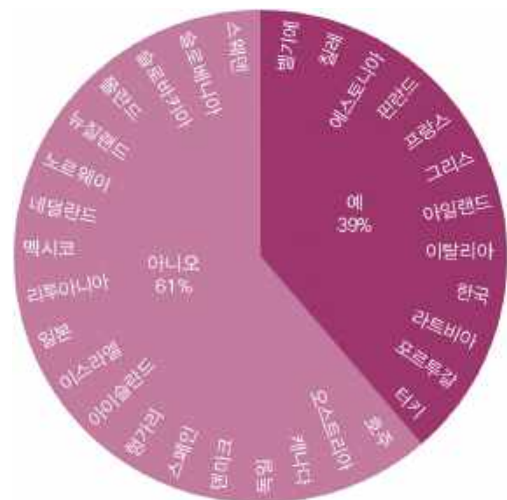
8.8. 전자조달 시스템과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의 통합 (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871>

8.9. 전자조달 시스템의 효율성 측정 (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890>

8. 공공조달

공공조달 역량 및 성과

공공조달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정부 자금의 활용에 있어 효율성과 적격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이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공공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공공조달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 지표의 활용을 통한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측정하는 국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공공조달 데이터는 유사한 조달 계약에 대한 벤치마킹, 성과의 추적과 목표달성도 측정을 통한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공공조달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측정과 관리는 성과관리 체계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또한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기술을 보유한 조달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는 공공조달에 관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정보와 데이터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조달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과지표는 가격절감(price savings)이며, 조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과 시간을 측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조달의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OECD 국가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조달의 성과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 또한 전체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들이 공공조달 데이터와 성과지표를 분석하는데 있어 보다 집권화된, 체계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공조달의 담당 인력에 요구되는 기술은 OECD 국가마다 다르며, 정부의 수준, 제도, 계약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공공조달 인증제도(certification system)는 공공조달의 인력에게 관련 기술에 대한 정기적이고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적 방향과 핵심 기술을 연결하는 역량 체계(competency framework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국가 중 공공조달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제도의 기획 및 설계와 동시에, 인증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1%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조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전체 OECD 국가의 30%에 불과하다. 칠레는 중앙구매기구가 특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무부가 개별 부처의 교육훈련 모듈과 연계한 통합적인 역량모델(proficiency model)을 개발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공공조달 인력의 역량 개발을 위해 개별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 재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 카탈로그(E-catalogues)는 직접 계약 또는 간소화된

조달 프로세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저가치 구매(low-value purchases)를 위한 광범위한 효율성 수단들을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약 55%는 전자 조달시스템에 전자 카탈로그를 포함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탈리아의 중앙구매기구인 공공조달공사(Consip)는 재무부(Ministry of Economics and Finance)의 공공조달의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place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MEPA) 보다 선진화된 전자 카탈로그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58%의 국가에서는 전자 조달시스템에 전자 역경매(E-reverse auctions)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조달 역량 및 성과’의 자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2018년 OECD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이사회 권고에 포함된 12개의 개별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 OECD 31개 국가와 코스타리카(회원 후보국)이다. 응답자는 주로 중앙정부 내 조달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구매기구(central purchasing bodies)의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카탈로그(E-catalogues)는 전자의 형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제시해주며 그림, 가격, 상품, 서비스 설명이 포함된다. 역경매(reverse auction)/전자경매(e-auction)란 경제적 행위자들이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조정된 가격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온라인 기능들을 의미한다. 가격절감(price savings)은 기준 가격과 공공조달 가격의 차이(예: 평균 입찰가, 최대할당예산 등)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OECD (forthcoming),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9), *Productivity in Public Procurement: A Case Study of Finland: Measur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http://www.oecd.org/gov/public-procurement/publications/productivity-public-procurement.pdf>.

그림 설명

- 체코,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8.10. 독일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 8.11.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노르웨이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구매자를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활용하지는 않는다.
- 8.12.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중앙정부의 전자 조달시스템에 전자 카탈로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 계약 기관이 운영하는 전자 조달시스템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8.10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체계 (2018년)

	성과측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공공조달의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가?	공공조달의 전략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정보를 활용하는가?	공공조달의 성과 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 존재하는가?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	●	●
칠레	●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그리스	○	○	●	○
헝가리	●	○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한국	●	●	●	○
라트비아	○	○	○	○
리투아니아	●	○	●	●
멕시코	○	○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터키	●	○	●	●
OECD 합계				
예 ●	13	9	17	10
아니오 ○	17	21	13	20
코스타리카	●	○	○	○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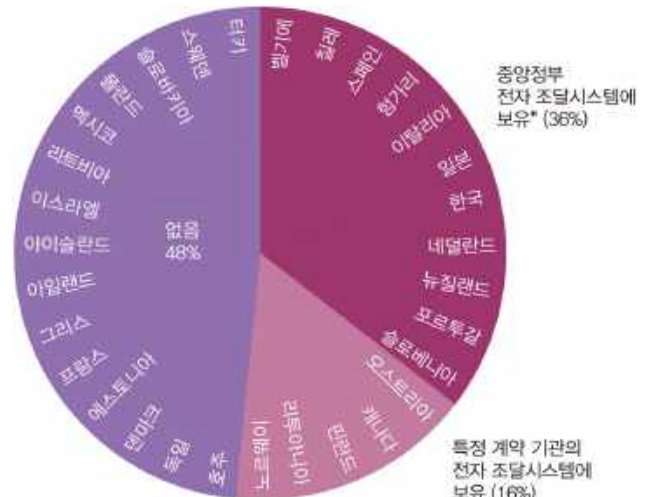
8.11. 공공조달 인력의 인증절차 (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928>

8.12. 전자 조달시스템 내 전자 카탈로그 보유 (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947>

8.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위험 관리

공공조달은 위험성이 높은 분야이다. OECD 국의 뇌물수수 보고서(*Foreign Bribery Report*)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지급된 뇌물 중 2/3는 공공조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패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해 공공 청렴도(public integrity)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익과 타협하지 않도록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이러한 청렴성 위반의 위험 외에도 공공조달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 과정(계획, 입찰경쟁, 계약의 이행, 계약금 지급)에서 낭비 또는 비효율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조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전자등록과 관련한 IT 인프라의 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외에도 재정적 위험, 계약 기관의 이미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평판의 위험 등이 존재한다.

위험관리는 위험의 평가(위험의 특성, 원인, 잠재적 결과에 대한 평가)와 위험의 완화 등 몇 가지의 단계를 포함한다. 공공조달 위험의 평가, 예방, 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 국가는 OECD 국가의 52%에 불과하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 적용되는 위험관리 정책을 제외한 수치이다. 공공조달 위험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인프라와 같이 대규모의 복잡한 사업을 위한 공공조달의 경우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일부 공공인프라 사업의 조달 시 공공조달법과 규정이 적용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든 인프라 사업에 공공조달법과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달 원칙과 체계의 적용에 기반을 둔 맞춤형 수단은 비효율성, 낮은 품질, 비용초과, 부패 등 인프라사업의 조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낮추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OECD 국가들은 특히 청렴성과 관련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단과 전략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공조달의 청렴성 위험을 보여준다. OECD 국가의 90%는 공공조달 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충돌에 대해 미리 알리는 공표(declaration) 제도는 OECD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조달의 절차로 이해충돌에 대한 공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의 81%이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뇌물의 수수 또는 기타 청렴성 위반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공급자에게 자격정지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조달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있다.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규정과 정책을 통합하여 정부가 공직자와 공급업체에 기대하는 바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문서인 행동강령을 배포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1/3에서는 공공조달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공급업체가 부패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입찰문서에 “부패방지 보증서(no corruption warranty)” 포함)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조달 역량 및 성과’의 자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2018년 OECD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이사회 권고에 포함된 12개의 개별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 OECD 31개 국가와 코스타리카(회원 후보국)이다. 응답자는 주로 중앙정부 내 조달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구매기구(central purchasing bodies)의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의 성과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즉, 직무와 사익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공공인프라(public infrastructure)는 시설, 구조, 네트워크, 시스템, 공장, 건물, 장비 또는 물리적 자산, 공공재 또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정치적으로 위임된 근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화들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참고문헌

- OECD (2018), *Third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the New International Airport of Mexico: Achievements and Lessons Learned*, OECD, Paris, <http://www.oecd.org/centrodemexico/medios/Full%20report%20EN.pdf>.
- OECD (2016), *Preventing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http://www.oecd.org/gov/ethics/Corruption-Public-Procurement-Brochure.pdf>.
-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11>.

그림 설명


체코,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8.15.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공공조달의 위험을 사기, 부패, 기타 청렴성의 위반으로 이해하였다.

8.13. 공공조달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기제 (2018년)

	이해충돌의 정의를 포함한 규정 마련	사적 이익에 대한 공표	'이해충돌이 없음'에 대한 공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고지	특정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공공조달 기회의 참여 제한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	●	●
칠레	●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그리스	●	●	●	●
헝가리	●	●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한국	●	●	●	●
라트비아	●	●	●	●
리투아니아	●	●	●	●
멕시코	●	●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터키	●	○	●	●
OECD 합계				
예 ●	28	18	25	18
아니오 ○	3	13	6	13
코스타리카	●	●	●	●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966>

8.14.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공공조달법과 관련 규정 적용 (2018년)

일부 또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존재하는 특정 법과 규정(민관협력, 특허 등)이 부분적으로 적용 (38%)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985>

8.15. 공공조달 위험의 평가, 예방, 완화를 위한 전략 수립 (2018년)

공공조달 위험의 평가와 관리를 위한 특정 전략이 없음 (48%)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004>





9.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디지털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숙도와 지속가능성

데이터 가용성: 정책 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데이터 개방

데이터 접근성: 공개된, 무료의, 접근가능한 형태

사용자 참여: 정부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사용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규모 공공부문의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OECD 국가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현대화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부문에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개혁들이 시행되었으나 공공부문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간 일관적이고 통합된 결정과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는 전자정부(e-government; 온라인 세금 납부 시스템 등)에서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정부란 정부의 현대화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가치를 만들어 내고,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와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정부행위자, 비정부 기구, 기업, 시민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정부 생태계를 의미한다(예: 정부기관이 공동 사용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정부 전략에 대한 OECD 위원회의 권고안(2014년 7월 15일 채택)은 각국의 리더십과 협업, 시스템 기반의 의사결정을 촉진함으로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 조사된 디지털 정부에 관한 설문(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30개국에서는 중앙/연방정부 차원의 조직에서 디지털 정부 전략을 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43%는 정부수뇌기관 내 디지털 정부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실)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부 전략을 조정 부처(co-ordinating ministry)가 담당하는 국가는 33%, 일선부처가 담당하는 국가는 2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직의 관리는 임명된 최고 정보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가 담당한다.

디지털 정부 정책의 주무부처(기관)는 의사결정 기능(예: 정보통신기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기술 개발 및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결정)과 자문 기능(예: 국가 디지털 정부 전략의 개발 및 조정, 전략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디지털 정부 정책의 주무부처(기관)가 전체 의사결정 기능(5가지) 중 3가지의 기능을, 전체 자문 기능(7가지) 중 6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콜롬비아에서는 디지털 정부 정책의 주무부처(기관)가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 벨기에, 멕시코, 코스타리카에서는 오직 자문 기능만 수행하는데, 특히 멕시코

에서는 전체 자문 기능 중 3가지의 기능만을 부여하였다.

디지털 정부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기술 사업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자금 조달과 예산 배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즈니스 사례 방법론,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사업 관리 모델, 셋째 디지털 기술의 조달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디지털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3가지 주요 정책수단을 도입한 국가는 OECD 30개국 중 11개국과 1개 회원 후보국(콜롬비아)에 해당한다. OECD 21개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중 2개국(브라질, 콜롬비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사업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모델을 채택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사례 방법론(예: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의 실시)을 채택한 국가는 OECD 21개국에 해당한다. 공공부문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기술 조달 전략을 수립한 국가는 OECD 국가 중 23개국인 반면, 정부 차원의 정보통신기술 조달 전략을 수립한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디지털 정부’의 자료는 2019년 디지털 정부 전략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행된 디지털 정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즉 해당 설문조사는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 이행하기 위한 각 국가의 절차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는 OECD 30개국과 회원 후보국 중 2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주요 경제협력국 중 1개국(브라질)이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정책과 관련된 중앙 및 연방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정책 수단(policy levers)은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분야의 수단 중 정부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OECD (forthcoming), *Governance of Digital Governmen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forthcom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ector: Helping Governments Respond to the Needs of Networked Societi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06>.

그림 설명

호주,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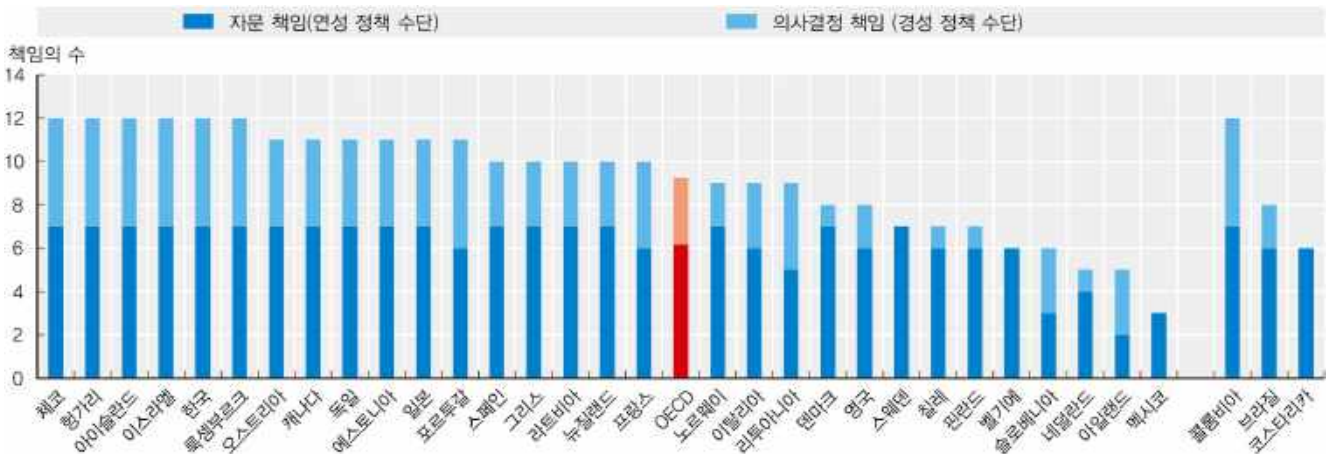
9.1. 디지털 정부 전략의 주무부처 (2019년)



출처: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OECD, Pari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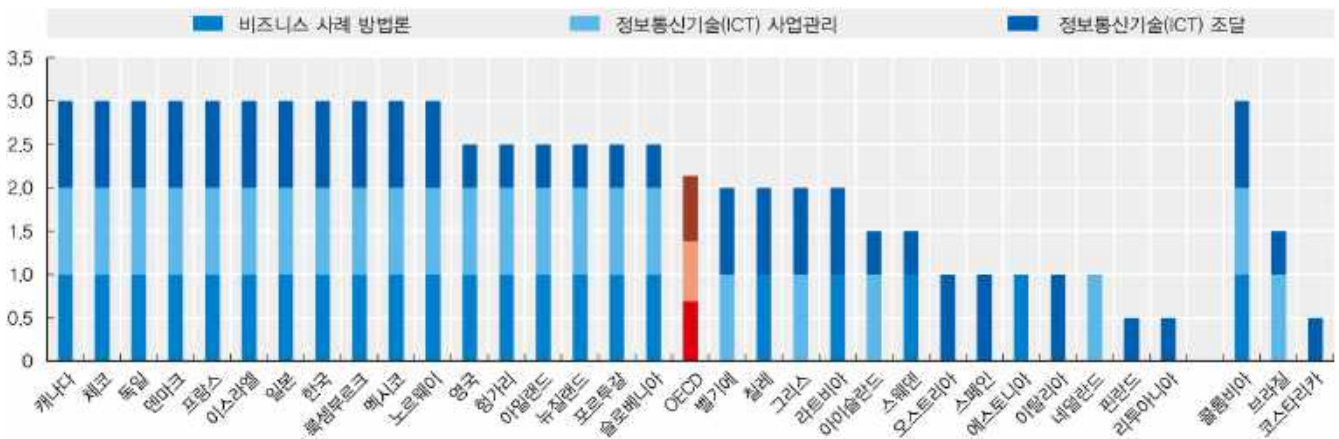
9.2. 디지털 정부 전략의 주무부처 책임



출처: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OECD, Pari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042>

9.3. 중앙/연방정부의 표준화된 정책수단의 활용 (2019년)



출처: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OECD, Pari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061>

9.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숙도와 지속가능성

데이터는 오늘날의 사회, 경제, 정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 중 하나이다. 공공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OGD) 정책은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모두에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사회 참여, 비즈니스 기회, 혁신, 정보를 통한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개방(OURdata) 지수는 공공데이터 정책과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준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to the re-use) 등 3가지 지표로 측정된다. 각각의 지표는 동일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0과 0.33사이의 값을 갖는다.

2019년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의 상승은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성숙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2019년 OECD 평균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0.60으로 2017년(0.53)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데이터 가용성(0.18('17)→0.20('19)), 데이터 접근성(0.21('17)→0.23('19)),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0.15('17)→0.17('19)) 등 각각의 지표 점수 또한 모두 증가하였다.

이전에 성과가 낮았던 국가들도 한국(0.93), 프랑스(0.90), 일본(0.75)과 같은 선두 주자들을 추격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아일랜드의 국가 공공데이터 전략(National Open Data Strategy), 폴란드의 공공데이터 사업(Public Open Data Programme), 슬로베니아의 행정 개발 전략(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Strategy)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0.65)와 캐나다(0.73)는 2017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7년 상위권이었던 핀란드와 영국은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 정책 기능의 재조정, 지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공공데이터개방 지수가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데이터 가용성 점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개선되어 데이터 가용성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0.14('17)→0.24('19)).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호주, 체코, 슬로베니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과 기업에게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데이터셋을 공공데이터(예: 사업자 등록 정보, 날씨 데이터, 주정부 예산 데이터 등)로 제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데이터 접근성 점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7년과 동일하게 2019년에도 호주(0.32), 콜롬비아(0.32), 프랑스(0.31)의 데이터 접근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 OECD 33개 국가 중 30개국에서 정부 데이터는 무료로 사용

되며, 29개국은 공개 저작권의 형태로 사용되고, 31개국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의 발전은 데이터의 품질과 완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33개 OECD국가 중 21개국에서는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서 역량과 능력의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하여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연구 또는 사례 수집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의 공공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지원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data Index)의 자료는 OECD 공공데이터 설문(OECD Open Government Data Survey)을 통해 수집되었다. 2018년 설문조사에는 33개 OECD 회원국과 1개 회원 후보국(콜롬비아)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주로 디지털 열린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자료는 중앙/연방정부에 한해 조사되었으며, 주정부/지방정부는 제외되었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국제오픈데이터헌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의 원칙을 참고하여 OECD에서 개발하였다(Lafortune, Ubaldi, 2018).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to the re-use) 등 3가지 지표로 측정된다. 각각의 지표는 동일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0과 0.33사이의 값을 갖는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충분조건들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공공데이터 개방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방법론과 기초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F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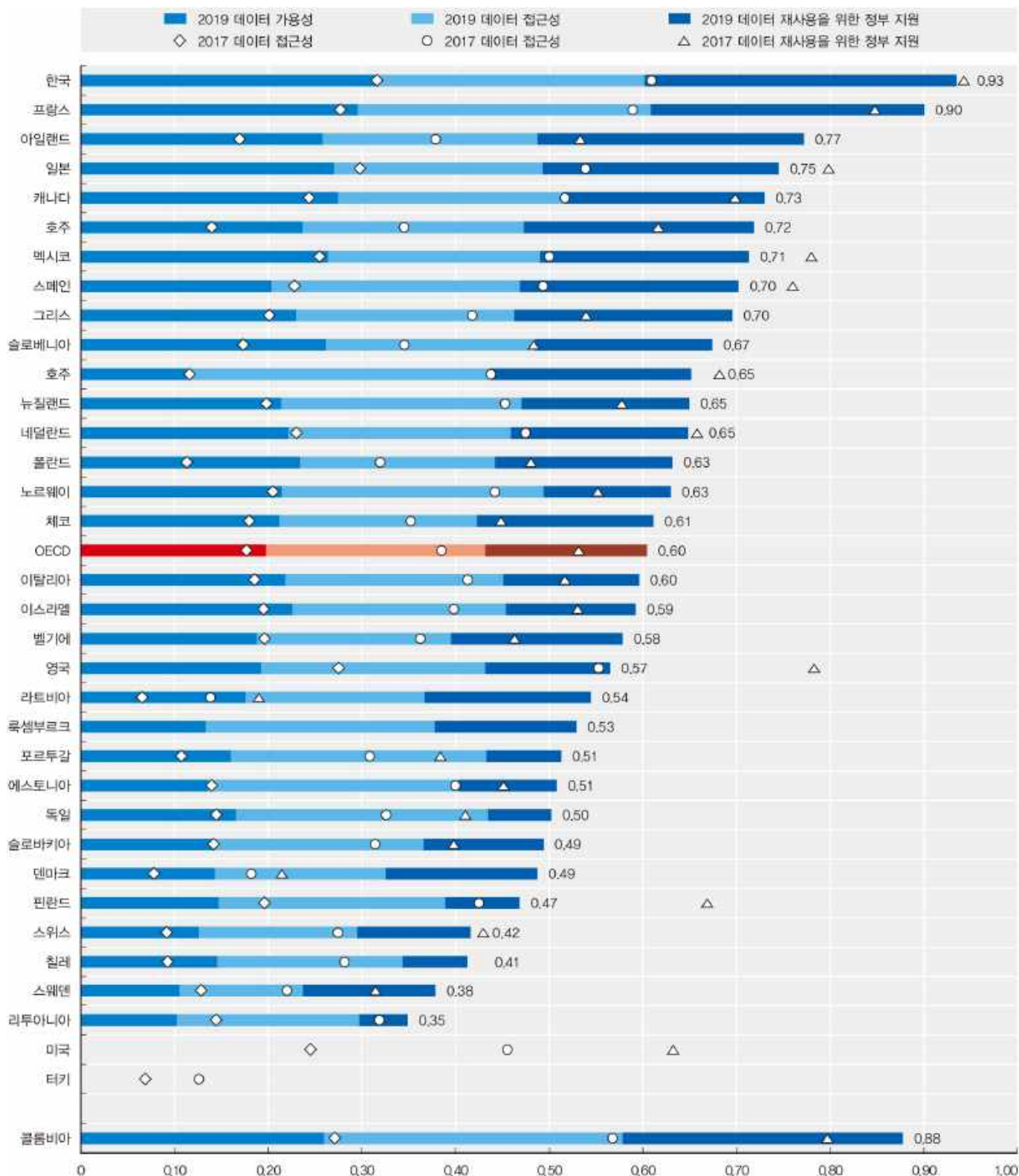
참고문헌

- Lafortune, G. and B. Ubaldi (2018), "OECD 2017 OURdata Index: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0,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2807d3c8-en>
-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Report: Enhancing Policy Maturity for Sustainable Impact",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5847-en>.

그림 설명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의 2017년 자료와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 미국의 2019년 자료는 누락되었다.

9.4. 공공데이터개방(OURdata) 지수 (2017년, 2019년)



출처: OECD (2016), "Open Government Data Survey";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1180>

9.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가용성: 정책 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데이터 개방

정부데이터의 가용성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핵심이다. 데이터 가용성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높은 가치를 지닌 데이터(예: 인프라, 사업자 등록 정보)의 공개를 의미한다(G8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 참고). 중앙/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보다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공공데이터 커뮤니티와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가용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데이터 가용성은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정책(*content of the open by default policy*), 데이터 개방에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ata release*), 실행력(*implementation*)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 값을 합산하여 단순 평균 값을 계산하였다.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53에서 2019년 0.5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수준 증가에 기인한다. 데이터 가용성 점수가 평균 이하인 칠레(0.28('17)→0.44('19)), 스위스(0.28('17)→0.38('19)), 포르투갈(0.18('17)→0.20('19))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데이터 가용성 점수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개선함에 따라 해당 점수가 2017년 0.19에서 2019년 0.22로 상승하였다. 최근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중앙/연방정부의 전략, 사업, 법률을 도입한 폴란드는 0.06점에서 0.26점으로, 아일랜드는 0.13점에서 0.25점으로, 독일은 0.08점에서 0.19점으로 각각 점수가 증가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정부데이터가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명시적인 공개 요건을 설정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원칙적 공개에 관한 명시적 요건이 없으나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데이터 접근성 참고, 150쪽).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요건의 이행(예: 최신의,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 제공)을 공공부문의 성과 지표로 포함한 국가는 절반에 불과하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18에서 2019년 0.20으로 증가하였다. 호주(0.07('17)→0.23('19)), 덴마크(0.03('17)→0.17('19))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참여 점수가 증가하였다. 슬로베니아(0.19('17)→0.29('19))와 아일랜드(0.21('17)→0.29('19))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데이터 계획을 개선하였다. 2019년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일본(0.33)과 한국(0.33)은 공공부문이 데이터 사용자와 정기적인 협의를 시행하도록 요건을 부과하였다.

2017년 이후 이용가능한 데이터셋의 양이 소폭 증가하면서, 실행력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16에서 2019년 0.18로

증가하였다. 체코(0.08('17)→0.21('19))와 슬로베니아(0.08('17)→0.20('19))는 우편번호(zip codes)와 국가/지방 지도 등 가치가 높은 데이터셋을 공개하여 실행력 점수가 증가하였다. OECD 국가 중 캐나다의 실행력 점수는 0.31로, 캐나다는 높은 가치를 갖는 데이터셋의 이용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이다. 반면, 덴마크(0.02), 에스토니아(0.06), 리투아니아(0.04)는 아직까지 공개 예산자료 등 중요한 데이터셋에 대한 공개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 가용성은 정부가 중앙/연방정부 수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요건을 채택 및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측정하는 지표이다. 데이터 가용성은 국제오픈데이터 헌장의 제1원칙인 “원칙적 공개”와 제2원칙인 “적시에 그리고 포괄적으로”와 관련된 지표이다. 데이터 가용성은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정책(*content of the open by default policy*), 데이터 개방에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ata release*), 실행력(*implementation*)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는 동일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0과 0.33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데이터 가용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의 산출 시 데이터 가용성 점수는 다른 지표(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와 동일한 가중치로 환산되어 0과 0.33의 값을 갖는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data Index)와 데이터 가용성의 자료는 OECD공공데이터 설문(OECD Open Government Data Survey)을 통해 수집되었다. 응답자는 주로 디지털·열린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데이터 가용성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과 절차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료는 중앙/연방정부에 한해 조사되었으며, 주정부/지방정부는 제외되었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국제오픈데이터 헌장의 원칙을 참고하여 OECD에서 개발하였다(Lafortune, Ubaldi, 2018).

방법론과 기초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F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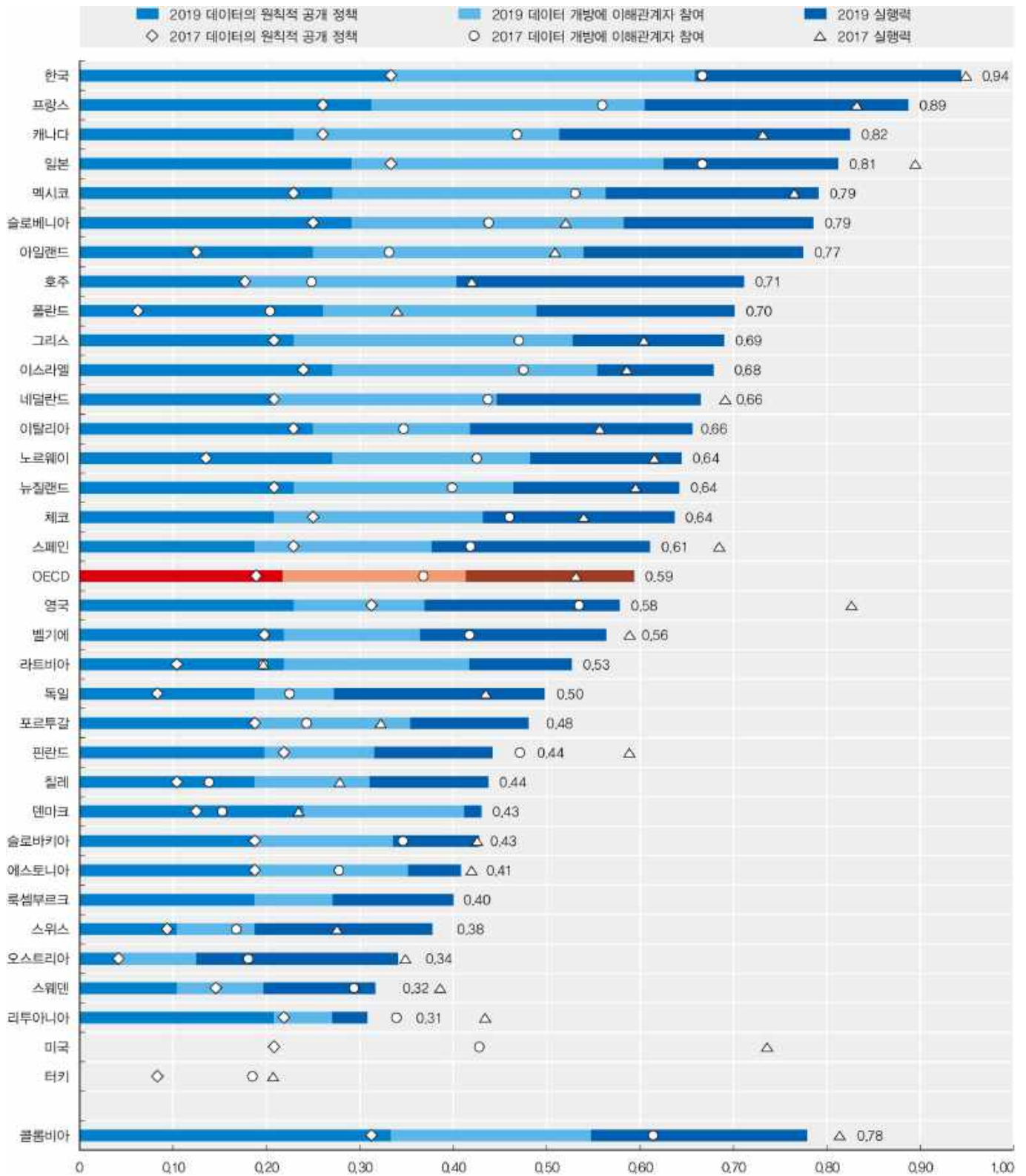
Lafortune, G. and B. Ubaldi (2018), “OECD 2017 OURdata Index: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0,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2807d3c8-en>

OECD (2016), *Open Government Data Review of Mexico: Data Reuse for Public Sector Impact and Innovation*,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59270-en>.

그림 설명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의 2017년 자료와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 미국의 2019년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9.5. 데이터 가용성 (2017년, 2019년)



출처: OECD (2016), "Open Government Data Survey";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080>

9.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접근성: 공개된, 무료의, 접근가능한 형태

시민, 기업, 이해관계자에 의해 정부 데이터가 재사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목적을 위해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접근가능한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가능한 데이터란 무료로, 접근에 제한이 없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형태와 제공 절차에 관한 표준 및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중앙/연방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피드백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사용자의 기여를 촉진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성은 데이터 정책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content of unrestricted access to data policy*), 데이터 품질 및 완전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ata quality and completeness*), 실행력(*implementation*)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하위 지표는 최대 0.33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데이터 포털이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62에서 2019년 0.70으로 증가하였다. OECD 국가의 중앙/연방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추가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협력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접근성의 하위 지표 중 이해관계자 참여 점수가 증가하였다.

OECD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무료로,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 정책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25에서 2019년 0.27로 증가하였다. 33개 OECD 국가 중 칠레,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포함한 11개국은 해당 지표의 점수가 최저점(0.33)을 기록한 반면, 스웨덴(0.06)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연방 공공데이터 법(*Federal Open Data Act*)의 제정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데이터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진전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로 해당 지표의 점수가 2017년 0.07에서 2019년 0.20으로 증가하였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은 데이터 품질과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공공데이터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11에서 2019년 0.14로 증가하였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사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고도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한 결과, 데이터 접근성의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0.67)과 멕시코(0.68)의 데이터 접근성 점수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참여 점수는 일본이 0.13, 멕시코가 0.07로 나타났다.

2017년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한 라트비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중앙/연방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접근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실행력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27에서 2019년 0.28로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실행력 점수는 0.30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한 공식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접근가능한 정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덴마크(0.22)와 리투아니아(0.21)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덴마크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사용자로 등록해야만 데이터에 접근 및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 접근성은 정부 데이터가 관련 메타데이터와 함께 공개 및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 측정하는 지표이다. 데이터 접근성은 국제오픈데이터 헌장의 제3원칙인 “접근가능성 및 이용가능성”과 제4원칙인 “비교가능성 및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지표이다.

데이터 접근성은 데이터 정책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content of unrestricted access to data policy*), 데이터 품질 및 완전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ata quality and completeness*), 실행력(*implementation*)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는 동일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0과 0.33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데이터 접근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의 산출 시 데이터 접근성 점수는 다른 지표(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와 동일한 가중치로 환산되어 0과 0.33의 값을 갖는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data Index)와 데이터 접근성 지표의 자료는 OECD공공데이터 설문(OECD Open Government Data Survey)을 통해 수집되었다. 응답자는 주로 디지털 열린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와 절차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료는 중앙/연방정부에 한해 조사되었으며, 주정부/지방정부는 제외되었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국제오픈데이터헌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의 원칙과 방법론을 참고하여 OECD에서 개발하였다(Lafortune, Ubaldi, 2018).

방법론과 기초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F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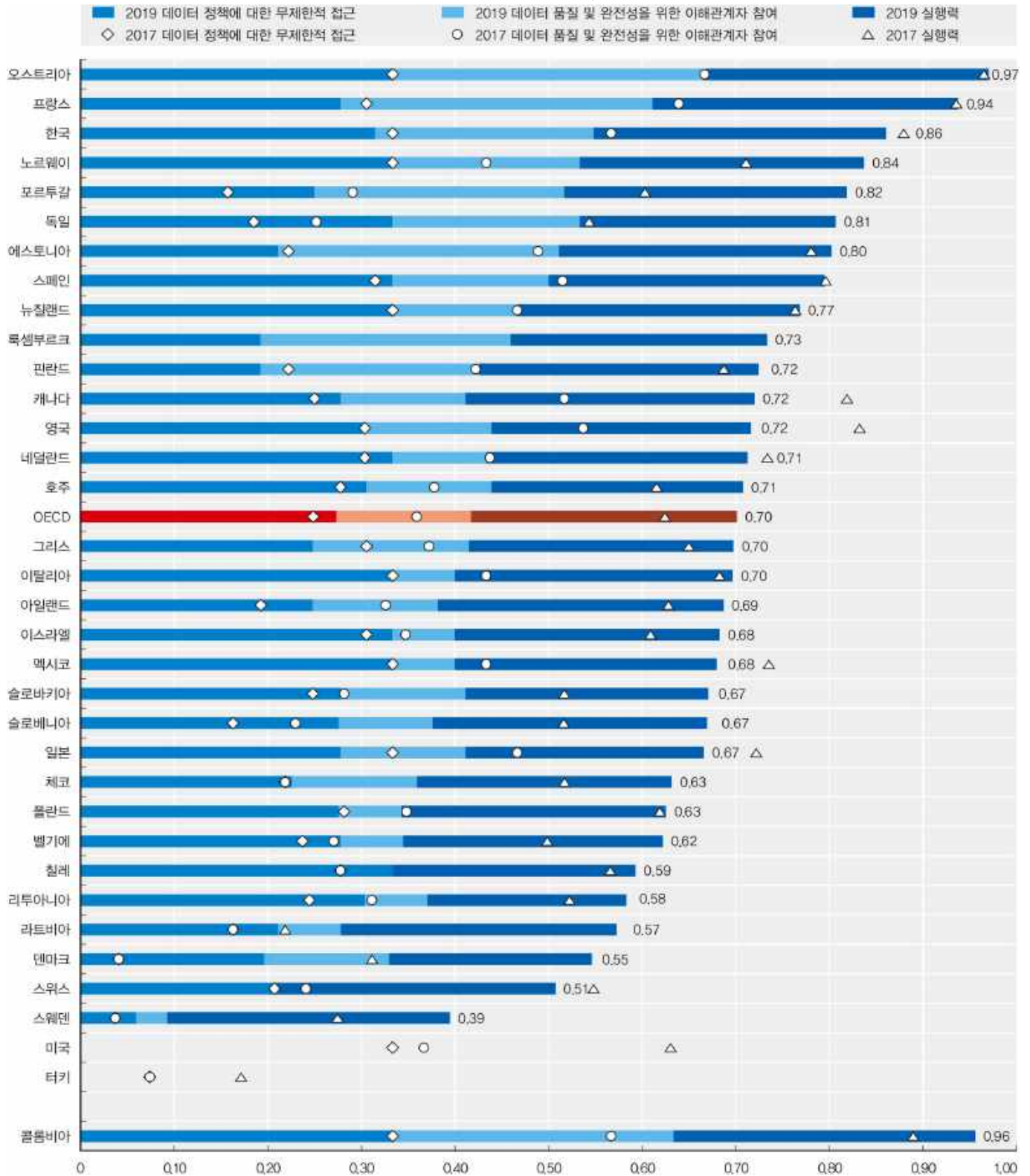
Lafortune, G. and B. Ubaldi (2018), “OECD 2017 OURdata Index: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0,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2807d3c8-en>.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in Mexico: The Way Forward*,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97944-en>.

그림 설명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의 2017년 자료는 누락되었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 미국의 2019년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9.6. 데이터 접근성 (2017년, 2019년)



출처: Source: OECD (2016), "Open Government Data Survey";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099>

9.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사용자 참여: 정부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사용

정부의 공공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 성공적인 정부 데이터의 재사용 사례를 제시, 수집,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 제공자로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안팎에서 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 및 대회, 사업, 파트너십을 조직하여 행정의 내부 역량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핵심이다.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은 데이터 활용 촉진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data promotion initiatives and partnerships*), 정부의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data literacy programmes in government*),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impact*)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하위 지표는 최대 0.33점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44에서 2019년 0.52로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원 대상의 공공데이터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투자, 중앙 공공데이터 포털에 재사용 사례 제시, 공공데이터의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킨 결과이다.

특히 한국은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의 세 가지 하위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도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수가 낮은 국가가 존재한다. 노르웨이(0.24('17)→0.08('19))와 핀란드(0.29('17)→0.03('19))는 2017년에 비해 시민사회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촉진 점수가 감소하였다.

2017-2019년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의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지원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데이터 활용 촉진에 대한 OECD 평균도 0.16점(0.33점 만점)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최근 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공공데이터를 정치적 의제로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데이터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예: 해커톤(*hackathons*), 공공데이터 컨퍼런스, 공동창조(*co-creation*)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가들은 행정의 내부 역량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데이터 리터러시 점수에 대한 OECD 평균은 2017년 0.18에서 2019년 0.21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2017년 0.13에서 2019년 0.29로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데이터 활용과 혜택에 대한 공무원 교육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공공데이터 포털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사용자의 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제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점수의 OECD 평균이 2017년 0.10에서 2019년 0.14로 증가

하였다. 일부 국가는 공공데이터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개된 지리정보 데이터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덴마크와 라트비아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은 정부가 내부와 외부에서 공공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측정하는 지표이다.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은 국제오픈데이터 현장의 제5원칙인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증진”과 제6원칙인 “포괄적인 발전과 혁신”과 관련된 지표이다.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은 데이터 활용 촉진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data promotion initiatives and partnerships*), 정부의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data literacy programmes in government*),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impact*)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는 동일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0과 0.33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의 산출 시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 점수는 다른 지표(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접근성)와 동일한 가중치로 환산되어 0과 0.33의 값을 갖는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data Index)와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지원의 자료는 OECD공공데이터 설문(OECD Open Government Data Survey)을 통해 수집되었다. 응답자는 주로 디지털·열린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현재의 제도와 절차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료는 중앙/연방정부에 한해 조사되었으며, 주정부/지방정부는 제외되었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는 국제오픈데이터현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의 원칙을 참고하여 OECD에서 개발하였다(Lafortune, Ubaldi, 2018).

방법론과 기초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F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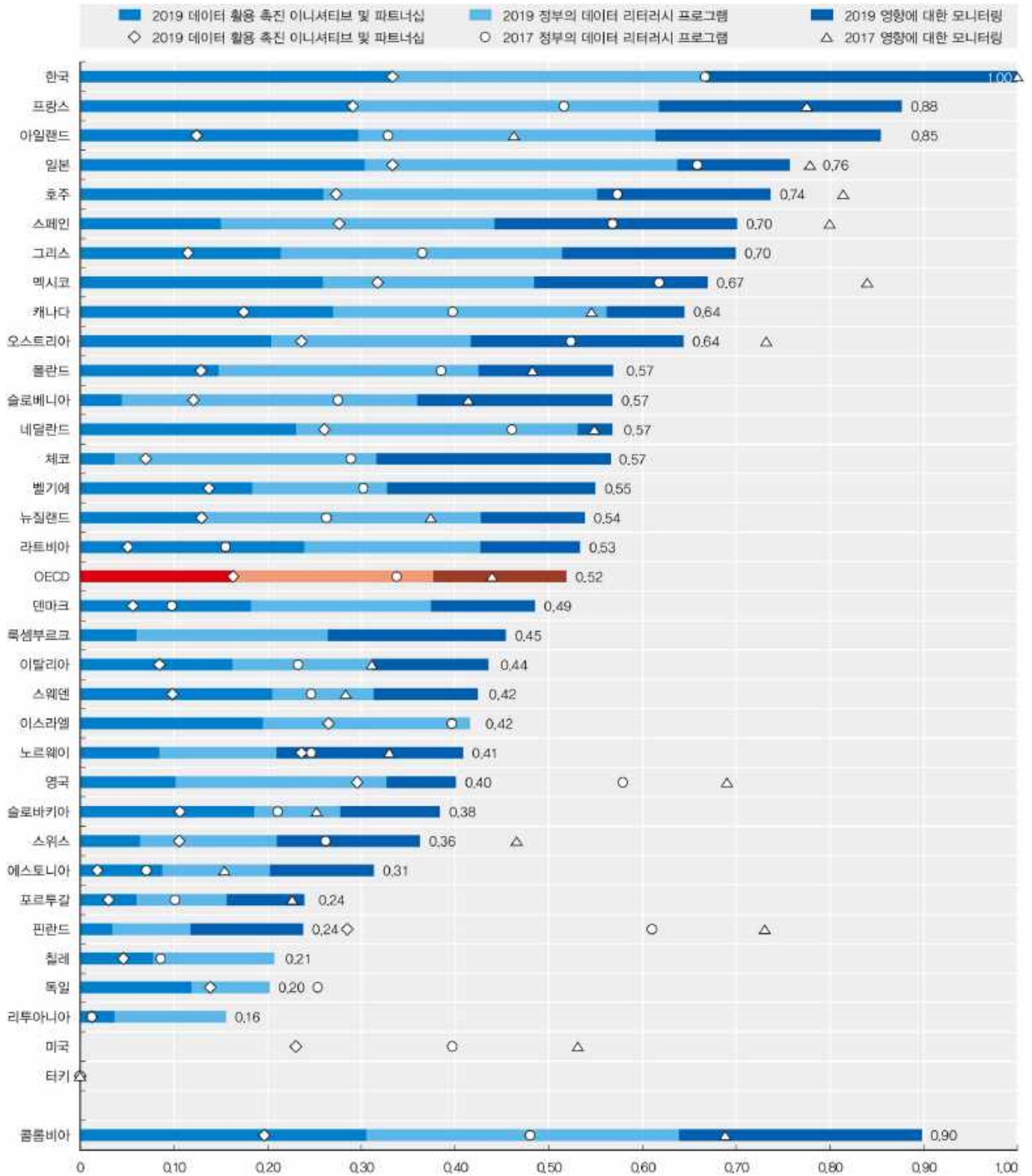
Lafortune, G. and B. Ubaldi (2018), “OECD 2017 OURdata Index: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807d3c8-en>

OECD (2015), *Open Government Data Review of Poland: Unlocking the Value of Government Data*,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41787-en>

그림 설명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의 2017년 자료는 누락되었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 미국의 2019년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9.7.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 지원 (2017년, 2019년)



출처: OECD (2016), "Open Government Data Survey";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118>





10. 핵심 정부 성과

정부 신뢰

정부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 : 외적 정치 유효성

소득 및 부의 재분배

법의 지배

공공부문의 효율성

공공정책의 비용효과성

신뢰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행동과 일치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OECD, 2017a). 제도적 신뢰는 정부가 정당성을 얻기 위한 기반이며, 정부의 규제와 조세 제도가 유지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즉, 정부가 강제력의 행사 없이 통치 능력을 보장 받고,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학술 문헌에 의하면, 신뢰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 공공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17b).

현재 갤럽 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는 모든 OECD 국가와 전략적 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비교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신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신뢰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70%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리스와 라트비아는 20%이하로 가장 낮다. 2018년 OECD 국가의 평균 신뢰 수준은 45%로 2007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지난 금융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정부 신뢰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2007-2018년 슬로베니아(-24%p), 그리스(-22%p), 핀란드(-20%p), 스페인(-19%p)의 신뢰 수준은 대폭 하락하였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성과를 거둔 국가들인 독일(24%p), 폴란드(24%p), 스위스(22%p), 이스라엘(20%p)은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신뢰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 내에서의 세대 간 정부 신뢰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청년인구(15세~29세)의 정부 신뢰도가 50세 이상 인구보다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15%p), 리투아니아(8%p), 이탈리아(8%p), 벨기에(6%p)이다. 정부 신뢰의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청년인구 집단의 경우 공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거나, 최근에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50세 이상 인구의 정부 신뢰도가 더 높은 국가는 헝가리(26%p), 터키(15%p), 칠레(14%p), 프랑스(14%p), 폴란드(14%p)이다. 청년인구의 정부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기회의 부족, 기성세대와 유사한 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지만, 경제적 성과 또는 공공 부문 청렴도와 같은 공공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세대간 갈등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또한 OECD 국가의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제도적 신뢰와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의 축적은

OECD 국가들이 정부의 신뢰 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 신뢰’의 자료는 갤럽 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 GWP)를 활용하였다. 갤럽 여론 조사는 각 국가별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sample)의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수도 혹은 대규모 도시를 설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일부 국가도 존재한다. 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설문 항목으로 재정제도, 사법제도, 경찰, 국방, 정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중 정부신뢰는 모든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을 의미하며, 정부의 일부(정치인, 관료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되지 않는다. 갤럽 여론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KDI (2018),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8992-en>

OECD (2017a),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821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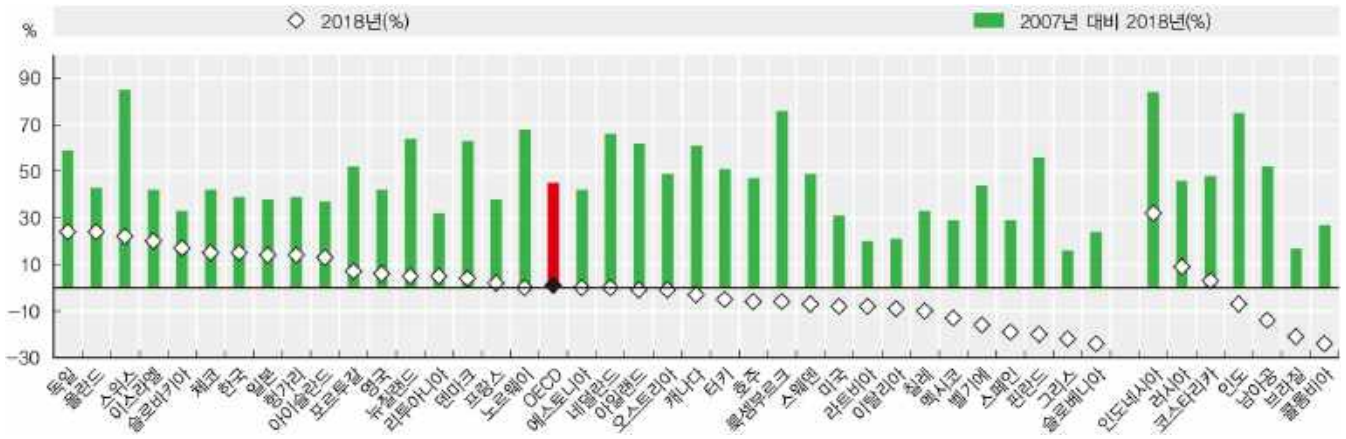
OECD (2017), *Trust and Public Policy: How Better Governance Can Help Rebuild Public Trust*,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8920-en>.

그림 설명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10.1. ‘OECD 국가의 정부 신뢰도’는 전체 응답자 중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의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이슬란드는 2018년 자료 대신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7년 자료 대신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2006년의 자료를 룩셈부르크는 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10.2. 호주, 아이슬란드, 일본, 슬로베니아의 청년인구(15세~29세) 자료는 누락되었다. 핀란드, 뉴질랜드는 2018년 대신 2017년 청년인구(15세~29세)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령대별 정부 신뢰도는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s)을 적용하였다.
- 10.3. ‘정부부패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자 중 “당신의 국가에 정부부패가 만연해 있습니까?”의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이슬란드는 2018년 자료 대신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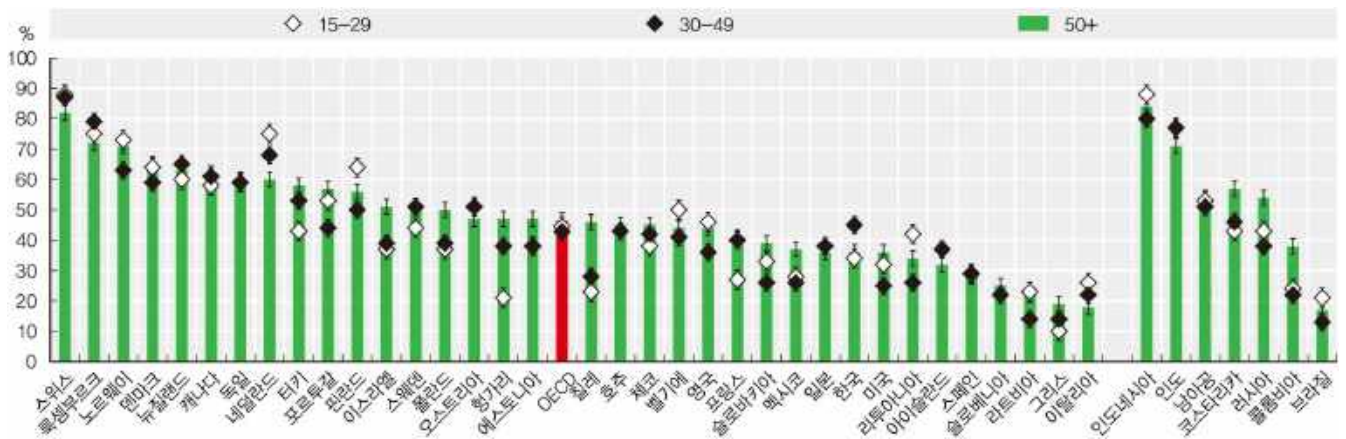
10.1. OECD 국가의 정부 신뢰도 (2018년, 2007년 대비 2018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18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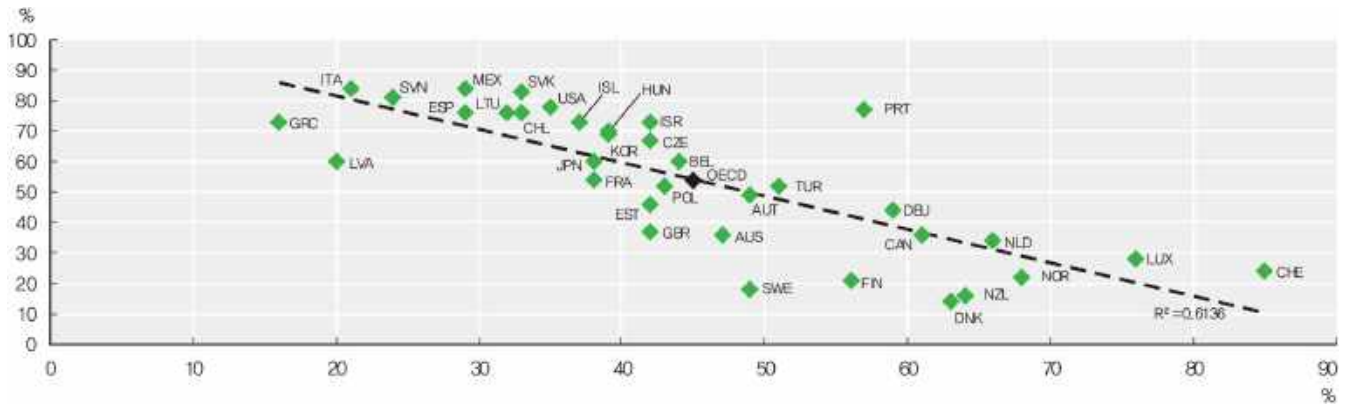
10.2. 연령대별 정부 신뢰도 (2018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18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156>

10.3. OECD 국가의 정부 신뢰와 정부부패 인식의 상관관계 (2018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18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175>

10. 핵심 정부 성과

정부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 : 외적 정치 유효성

외적 정치 유효성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요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정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하다. 외적 정치 유효성은 정부와 상호 작용 했던 개인적 경험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낮은 정부 대응성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외적 정치 유효성은 정치·사회의 변화가 가능하고, 개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므로 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도 관련된다(OECD, 2017).

1952년 이후 미국에서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와 같은 정치참여 서베이에는 외적 정치 유효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를 포함한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와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서도 정기적으로 정치 유효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16년 OECD 23개 국가(주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 유효성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3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스위스의 경우 정치 유효성이 75%로 매우 높은 반면, 이탈리아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6년 정치 유효성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아이슬란드(24.5%p)와 독일(14.4%p)이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폴란드(12.4%p), 스웨덴(9.9%p)이다.

학술문헌에 의하면, 대외적 정치 유효성은 시민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의회 및 정부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대외적 정치 유효성이 높은 국민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의회 및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높다(OECD, forthcoming).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 네덜란드는 국민들의 외적 정치 유효성이 높은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의회의 신뢰도 또한 높다. 반면,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의회의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제비교조사를 의미한다. 유럽 사회조사는 2년마다 시행되는 횡단조사이며,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된다. 각 국가는 최소 1,500명의 유효표본 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가 200만명 미만인 국가는 최소 800명의 유효표본 수를 얻어야 한다. 유럽 사회조사는 ‘인구의 다양성’에 대한 유럽인들의 가치관, 태도, 행동 양식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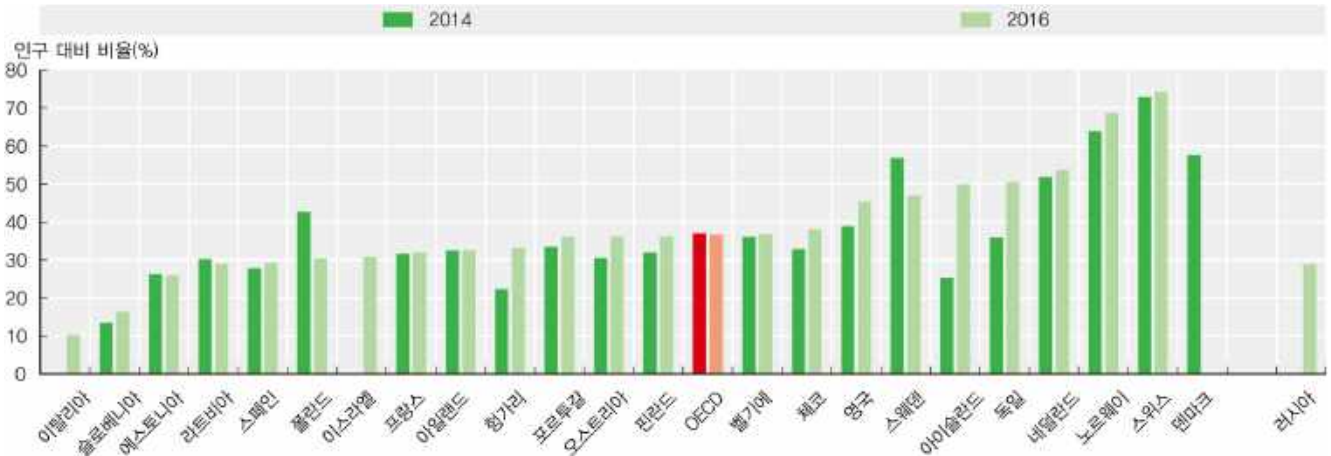
참고문헌

- Borgonovi, F. and A. Pokropek (2017), “Mind that gap: The mediating role of literacy and education in explaining disparities i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n 28 countries”, *Intelligence*, Vol. 62, pp. 125-137, <https://doi.org/10.1016/j.intell.2017.03.006>.
- González, S. (forthcoming), “Statistical accuracy of responsiveness measures in public governance”,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7),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how_life-2017-en.

그림 설명

-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10.4. 2016년 자료는 전체 응답자 중 “당신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질문에 “약간(some)”, “많이(a lot)” “상당히(a great deal)”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 2014년 자료는 전체 응답자 중 0점(동의하지 않음)~10점(완전 동의)척도에서 5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대외적 정치 유효성’ 자료는 21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유럽사회조사 7차 자료와 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탈리아는 8차 자료에 포함되었으나, 7차 자료에는 누락되었다. 덴마크는 7차 자료에 포함되었으나, 8차 자료에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은 8차 자료에만 포함되었다.
- 10.5.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자료는 0점(매우 불만족)~10점(매우 만족)척도에서 5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 10.6. ‘의회 신뢰도’ 자료는 0점(전혀 신뢰하지 않음)~10점(완전히 신뢰함)척도에서 5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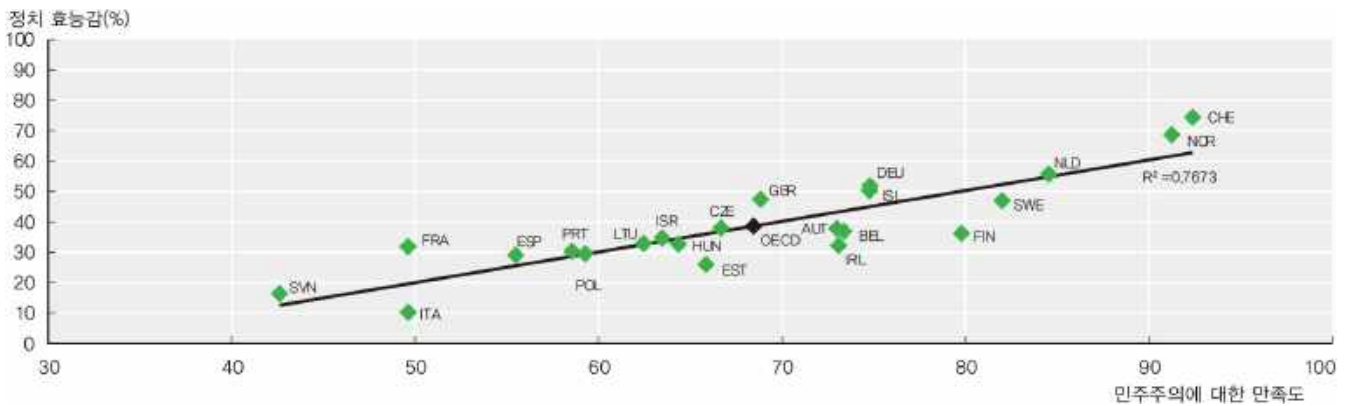
10.4.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014년, 2016년)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in rounds 7 and 8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194>

10.5. 정치 유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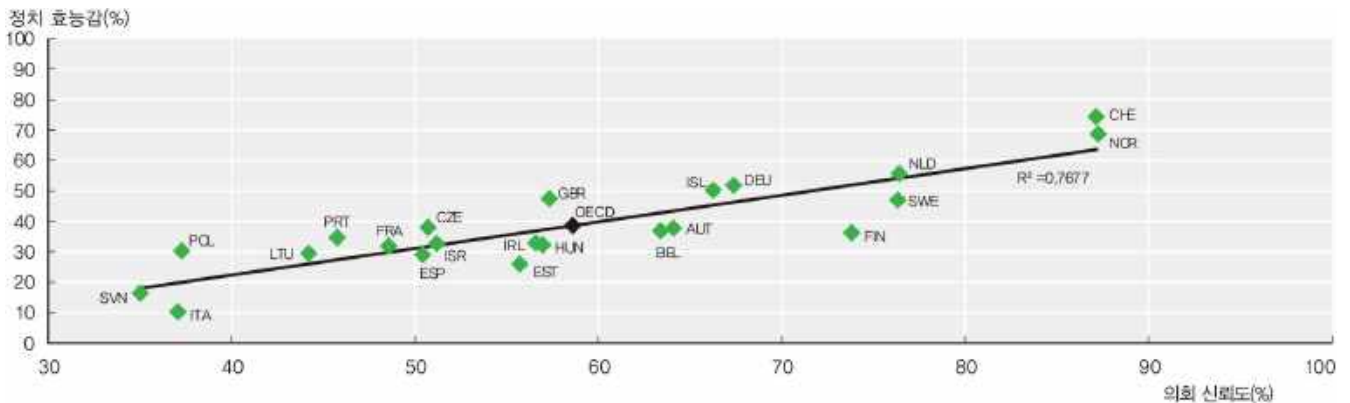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Social Survey, 2016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213>

10.6. 정치 효능감과 의회 신뢰도 (2016년)



출처: European Social Survey, 2016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232>

10. 핵심 정부 성과

소득 및 부의 재분배

2007-08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물적 상황(material conditions), 인적자본의 형성, 소득이 낮은 집단에 대한 기회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신뢰 수준이 낮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정부가 평등한 기회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예: 조세감면)와 이전지출(예: 수당 또는 보조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지니계수는 특정 국가 인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가질 때 0, 한 가구가 모든 소득을 가질 때 1의 값을 갖는다. 2016년 OECD 국가의 평균 지니계수는 세전 0.47에서 세후 0.32로 조세 부과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감소하였다. 조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수준은 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인 핀란드(24.6%p), 아일랜드(23.4%p), 벨기에(23.3%p)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자산(부) 불평등 수준은 소득의 불평등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계층의 자산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상위 10%의 총 소득은 전체 소득의 24%를 차지하는 반면, 상위 10% 가구의 총 자산은 전체 자산의 52%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의 불평등은 전체 자산 중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의 비율로 측정된다. 자산의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79%), 네덜란드(68%)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41%), 슬로바키아(34%)이다.

정부가 소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분배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OECD 국가에서 실업, 가족 해체, 장애 등으로 급격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득빈곤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갑자기 소득이 중단된 사람들은 최소 3개월 동안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만한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득과 자산의 분배와 함께 경제적 취약성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62.2%)와 그리스(55.4%)이다. 반면,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4.3%)과 일본(13.6%)이다. 최근 자산 보유의 불평등과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국가의 소득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자료는 OECD 소득분포통계(Income Distribution Database)와 자산분포통계(Distribution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소득재분배는 생산가능인구의 가구시장소득(household market income)의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의 지니계수 간 차이를 의미한다. 가구시장소득은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순자산에는 부동산 자산(예: 다주택 소유), 투자자산, 금융자산(예: 임의 연금(voluntary pensions), 개인 저축, 상속), 순 부채가 포함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형태인 연금 자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occupational pensions)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빈곤은 최소 3개월 동안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만한 유동성 금융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산 빈곤은 소득 빈곤이 아닌 경제적 취약성을 의미한다. 경제적 취약성(economically vulnerable)은 특정 유형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인 사회이전소득(예: 실업급여)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다. 소득빈곤층은 세전 가구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소득빈곤선)인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Balestra, C. and R. Tonkin (2018),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8/0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e1bf673-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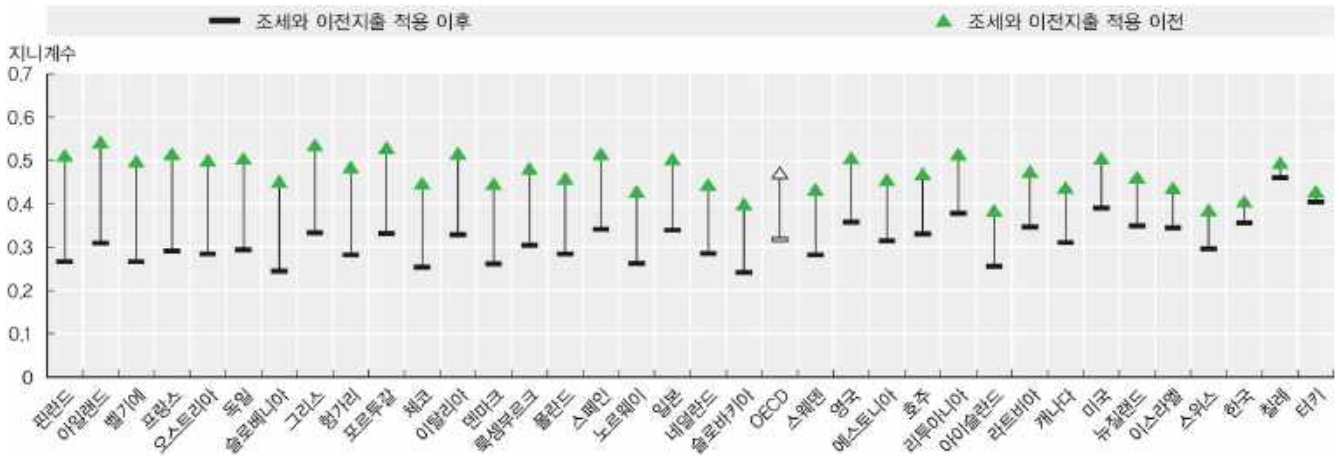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10.7. 2016년 자료 대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한국, 칠레는 2017년의 자료, 뉴질랜드는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멕시코, 터키의 가구시장소득은 공적이전지출 전 그리고 세후 소득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10.8. 2015년 자료 대신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2016년의 자료, 호주, 헝가리, 뉴질랜드는 2014년의 자료, 일본은 2012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수치는 방법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10.9. 2015년 자료 대신 캐나다는 2016년의 자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2014년의 자료,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은 2013년의 자료, 스페인은 2012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렇듯 국가마다 소득 및 자산 자료의 조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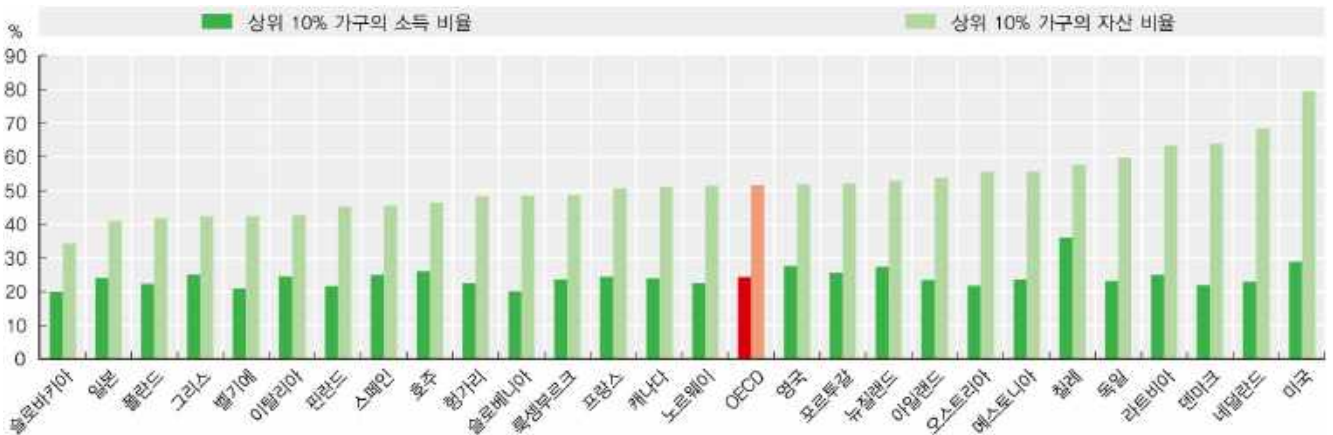
10.7. 정부의 이전지출과 조세부과 전후의 소득 불평등 차이 (2016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6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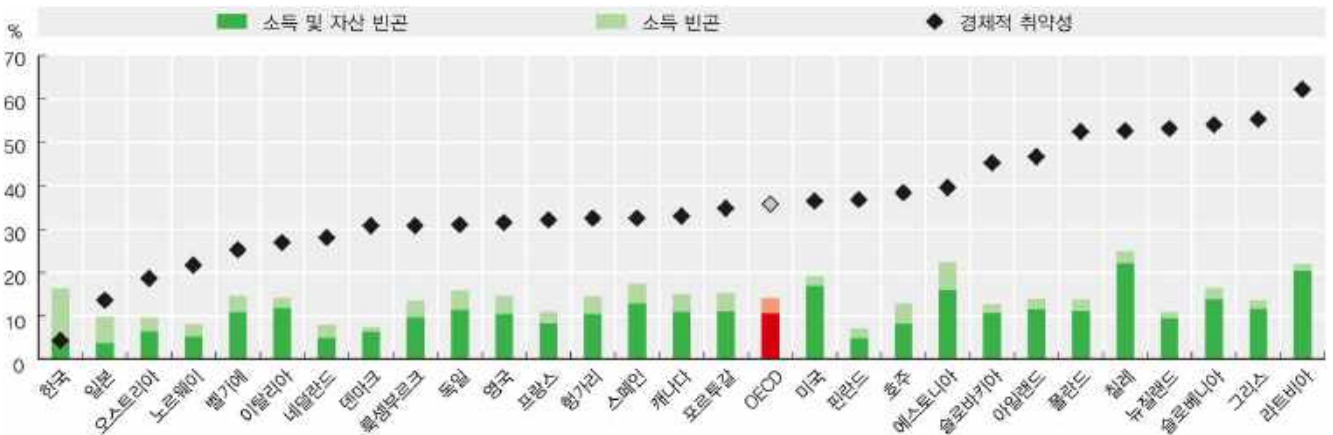
10.8. 상위 10% 가구의 소득과 자산의 분배 수준 (2015년)



출처: Balestra and Tonkin (2018), based on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an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270>

10.9.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경험한 개인의 비율 (2015년 또는 최신 자료)



출처: Balestra and Tonkin (2018), based on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289>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체제의 초석이다. 법의 지배는 모든 개인과 정부를 포함한 조직에 동일한 규칙, 절차,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개념은 공정한 대우와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사법 제도의 예측가능성, 신뢰성, 책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법의 지배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공공질서와 안전, 부패의 통제, 열린 정부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국제 평화와 질서의 유지, 경제의 발전, 공공재와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인 굿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는 법의 지배를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의 지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보편적인 원칙이 포함된다. 첫째, 정부와 민간 행위자들은 법률에 의해 책임을 진다. 둘째, 법은 명확해야 하고, 공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또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과 사적재산의 안전, 특정한 핵심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법의 제정, 관리와 집행 과정은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넷째, 재판은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독립적인 대표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접근가능성이 있는 중립적 인사에 의해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WJP, 2019).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는 법의 지배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8가지 핵심 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핵심 지수 중 정부권력의 제한, 기본권의 보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핵심 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법치주의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정부권력의 제한 지수는 “법에 의해 통치 기구가 구속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해당 지수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모든 헌법적, 제도적 수단들을 측정한다. 또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언론 등의 비정부기구에서 정부의 권력을 견제·감독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WJP, 2019). 정부권력의 제한 지수에 대한 OECD 국가의 평균 점수는 0.75이다. 특히 덴마크(0.95), 노르웨이(0.94), 핀란드(0.92), 스웨덴(0.87)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서 정부권력의 제한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멕시코(0.47), 터키(0.29)는 0.5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OECD 국가와 기타 주요 경제국 중 코스타리카(0.78)가 유일하게 OECD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국가 행위를 감독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 보호 지수는 국제법 하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 등의 존중과 보장 정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적법 절차가 갖춰졌는지를 측정한다. 기본권 보호 지수에 대한 OECD 국가의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0.76으로 정부권력의 제한 지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기본권 보호 지수의 값은 0.90 이상인 반면,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0.60이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부권력의 제한과 기본권 보호는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한 국가가 기본권 또한 보장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 자료는 법의 지배를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국가 기관과 자주 교류하는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계 126개 국가에서는 1,000명의 일반 국민과 평균 30명의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모든 국가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자료는 OECD 28개국과 회원 후보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전략적 협력국(6개국)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핵심 지수에 활용되는 개별 변수는 코드화하여 0 (가장 낮음)과 1 (가장 높음)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normalized)한다. 핵심 지수에 활용되는 개별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research-and-data/wjp-rule-law-index-2019/methodology>)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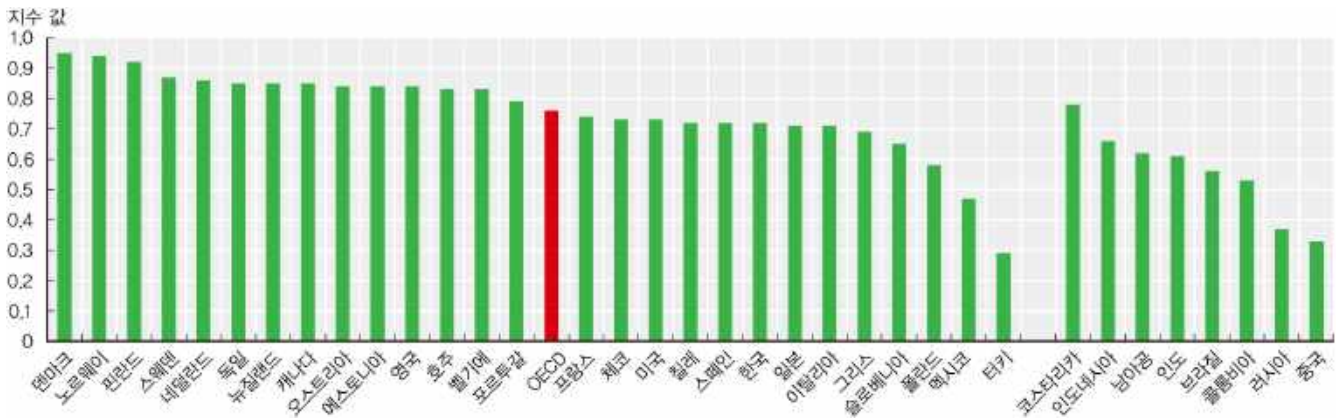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5), *Costa Rica: Good Governance, from Process to Result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9789264246997-en>.
- World Justice Project (2019), *Rule of Law Index 2019*,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ROLI-2019-Single%20Page%20View-Reduced_0.pdf.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헝가리의 자료는 표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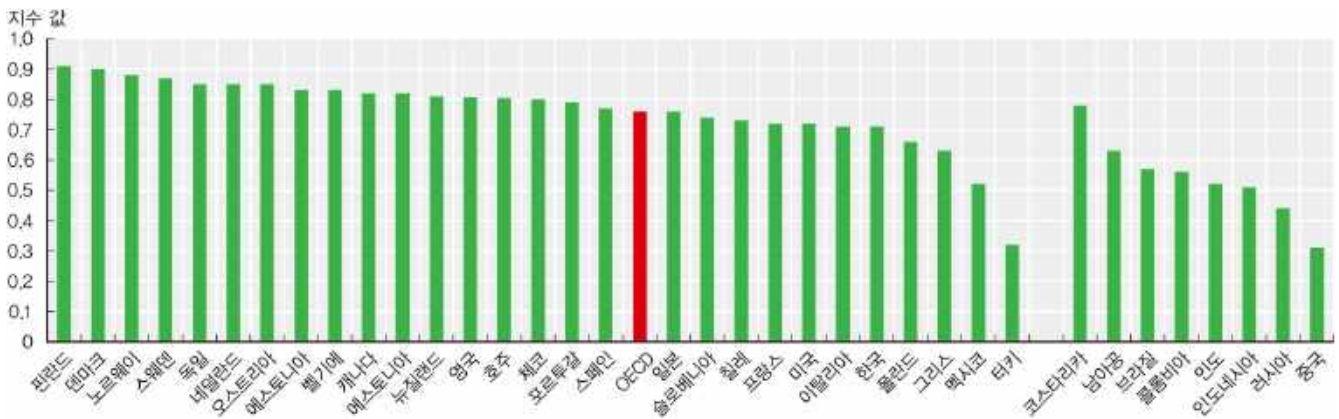
10.10. 정부권력의 제한 지수 (2019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19), Rule of Law Index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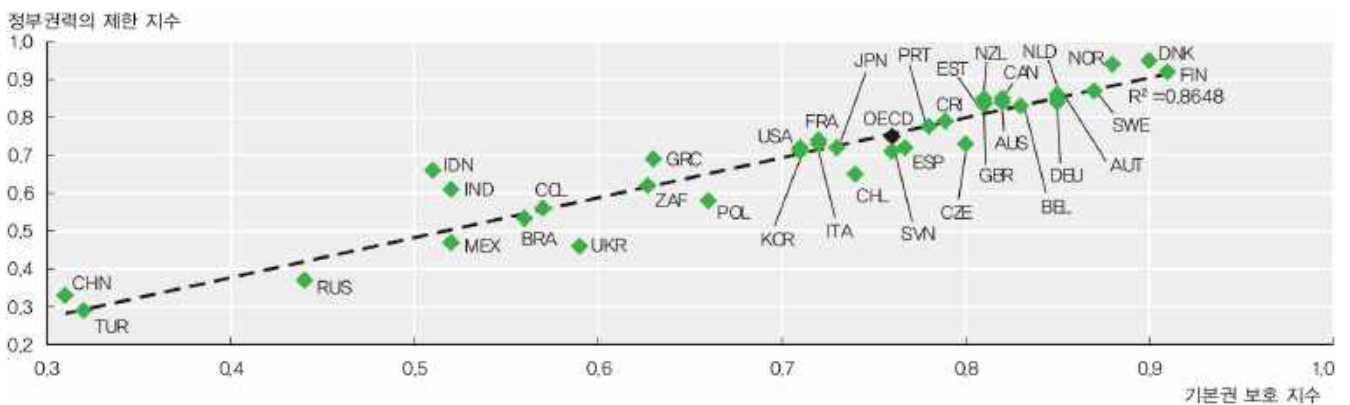
10.11. 기본권 보호 지수 (2019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19), Rule of Law Index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327>

10.12. 정부권력의 제한과 기본권 보호의 상관관계 (2019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19), Rule of Law Index 2019.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403>

10. 핵심 정부 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효율성은 투입(또는 생산요소)과 산출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정부 또는 공공부문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세 행정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적시에 징수함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average length of stay; ALOS)가 주요 지표에 해당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을수록 치료에 드는 비용과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어진 투입으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보다 많은 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 환자의 안정과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보건 성과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병원 재원일수는 7.5일이다.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짧은 국가는 터키(4.1일)인 반면, 가장 긴 국가는 한국(18.5일)이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평균 재원일수는 약 1일 정도 감소했으나, 네덜란드(-5.8일), 핀란드(-4.5일), 뉴질랜드(-3.3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2006-2017년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OECD 국가들은 의료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동시에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이 자택에서 후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 퇴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병상 수를 감소하고, 인체에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최소침습수술(less invasive surgical procedures)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3.6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 10년간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는 노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들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세금의 징수는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세금의 징수 과정은 세금 시스템 등록, 신고 및 납부, 신고내용의 검증, 징수, 조세쟁송(불복)의 단계로 진행된다. 조세행정의 업무와 성과가 중요해지는 단계는 세금의 부과발행, 환급, 통지 등이 포함되는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과정이다. 특히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비용의 지불이 가능하므로 이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세 행정은 세금의 신고 및 납부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적시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전자 신고·납부, 사전 신고, 기타 수단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17년 OECD 국가의 기한 내 개인소득세 신고율은 평균 87.9%이다.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기한 내 개인소득세 신고율이 100%를 기록한 반면, 신고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25%)이다. 멕시코는 최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사전신고서 자동기입 프로그램, 납부세액 자동계산 시스템, 세금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OECD, 2019). 2017년 OECD 국가의 기한 내 법인세 신고율은 평균 81.9%로 개인소득세 신고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업의 연말 재무보고 준비의 지연, 법인 시스템의 복잡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 신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고, 개인소득세 신고율과 동일한 100%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의 기업은 납세자로 등록하여 납세자 식별 번호를 획득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세금 납부 과정이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average length of stay; ALOS)는 환자가 병원에서 보내는 날의 평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해 병원에서 모든 환자가 머문 총 날짜 수를 입원 또는 퇴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일 입원 및 퇴원은 제외한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PIT)는 개인의 순소득(총소득 - 소득 공제)과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CIT)는 기업의 순이익(총소득 - 소득 공제)과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기한 내 신고율은 기한 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 총세금의 건수 중 실제 기한 내 신고된 세금의 건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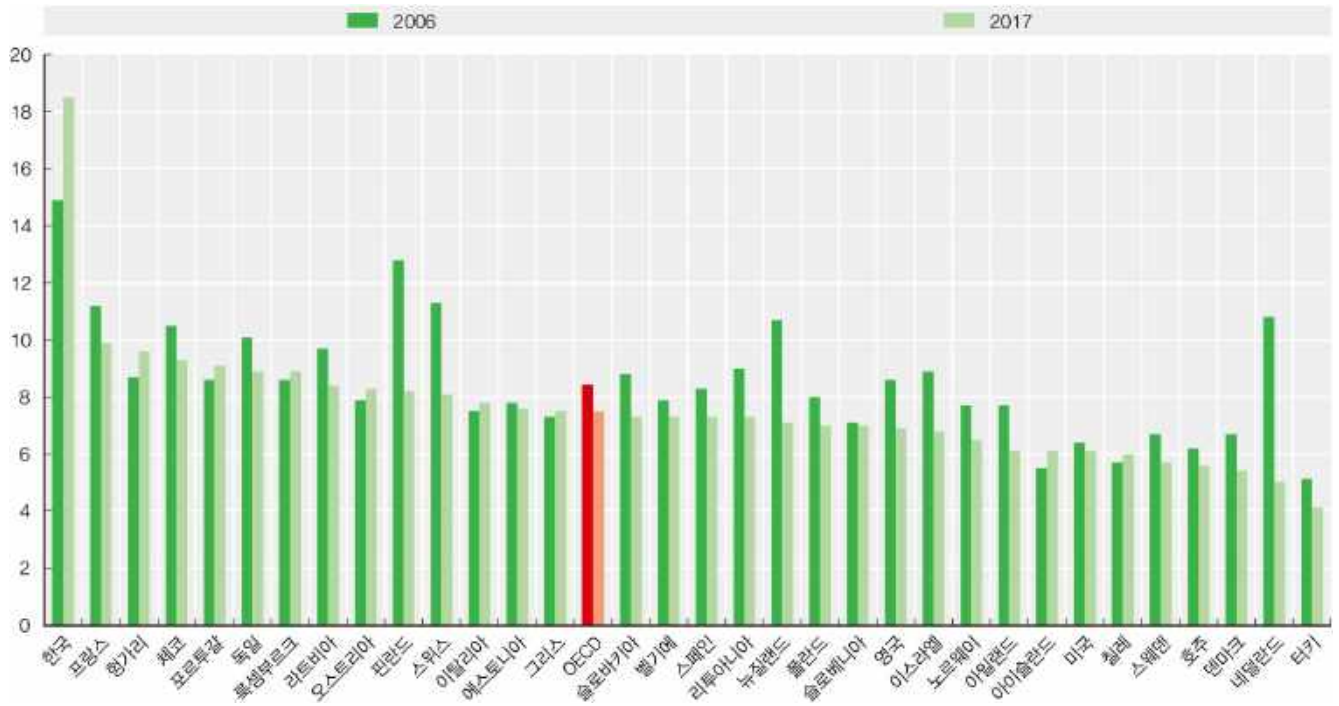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9), *Tax Administration 2019: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4d162b6-en>.

그림 설명

- 10.13. 2017년 자료 대신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은 2016년의 자료, 그리스는 2013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은 2006년 자료 대신 200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본은 급성 치료의 대상인 중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10.13에 포함하지 않았다.
- 10.14: 헝가리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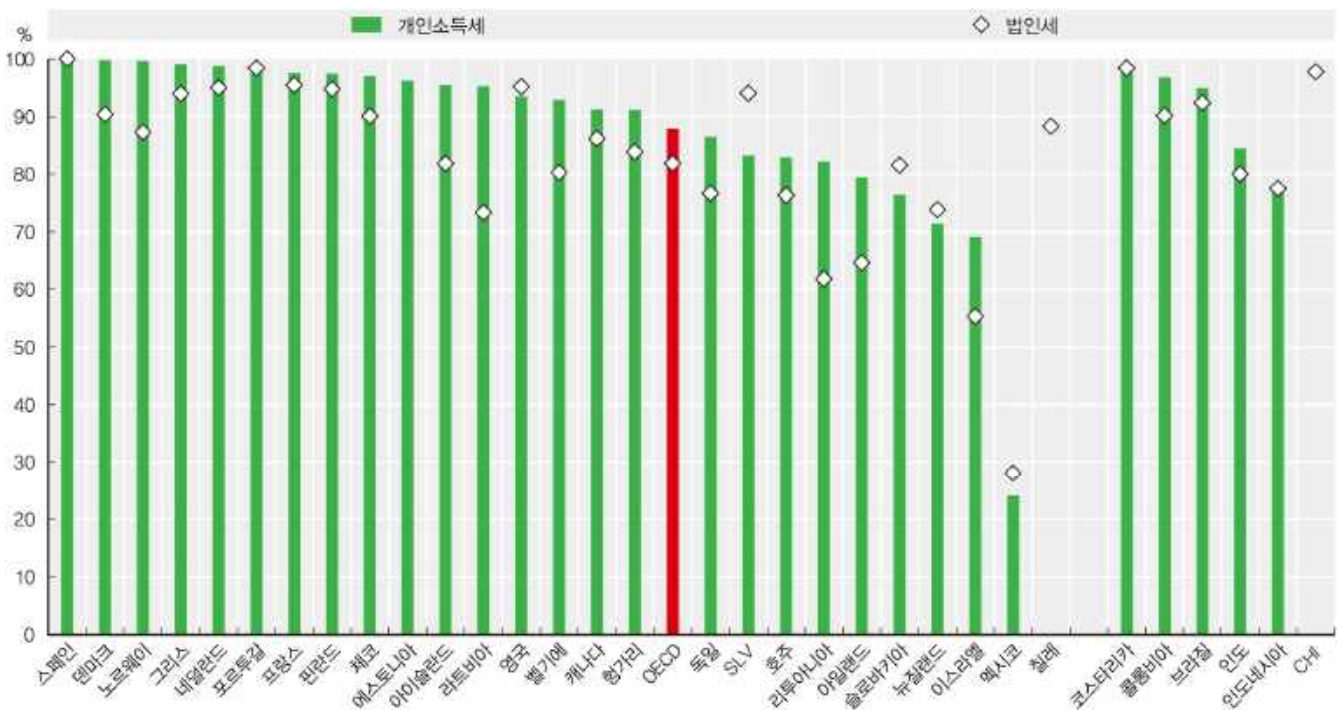
10.13.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 (2006년, 2017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365>

10.14.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기한 내 신고율 (2017년)



출처: OECD (2019), Tax Administration Series (database).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384>

10. 핵심 정부 성과

공공정책의 비용효과성

정부는 직접 또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비용효과성은 투입(인적 또는 물적)과 성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때 성과는 공공정책과 서비스 공급의 최종 결과를 의미하며, 보건 및 교육 분야의 성과에는 예를 들어, 건강 향상, 학습 수준의 개선, 재정적 순이익, 서비스 만족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

보건 분야의 지출효과성은 총 보건 지출(또는 공공보건 지출(총 보건 지출의 75%))과 출생 시 기대여명의 관계로 측정할 수 있다. 보건 지출의 규모가 클수록 비록 수확체감이 발생하나 기대여명은 증가한다. 국가 간 기대여명의 차이는 이외에도 정부 정책,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양식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은 국가의 보건 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높은 국가이다. 반면, 미국, 라트비아, 멕시코, 헝가리는 보건 지출 수준에 비해 기대여명이 낮다. 미국의 기대여명이 낮은 이유는 공공보건과 1차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낮은 비중, 보건시스템의 분절화, 건강과 관련된 국민들의 행태(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비만율), OECD 국가 중 높은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등의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2015~2017년 발생한 오피오이드 약물(opioid) 위기와 심장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가 둔화되면서 기대여명이 낮아졌다(Raleigh, 2019).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기대여명이 낮은 이유는 주로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행태적 특성(예: 흡연, 음주,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의 형성과 숙련의 개발은 교육 분야의 두 가지 핵심 목표로 개인의 평생소득과 고용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 분야의 비용효과성은 교육수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차이(예: 직장생활 동안의 순재정수입)로 측정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자와 중등교육 이수자의 순재정수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교육 이수자의 수입이 남성은 148,200달러, 여성은 77,300달러만큼 크다. 남성의 교육 수준(중등교육과 고등교육)별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룩셈부르크(373,300달러)이고, 여성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223,600달러)이다. 남성과 여성의 순재정수입 간의

차이는 여성의 낮은 소득과 고용률로 설명된다. 또한 이는 남녀간 고용 분야의 차이, 경력개발의 정도, 직업의 특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남녀 간의 임금격차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현재의 사망률이 유지될 경우,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총 보건지출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 소비지출(예: 경상지출)은 포함되나, 보건의료 인프라 등의 자본 투자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 보건지출에는 의료 서비스, 상품, 예방 프로그램 및 관리를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의 이수로 인한 총 비용과 편익은 중등교육 이수자와 고등교육 이수자의 차이를 반영한다. 총 비용에는 공교육비 지출(직접비용)과 포기세금(한 개인이 학업 대신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취업했을 경우 정부가 거둘 수 있었던 세수입; foregone taxes on earnings)이 포함된다. 총 편익에는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이 고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접비용은 총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등교육 이수자는 국제표준 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에 따라 전문 학사학위(ISCED 5), 학사학위(ISCED 6), 석사학위(ISCED 7), 박사학위(ISCED 8) 과정을 이수한 자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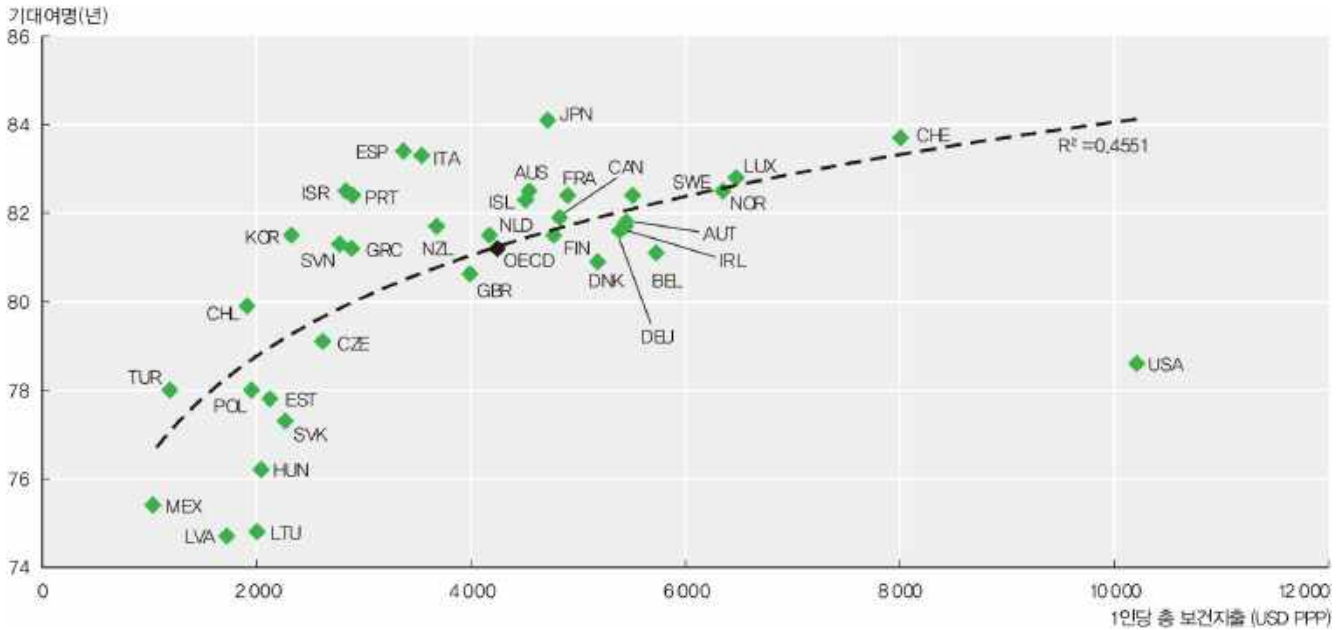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8d7880d-en>.
-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 Raleigh, V. (2019), "Trends in life expectancy in EU and other OECD countries: Why are improvements slowing?",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0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23159ab-en>.

그림 설명

-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10.15. 2017년 1인당 총 보건지출 자료에는 경상지출만 포함된다.
- 10.16. 중등교육의 이수자의 순재정수입과 비교한 고등교육의 이수자의 순재정수입을 나타낸다. 2016년 자료 대신 체코,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는 2015년 자료, 네덜란드는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0.15. 출생 시 기대여명과 1인당 총 보건지출 (2017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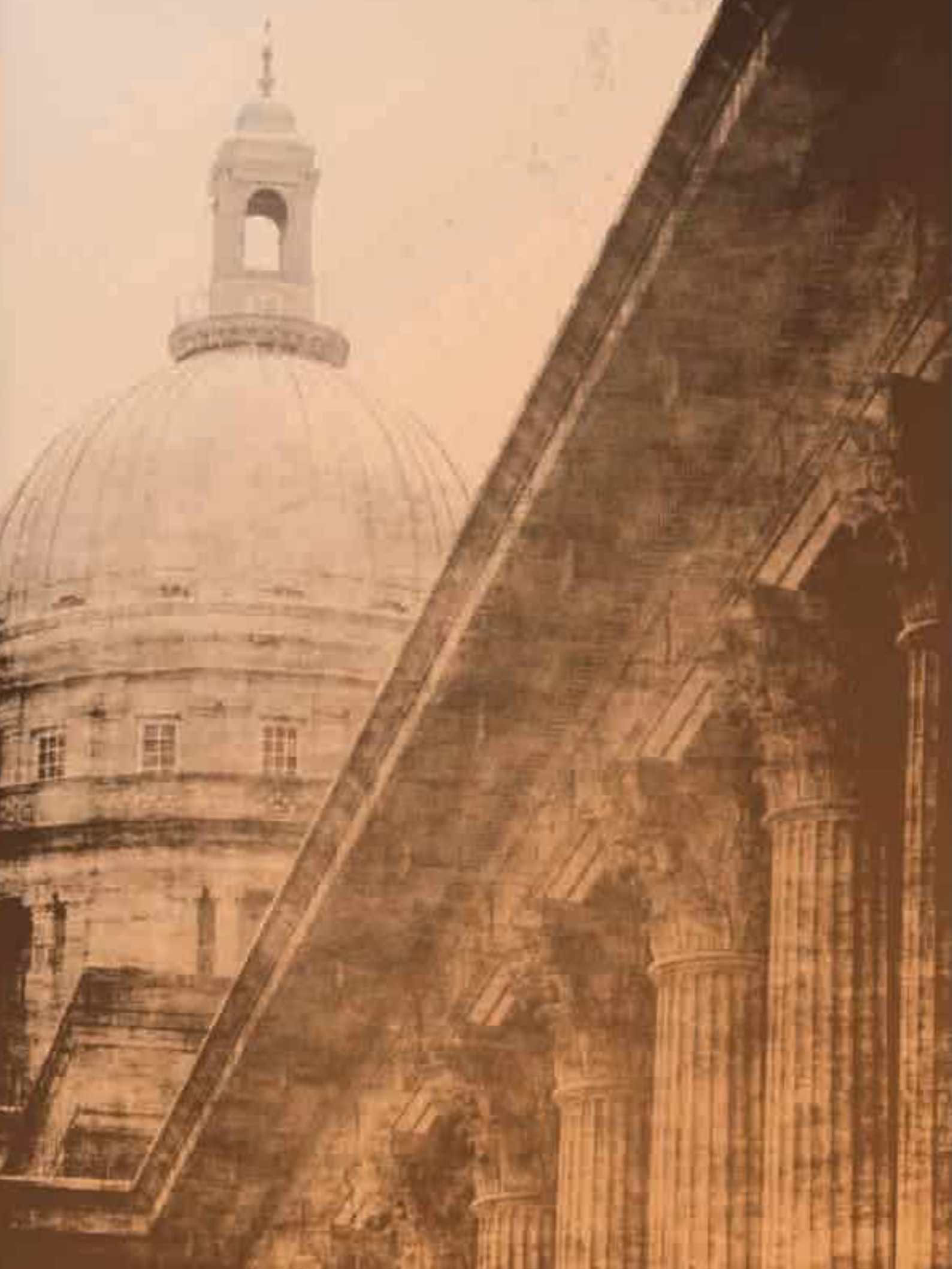
10.16. 고등교육을 이수한 남성/여성의 공적 순현재가치 (2016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주: 중등교육 이수로 인한 순현재수입과의 비교(GDP에 대한 미국 달러 기준 PPP 환산액), 미래의 비용과 편익은 2%의 할인율 적용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422>





11. 대시민서비스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공공서비스와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 만족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리적 접근성

교육에 대한 재정적 접근성

법률 및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환자의 수요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대응성

특별한 수요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

보건의료의 질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 형평성

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11. 대시민서비스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제11장은 OECD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을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대시민서비스 접근성, 대응성, 질을 평가하였다. 특히 교육, 보건, 사법 등 특정 분야의 대시민서비스 성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성과표는 이를 요약한 것이다. 대시민서비스 성과표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적·개인적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국가별 순위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대시민서비스 성과표는 측정 단위와 근본적인 현상에 있어 다양한 지표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측정된다.

대시민서비스 성과표는 2017년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정부(2017 Government at a Glance)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OECD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제별로 각각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의 선정기준은 1) 적절성(예: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는 지표인가), 2) 정책 관련성, 3) 데이터의 가용성 및 범위, 4) 데이터 해석가능성(예: 자료 값이 성과의 높고 낮음을 의미할 것)으로 구성된다.

OECD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은 각 분야별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측정 기준이 다른 이유(즉, 교육의 접근성은 학교 입학률, 보건의료의 접근성은 보건의료의 적용 범위로 측정)를 보여준다. 성과표의 측정은 2017년 한 눈에 보는 정부에 기초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2017년판에서 업데이트 된 자료만 표시하였다.

성과표의 해석

각각의 성과표는 분석 틀의 한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서비스(교육, 보건, 사법)를 비교한다. “대응성”은 비교가능한 국가별 데이터가 부족하여 성과표에서 제외되었다. OECD 국가는 각 지표의 성과에 따라 1) 상위 3분위(녹색), 2) 중위 3분위(주황색), 3) 하위 3분위(빨간색)로 구분된다.

또한 성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별 순위를 측정하였다(성과가 가장 높은 국가가 1위). 여러 국가의 지표 값이 동일한 경우 해당 국가들은 동일한 순위로 측정된다.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화살표는 각 국가별 성과의 절댓값의 변화를 보여주며 개선(↑), 감소(↓), 유지(→)로 표시하였다. 성과표의 마지막 행에는 비교를 위한 기준 연도(base year, reference year)를 모두 표시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보험 또는 공공보험 제도를 통해 보편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상위 3분위 국가들의 의료보험 보장범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3년 그리스는 금융위기의 결과로 전체 인구의 약 30%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는 2016년 보건의료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헝가리는 보건부가 해체되는 등 일련의 개혁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OECD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

접근성	대응성	질
지불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 보장성 • 미충족 의료 • 가계 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 사교육비 지출 (초등교육~고등교육) • 4세 아동 취학률 • 고등교육 최초 입학률 • 민사사법 제도의 접근성 및 지불가능성 	공손함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만큼 진료 또는 치료 과정의 결정에 참여한 환자의 비율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심장병) • 사망률 - 뇌혈관질환(뇌졸중) •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 •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 •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 국제임기능력평가 •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 •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지리적 근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역(TL2)의 의사 밀도 	특별한 교육 수요의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직업이 없는 18세-24세 조기 중퇴자의 비율 • 중등교육 이하의 특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의 부족을 경험한 학교 • 중등교육 이하 교육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 수준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학생 중 읽기 및 쓰기 능력을 보유한 학생의 비율이 75% 이상인 학교의 국제임기능력평가 점수 •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학생의 비율과 국제임기능력평가 점수
정보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간 분쟁해결조치 및 법률자문을 받은 사람의 비율 •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 •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접근 가능한, 공정한, 효과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존재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 진료 예약을 위해 2달 이상을 대기한 환자의 비율 • 입원 후 이를 이내에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 • 민사, 상사, 행정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민사, 상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1심법원) • 행정 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최고법원) 	보호/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

주: 성과표에 포함되는 지표는 이탤릭체(italics)로 표시

보장범위가 축소(2011년 보편적 보장에서 2017년 94%로 변경)되었다. 멕시코는 2004년 보편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세구로 포플라르(Seguro Popular)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도입하여 보건의료의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는 보장범위가 90%를 달성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 정도는 OECD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가구의 최종 지출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비율만으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위스는 본인부담액의 비중이 높지만,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의 비율은 낮다. 반면, 슬로베니아와 영국은 본인부담액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의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진료에 긴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은 학령기의 아이들을 위한 의무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공의 부담비율과 그 성과와의 관계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교육비 지출 중 공공부담의 비율은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의 접근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다. 벨기에는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의 전체 교육지출에 대한 민간부담의 비율이 낮지만, 3~4세 아동의 유아교육 취학률과 고등교육의 최초 입학률은 높은 국가이다. 반면, 미국은 전체 교육예산 중 민간부담 비율(정부 이전지출 이전, 이후에 모두 해당)이 높지만, 3~4세 아동의 유아교육 취학률과 고등교육의 최초 입학률은 낮은 국가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 또는 민간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이전지출로 인해 민간부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은 비용부담의 주체가 공공, 민간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4세 아동에 대한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유아교육 취학률이 100%에 해당한다. 칠레는 2016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2020년 대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2017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입학률을 달성하였다.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분쟁해결 방식의 존재, 사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지불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 따르면, 민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인식, 공정한 대우, 재정적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이다. 반면, 멕시코, 영국, 미국은 시민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ADR)은 법정의 외부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전문가 설문에서는 중재의 공정성, 대안적 분쟁해결의 비용과 적시성, 상사 사건의

합의 이행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국가는 일본, 한국, 노르웨이, 헝가리, 멕시코인 반면, 접근성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

공공서비스 공급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예를 들어, 보건 시스템은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사법 시스템은 법치주의와 인권,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대시민서비스 성과표의 지표는 예방을 포함한 보건 의료 정책의 질을 평가한다. 따라서 본 성과표의 지표는 보건 의료의 질을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예: 예방 가능한 입원율(avoidable hospital admission), 산과적 외상 obstetric trauma)에 한정된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성과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대시민 성과표에서는 성과지표로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자가관리 행위(예: 건강검진 일정 준수)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하의 ‘보건 의료의 질’에서 다루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흡연, 식습관 등 개인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인 심장마비, 뇌졸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전략은 이러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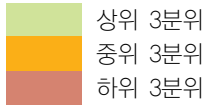
스페인인 심장마비, 뇌졸중, 유방암과 관련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이외의 OECD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하나 이상의 질병과 관련된 사망률은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사망률이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터키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은 반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일반시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법 집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에는 불만해소를 위한 개인적 폭력행사의 가능성, 재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법의 효과적 집행 등의 질문이 포함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전반적인 사법제도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이다. 반면, 그리스, 멕시코, 터키는 법의 효과적 집행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일부 국가들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우수한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사람들이 불만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행사를 행사하는 정도는 낮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크고 법의 효과적인 집행 수준도 낮다.

11. 대시민서비스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성과표 1.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국가	보건의료						교육					사법				
	재정적 접근성						교육 접근성					사법부 접근성				
	보건의료 보장범위		미충족 의료		가구 소비지출내의 환자 부담 의료 비용		사교육비 지출 (초등교육~고등교육)		4세 아동 취학률		고등교육 최초 입학률	민사사법 제도의 접근성 및 지불가능성		접근 가능한, 공정한, 효과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존재		
호주	1	→	해당없음		16	↑	33	↓	24	↑	해당없음	20	↑	9	↓	
오스트리아	2	→	1	→	30	↓	6	→	18	↑	13	10	↑	20	↑	
벨기에	4	↓	9	↑	25	→	7	↓	2	→	9	6	↑	15	↑	
캐나다	1	→	해당없음		13	↓	26	→	해당없음		해당없음	23	↑	16	↓	
칠레	7	↓	해당없음		31	→	34	↑	26		2	13	↑	21	↑	
체코	1	→	3	↑	5	↓	17	→	23	↑	17	18	↓	11	↑	
덴마크	1	→	7	↑	17	→	해당없음		3	→	4	4	↑	4	→	
에스토니아	6	↑	20	↓	19	↓	9	↓	20		해당없음	7	↑	8	↑	
핀란드	1	→	17	↓	24	↓	1	→	28	↑	21	17	↑	19	→	
프랑스	2	→	6	↑	3	↑	16	→	1	→	해당없음	15	↑	7	↑	
독일	1	↑	3	↑	11	→	18	→	13	→	20	2	↑	5	↓	
그리스	1	↑	19	↑	32	→	8		30	↑	26	16	↑	23	↓	
헝가리	7	↓	5	↑	28	↑	21	↑	11	↑	27	24	↑	27	↓	
아이슬란드	1	→	14	↑	15	↑	5	↑	6	↑	16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일랜드	1	→	13	↑	12	↑	10	↓	1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스라엘	1	→	해당없음		18	↓	23	↑	4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탈리아	1	→	9	↑	21	↓	15	→	15	↓	24	22	→	25	→	
일본	1	→	해당없음		10	↓	29	→	12	↑	5	11	↑	2	↑	
한국	1	→	해당없음		34	↓	30	↑	7	↑	해당없음	19	↑	3	↓	
라트비아	1		18	↑	33	↓	11	↑	1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리투아니아	8		8	↑	20	→	14	→	25		8	해당없음		해당없음		
룩셈부르크	해당없음		3	↑	2	→	3	→	14	↓	28	해당없음		해당없음		
멕시코	11	↓	해당없음		23	↑	25	↓	21	↑	23	28	↓	28	↓	
네덜란드	2	↑	2	↑	8	↑	22	→	9	↓	14	1	↑	6	→	
뉴질랜드	1	→	해당없음		4	↓	28	→	10	↑	1	8	↑	12	→	
노르웨이	1	→	7	↓	22	↓	2	↓	8	→	12	9	↓	1	↑	
폴란드	9	↑	16	↑	9	→	13	→	27	↑	7	21	↑	13	↑	
포르투갈	1	→	10	↑	29	→	20	↑	19	↑	19	14	↑	10	↑	
슬로바키아	5	→	11	↓	6	↑	19	→	29	↑	22	해당없음		해당없음		
슬로베니아	1	→	15	↓	1	→	12	→	22		11	12	↑	22	↓	
스페인	2	→	2	↑	26	→	24	↓	5	→	6	5	↑	14	↑	
스웨덴	1	→	8	↑	27	→	4	→	16	→	18	3	↑	26	↓	
스위스	1	→	4	↑	35	↓	해당없음		32	↑	3	해당없음		해당없음		
터키	3	→	12	↑	해당없음		27	↓	33	↑	해당없음	25	↑	24	↓	
영국	1	→	15	↓	7	→	31	↓	1	↑	10	26	↓	17	↓	
미국	10	↑	해당없음		14	↑	32	→	31	→	25	27	↓	18	↓	
연도	2017	2013	2018	2014	2017	2013	2016	2012	2017	2012	2017	2019	2015	2019	2015	

주: 국가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였다. 성과표에 기입된 숫자는 각 국가의 순위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 범위에 따라 상위 3분위 국가(보건의료 보장 범위가 95%~100%), 중위 3분위 국가(90%~95%), 하위 3분위 국가(90% 이하)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 보장 범위에 관한 자료에 대해 스페인과 일본은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비율에 관한 자료에 대해 칠레는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의 지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 교육예산 중 민간부담의 비율이 높다. 교육 지출에 대한 민간부담의 자료에 대해 그리스는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지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rresponding sections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2019, Eurostat 2019 OECD Education Statistics 2019,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9.

성과표 2. 서비스 전달 및 정책의 질

상위 3분위
중위 3분위
하위 3분위

국가	보건의료						사법					
	사망률 - 급성심근경색 (심장병)		사망률 - 뇌혈관질환 (뇌졸중)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	
호주	14	↑	10	↑	9	↓	10	↓	4	↓	13	↓
오스트리아	24	↑	6	↑	18	↓	8	↓	9	→	9	↑
벨기에	9	↑	12	↑	24	↓	9	↑	11	↑	17	↓
캐나다	17	↑	3	↑	12	↓	13	→	7	↑	7	↑
칠레	31	↑	30	↓	8	↑	19	↑	21	↓	27	↓
체코	19	↑	26	↑	14	↓	18	↓	17	↑	6	→
덴마크	5	↑	18	↑	27	↓	4	↑	2	→	2	→
에스토니아	8	↑	19	↑	11	↓	16	↑	10	→	10	↑
핀란드	25	↑	22	↑	9	↓	6	→	8	↑	5	→
프랑스	2	↑	2	↑	21	↓	11	↑	15	↑	22	↑
독일	23	↑	13	↑	28	↓	5	↑	3	↑	12	↑
그리스	22	↑	29	↑	19	↓	25	↓	23	↓	26	↓
헝가리	28	↑	31	↑	30	↓	26	↓	27	↓	8	↑
아이슬란드	18	↑	7	↑	28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일랜드	29	↑	17	↑	29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스라엘	3	↑	4	↑	23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탈리아	8	↑	24	↑	17	↓	28	↓	20	↓	25	↑
일본	1	↑	13	↑	3	↑	12	↑	16	↑	3	↓
한국	6	↑	20	↑	1	↑	7	↓	18	↓	20	↓
라트비아	27	↑	35	↑	26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리투아니아	11	↑	34	↑	13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룩셈부르크	10	↑	5	↑	22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멕시코	33	↓	21	↑	4	↑	27	→	26	↓	28	↓
네덜란드	7	↑	16	↑	26	↓	3	→	6	↓	18	→
뉴질랜드	30	↑	23	↑	16	↓	15	↓	12	↑	11	↑
노르웨이	20	↑	9	↑	6	↓	2	↑	1	↓	4	↑
폴란드	12	↑	25	↑	20	↑	20	↑	25	↓	19	↑
포르투갈	13	↑	28	↑	10	↓	24	↑	14	↑	24	↑
슬로바키아	26	↓	33	↓	25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슬로베니아	27	↓	27	↑	28	↓	21	↑	24	↓	14	↑
스페인	6	↑	8	↑	5	↓	23	↑	22	→	21	↑
스웨덴	21	↑	14	↑	7	↓	1	↑	5	→	1	↑
스위스	4	↑	1	↑	15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터키	32		32		2		22	↑	28	↓	23	↑
영국	15	↑	15	↑	22	↓	14	→	13	→	15	↑
미국	16	↑	11	↑	9	↓	17	↑	19	↓	16	→
연도	2017	2006	2017	2006	2017	2006	2019	2015	2019	2015	2019	2015

주: 국가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였다. 성과표에 기입된 숫자는 각 국가의 순위를 의미한다.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유방암 자료에 대해 호주,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은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 뉴질랜드와 슬로바키아는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2005년 자료 대신 호주는 2004년의 자료, 포르투갈은 200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지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rresponding sections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2019,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9

국공립 병원과 학교는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일선 공공부문의 기관 중 하나이다. 이에 비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사법은 삼권분립 제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정부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성과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갤럽 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는 정기적으로 건강, 교육, 사법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과의 상호 작용 경험, 응답 피로도, 응답 방식 등 여론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럽 여론 조사 데이터는 OECD 국가 간 시민 만족도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민 인식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보건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약간 증가하였다. 2018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에 대해 만족하는 시민은 전체 시민 중 70%로 나타났으며, 해당 비율은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시스템과 학교 서비스에 만족하는 시민의 평균 비율은 66%로 2007년 대비 3%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56%로 2007년에 비해 4%p 증가하였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네덜란드(90%), 벨기에(89%), 노르웨이(89%), 덴마크(88%), 스위스(88%)이다. 반면, 시민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40%), 라트비아(40%), 그리스(42%)로, 칠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 범위가 가장 낮은 국가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에스토니아(21%p), 리투아니아(19%p)이다. 반면, 시민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일본(-13%p), 프랑스(-10%p), 그리스(-10%p), 룩셈부르크(-10%p)이다.

학교 서비스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87%), 스위스(85%), 덴마크(84%), 핀란드(84%)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35%), 리투아니아(43%), 헝가리(48%)이다. 시민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네덜란드(16%p), 스위스(12%p), 이스라엘(12%p)이다. 터키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17%p).

사법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89%), 덴마크(87%), 스위스(82%)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24%), 라트비아(28%)이다. 사법 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경찰, 검찰 등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0.1 정부 신뢰(157쪽)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시민 만족도’ 자료는 갤럽 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 GWP)를 활용하였다. 갤럽 여론 조사는 각 국가별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sample)의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갤럽 여론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답 방식(response styles)은 설문지의 내용과는 관계 없이 응답자의 행태로 인해 응답이 결정되는 경향을 의미하며, 결과 값의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상 극단 값이나 중간 값을 선택하는 경향이 이에 해당한다.

응답 피로(respondent fatigue)는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 응답자들의 의욕과 흥미가 떨어질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데이터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보건의료/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당신이 살고있는 도시 혹은 지역의 보건의료/교육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과 이용 가능성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당신이 살고있는 국가의 사법 제도와 법원 서비스에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Murtin, F., et al. (2018), “Trust and its determinants: Evidence from the Trustlab experiment”,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8/02, OECD Publishing, Paris
- OECD/KDI (2018),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8992-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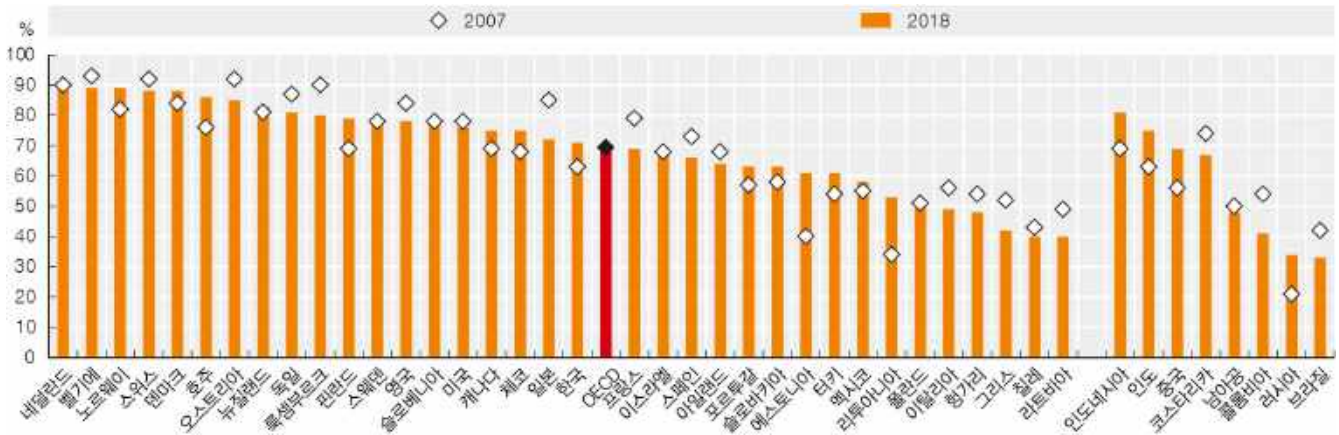
그림 설명

각 국가의 순위는 평균의 내림차순으로 결정된다. 2007년 자료 대신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2006년의 자료, 룩셈부르크는 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11.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7년 자료 대신 200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포함하지 않았다. OECD는 사법 시스템과 법원 서비스에 관한 자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4. 지방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부록 F의 제시된 온라인 주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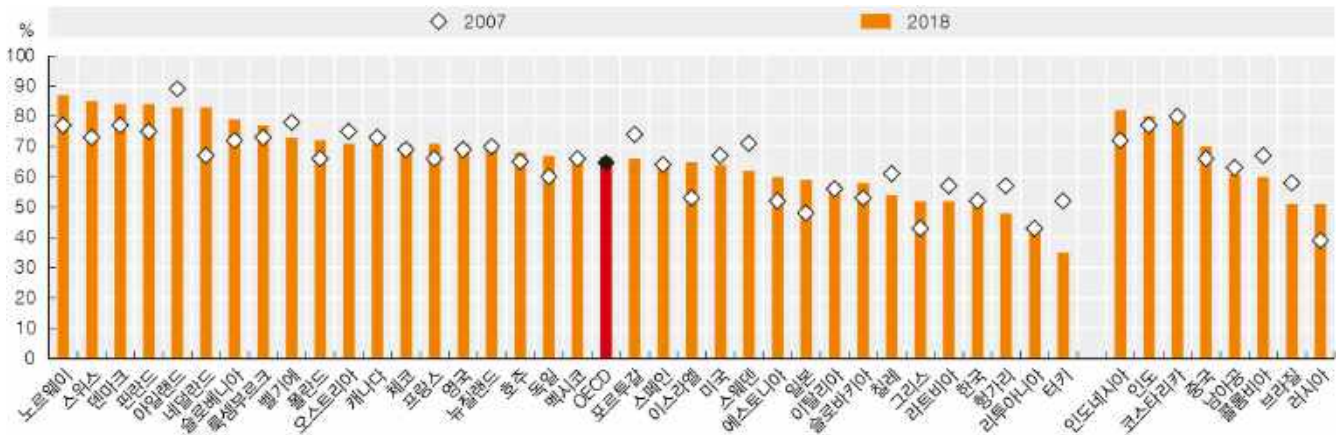
11.1.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시민 만족도 (2007년, 2018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18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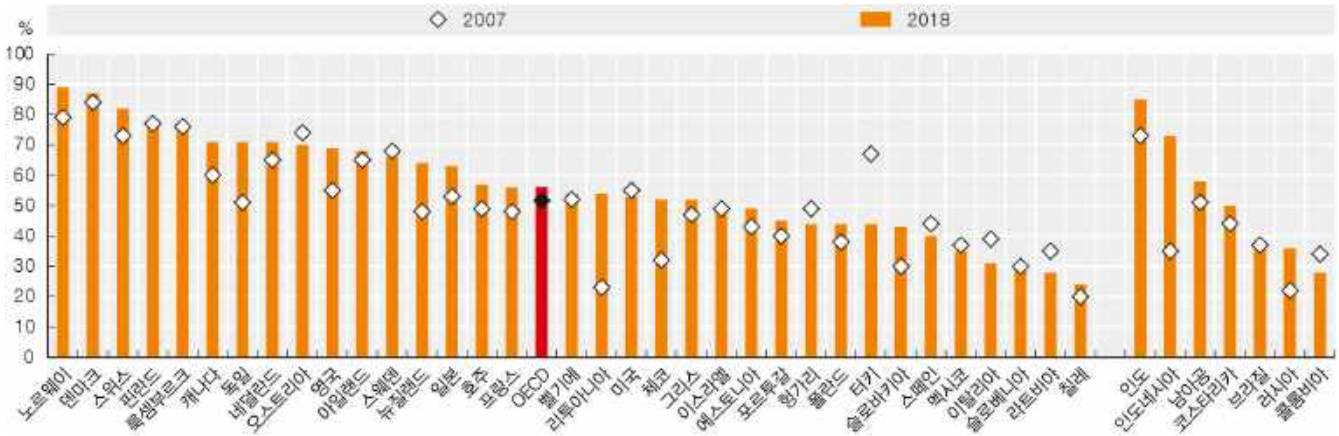
11.2. 교육 시스템과 학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2007년, 2018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18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460>

11.3. 사법 제도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



출처: Gallup World Poll 2018 (database)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479>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리적 접근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핵심 보건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보장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통 의사 상담, 병원 진료 서비스가 이에 포함된다. 국민보건서비스(NHS)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 보편적 건강보장이 적용된다. 그러나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또는 접근성(accessibility)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는 대부분 본인부담액(out of pocket (OOP) payments), 보건 서비스와의 거리, 예약대기시간과 관련이 있다.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이다. EU소득 및 생활여건에 관한 설문조사(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이유로 인해 건강 검진(medical examination)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2018년 OECD 회원국 중 유럽 국가 인구의 2.7%가 거리, 대기시간, 비용의 문제로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의 비율이 4.6%까지 증가하였다.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6.4%), 그리스(8.8%)이다. 보건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 라트비아, 터키, 벨기에이다.

2017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중 3%를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 해당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본인부담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와 한국이며, 해당 국가들에서는 전체 가구의 소득 중 6%를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와 비교할 때,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의 의료서비스 지출은 1/3미만의 수준이다.

정부의 정책은 가구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2013년 만성질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액을 낮추기 위한 정책과 민간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이후 본인부담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OECD and European Observatory, 2017a). 라트비아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본인부담금(co-payments) 면제, 의약품 보조를 포함한 안전망 및 사회 부문 개혁 프로그램(Safety Net and Social Sector Reform Programme)을 시행하여 2009-2011년 본인부담액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특정 환자 집단으로 한정하여, 본인부담액의 비중이 2009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다(OECD and European Observatory, 2017b).

의사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아진다(OECD, 2019). 전체 의사의 수, 지리적 분포는 OECD 국가마다 상이하다. 2017년 한국, 폴란드, 터키에서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active physician)의 수는 2명이며,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이보다 더 많은 활동의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활동의사의 분포가 국가의 수도(national capital)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자료는 EU에서 수행한 소득 및 생활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를 활용하였다. “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이유로 인해 건강 검진(medical examination)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문항에 거리, 대기시간,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고 답한 응답자 수를 측정하였다. 저소득층은 소득 하위 5분위 가구, 고소득층은 소득 상위 5분위 가구를 의미한다.

본인부담액(OOP payments)은 환자가 의료 또는 치료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의 소득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공공(또는 민간)건강보험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포함된다(co-payments).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의료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본인부담액에 포함한다.

의사의 수는 1년 동안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의료 및 진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 전문의(specialist)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자료에는 진료 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어 결과가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밀도(physician density)는 한 지역의 의사 수를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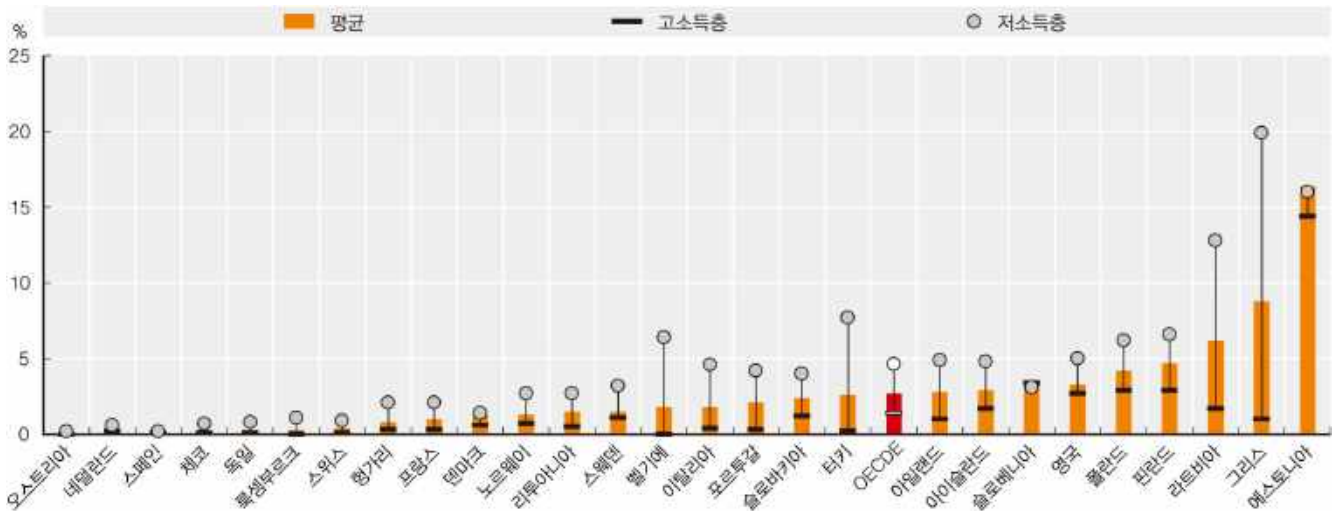
OECD/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17), *Slovak Republic: Country Health Profile 2017, State of Health in the EU*, OECD Publishing, Paris/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Brussels, <https://doi.org/10.1787/9789264283541-en>.

OECD/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17), *Latvia: Country Health Profile 2017, State of Health in the EU*, OECD Publishing, Paris/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Brussels, <https://doi.org/10.1787/9789264283466-en>.

그림 설명

- 11.5. 2018년 자료 대신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은 2017년의 자료, 아이슬란드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11.6. 오스트리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러시아는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칠레와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11.7. 2015년 자료 대신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미국, 뉴질랜드, 영국은 2010년 자료, 러시아는 2014년 자료, 중국은 2013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Territorial level 2(TL 2)는 도(道)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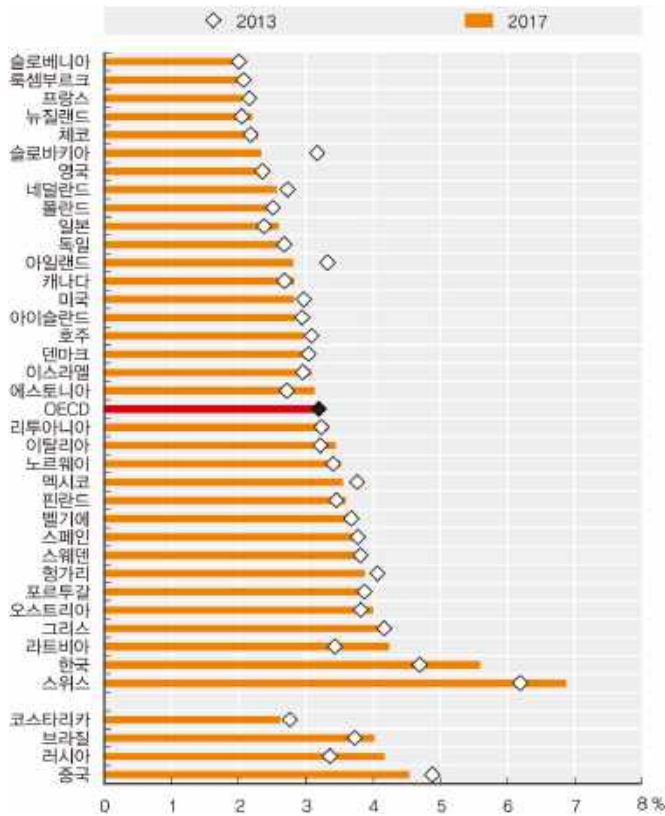
11.5. 소득 수준별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2017년)



출처: EU-SILC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498>

11.6. 가구의 최종 지출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비율 (2013년, 2017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9,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517>

11.7. 광역 지역(TL2)의 의사 밀도 (2015년 혹은 가장 최근 연도)



출처: OECD Statistics Database, 2019.

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Active physician)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536>

OECD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6세부터 16세까지의 교육을 의미한다(OECD, 2018).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 기관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재정, 선호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중등교육 이수율(특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는 tracking system을 운영하는 국가),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인지된 순편익, 장소(공간)의 이용가능성, 자금 지원 기회(예: 장학금, 학점교환 프로그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 OECD 국가의 3~4세 아동 취학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취학 전 교육(또는 유아교육)의 취학률은 3세 아동이 89%, 4세 아동이 79%로 나타났다.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헝가리는 3세 아동의 취학률이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완전한 취학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7년 4세 아동의 취학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16%p)와 폴란드(18%p)이다. 터키의 4세 아동의 취학률은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2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17%p).

전체 교육예산 중 민간부담 비율은 평균 1/3 미만에 해당한다. 2015년 초중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비율은 10% 미만의 수준인데 반해, 취학 전 교육은 18%, 고등교육은 31%로 높게 나타난다.

OECD국가 간 교육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예산의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초중등교육비가 전액 공공부담인 반면, 터키에서는 민간이 25%를 부담한다.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는 취학 전 교육비가 전액 공공부담인 반면, 일본에서는 민간이 50%를 부담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2016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에서는 고등교육 예산의 8%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반면, 칠레, 일본, 영국, 미국에서는 64%를 민간이 부담한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GDP 대비 1.8%로 이들 국가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매우 낮다.

대학(고등교육 기관)의 입학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중등교육 기관)를 졸업한 직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25세 전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약 50%인 반면, 칠레는 7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부 학생들은 25세 이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대학교의 입학에 결정할 수도 있다. 덴마크, 스위스의 고등교육 기관 입학률은 70%(유학생 제외)이지만, 25세 이하 입학률은 50%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 최초 입학률은 65%이고, 유학생을 제외하면 58%로 감소한다. 뉴질랜드의 고등교육 최초 입학률은 89%이지만, 유학생을 제외하면 61%로 크게 감소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 접근성’의 자료는 UNESCO, OECD, Eurostat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통계로부터 수집하였다. 민간부담 교육비에는 정부 이전지출의 포함 여부를 떠나 민간이 직접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교육 수준은 2011년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에 따라 구분하였다.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ISCED 0)에는 영유아발달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과 취학 전 교육(pre-primary; ISCED 02)이 포함된다. 유아교육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도 포함된다. 완전한 취학(full enrolment)이란, 특정 연령의 인구 중 적어도 90% 이상이 교육 기관에 입학했음을 의미한다. 특정 연령의 순입학률(net entry rate)은 특정 연령의 최초 입학자 수를 같은 연령의 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순입학률의 합계는 연령별 비율을 합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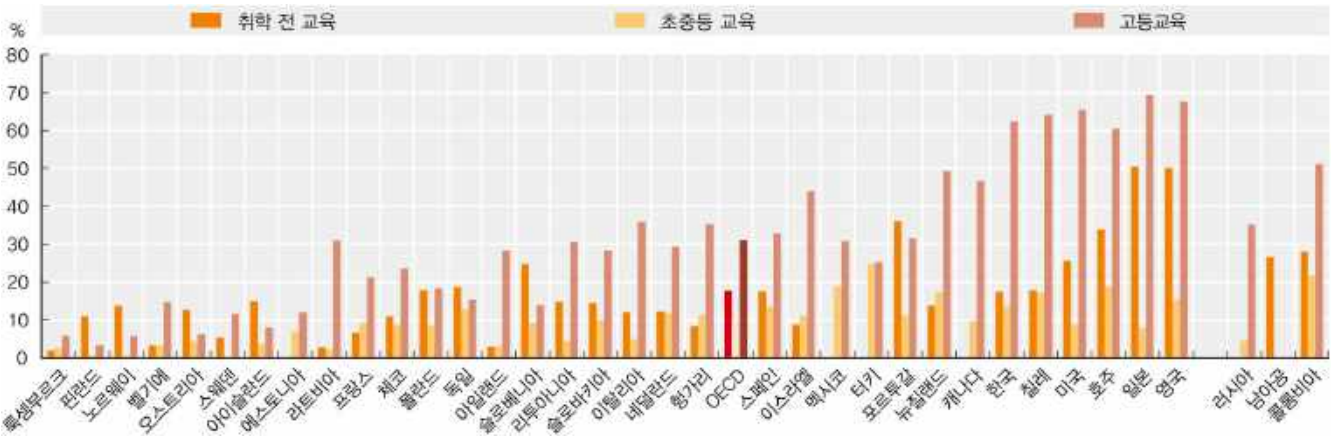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8d7880d-en>.
- OECD (2017),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9789264276116-en>

그림 설명

-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 11.8. 칠레, 콜롬비아는 2016년 자료 대신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캐나다는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에 취학 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을 포함한다. 아일랜드는 취학 전 교육에 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을 포함한다. 전체 교육예산 중 민간부담의 비율은 정부 이전지출 이후의 민간부담 비율을 의미한다.
- 11.9.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11.9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국가별 4세 아동의 취학률을 보여준다.
- 11.10.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라트비아,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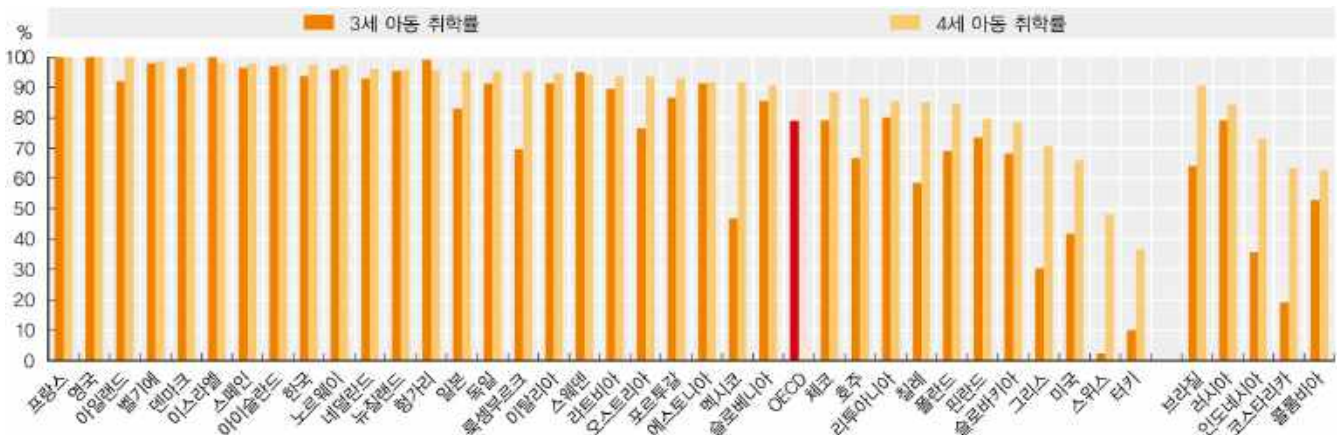
11.8. 전체 교육예산 중 민간부담 비율 (2016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주: 정부 이전지출 이후의 민간부담 비율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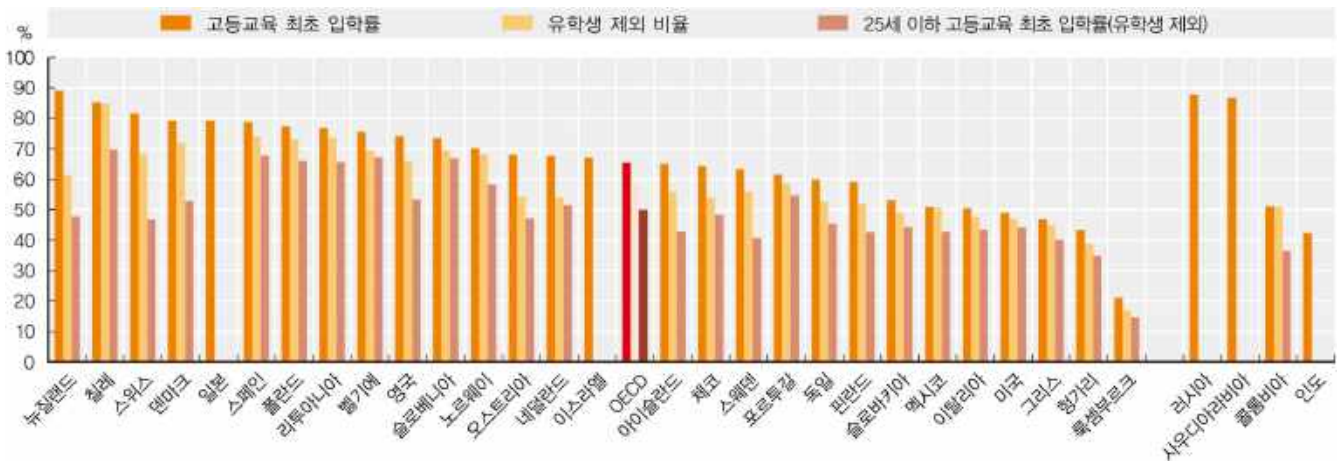
11.9. 3~4세 아동의 취학 전 교육 및 유아 교육 취학률 (2017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574>

11.10. 고등교육 최초 입학률 (2017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593>

11. 대시민서비스

법을 및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사법 접근성은 광범위한 법률 및 사법 서비스를 통해 법적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의 능력을 의미한다. 사법 접근성에는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공식적인 소송 대리(예: 법원), 대안적 분쟁해결, 강제집행 등이 포함된다(OECD, 2019). 최근 OECD는 국민들이 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법률을 이해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권한부여(legal empowerment)를 강조하고 있다(OECD, 2019). 법치주의는 사법의 공정성과 비차별 원칙을 요구한다. 사법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인구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소외될 수 있다.

법률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는 시민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분쟁해결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응답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문제를 경험했는지, 법적 도움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분쟁 해결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은 가구 조사에 법률 수요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수집하지는 않는다(OECD/Open Society Foundations, 2019). 2016년 이후,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전세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법 접근성 조사를 수행하므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졌다.

2018년 기준, 전체 응답자 중 지난 2년 동안 법적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 59%로 나타났다. 이중 32%는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았다.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람의 비율은 OECD 국가마다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법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 중 거의 절반이 법률 자문을 요청한 반면, 터키에서는 16%만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법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 중 법원, 경찰서, 관공서, 종교시설, 지역시설 등의 공식 메커니즘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스페인에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공식 메커니즘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 22%인 반면,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영국은 8% 미만에 불과하다.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았다(평균 5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해당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74%)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벨기에(39%)이다. OECD 국가 평균 30%의 응답자들이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의 부족, 거리, 두려움, 비용의 문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벨기에의 경우 40%, 칠레의 경우 18%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제3자를 통한 분쟁해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 28%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37%, 일본의 경우 19%가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문제의 중요도가 낮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 28%이며, 폴란드는 35%가 이와 같이 답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17년, 2018년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서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국가의 3대 도시 거주 인구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의 추출은 쿼터샘플링(quota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였고, 온라인과 대면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쟁(dispute)은 개인과 서비스 공급자, 정부, 고용인, 이웃, 가족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실, 경찰의 직권남용, 불공정한 해고, 토지의 경계분쟁, 이혼 등을 들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법원이나 제3자의 법적 개입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문항을 제시하였다.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의 중요도가 낮음,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낮음, 비용에 대한 두려움, 어디서 자문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제3자의 법적 개입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법적 절차가 길고 관료적이라는 인식, 결과의 두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9), *Equal Access to Justice for Inclusive Growth: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97f5b7f-en>.

OECD/Open Society Foundations (2019), *Legal Needs Surveys and Access to Justi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g2g9a36c-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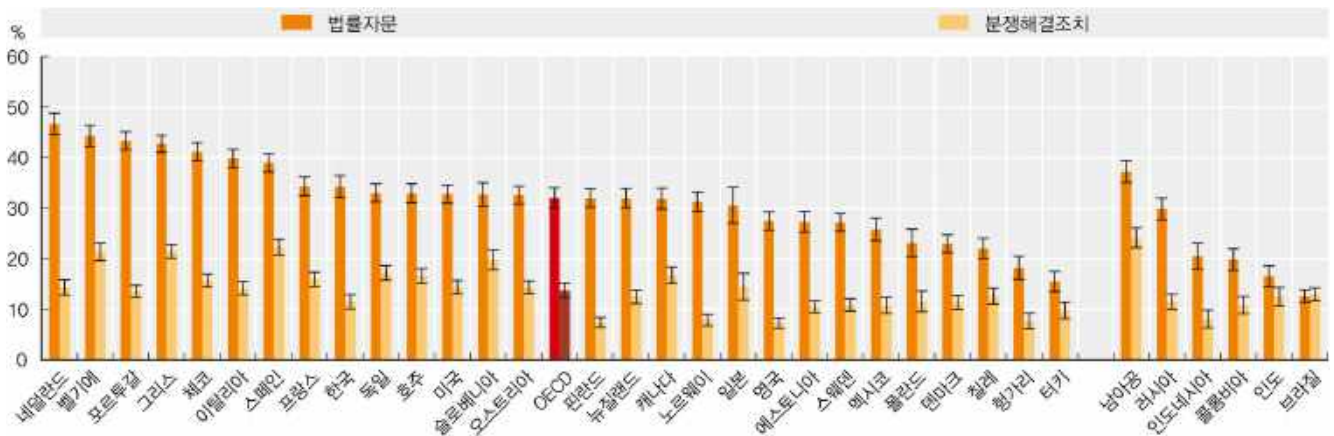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2018년 자료 대신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1.13. 2017년 설문조사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차 막대(error bar)는 표준 오차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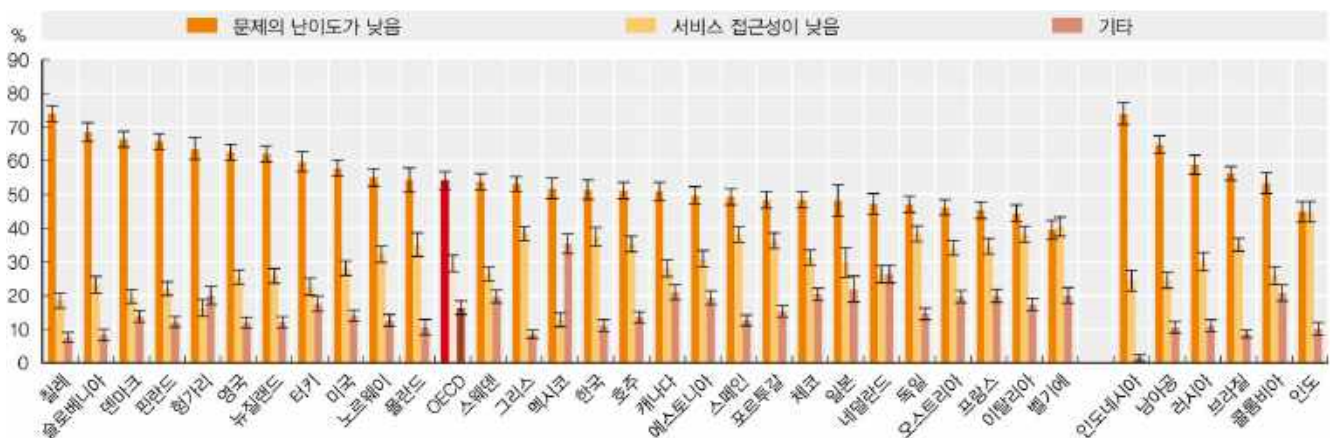
11.11. 지난 2년간 분쟁해결조치 및 법률자문을 받은 사람의 비율 (2018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18 General Population Poll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612>

11.12.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 (2018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18 General Population Poll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631>

11.13.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18 General Population Poll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650>

11. 대시민서비스

환자의 수요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대응성

OECD 국가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점차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환자의 경험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성과 체계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즉,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 환자를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환자 중심(patient-centered)의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보건 시스템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보고 데이터(patient-reported data)의 측정, 모니터링,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입원환자, 외래(통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조사(patient-reported experience measures; PREM)를 실시하고 있다. OECD는 2018년 환자보고지표조사(Patient-Reported Indicators Surveys; PaRIS)를 시작하였다. 또한 OECD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민간 재단인 Commonwealth Fund의 국제보건 정책조사(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를 통해 환자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은 환자경험조사(PREM)의 주요 조사항목 중 하나이다. 환자에게 치료 과정, 치료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히 자가 치료(self-care) 단계에서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를 의료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서 포함시킬 수 있다. 2017년 Commonwealth Fund의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노인 환자의 59%는 주치의와 함께 진료 및 치료 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73%, 뉴질랜드는 72%의 환자가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주치의와 협의했다고 답한 반면, 프랑스는 해당 비율이 26%에 불과하다.

병원의 긴 대기자 명단은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Siciliani, Borowitz and Moran, 2013), 환자의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7년 Commonwealth Fund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환자의 15%는 일반의에게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에 전문의 진료를 예약하기까지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응답자의 단 5%만이 진료 예약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답한 반면, 노르웨이(22%)와 캐나다(28%)는 해당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관절 골절(hip fracture) 이후 고관절의 복원 혹은 치환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기에 외과 수술을 진행할 경우, 환자 치료의 결과를 극대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19). 2017년 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 중 이틀 이내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OECD 평균 81%로 나타났으며, 해당

비율은 2012년 대비 3%p 증가하였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이틀 이내에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96%를 넘는 반면, 라트비아와 포르투갈은 해당 비율이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2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개선을 보인 국가로 2012년 68%에서 2017년 89%로 증가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입원 후 고관절 골절수술 실시율은 특정 연도에 대퇴골 상부 골절(upper femur fracture)을 진단받아 병원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 입원 후 2일 이내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11.3과 11.4의 자료는 OECD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Commonwealth Fund의 국제보건 정책조사(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에서 수집하였다. 2017년에는 3월-6월 전화 인터뷰(온라인으로 진행된 스위스 제외)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500-700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데이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ommonwealthfund.org)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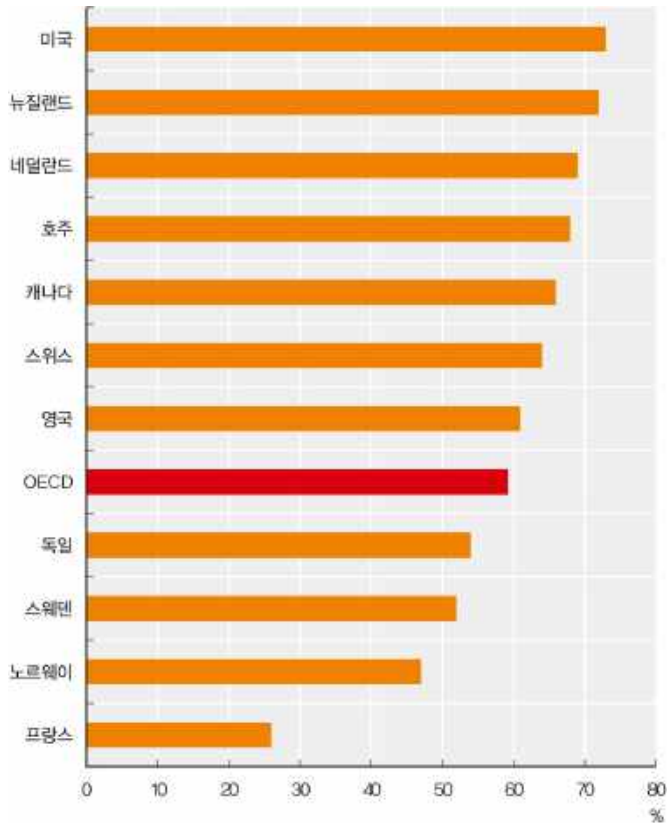
참고문헌

- Fujisawa, R. and N. Klazinga (2017), “Measuring patient experiences (PREMS): Progress made by the OECD and its member countries between 2006 and 2016”,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0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93a07d2-en>.
- OECD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Siciliani, L., M. Borowitz and V. Moran (eds.) (2013), *Waiting Time Policies in the Health Sector: What Works?*,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79080-en>.

그림 설명

- 11.14. 한 명 이상의 주치의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당신은 얼마나 자주 주치의 또는 의료진을 만나며,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진료 또는 치료 과정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 11.15. 지난 2년 동안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받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당신은 전문의를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거나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로 결정한 이후, 진료를 받기 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 11.16. 2012년 자료 대신 체코,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는 2016년의 자료,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코스타리카는 2015년의 자료, 벨기에, 노르웨이는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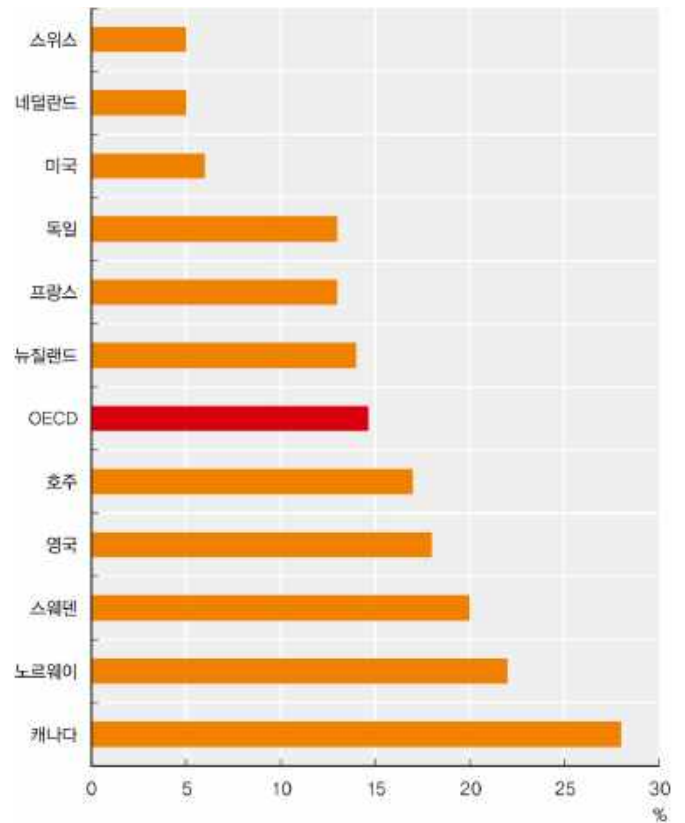
11.14. 원하는 만큼 진료 또는 치료 과정의 결정에 참여한 환자의 비율 (2017년)



출처: 2017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of Older Adult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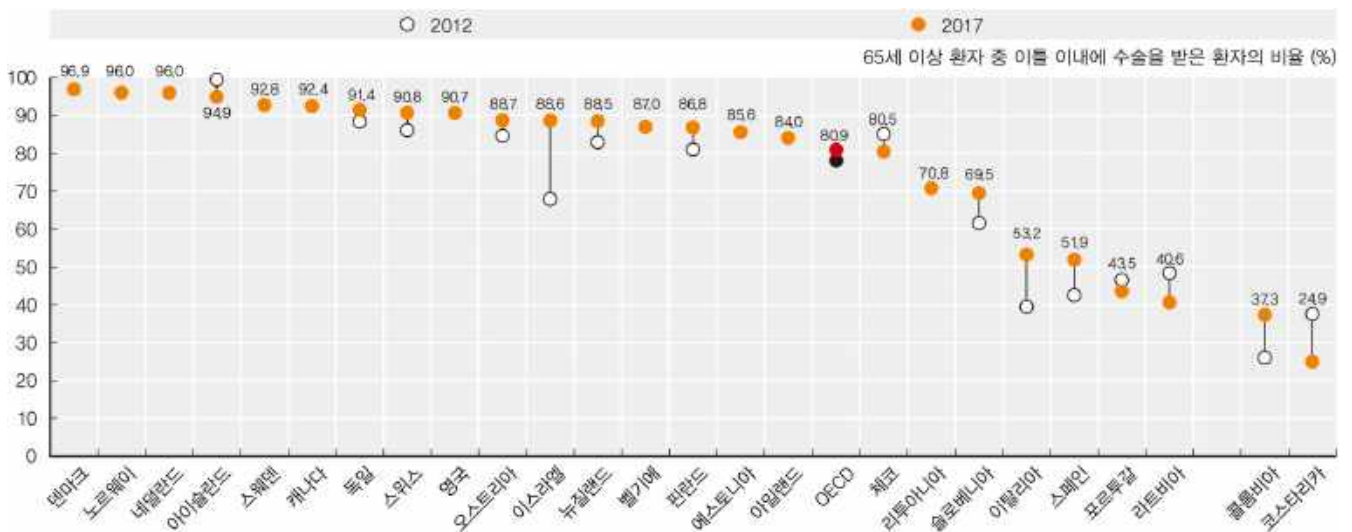
11.15. 전문의 진료 예약을 위해 2달 이상을 대기한 환자의 비율 (2017년)



출처: 2017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of Older Adults.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688>

11.16. 입원 후 이틀 이내에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 (2012년, 2017년)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707>

11. 대시민서비스

특별한 수요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

지속적인 일자리가 자동화된 공정에 의해 대체되는 등 노동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정보통신 기술(ICT)뿐만 아니라 분석 기술과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은 청년 세대가 미래의 직업을 준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은 다양한 배경, 소득 수준, 생활 환경에 있는 시민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학업도, 일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의 증가는 OECD국가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2018년 OECD회원국 중 유럽국가들은 전체 청년인구(18-24세) 중 5.2%가 니트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과 비교할 때 해당 비율은 1.7%p 감소하였다. 2018년 전체 청년인구(18-24세) 중 중등교육 이전 또는 중등교육 졸업 직후 학교를 떠난 인구(예: 조기 중퇴자)의 비율은 10.7%로 2012년에 비해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청년 니트족, 청년 조기 중퇴자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는 해당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

2010년 독일은 학교교육을 직업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 직업의 연계제도(Education Chains initiative)를 도입하여 청년들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해당 제도에는 청년들이 자신만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잠재적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습 중심의 워크샵 데이(Practice-oriented Workshop Days)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약 18개의 직업에 대한 실무적인 통찰력을 기르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등교육 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체 OECD 국가 교장의 31%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가르칠 유능한 교사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18%는 다문화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 있는 교사의 부족, 16%는 저소득층의 학생(사회적 약자)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학교의 거버넌스 또한 다른 차원에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에 영향을 미친다. OECD 국가들에 학교 의사결정의 거버넌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의 모든 결정이 학교 단위 또는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응답이 38%, 상급기관이 정한 규정 내에서 학교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23%, 학교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의 정도는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부터 분권화된 의사결정 체제를 갖는 국가까지 다양한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학교들이 전체

의사결정의 92%까지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와 터키보다 11배 많은 수치이다. 영국은 전체 의사결정의 48%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반면, 학교에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전체 OECD 국가의 33%에 해당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그림 11.17의 자료는 2012년과 2018년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분기별 가구 표본조사(170만명 참여)인 유럽 연합의 노동력조사(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를 통해 수집하였다. Eurostat은 조기 중퇴자(early leaver)를 중등교육 이하(ISCED 2011 0-3C 수준)의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설문조사 4주 전까지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24세 인구로 정의하였다. 해당 지표는 18-24세 전체 인구 중 조기 중퇴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학업도, 일도, 훈련도 받지 않는 18-24세 인구를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11.18의 자료는 2018년 OECD가 실시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를 참고하였다. 해당 조사는 두 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교장, 다른 하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각 국가당 최소 2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림 11.18은 “해당 학교는 다음의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그림 11.19의 자료는 2017년 OECD가 실시한 교육 의사결정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각 국의 중등교육 이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중등교육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의 유형별 자율성 수준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해당 설문은 교수 조직(예: 수업시간), 인사관리(예: 고용), 기획 및 조정(예: 개교), 자원 배분 및 사용의 네가지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조사하며, 결과는 백분율로 표시된다.

참고문헌

Carcillo, S. et al.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s6363503f6-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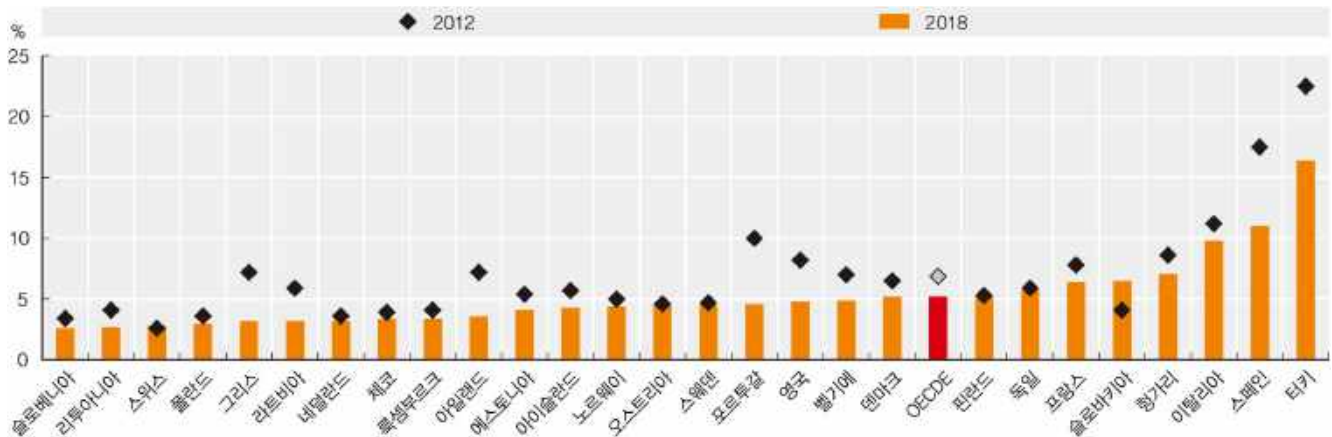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11.17. 유럽국가 외의 OECD국가들은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11.18. 특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의 부족의 지표 값을 기준으로 각 국가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캐나다는 알버타 주(Alberta),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위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11.19. 벨기에는 프랑스어권 공동체(French)와 네덜란드어권 공동체(Flem)로, 영국은 영국(England)과 영국(Scotland)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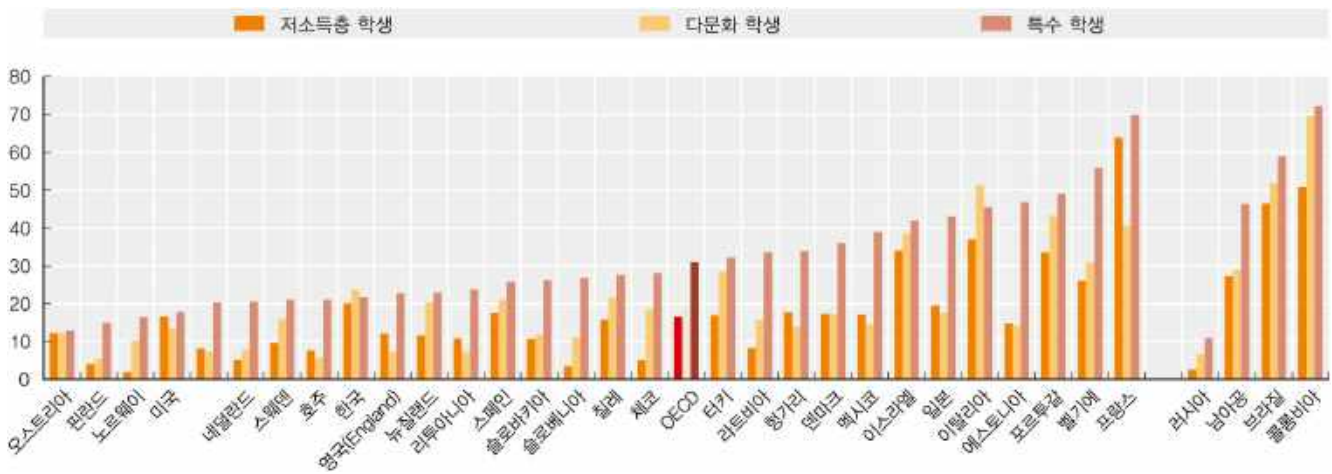
11.17. 현재 직업이 없는 18세-24세 조기 중퇴자의 비율 (2012년, 2018년)



출처: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2018 and 2012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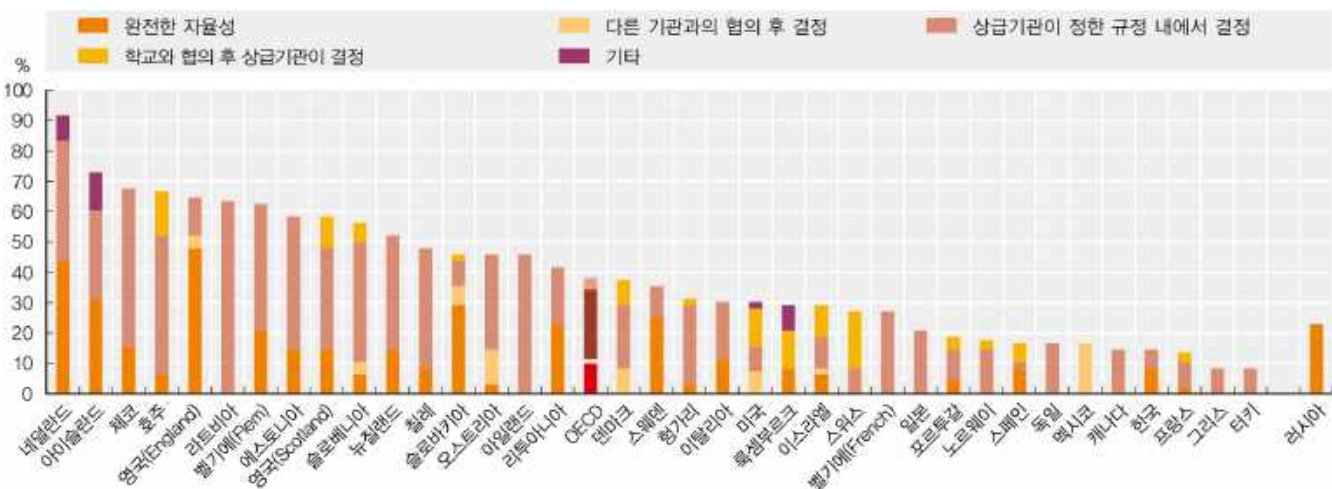
11.18. 중등교육 이하의 특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의 부족을 경험한 학교



출처: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8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745>

11.19. 중등교육 이하 교육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 수준 (2017년)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18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764>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모든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해 동일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법치주의의 부재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 법적인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며, 주로 민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사법 처리에 있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비용, 생산성, 건강, 고용, 관계 등의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지연이 지속되면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 시스템의 대응성은 정확한 대상자(고객)에게 적시에, 적소에서, 적절한 법률 분야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OECD, 2019).

분쟁 해결에 있어 적시성(timeliness)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판사 및 관련 전문가의 부족, 심리를 위한 법정 공간의 부족,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의 제한적 사용, 재정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물질적 제약을 넘어 사법 시스템 자체의 경직성(예: 사건의 재배당을 허용하지 않음), 비효율적인 법적 절차와 규정(예: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을 기소할 수 없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보통신 기술의 낮은 활용 등의 문제 또한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법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는 민사, 상사, 행정, 기타 사건(형사 사건 제외)의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disposition time; DT)에 대한 추정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재판기간은 법원이 관할구역 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대 기간을 의미하며, 한 해 동안 처리된 사건 수 중 미해결된 사건의 수로 측정한다. 2016년 범죄가 아닌 비소송사건(예: 협의 절차)의 재판기간이 짧은 국가는 덴마크(21일), 에스토니아(40일), 리투아니아(41일)인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에서는 300일 이상의 재판기간이 소요된다. 2012년과 비교할 때, 재판기간이 길어진 국가는 체코(39일 증가), 프랑스(37일 증가), 폴란드(35일 증가)이다. 반면, 재판기간이 짧아진 국가는 스위스(161일 감소), 슬로바키아(120일 감소)이다.

2016년 기준, 민사·상사 소송의 재판기간이 짧은 국가는 리투아니아(88일), 룩셈부르크(91일), 스위스(107일)인 반면, 그리스(18개월 이상), 이탈리아(약 18개월), 터키(1년 이상)는 법원의 판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2012년과 비교할 때, 재판기간이 짧아진 국가는 슬로바키아(307일 감소), 포르투갈(80일 감소), 이탈리아(76일 감소)이다. 반면,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 국가는 터키(265일 증가), 그리스(141일 증가)이다.

2016년 기준,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국가는 리투아니아(72일), 이스라엘(101일), 에스토니아(108일), 스웨덴(108일), 헝가리(109일)인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길다(2.5년 이상). 2012년과

비교할 때,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짧아진 국가는 슬로바키아(530일 감소)이다. 그리스는 2012년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1520일인 반면, 2016년에는 1086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슬로베니아는 2012년 대비 2016년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130일('12년)→282일('16년)).

방법론 및 개념정의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 자료는 2016년과 그 이전의 사법 시스템을 평가한 사법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의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정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1심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해 동안 미해결된 사건의 수를 해결된 사건의 수로 나눈 값에 365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평균 시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지만, 특정 관할권 내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추정 값을 제공한다.

소송 절차가 있는 민사상사 사건은 이혼 소송과 같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소송 절차가 없는 사건은 협의 지급 명령과 같은 협의 절차와 관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사 사건을 다루는 상사법원이 존재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민사법원이 이를 다루고 있다. 행정사건은 시민과 행정기관(지방,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이 존재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민사법원이 이러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각 국가마다 개별 법원이 다루는 재판의 종류, 법원 간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비교는 신중을 요한다. 국가 간 법원의 유형과 개별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분류 방법에 차이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 CEPEJ (2018), *European Judicial Systems: Efficiency and Quality of Justice*,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for the Judiciary (2011), *Timeliness Report 2010-11*, ENCJ, Brussels.
- OECD (2019), *Equal Access to Justice for Inclusive Growth: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97f5b7f-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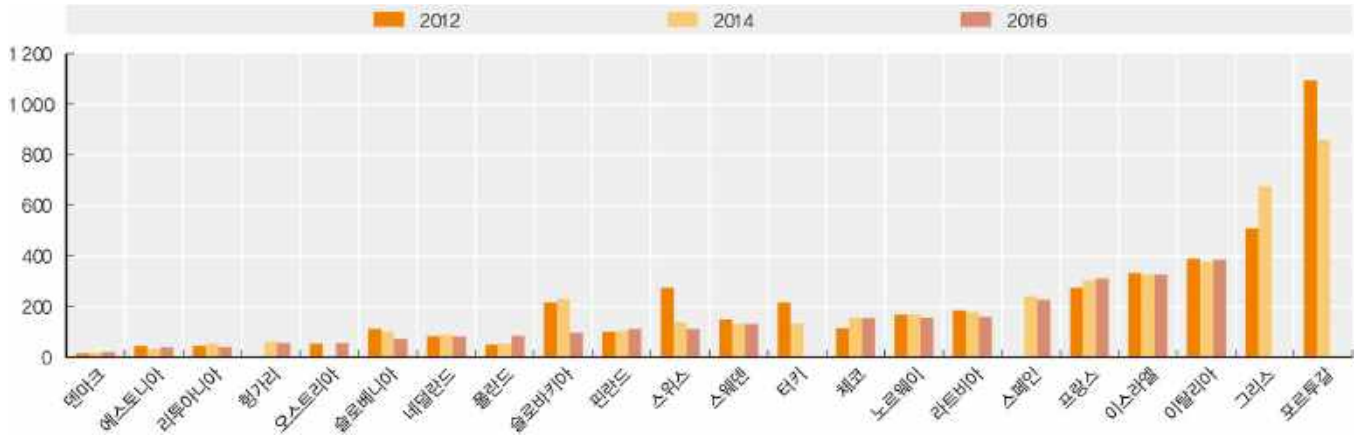
그림 설명

1심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각 국가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유럽국가 외의 OECD국가들은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11.22 영국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자료만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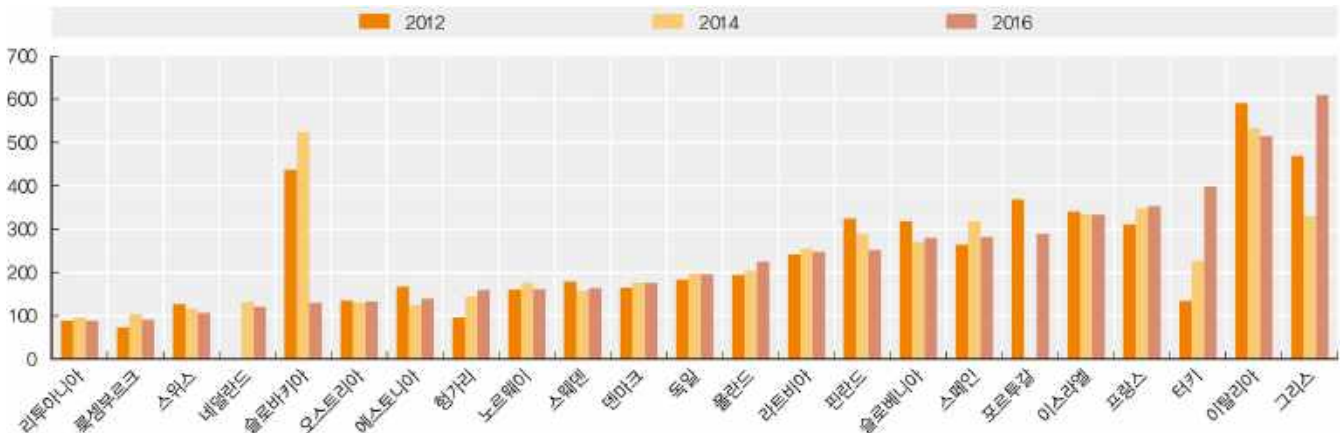
11.20 민사, 상사, 행정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2012년, 2014년, 2016년)



출처: Database of European judicial systems,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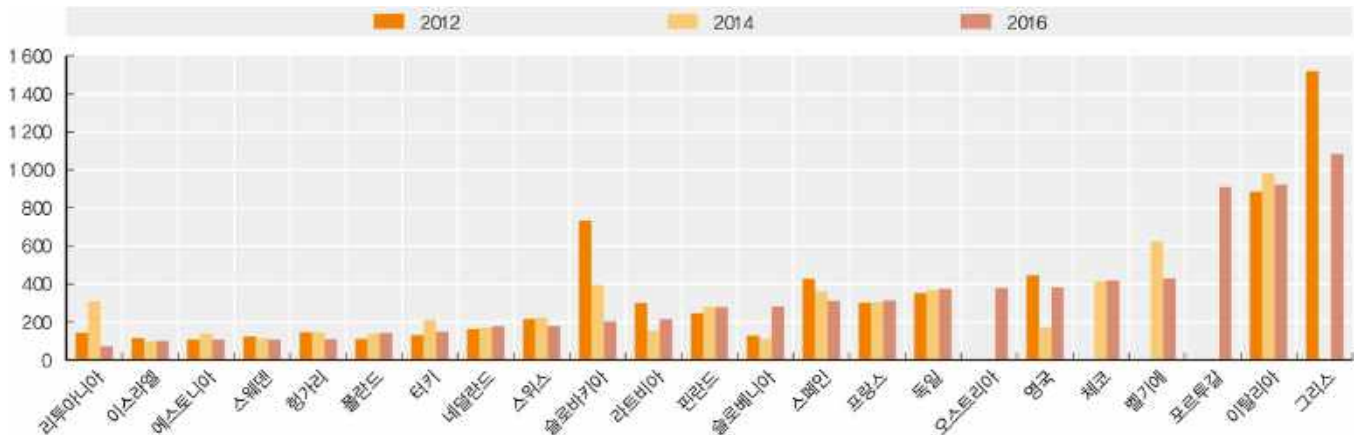
11.21 민사, 상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2012년, 2014년, 2016년)



출처: Database of European judicial systems,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802>

11.22 행정 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2012년, 2014년, 2016년)



출처: Database of European judicial systems,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821>

보건 시스템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급성 또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의료의 질은 바람직한 건강 결과(예: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를 달성하고, 의료 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Kelley and Hurst, 2006).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환자의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병원진료의 가장 잘 알려진 성과지표에 해당한다. 지난 10년간(2007-2017년) OECD국가의 45세 이상 급성심근경색 환자 100명당 사망자 수는 2.6명 감소했으며, 특히 칠레와 슬로바키아에서는 5.7명, 네덜란드에서는 5.4명이 감소하였다. OECD국가 중 멕시코에서만 해당 사망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에서 4%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차진료는 환자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작점으로, 1차진료를 통해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조기에 진단하며, 예방할 책임이 있다. 천식(asthma),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CHF)은 발생률이 높은 3대 만성질환이다. OECD국가들은 1차진료 단계에서 3대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화된 치료법을 갖추고 있다. 1차진료 단계에서 접근가능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급격한 증상 악화를 막고 불필요한 병원의 입원을 줄일 수 있다(OECD, 2019).

2017년 OECD 국가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병원 입원율은 전체 인구 10만명당 183명으로 나타났다.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칠레,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의 입원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나타난 반면, 헝가리와 칠레의 입원율은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천식환자의 입원율은 라트비아가 인구 10만명당 93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헝가리가 인구 10만명당 354명으로 가장 높다.

2017년 OECD 국가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입원율은 전체 인구 10만명당 233명으로 나타났다.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입원율은 멕시코가 인구 10만명당 57명으로 가장 낮고, 다음

으로는 한국(88명), 칠레(96명)가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입원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510명), 리투아니아(502명), 슬로바키아(479명) 순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은 45세 이상 인구 중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11.23에 제시된 사망률은 최초 입원한 병원과 동일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연령별-성별 표준화 비율을 의미한다.

입원율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으로 1차 진단을 받은 입원환자 비율로 2010년 OECD국가의 15세이상 인구에 대한 연령별-성별 표준화 비율을 의미한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한 환자의 입원과 사망은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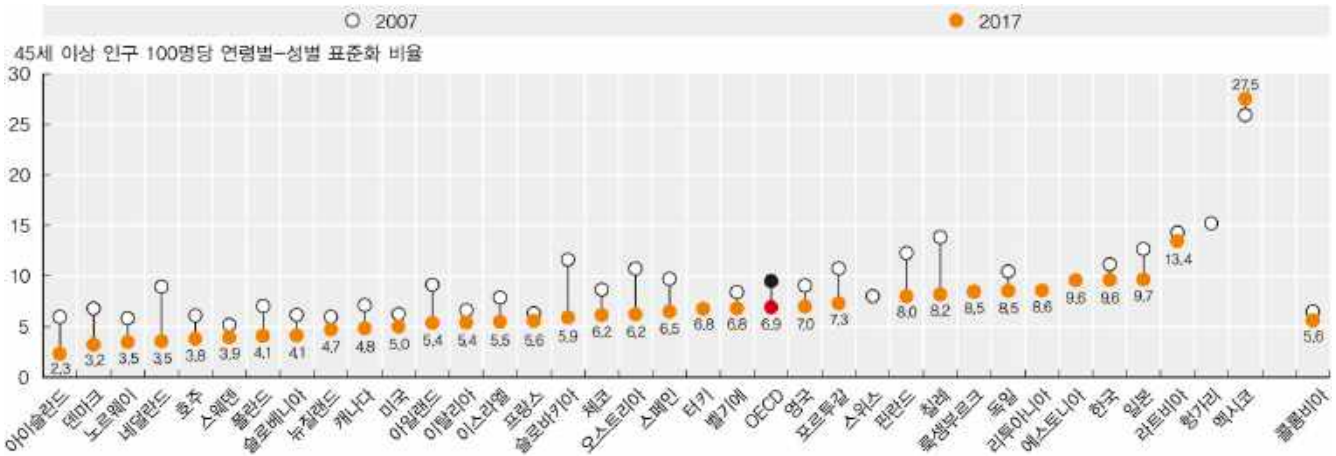
참고문헌

Kelley, E. and J. Hurst (2006),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Conceptual Framework Paper”,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40134737301>.
 OECD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설명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11.23. 2007년 자료 대신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일본, 한국, 라트비아, 영국은 2008년의 자료,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슬로베니아, 콜롬비아는 2009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프랑스, 2017년 자료 대신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는 2015년의 자료, 호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는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England)에 한정하였고,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단위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11.24 and 11.25. 호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은 2017년 자료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11.24에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터키는 2017년 자료 대신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자료 대신 헝가리는 2012년의 자료, 일본은 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11.25에서 룩셈부르크와 일본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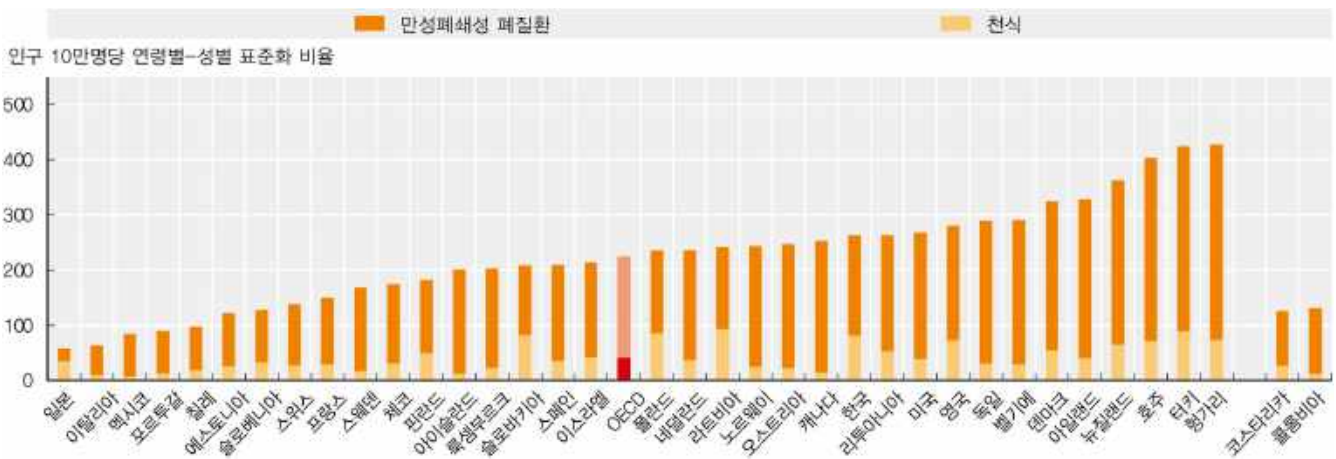
11.23.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 (2007년, 2017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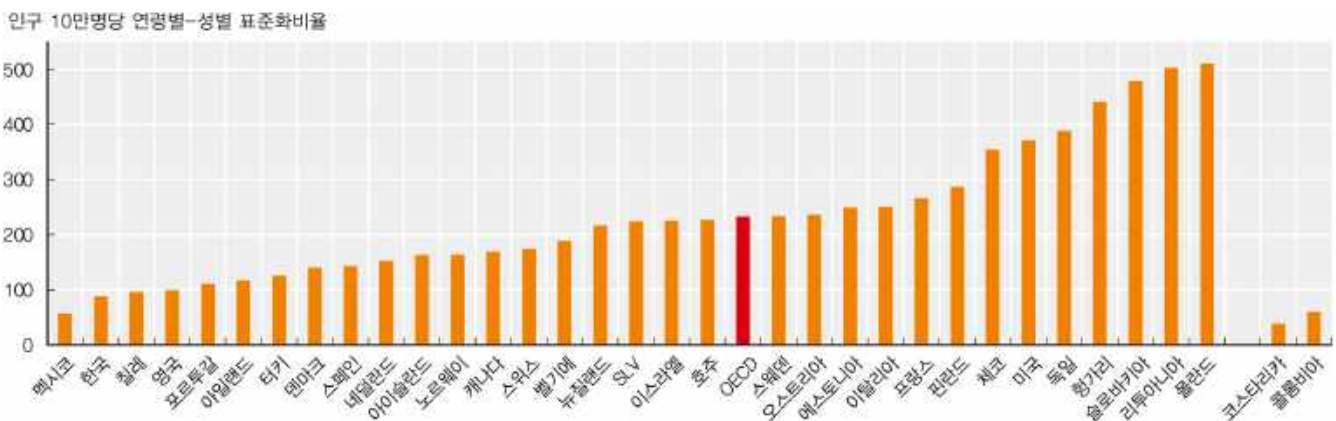
11.24.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을 (2017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9.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859>

11.25.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2017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878>

교육 시스템은 개인이 평생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수단을 갖추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학생들이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조기 투자는 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주며, 지지적 학교 환경의 조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준다(OECD, 2012).

교육의 성과에 대한 국제 평가로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의 국제읽기능력 평가(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PIRLS)가 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15세 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는 4학년, 8학년 학생, 국제읽기능력 평가(PIRLS)는 4학년 학생(13-14세)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제공해주며, 학생과 학교 간 차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2011-2016년 OECD 국가의 국제읽기능력 평가 점수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국제읽기능력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와 핀란드이다. 국제읽기능력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왈롱; Wallonia)이다. 2011-2016년 국제읽기능력 평가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리투아니아(+22점), 호주(+17점), 헝가리(+15점), 아일랜드(+15점), 스페인(+15점)인 반면, 포르투갈(-13점), 이스라엘(-11점)은 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이다. 2016년 국제읽기능력 평가 점수는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교육 시스템의 평균적인 성과가 전 학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교육 평가 또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평생동안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OECD, 2017). 국제읽기능력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읽기 능력(예: 단어 읽기)을 갖춘 학생이 전체 학생 중 75%이상인 학교를 파악할 수 있다. OECD 국가에서는 전체 학생의 21%가 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96%, 북아일랜드는 94%의 학생이 이에 재학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입학하는 학교의 학생 간 성과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칠레이다. 반면, 학생 간 성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국가는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로 해당 국가들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보유한 학생의 비율이 15%미만이다.

교육의 성과는 학교 내 학생들 간의 통합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국제읽기능력평가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함

으로써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을 평가한다. 학생들의 소속감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82%)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42%)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학생들이 소속감이 낮은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과의 차이는 북아일랜드와 핀란드에서 가장 크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소속감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 형평성’의 자료는 2016년 국제 읽기능력 평가(PIRLS) 결과를 활용하였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는 2006년부터 5년마다 국제읽기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또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국제읽기능력 평가는 총 346,852명의 학생(50개국, 11개 벤치마킹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제읽기능력 평가에서 읽기 이해 과정은 정보 재인하기, 추론하기, 정보 통합하기, 내용과 형식 평가하기로 구분된다. 국제읽기능력 평가 점수의 읽기 성취도는 평가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성취도에 기초하여 2001년 만들어졌다. 국제읽기능력 평가 점수는 300~700점의 값을 가지며, 중심점은 2001년 성취도의 평균 값인 500점이다.

학교 배경에 대한 설문은 교장들을 대상으로 알파벳 인식, 단어 읽기, 문장 읽기, 글 읽기, 알파벳 쓰기, 단어 쓰기 등을 할 줄 아는 1학년 학생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림 11.27은 학교 학생 중 3가지 이상의 읽기 능력을 보유한 학생이 적어도 75% 이상이라고 답한 학교의 결과만을 보여준다.

학생 배경에 대한 설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학교에 소속감을 느낀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공정하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높은 소속감을 가진 학생은 3개의 질문에 대해 적어도 “매우 동의함”으로 응답하고, 나머지 2개의 질문에 대해 “약간 동의함”으로 응답한 학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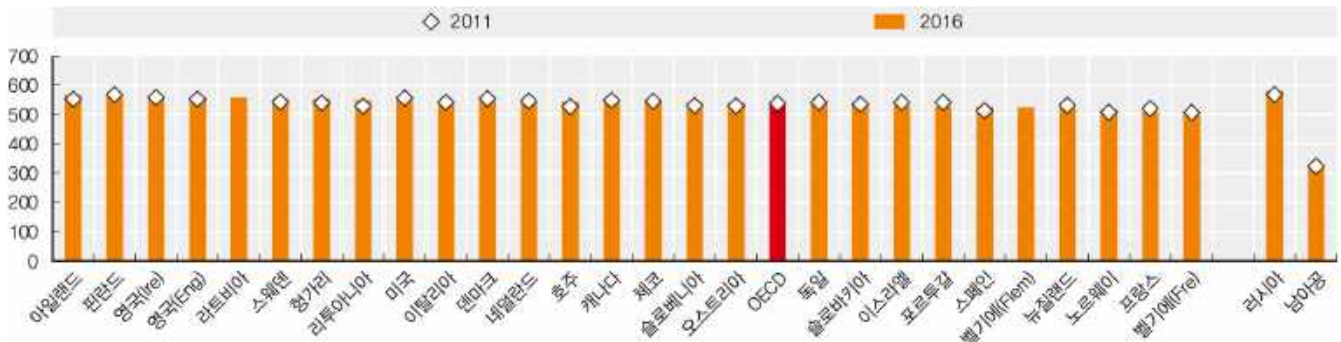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12),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Supporting Disadvantaged Students and School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30852-en>.

그림 설명

벨기에에는 프랑스어권 공동체[BEL (Fre)]와 네덜란드어권 공동체[BEL (Flem)]로 구분하였다. 영국은 잉글랜드[GBR (En)]와 북아일랜드[GBR (Ire)]로 구분하였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는 <http://doi.org/10.1787/888932315602>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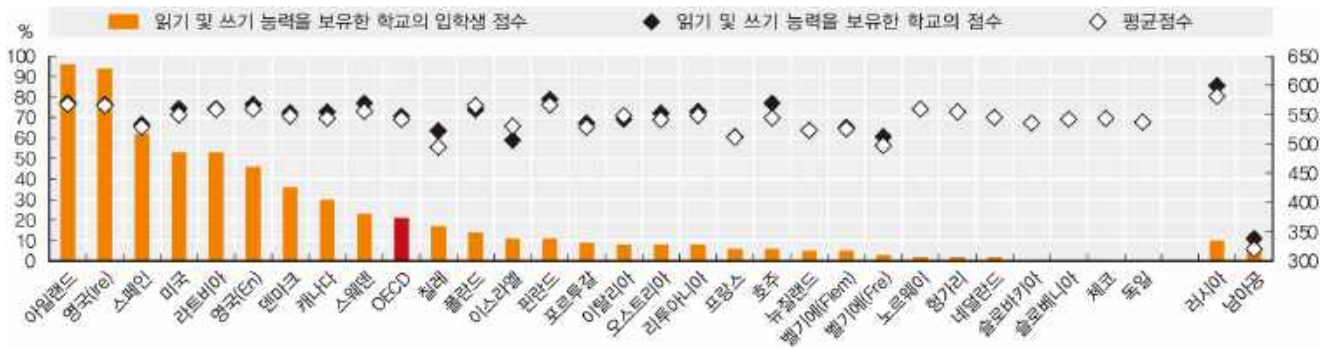
11.26. OECD 국가의 국제읽기능력평가 점수(2011년, 2016년)



출처: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PIRLS) 2016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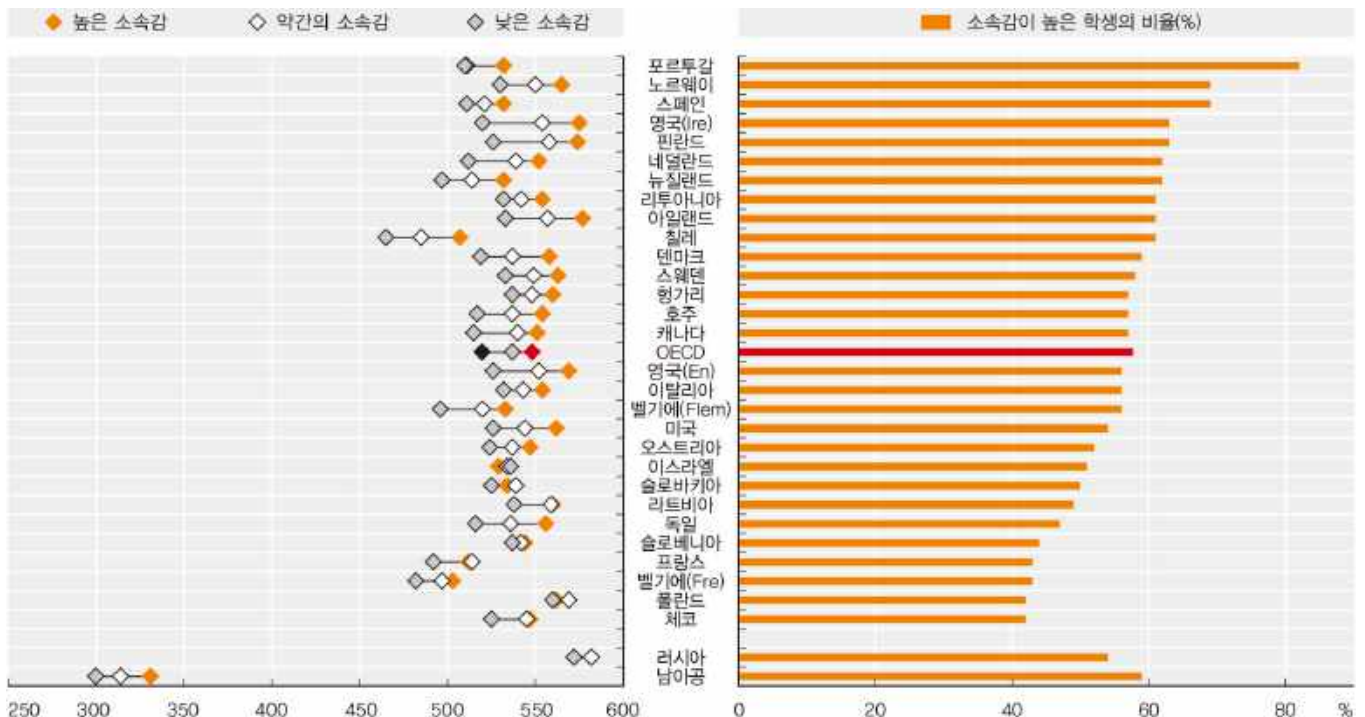
11.27. 1학년 학생 중 읽기 및 쓰기 능력을 보유한 학생의 비율이 75%이상인 학교의 국제읽기능력평가 점수 (2016년)



출처: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PIRLS) 2016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916>

11.28.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학생의 비율과 국제읽기능력평가 점수



출처: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PIRLS) 2016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935>

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사법 제도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필요가 충족 되도록 보장하는 핵심 축의 역할을 한다.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법률 지원, 대안적 분쟁 해결, 법의 강제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법 제도가 필요하다(OECD, 2019).

법원은 개인, 법인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 강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법 제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법원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판결이 요구된다. 2017년 유럽국가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원관리 협회, 정치적 정당 혹은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응답자의 1/3은 사법 위원회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ENCJ, 2017).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점수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에서 측정된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015-2019년 해당 지표의 점수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해당 지표의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벨기에로, 부적절한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점수는 0.09점, 법의 효과적 집행 점수는 0.14점 증가하였다.

사법 제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재판이 존재하지만, 이중 형사 사법 제도는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재판 중 하나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신변안전 보장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한다. 피해자는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피의자에게는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미결 구금(pre-trial detention)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가능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이렇듯, 두 가지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빠르고 공정해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적시성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에 의해 측정된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해당 지표에 대한 OECD 국가의 점수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2015-2019년 해당 지표의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터키로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에 대한 점수는 0.20점, 형사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적시성 점수는 0.05점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0.17점, -0.02점)과 그리스(-0.09점, -0.05점)는 해당 지표의 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슬로베니아는 형사 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적시성 점수가 감소했으나(-0.12점),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의 점수는 증가하였다(+0.15점).

2015년 이후, OECD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범죄가 효과적

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개선되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는 개인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강도나 절도의 피해자로 인식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19년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르웨이(+0.05), 헝가리(+0.05), 슬로 베니아(+0.05)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08년 유럽사법위원회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for the Judiciary; ENCJ)의 부다페스트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평의회(Councils for the judiciary)는 사법행정 및 사법서비스 전달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기구를 의미한다.

그림 11.29, 11.30, 11.31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에 기초하였으며, 해당 조사는 각 국가의 3대 도시 거주 인구 중 일반인 1,000명과 민법에 관한 전문가(실무자 및 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법치주의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점수가 클수록 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참고).

부적절한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소송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은 법원 판결의 집행과 적시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형사사법 제도의 효과성과 적시성은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기까지의 기간, 미결구금 및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기까지의 기간 등을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적 폭력 행사는 가해자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포함한 범죄를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개인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최근 3년(또는 1년) 이내에 신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인식되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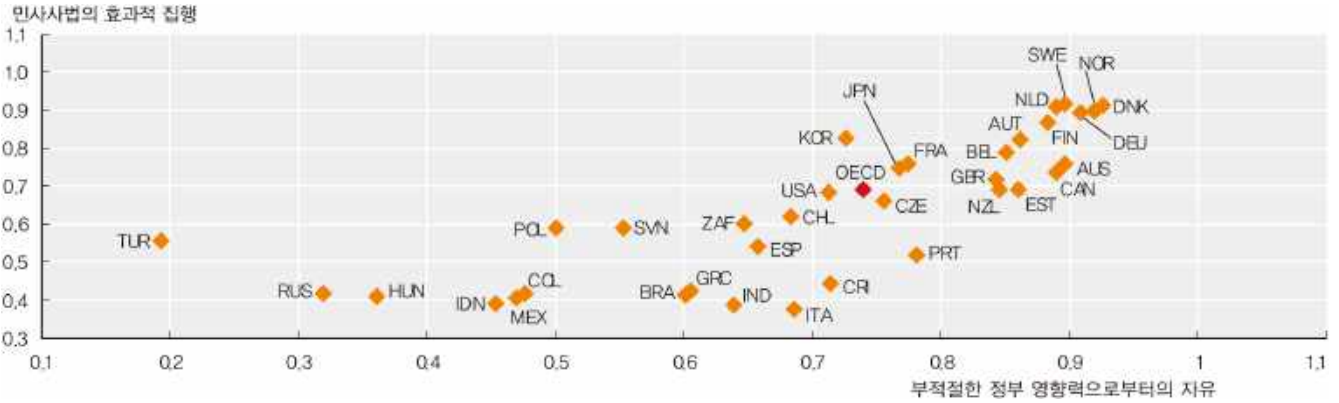
-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for the Judiciary (2017) Data ENCJ Survey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2016-2017, ENCJ, Brussels
- OECD (2019), *Equal Access to Justice for Inclusive Growth: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그림 11.32(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2015년과 2019년의 점수 변화) 자료, 그림 11.3(형사사법 제도의 효과성 및 적시성과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의 2015년과 2019년의 점수 변화) 자료는 부록 F에 제시된 온라인 주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11.29.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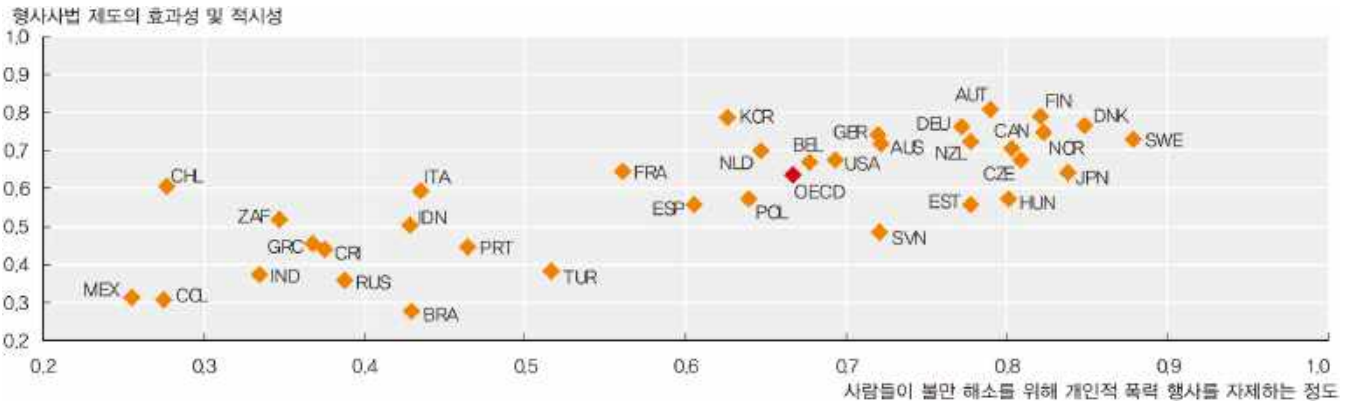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954>

11.30. 형사사법 제도의 효과성 및 적시성과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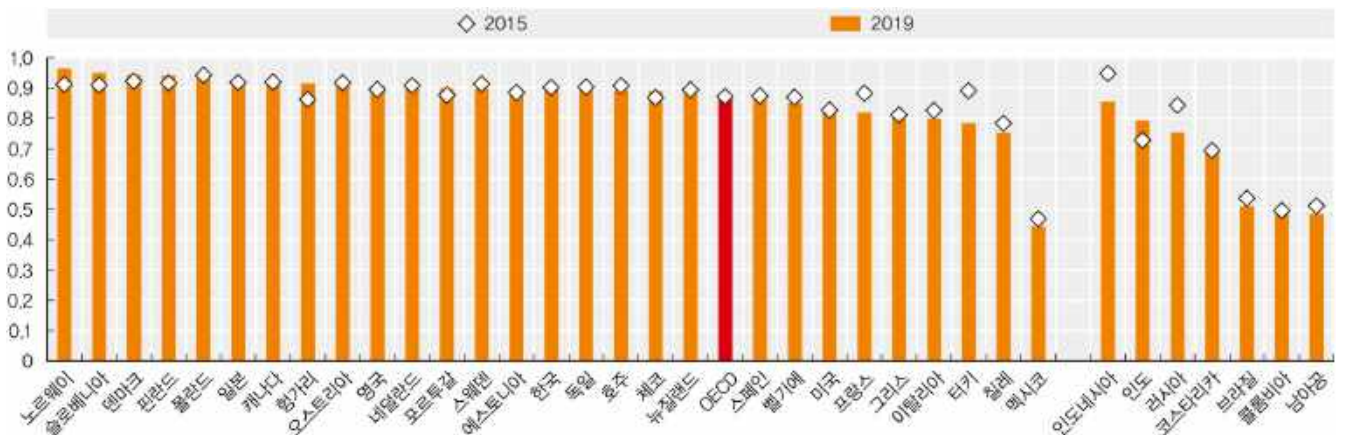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주: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영어로 표기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973>

그림 0.27.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2015년, 2019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033992>

부록 A

국가별 국민계정통계의 보고 체계 및 출처

표 A.1. OECD 국가의 보고 체계 및 출처

국가명	비금융계정	금융계정
OECD 회원국		
호주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오스트리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벨기에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캐나다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칠레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 consolidated
체코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덴마크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에스토니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핀란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프랑스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독일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그리스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헝가리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아이슬란드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아일랜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표 A.1. OECD 국가의 보고 체계 및 출처 (계속)

국가명	비금융계정	금융계정
이스라엘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이탈리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일본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한국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라트비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리투아니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룩셈부르크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멕시코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 consolidated
네덜란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뉴질랜드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 consolidated
노르웨이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폴란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포르투갈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슬로바키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슬로베니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스페인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스웨덴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스위스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터키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영국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표 A.1. OECD 국가의 보고 체계 및 출처 (계속)

국가명	비금융계정	금융계정
미국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OECD 회원 후보국		
콜롬비아	SNA1993;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코스타리카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1993 (GFSM2001/86)
러시아	SNA1993;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 consolidated

* 해당 국가들의 금융계정 자료는 Eurostat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자료(연 2회 갱신)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 다른 국가들은 OECD 국민계정통계로 가장 최신의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부록 B

정부 총수입

표 B.1은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세, 순사회보장기여금, 판매 수입, 보조금 및 기타 수입 등 정부의 총수입이 국민계정체계상, OECD 국민계정통계상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표 B.1. 정부 총수입

본 보고서상 총수입	국민계정체계상 총수입	OECD 국민계정통계상 코드 (일반정부의 총수입)
조세 (Taxes)		
간접세 (Indirect taxes)	생산 및 수입세, 수취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receivable)	GD2R
직접세 (Direct taxes)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수취 (Current taxes on income and wealth, receivable)	GD5R
자본세 (Capital taxes)	자본세 (Capital taxes)	GD91R
순사회보장기여금 (Net social contributions)	순사회보장기여금 (Net social contributions)	GD61R
판매	시장산출액 (Market output and output for own final use) 기타 비시장 산출에 대한 지출 (Payments for other non-market output)	GP11_P12R GP131R
보조금 및 기타 수입		
경상 및 자본 보조 (Current and capital grants)	기타 경상이전, 수취 (Other current transfers, receivable)	GD7R
	기타 자본이전 및 투자 보조금, 수취 (Other capital transfers and investment grants, receivable)	GD92R_D99R
보조금 (Subsidies)	보조금, 수취 (Other subsidies on production, receivable)	GD39R
재산소득 (Property income)	재산소득, 수취 (Property income, receivable)	GD4R
총수입 (Total revenues)	총수입 (Total revenues)	GTR

부록 C

정부기능별 분류(COFOG)

OECD는 국민계정체계의 정부지출 자료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정부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방식을 개발하였다. 표 C.1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부지출은 기능별로 10개의 분야(경제활동, 교육, 사회보호 등)로 분류되며, 각각의 분야는 하위 부문(최대 9개)으로 분류된다. 정부기능별 분류 중 분야별 정부지출(시계열 자료) 자료는 전체 OECD 국가(36개국) 중 32개 국가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부문별 정부지출은 OECD 국가 중 26개 유럽 국가와 이스라엘, 일본의 자료만 이용할 수 있다.*

표 C.1. 분야 및 부문별 정부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일반공공행정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해외 경제 원조 일반 서비스 기초연구 일반공공행정 R&D 기타 미분류 일반공공행정 공공 채무 거래 정부 간 일반 이전
국방	군사 방어 민방위 해외 군사원조 국방 R&D 기타 미분류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법원 교도소 공공질서 및 안전 R&D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 캐나다, 칠레, 멕시코의 분야별 정부지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는 일부 국가의 통계청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는 모든 국가, 모든 시점에 대해서 완전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민계정체계(SNA) 및 국제연합(UN)의 가이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매뉴얼에서 정부기능별 분류의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유럽 통계청(Eurostat)은 국민계정체계의 정부지출 자료에 정부기능별 분류를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고, 유럽 국가들의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만들었다.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일본을 제외한 모든 비유럽국가들의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도 정부기능별 분류를 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만 이용할 수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이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표 C.1. 분야 및 부문별 정부기능별 분류 (계속)

분야	부문
경제활동	일반 경제, 상업, 노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연료 및 에너지 광업, 제조, 건설 운송 통신 기타 산업 경제활동 R&D 기타 미분류 경제활동
환경보호	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공해 방지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환경보호 R&D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주거 시설 개발 지역사회 시설 개발 수도 공급 가로등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의료 제품, 기기, 장비 외래 환자서비스 병원서비스 공공 보건서비스 보건 R&D 기타 미분류 보건
휴양, 문화, 종교	휴양 및 스포츠 서비스 문화 서비스 방송 및 출판 서비스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휴양, 문화, 종교 R&D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유아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2차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급 외 교육 교육 보조 서비스 교육 R&D 기타 미분류 교육
사회보호	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부록 D

직업의 분류 및 정의

‘직업의 분류’에 관한 자료는 2016년 OECD에서 수행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업데이트한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직업의 정의’는 2016년 OECD의 중앙 및 연방정부의 공무원 구조에 관한 설문조사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직업의 분류는 크게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된다.

직업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개발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를 재구성하였다. 각 국가마다 법과 행정제도, 직업 체계가 상이하여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직업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isco08/index.h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표 D.5. 직업의 분류 및 정의

고위 관리자
<p>D1 관리자 (ISCO-08 1112)는 장관 또는 국무장관/차관 바로 아래 직급인 고위 공무원과 정부 또는 정부수반에 의해 임명된 고위 공무원을 의미한다. D1관리자는 정책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고, 정부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며, 정책 이슈를 해석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집행권을 갖는다. D1관리자는 내각/각료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내각/각료회의의 구성원은 아니다. D1관리자는 부처/국무부 또는 특정한 행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한다. 책임운영기관, 지방 분권화, 수평형 조직, 자율적인 관리자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이 D1관리자에 포함된다.</p>
<p>D2 관리자 (ISCO-08 11, 112)는 D1관리자 바로 아래 직급을 의미한다. D2관리자는 다른 관리자의 지원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며, 부처 또는 특정 부서의 전반적인 활동을 기획, 지시, 조정, 평가한다. D2관리자는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기도 한다. D2관리자는 서로 다른 정책 분야의 전문 팀에게 업무·리더십 프로그램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D2관리자는 자신이 감독하는 특정 행정 단위/부서의 목표, 전략, 프로그램을 결정한다.</p>
중간 관리자 (최소 3명의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
<p>D3관리자 (ISCO-08 12)는 D2관리자 바로 아래 직급을 의미한다. D3관리자는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지침 내에서 다른 관리자들을 지원하고, 부처 내의 특정 부서/행정 단위의 일반적인 기능을 기획, 지시, 조정한다. D3 관리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과(division)에 한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관리한다. D3관리자는 과 단위의 업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을 관리한다. D3관리자는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지출의 통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다른 팀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p>
<p>D4 관리자 (ISCO-08 121)는 D3관리자 바로 아래 직급을 의미한다. D4관리자는 정책 조언, 전략적 계획,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한다. D4관리자는 운영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지시하며, 고위 관리자에게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D4관리자는 직원의 선발, 교육훈련, 성과관리, 예산의 편성, 재정 운영의 감독, 지출의 통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D4관리자는 팀(team)단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p>
<p>D5 관리자 (선택적) (ISCO-08 1211, 1212, 1213)는 D4관리자 바로 아래 직급을 의미한다. D5관리자는 업무, 사업의 집행을 주도하고, 다른 전문가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고위직 전문가에 해당한다.</p>
<p>D6 관리자 (선택적) (ISCO-08 1211, 1212, 1213) 업무, 사업의 집행을 주도하고, 다른 전문가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p>

전문가

선임급(senior) 경제학자/정책분석가 (ISCO-08 242, 2422)는 관리의 책임이 없거나 최대 3명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만 관리의 책임이 주어지는 직급으로, 행정직/비서직 직원과 하위직 전문가에 비해 직급이 높은 전문가를 의미한다. 보통 선임급 전문가는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선임급 전문가는 그들의 업무 분야 혹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을 갖고, 정부 운영과 사업의 설계, 집행, 조정을 위해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선임급 전문가는 기존의 정책과 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낡은 규정을 파악한다. 이들은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요약보고서 및 권고안을 준비한다. 또한, 공공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타당성, 행정적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선임급 전문가는 경력에 따라 전문가 직급에 포함될 수 있다. 선임급 전문가의 전공 분야는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공학, 환경학, 교육학, 보건경제학 등 다양하다. 선임급 전문가들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전임급(junior) 경제학자/정책분석가 (ISCO-08 242, 2422)는 행정직/비서직 직원에 비해 직급이 높은 전문가를 의미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없다. 전임급 전문가는 정부 운영과 사업의 설계, 집행, 조정을 위해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또한 기존의 정책과 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낡은 규정을 파악한다. 전임급 전문가는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요약보고서 및 권고안을 준비한다. 또한, 공공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타당성, 행정적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전임급 전문가의 전공 분야는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공학, 환경학, 교육학, 보건경제학 등 다양하다. 전임급 전문가들은 적어도 5년 이하의 전문 경력이 요구된다.

비서직

비서직(일반사무직) (ISCO-08 411, 4110) 직원은 학위 소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반 사무직 직원은 자금 관리, 출장 준비, 정보 요청, 일정 관리 등의 광범위한 사무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자료를 기입, 기록, 준비, 정리, 분류하고, 우편물을 정리, 개봉, 발송하며, 보고서와 서신을 준비한다.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며, 전화 혹은 전자 문의로 응답하거나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일반사무직 직원은 금융거래의 세부정보를 기록하고, 수치를 확인하며, 청구서를 준비한다. 또한 컴퓨터에 정보를 기록하고, 문서를 교정한다. 일반사무직 직원 중 일부는 예산 편성, 지출 모니터링, 계약서 및 구매(매입) 주문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일반사무직 직원의 상위 감독자는 해당 직급에서 제외된다.

부록 E

성인지예산,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에 관한 방법론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협의의 종합지수는 불연속적이고 정성적인 정보를 요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많은 개별 지표로부터 공통된 추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종합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해석하는데 더 용이하다.” (Nardo et al., 2005). 그러나 종합지수의 개발과 활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종합지수가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엄밀히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지수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리고 자주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

OECD는 종합지수와 관련된 공통의 문제점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하였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종합지수는 의미있는 종합지수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종합지수 작성 편람(*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의 단계를 따르고 있다(Nardo et al., 2008).

개별 종합지수는 각각의 분야에서 합의된 개념을 나타내는 이론적 분석들에 기초하고 있다.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개념과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종합지수는 OECD 전문가 집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성되는데, 협의 과정에는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수의 선택과 변수 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자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종합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분석이 실시된다.

- 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조사의 질문은 국가별로 동일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함을 보장한다.
-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 모든 하위지표와 변수는 정규화하여 비교가 가능하다.
- 종합지수의 개발을 위해 모든 하위지표는 채택된 방법론에 따라 선형방법을 사용하여 종합되었다.
- 주성분 분석 및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될 기본 개념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 변수의 중복산정과 과대평가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 변수는 제외되었다.
- 또한,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여 항목 간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다른 가중치를 갖는 지표의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에 제시된 각각의 종합지수와 하위지표를 구성하는 변수 및 가중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http://www.oecd.org/gov/govatag lance.htm>).

참고문헌

Nardo, M., et al. (2005). Tools for Composite Indicators Building, Report EUR 21682 EN, Joint Research Centre, Ispra.
OECD/EU/JRC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and User Guid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043466-en>.

부록 F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그림 자료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 2.5. 국내총생산 대비 순자본이전의 비율 [<https://doi.org/10.1787/888934034011>]
- 2.12. 1인당 실질정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2007-17년, 2017-18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030>]
- 2.24. 중앙정부 수입의 구조(2017년, 2018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049>]
- 2.25. 주정부 수입의 구조(2017년, 2018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068>]
- 2.26. 지방정부 수입의 구조(2017년, 2018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087>]
- 2.32. 정부기능별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106>]
- 2.33. 정부기능별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 변화(2007년 대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125>]
- 2.34. 일반공공행정 분야 정부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144>]
- 2.3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부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163>]
- 2.36. 경제활동 분야 정부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182>]
- 2.37. 교육 분야 정부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201>]
- 2.38. 정부기능별 중앙정부 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220>]
- 2.39. 정부기능별 주정부 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239>]
- 2.40. 정부기능별 지방정부 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258>]
- 2.42. 경제적 거래별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2017년, 2018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277>]
- 2.45. 정부 수준별 일반정부 수입의 비중 변화(2007년 대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296>]
- 2.46. 정부 수준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 변화(2007년 대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315>]
- 2.50. 총 투자 대비 정부투자 비율(2007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334>]
- 2.51. 정부기능별 일반정부 투자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353>]
- 2.55. 일반정부 아웃소싱 지출의 구조(2017년, 2018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372>]
- 2.58. 사회보호 분야 정부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391>]

- 2.59. 보건분야 정부지출의 구조(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410>]
- 2.60. 사회보호 분야 정부지출의 구조 변화(2009년 대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429>]
- 2.61. 보건 분야 정부지출의 구조 변화(2009년 대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448>]

제4장 정부기관

- 4.3. 내각에 제출된 의안의 검토 항목과 주체 [<https://doi.org/10.1787/888934034467>]
- 4.4. 정부수뇌기관이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적 수단
[<https://doi.org/10.1787/888934034486>]
- 4.7. 정책 단계별 정부수뇌기관과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현황
[<https://doi.org/10.1787/888934034505>]
- 4.10. 정부 정책평가의 지침에 관한 법 체계 [<https://doi.org/10.1787/888934034524>]

제5장 예산제도와 실무

- 5.15. 공공인프라 사업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https://doi.org/10.1787/888934034543>]

제8장 공공조달

- 8.3. 정부기능별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 구조의 변화(2012년 대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562>]
- 8.4. 정부수준별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2009년, 2015년, 2017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581>]

제11장 대시민서비스

- 11.4 지방 경찰에 대한 신뢰도(2018년) [<https://doi.org/10.1787/888934034600>]
- 11.32.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2015년 대비 2019년의 점수 변화) [<https://doi.org/10.1787/888934034619>]
- 11.33. 형사사법 제도의 효과성 및 적시성과 사람들이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2015년 대비 2019년의 점수 변화) [<https://doi.org/10.1787/888934034638>]

부록 G

운영위원회의 구성

국가	이름	직위	부처
오스트리아	Mr Michael Kallinger	Head of Unit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	Federal Chancellery, Public Service and Innovative Administrative Development
벨기에	Mr Jacques Druart	Head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Federal Public Service Policy and Support
캐나다	Ms Erica van Wyngaarden	Analyst, Strategic Policy, Priorities and Planning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칠레	Mr Raimundo Monge	Division Head of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Ministry of the Presidency
핀란드	Ms Katju Holkeri	Financial counsellor, Public Governance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프랑스	Daniel Yves Taupenas	Counselor public governance, social affairs and regional development	French permanent representation to the OECD
헝가리	Ms Zsuzsanna Gregor	First Secretary	Permanent Delegation of Hungary to the OECD and UNESCO
이탈리아	Mr Stefano Pizzicanela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s
일본	Mr Maki Takashi	First Secretary	Permanent Delegation of Japan to the OECD
한국	Mr Kiyeon Hwang	Counsellor	Delegation of Korea to the OECD
네덜란드	Mr Frans Van Dongen	Program Manager	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노르웨이	Mr John Noseid	Senior Adviser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and eGovernment
스웨덴	Mr Arvid Perbo	Analyst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영국	Mr Matt Kerlogue	Head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Analysis, Civil Service Group	Cabinet Office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용어 해설

- 예산** 지출, 수입, 적자 또는 흑자, 채무를 포함한 정부의 재정 계획에 관한 포괄적인 문서를 의미한다. 예산은 정부의 주요 재정 정책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즉, 예산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 현금지원**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출 없이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현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금지원에는 연금, 실업급여, 개발원조 등이 포함된다.
- 중앙예산기관** 중앙예산기관(CBA)은 국가/연방 예산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중앙/국가/연방 정부 내 부처 및 조정기구를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중앙예산기관은 재무부 소속이다. 국가마다 중앙예산기관의 기능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른 부처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며, 재원을 배분 또는 재배분하고, 예산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며, 성과평가와 효율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나, 반드시 공적자금 상황과 같은 재무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앙예산기관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량적 재정규율의 유지 및 관리와 예산지출의 효과적인 통제에 있다.
- 정부수뇌기관** 정부수뇌기관(CoG)은 행정부(대통령 또는 수상, 내각)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기관을 의미한다. 정부수뇌기관은 정부 사무국, 내각실, 수상관청, 대통령실, 추밀원 등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수뇌기관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수뇌기관의 역할은 행정부 자체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수뇌기관은 정치적 비전을 반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응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자원(재정적, 법적, 규제적, 군사적 자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시민 예산**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는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예산 문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한 문서를 의미한다.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는 연간 예산안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독립적인 문서이다. 가이드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야 하며, 가이드에 포함된 문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링크와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 공무원** 국가와 영속적 또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은 직원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국가의 직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공무원은 특정한 공법 또는 기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의미한다.
- 집합재 및 서비스** 공동체 전체에 혜택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정부 지출이 이에 포함된다.
- 종합지수** 기본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개별 지표들을 단일 지표로 종합하여 만든 지수를 의미한다(Nardo et al., 2005).

데이터셋	단일한 주제에 관한 일련의 지표 또는 변수(예: 규제 의 질)
효율성	주어진 자원으로 활동한 결과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OECD 통계용어)
효과성	활동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 정도(OECD 통계용어)
유럽 국민계정체계	유럽연합 회원국이 전체 경제(지역, 국가 또는 국가 집단) 및 그 구성요소, 여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위해 활용하는 국제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계정체계를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유럽 국민계정체계는 UN국민계정체계(SNA)와 완전히 일치한다.
연방제 국가	하나의 중앙정부와 여러 개의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 사이에 정치적 권한의 분리가 헌법상 보장된 국가를 의미한다.
재정준칙	본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OECD는 재정준칙에 대해 유럽위원회와 유사한 정의를 사용한다. 계량적 재정준칙은 재정정책의 총량에 대한 항구적인 제약을 의미하며, 단년도 준칙은 재정준칙에서 제외된다.
정규직환산인력(FTE)	정규직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총 노동시간을 나눈 값으로, 정규직과 동등한 직원의 수를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성(Gender)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학습된 남성과 여성에 관련한 행동과 기대를 의미한다. 모든 문화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소유한 권리, 자원, 권력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과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기대를 여성과 남성 간 생물학적 차이로 해석하고 상세히 설명한다. 인종, 민족, 계급과 같이 성(gender)은 한 개인의 삶의 기회와 사회 및 경제에 참여하는 양상을 상당부분 규정짓는 사회적 범주이다.
공공부문의 일반고용체계	대부분 법적 지위를 갖는 근로자로서 정부 근로자의 고용 조건과 관련된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고용체계 하에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단기로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일반고용체계하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포함하고 있다.
일반정부	일반정부 부문은 이하의 제도적 단위로 구성된다. a)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b)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 비시장, 비영리단체, c) 사회보장기금(통합된 혹은 중앙, 주, 지방정부로 분리된 사회보장기금 모두 포함)으로 구성되나 정부가 소유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 범주에 속하는 준법인을 제외한 정부가 소유하는 비법인 기업은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해야 한다(2008 국민계정체계).
거버넌스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한의 행사

국내총생산(GDP)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특히 국내총생산은 생산에 참여한 모든 제도적 단위의 총 부가가치의 합계(산출물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에 대한 세금은 더하고, 보조금은 제외함)를 의미한다. 즉, 국내총생산은 구매자 가격으로 측정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합(중간 소비 제외)으로 수입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생산자에게 귀속된 본원소득의 합을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독립적 재정기구(IFI)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자문, 분석,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정파적인 기구로 행정부 또는 의회에 속한 법적 권한을 갖으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구를 의미한다. 독립적 재정기구는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사전적 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감사원은 사후 감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표	“주어진 분야에서 상대적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관찰치에 대한 양적 혹은 질적인 측정치를 의미한다. 지표를 통해 일정한 간격을 평가할 경우, 시간별, 단위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Nardo et al., 2005).
개별 재화와 서비스	주로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그 예로는 교육, 보건,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투입	노동,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건 서비스의 투입에는 의료 및 비의료인력의 노동 시간, 의약품, 전력사용, 그 외의 구입된 물품과 장비, 건물의 사용에 관한 자본비용이 포함된다”(Lequiller, 2005).
경제활동인구	주어진 기간 동안 취업자와 주어진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포함한 현재 활동인구를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공공데이터 포털	중앙/연방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원스톱 통합 포털)은 정부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를 의미한다. 데이터는 포털에서 직접 얻을 수 있거나 데이터가 위치한 웹사이트(예: 재무부 홈페이지)로 안내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결과	결과(outcome)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에는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 않은 정부 활동의 결과가 반영되나, 정부 활동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OECD 통계용어).
산출	정부 성과평가에서 산출(output)이란, 정부 기관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예: 교육시간, 복지혜택의 산정 및 지급액)(OECD 통계용어).

- 성과정보**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작성한 양적, 질적인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성과정보는 정부 정책, 사업, 조직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대한 기준, 지표, 일반적인 정보로 효과성, 비용효과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정보는 통계, 정부조직의 재무 또는 운영계정, 정부조직에 의해 작성된 성과보고서, 정책, 사업, 조직의 평가 또는 지출검토 등에 포함된 정보를 의미한다.
- 생산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경제학자들은 총생산성(투입 대비 총 산출)과 한계생산성(투입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산출의 변화분)을 구분한다(Coelli et al., 1999).
- 공공부문**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이 포함된다. 정부가 소유하는 준공기업은 비금융기업 또는 금융기업으로 분류되므로 공기업에 포함된다(2008 국민계정체계).
- 공공부문 프로세스**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구조, 절차, 관리 방식
- 공공서비스** 일반 국민 또는 공공부문을 위하여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을 통해 정부가 직접 시민들에게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공공서비스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서비스로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는 공적으로 공급되지 않거나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경제 분야에 적용되는 것 이상의 규제를 받는다.
- 국민계정체계** 국민계정체계(SNA)는 일관된, 통합된 일련의 거시경제 계정,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련의 개념, 정의, 분류, 회계규정에 기초한 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2009년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국민계정의 작성을 위한 국제기준의 개정을 승인하면서 1993년 국민계정체계에서 2008년 국민계정체계로 개정되었다. 2008년 국민계정체계에서는 1993년 국민계정체계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통계위원회의 지침에 의거하여, 2008년 국민계정체계는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한 처리, 분석적 측면에 대한 상세한 기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008년 국민계정체계는 경제 환경, 방법론 연구의 발전, 사용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1995년 유럽연합은 1993년 국민계정체계와 일치한 유럽 국민계정체계를 만들었다. 2010년 유럽연합은 2008년 국민계정체계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고, 분류에 따라 유럽 국민계정체계를 개정하였다.
- 총고용** 총고용에는 국민계정의 생산범위(production boundary) 내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취업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유급으로 고용된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으로 구성된다.

- 신뢰** 신뢰는 개인 또는 조직의 행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뢰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할 것으로 믿도록 해준다. 신뢰는 실제의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는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단방제 국가** 하나의 중앙정부와 여러 개의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 사이에 정치적 권한의 분리가 헌법상 보장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방제 국가에서도 행정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구분될 수 있다.
- 변수** 변수란 관측된 단위의 특성으로, 예를 들어 소득, 나이, 무게, 직업, 산업, 질병 등 분류가 가능한 계량적 기준 또는 범주에 따라 구분된 하나 이상의 가치집합을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발 행 처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9층
연 락 처 Tel. 02 3702 7132~4
홈 페이지 : <http://www.oecdkorea.org>

이 책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

한 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의 정부 정책과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OECD 회원국 외의 국가인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는 다양한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일한 보고서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는 개별 국가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뿐만 아니라 맥락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에는 공공재정 및 고용에 대한 투입 지표와 함께, 공공부문, 예산제도와 실무, 인적자원관리, 규제거버넌스, 공공조달,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등에 대한 과정 지표가 포함된다. 또한 핵심 정부 성과(예: 신뢰, 불평등 감소), 교육, 보건,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 대응성, 질, 시민 만족도에 대한 결과 지표가 포함된다. 거버넌스 지표는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유용하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각각의 지표는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제공되며, 국가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도표, 주요 결과 중심의 간략한 분석과 설명, 방법론 및 개념 정의,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